

소규모 연구모임 지원사업
풀씨연구회 2기



소규모 연구모임 지원사업 풀씨연구회 2기



목차

풀씨연구회 소개 및 명단 _ 04

01 EGG _ 06

02 MDRT _ 12

03 360.esg _ 26

04 교통약자의 안전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아젠다 연구모임 _ 66

05 대안을 그리다 _ 96

06 모비딕 _ 106

07 생상모(생태적 상상 모으기) _ 122

08 예티YETTE _ 132

09 언론과 환경포럼 _ 144

10 출산과 출생 정책 연구회 _ 168

11 평화떡잎 _ 180

풀씨연구회 소개

1. 사업목적

- 환경·안전·보건 분야 소규모 연구모임 활성화
- 젊은 연구자들의 학술정보 교류와 연구 협동 기회 제공
- 사회적 난제에 대한 대안 논의 활성화

2. 지원개요

- 분야 : 환경·안전·보건 분야
- 대상 : 5인 이상의 연구자로 구성되어 연 6회 이상의 모임을 하는 소규모 연구모임
- 형태 : 발제비, 회의비 등 모임 경비 지원
- 예산 : 연구모임별 최대 300만 원(연간 최대 20개 팀 지원)
- 기간 : 2022.3.14. - 2022.11.14.

3. 사업 일정

| 구분 | 일정 | 비고 |
|---------|--|-----------------|
| 오리엔테이션 | 3.10.(목) 14~16시 | 숲과나눔 강당 |
| 연구모임 기간 | 3.14.(월)~11.14.(월) | |
| 중간공유회 | (1차) 8.24.(수) 14~17시 (2차) 8.30.(화) 14~17시 | 숲과나눔 강당 |
| 결과공유회 | 11.14.(월) 14시~17시30분 | 연세대 백양누리 그랜드볼룸A |

4. 풀씨연구회 2기 명단

| NO | 연구모임명 | 연구모임 목적/특징 | 인원 |
|----|-----------------------------------|--|----|
| 1 | EGG (Eco Green Group) | 기존 태양전지로부터 발생하는 환경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건물 외벽이나 유리 등 다양하게 응용과 사용이 가능한 2차원 소재 기반의 친환경 태양전지 연구 | 5 |
| 2 | MDRT | 태풍에 동반된 복합기상재해에 대한 사전 대응 모델링 개발,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대안 논의 | 8 |
| 3 | 360.esg | ESG에 대해 시민사회, 청년세대 등이 함께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 평가하여 ESG 이해 돕기 | 9 |
| 4 | 교통약자의 안전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어젠다 연구모임 | 교통약자의 교통복지 제고를 위해 해외사례 비교 검토를 통해 교통약자의 안전 및 이동권 향상 방안 제안 | 6 |
| 5 | 대안을 그리다 | 대학생기후행동 서울지역과 연결하여 기후 위기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사회로 나아가야 할지 대안을 그려봄 | 10 |
| 6 | 모비딕 | 다양한 분야에서 등장하는 비거니즘 담론의 인식을 탐구해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전환 정책을 모색함 | 6 |
| 7 | 생상모 (생태적 상상 모으기) | 문학적·미술적 상상력을 통해 지구적 환경 변화와 기후 위기 상황에 대한 담론을 모색하며 이를 생태 문화적 차원으로 담론화 하기 | 4 |
| 8 | 에티 YETTE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정책의 영향을 탄소배출량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산업 추이에 대한 미래예측 모델 연구 | 8 |
| 9 | 언론과 환경포럼 | 환경·보건 분야 기자들이 모여 솔루션 저널리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바람직한 보도 사례 공유를 통해 올바른 기사 작성을 이끌고, 나아가 공동 가이드북을 집필함 | 15 |
| 10 | 출산과 출생 정책연구회 | 인구정책으로 분류되는 저출산 대응 정책이 갖는 보건학적 함의를 탐색하고 이들 정책이 인구집단의 건강과 의료 이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 6 |
| 11 | 평화떡잎 | 풀씨연구회 1기 활동에 이어 북한의 문화예술을 통해 북한 내부 산림논의 특성을 발굴, 남북산림협력에 시사점 제언 | 5 |

01

EGG (Eco Green Group)

하지상, 박세원, 임채광, 전성찬

기존 태양전지로부터 발생하는 환경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건물 외벽이나 유리 등 다양하게 응용과 사용이 가능한
2차원 소재 기반의 친환경 태양전지 연구

이차원 물질 기반 투명 태양전지

2D Material-based Transparent Solar Cell

EGG

하지상, 박세원, 임채광, 전성찬

1. 서론

오늘날 실리콘 기반의 p-n 그리고 쇼트키 접합 형태를 이용한 박막 구조의 태양전지가 계속해서 제작되어왔다. 하지만, 실리콘 기반 태양전지들은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반면에 이론적 한계에 도달하였다. 실리콘은 굴절도가 높아 표면에 들어오는 광자의 흡수를 막아 에너지 효율을 매우 낮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이차원 물질을 기반으로 하여 투명한 표면으로 광자의 흡수를 활발하게 하고, 전자 이동도도 실리콘보다 우수한 태양전지를 제시한다.

노벨상을 수상한 영국의 가임과 노보셀로프 연구팀이 물리적 박리를 통해 그래핀을 발견한 이후, 다양한 이차원 물질들이 연구되어왔다. 그리고 다양한 이차원 물질들이 Chemical vapor deposition (CVD)을 통해 박막으로 제조되면서 물리적 박리보다 넓은 면적의 이차원 물질을 얻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를 이용하여 넓은 면적의 투명한 이차원 물질을 얻을 수 있고, 이는 광자를 받을 수 있는 면적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를 활용한 제조 방법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포토리소그래피 과정이 수반된다. 본 연구에서는 열박리 테이프(Thermal release tape)를 사용하여 이차원 물질 기반의 투명 태양전지를 기존의 알려진 방법보다 더욱 간단하고 효율적으로 제작하였다. 또한, 하단 전극으로 투명한 인듐 주석 산화물(ITO : Indium Tin Oxide)을 사용하여 기판까지 투명한 태양전지를 제작하였다.

2. 본론

1) 실험 방법

(1) 디바이스 제조 공정

투명 태양전지 제작 방법으로, ITO 코팅이 된 유리를 활용하였다. 제작에 사용된 ITO의 저항은 30Ω 이하이며 다이싱된 유리 기판에 태양전지를 제작하였다. PN 접합 기반 태양전지를 제작하였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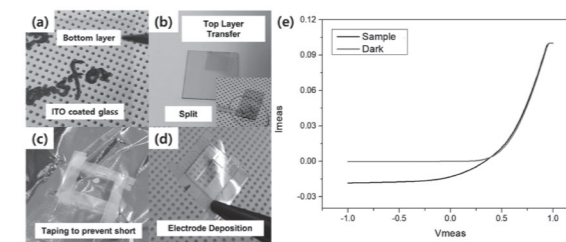
며 각각 서로 다른 대면적 이차원 물질인 이셀레늄화텅스텐(WSe₂)과 이황화몰리브덴(MoS₂)을 사용하였다. 이에, 첫 번째로는 하단에 들어가는 이차원 물질인 MoS₂을 전사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이때, 각각의 이차원 물질은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위에 CVD(Chemical vapor deposition)로 증착되어 있으므로 먼저, 폴리메틸메타아크릴레이트(PMMA : Polymethyl methacrylate) 스핀 코팅 후 실리콘 다이옥사이드를 BOE(Buffered Oxide Etch)로 에칭시켜 이차원 물질을 습식 전사하였다. 그 후 PMMA를 제거하는 공정으로, 아세톤에서 2시간, IPA 워싱, CVD Vacuum Annealing(250°C, 3H, Ar 50sccm)을 진행하였다. 그 후 유사한 방법으로 상단부 이차원 물질인 WSe₂를 전사한 후 PMMA를 제거했다. 마지막으로 열박리 테이프를 활용해 메탈 마스크(metal mask)로 메탈 전극을 증착하여 투명 태양전지를 제작하였다.

(2) 측정 방법

N형 물질인 MoS₂와 P형 물질인 WSe₂의 접합구조로 생기는 투명 태양전지의 광전지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Keithley 2400소스미터와 100mW·cm⁻² 조건에서 Newport 태양광 시뮬레이터를 구동하였다.

2) 실험 결과 및 분석

앞서 설명한 디바이스 제조 공정을 통하여 제작한 투명 태양전지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이차원 물질인 MoS₂와 WSe₂는 각각 CVD 공정을 통하여 합성되었기 때문에 대면적이고, 투명한 특성을 지닌다. PMMA를 이용한 전사 방법을 통하여 서로 다른 이차원 물질을 투명 금속 전극인 ITO 위에 전사할 수 있었다. 또한, 포토 리소그래피를 사용하지 않고, 열박리 테이프와 웨도우 마스크를 활용하여 상단 전극을 증착하였기 때문에 공정이 간소화된 투명 태양전지를 제작할 수 있었다.



〈그림 1〉 투명 태양전지의 제작 과정 및 전류-전압 곡선

(a) ITO가 하단 전극으로 코팅된 유리 기판 위에 하단부 레이어인 MoS₂를 전사한 모습, (b) 상단 레이어인 WSe₂를 전사한 후 잉여 공간을 절단한 모습, (c) 열박리 테이프를 부착한 모습 (d) 상단 금속 전극을 증착한 모습 (e) 빛이 있을 때와 없을 때를 비교한 측정 값을 적용해 제작한 '디바이스의 전류-전압 곡선'

디바이스 제작이 완료된 이후에는 전류-전압 곡선을 측정하여 본 연구의 제작 방법을 통하여 제작한 투명 태양전지의 작동 유효성에 대한 결과를 파악하였다. 빛이 있을 때와 없을 때에 대한 전류-전압 그래프가 차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빛이 있을 때 Fill Factor(FF)와 Voc(Open-circuit voltage) 등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제작한 태양전지의 작동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제조 공정을 통하여 생기는 이점 중 하나는 포토리소그래피를 진행하며 생기는 다양한 오차들을 배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빛의 투과성, 열팽창, 표면의 평탄도, 내구성과 같은 포토리소그래피를 진행하기 위해 고려해야 되는 다양한 요소들을 배제함으로써 생산에 필요한 다양한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 다층 거울과 흡수체에 따라 형성되는 패턴의 위치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 마스크 공정에서 패턴 미세화로 인해 레티클(reticle)에 의한 패턴 회절이 증가하여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오차를 고려하여 추가적인 공정을 진행하거나, 광학적 인위적 작업을 통해 패턴 왜곡을 보정해 주어야 하며, 각각의 공정으로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 하지만 본 연구의 투명 태양전지는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더 적은 비용과 시간으로 동일하게 낮은 오차를 갖는 태양전지를 제작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실리콘 대신 이차원 나노 소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광 투과도와 유연성을 높일 수 있었다. 특히, 유연하다는 특성은 굴곡이 있는 다양한 모양의 구조물에 적용할 수 있고, 투명도가 높다는 것은 유리창에 설치하더라도 미관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장점으로 작용한다. 기존의 불투명한 태양전지의 경우 건물의 옥상이나 외부의 넓은 공간에 설치해야 하지만, 투명 태양전지는 유리창에 설치할 수 있어 추가적인 공간이 없더라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3. 결론

투명한 전극인 ITO 위에 N형 이차원 물질인 MoS₂와 P형 이차원 물질인 WSe₂를 기반으로 하는 디바이스 제작을 최적화하는 데 성공하였다. 특히, 투명한 소재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매우 높은 광 투과성을 달성하였다. 또한, 저항값도 매우 낮기 때문에 매우 많은 광전하들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제작 과정에서 복잡한 포토리소그래피 방식을 사용하는 대신, 열박리 테이프를 활용하여 제작 과정을 획기적으로 단순화하였기 때문에 실제 양산단계의 고효율 투명 태양전지의 개발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참고문헌

- Frisenda, Riccardo, et al. "Atomically thin p-n junctions based on two-dimensional materials." *Chemical Society Reviews* 47,9 (2018): 3339-3358.
- Tiedje, T. O. M., et al. "Limiting efficiency of silicon solar cells." *IEEE Transactions on electron devices* 31,5 (1984): 711-716.
- Geim, Andre K., and Konstantin S. Novoselov. "The rise of graphene." *Nature materials* 6,3 (2007): 183-191.
- Jeon, Jaeho, et al. "Layer-controlled CVD growth of large-area two-dimensional MoS₂ films." *Nanoscale* 7,5 (2015): 1688-1695.
- Granqvist, Claes G., and A. Hultåker. "Transparent and conducting ITO films: new developments and applications." *Thin solid films* 411,1 (2002): 1-5.
- Suk, Ji Won, et al. "Transfer of CVD-grown monolayer graphene onto arbitrary substrates." *ACS nano* 5,9 (2011): 6916-6924.

MDRT (Meteorological Disaster-Ready Team)

나하나, 도우곤, 문정희, 안유진, 정우식

태풍에 동반된 복합기상재해에 대한 사전 대응 모델링 개발,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대안 논의

기후위기, 태풍에 대한 최적의 대응방안

Typhoon-Ready System

MDRT

나하나, 도우곤, 문정희, 안유진, 정우식

1.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기후변화란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하며, 기후위기란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를 포함하여,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수면 상승 등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협을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사회에서는 지구의 기후가 '변화하는 수준을 넘어 '위기' 상황에 놓여있으며, 그 위험성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기후변화가 아닌 기후위기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세계기상기구(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는 지난 50년 동안 자연재해로 인해 하루 평균 115명이 사망하고, 2억200만 달러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밝혔다. 기후변화로 인한 열대 해수온도 상승은 태풍, 허리케인 등과 같은 위험기상재해의 위력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기후위기사대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기상재해가 나타나고 있다. 많은 기상재해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태풍'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태풍은 열대 해상에서 발생한 열대저기압이 발달하여, 중심 부근 풍속이 약 17m/s 이상의 강한 호우와 폭풍을 동반한 중규모 기상 현상을 말한다. 태풍은 북서태평양에서 7월과 10월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북상하면서 동아시아 지역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세계기상기구는 열대저기압 중에서 중심 부근의 최대풍속이 33m/s 이상인 것을 태풍(TY), 25~32m/s인 것을 강한 열대폭풍(STS), 17~24m/s인 것을 열대폭풍(TS), 그리고 17m/s 미만인 것을 열대저압부(TD)로 구분한다. 태풍의 강도는 중심 부근의 최대풍속(10분 평균)에 따라 단계별로 분류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태풍의 강도를 '약', '중', '강', '매우 강', '초강력'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기준은 17m/s, 25m/s, 33m/s, 44m/s, 54m/s이다.

태풍은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어떤 자연재해보다 막대한 인적 및 물적 피해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자연재해 현상이다. 더욱더 최근 들어서는 지구온난화의 가속화로 인해 열대 해상에서의 태풍 발생빈도

가 감소하였지만,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들은 오히려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점차 강력한 규모로 강화된 태풍이 더욱 빈번하게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태풍으로 유발되는 기상재해는 강풍, 호우, 해일 등의 단일 현상으로써의 기상재해가 아닌 이들 현상과 더불어 대기질에 미치는 악영향도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의 성격이 강하므로 단순 위험기상재해로서의 접근이 아닌 복합기상재해로서의 사전대비 및 평가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세계기상기구에서는 예측정확도가 높아지는 기상예보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기상재해를 저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영향 예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고, 기상영향 예보를 권고하고 있다. 여기서 기상영향 예보는 재해의 가능성, 취약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예보로써, 기상재해의 발생과 그 영향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다. 영국, 프랑스, 일본, 미국을 비롯한 기상선진국에서는 '영향 예보'를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는 이례적으로 Weather-Ready Nation(WRN)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하고, 영향 예보의 적극적인 홍보 및 도입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상청에서도 영향 예보 추진 계획(2019~2023)을 수립하고, 지역 맞춤형 영향 예보 시범서비스(2016~2018), 태풍(2016) 및 폭염(2018) 영향 예보 시범서비스, 폭염 정규 서비스(2019)를 수행하였으며, 폭염과 한파에 대한 영향 예보가 정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태풍에 대한 영향 예보를 수행할 것이라 발표한다. 한국기상학회(2016)에 따르면, 태풍, 호우, 대설, 폭염 등 재해 관련 영향 예보를 실시할 경우, 창출 가능한 경제적 가치를 계산한 결과, 총편익의 관점에서 태풍 영향 예보가 가장 높게 나타나며, 태풍 영향 예보의 중요성은 사전에 다수 파악되어 있다. 그러나, 2021년 실제 기상청에서 추진한 태풍 영향 예보 연구와 실용적 수준의 결과도출은 거의 전무하여, 실제 현장에서의 태풍사전방재 활동에 도움이 전혀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의 영향빈도와 강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실제 최근 10년간(2011~2020) 한반도 영향 태풍 가운데, '매우 강(≥44m/s)'에 해당하는 태풍의 발생 및 영향이 전체 태풍의 50% 이상 차지하며 영향태풍의 강도가 매우 강력해졌으며, 9월, 10월 영향을 주는 태풍인 가을 태풍의 형태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태풍에 동반된 복합기상재해의 피해저감과 사전방재에 활용하기 위하여, 최종적으로, 영향 예보 기반의 우리나라 전역 및 각 상세지역의 태풍에 동반된 복합기상재해의 사전방재정보(위험도)를 생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2. 본론

1) 각국의 태풍 영향 예보 시스템 조사

1.1. 영국

영국 기상청(Met Office)은 전 세계 최초로 2011년부터 위험 매트릭스를 개발하여, 이를 근간으로 재해영향모델 구축 및 국가재해기상정보시스템(National Weather Warning System)을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 WRN 패러다임 전환을 기점으로, 보다 빠르고 다양한 영향 예보를 수행하고 있다.



〈그림 1〉 영국 영향 예보 WEATHERREADY 시스템

1.2. 프랑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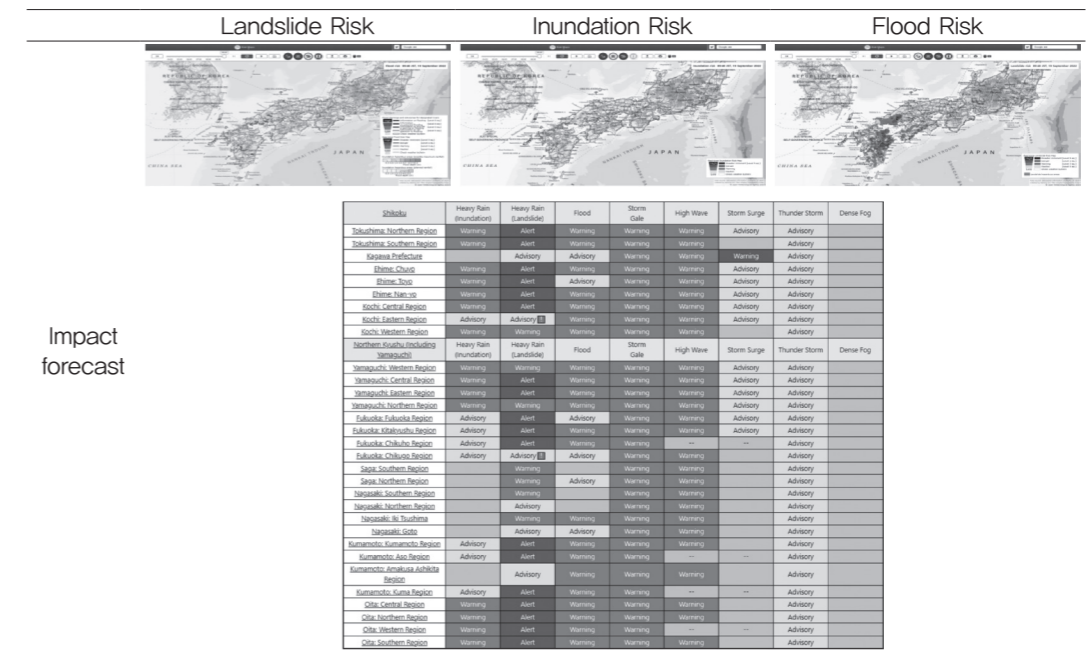
프랑스 기상청에서는 2001년부터 위험등급별 임계값에 기반하여 대부분의 기상현상에 대한 영향 예보를 사전에 수행하고 있으며, 영향정보와 대응요령을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미국 WRN 패러다임 전환을 기점으로 지역별 영향 예보를 수행하였고, 보다 빠른 시점에 사전방재가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영향 예보를 계속 개발하고 보완하고 있다.



〈그림 2〉 프랑스 영향 예보 시스템

1.3.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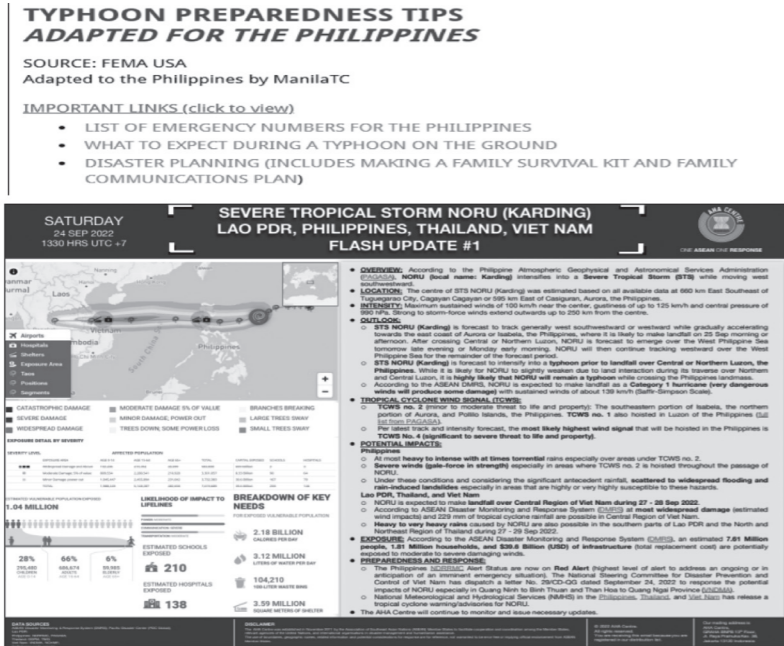
시간대별 위험지수의 분포 제공과 함께 행정구역별 복합기상재해에 대한 영향 예보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3〉은 일본에서 태풍 난마돌(2022.09.18, 0900LST)의 영향 예보를 제공한 화면이다.



〈그림 3〉 일본 영향 예보 시스템

1.4. 필리핀과 베트남

개발도상국(필리핀, 베트남 등)에서는 WMO의 재정적 지원과 함께 영향 기반의 예측 및 경고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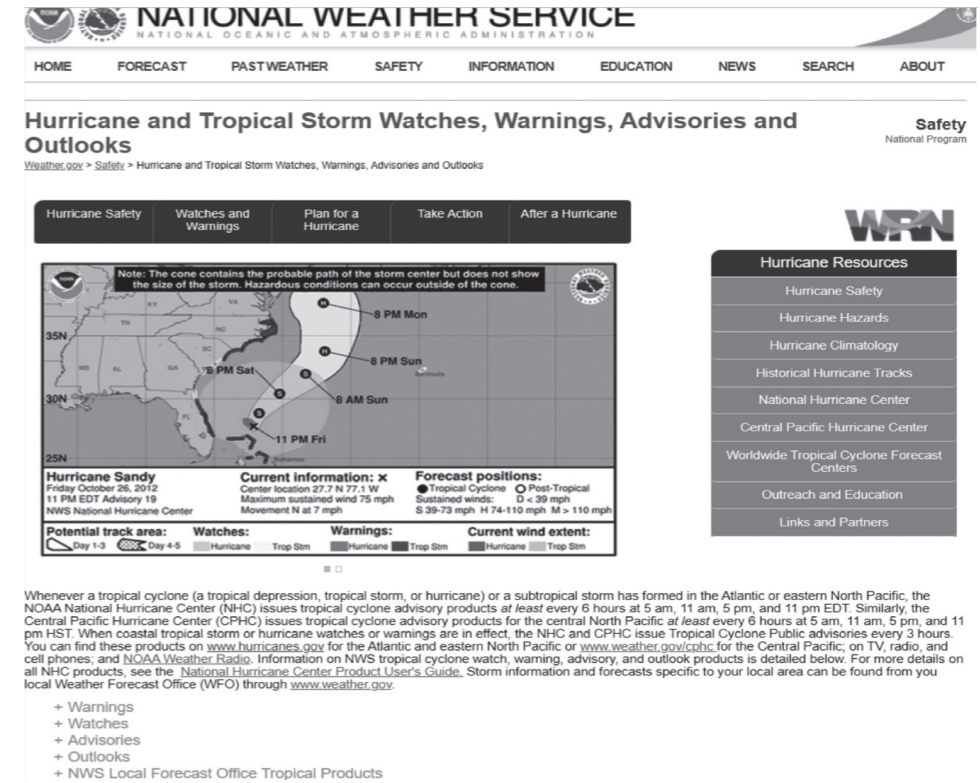


〈그림 4〉 필리핀과 베트남의 태풍 영향 예보 시스템

1.5. 미국

위의 모든 기상선진국을 포함한 다양한 나라들에서의 태풍 영향 예보는 2011년 미국의 WRN 패러다임 전환을 기점으로 활성화되었다. 미국 해양 대기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과 국립기상국(National Weather Service, NWS)에서는 극한 기상현상의 영향에 대하여 사전에 준비하여, 조치를 취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전략인 Weather-Ready Nation(WRN)을 2011년 향후 10년간의 전략계획으로 선언하며,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였다. 이는 기록적인 강설, 강렬한 토네이도, 파괴적인 허리케인, 광범위한 홍수 및 가뭄과 같은 극한 기상현상의 영향에 대하여 사전에 그 위험을 파악하여, 조치를 취함으로써 그 피해를 저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기점으로 기상선진국이라 불리는 여러나라들(영국, 프랑스, 일본, 중국 등)에서는 태풍, 허리케인과 같은 열대성 저기압에 관련하여 Ready, Prepare라는 단어를 개념화하며, 사전방재를 확립하고 국가운영 정책기조를 변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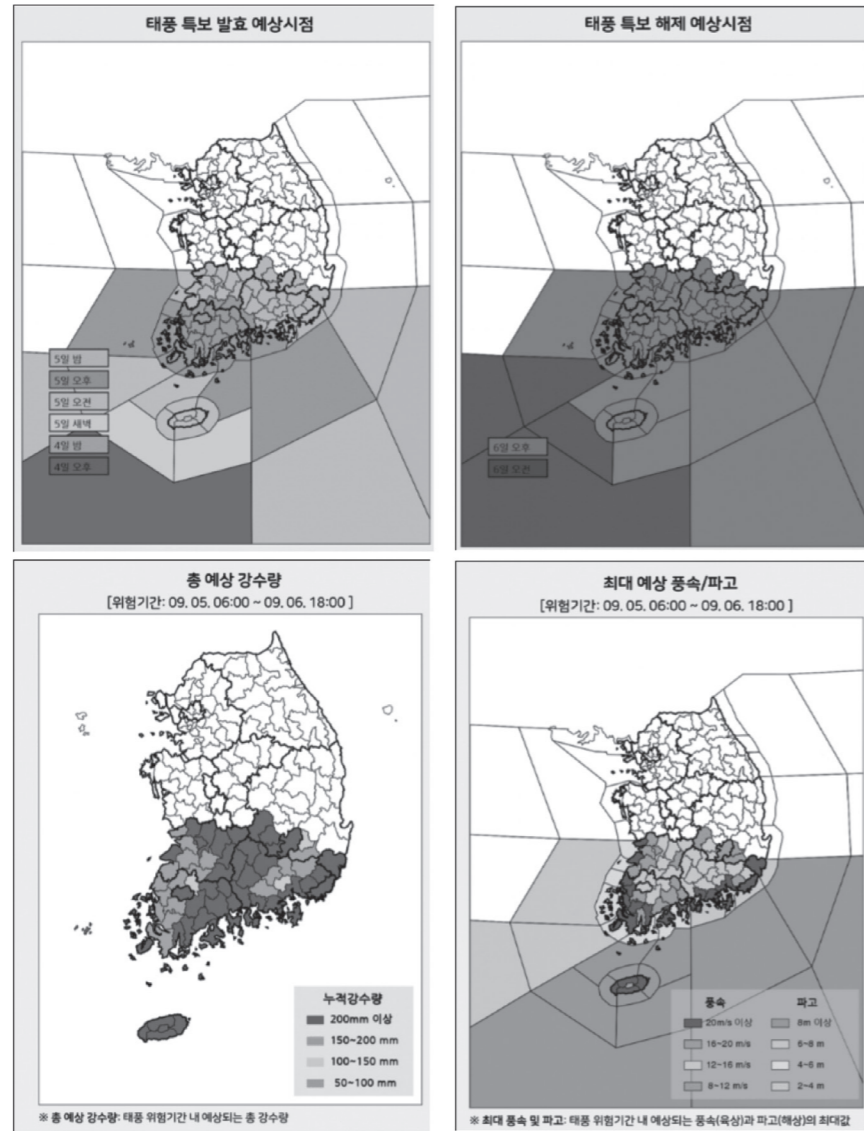
미국 NWS에서는 영향기반 의사결정서비스(Impact-based Decision Support Service) 개념을 도입하여 2017년부터 전 국가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위험기상 브리핑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로 전달함으로써, 수요자 맞춤형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위에 설명하였듯 WRN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하고 학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현업에서 활용하고 있다.



〈그림 5〉 미국의 WRN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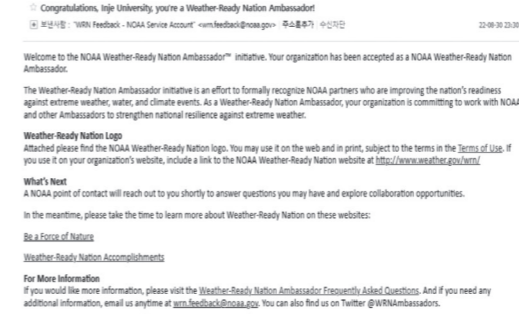
16. 한국

2020~2024년 전략계획으로 '국민안전 중심의 방재 의사결정 지원강화'를 선정하고, 지역·분야별 위험수준에 따라 대응 방안을 알려주는 영향 예보 시행 및 수요자 관점의 기상정보 활용을 위한 소통 강화로 방재 대응 지원을 지정하였고, 2021년부터 태풍에 대한 영향 예보를 수행할 것이라 밝혔으나, "태풍 위험 시점 정보"라는 이름으로 육상 특보 구역에 태풍(예비)특보 발표 후, 제공되는 정보만 추가되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태풍 영향 예보는 2016년부터 시범 운영하고, 문서로는 개발되어 오고 있지만, 아직은 미흡하고, 아쉬움이 있는 실정이다.



〈그림 6〉 한국의 태풍예보 시스템

본 연구를 수행한 MDRT는 이러한 태풍 영향 예보의 부재를 보완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전 세계의 영향 예보를 이끌고 있는 미국 WRN과 AMBASSADOR 협력관계를 구축하였다. 우리나라 영향 태풍에 대한 사전 방재, 영향 예보 개념을 도입하기 위하여 협력하였으며, 미국 WRN을 기반으로 Typhoon-Ready System을 개발하고, 공유하기로 한 상태이다.



〈그림 7〉 WRN과의 AMBASSADOR 협력관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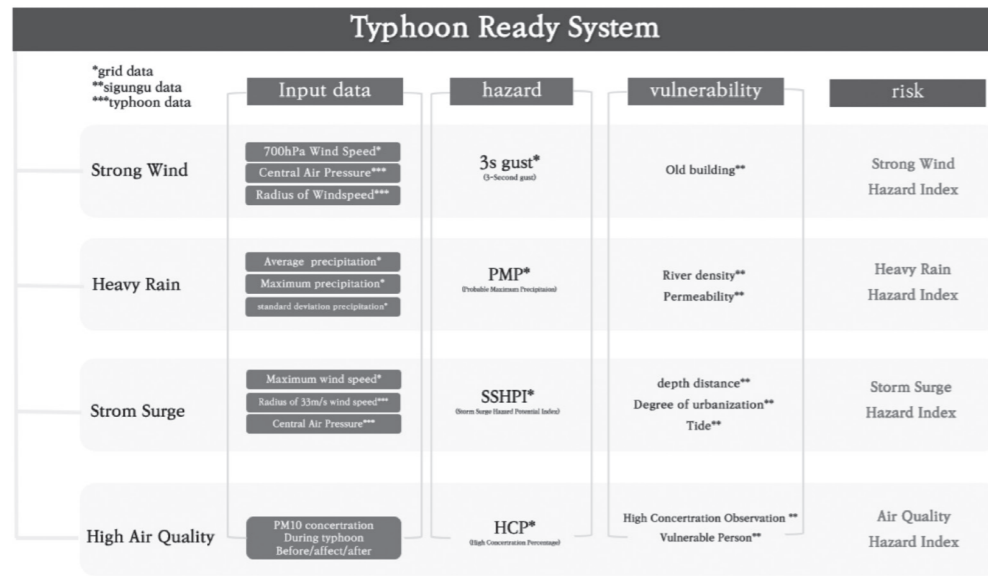
2) Typhoon-Ready System 태풍에 동반된 복합기상재해 DB 구축 및 위험지수 산정

태풍의 시기에는 강풍, 호우, 해일, 고농도 대기오염이라는 복합기상재해가 지역 곳곳에서 발생할 수 있으나, 단일 기상재해에 대한 분석만이 수행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태풍에 동반된 복합기상재해에 대한 DB를 구축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기상관측이 시작된 1904년부터 2021년까지 총 118년간의 모든 자료를 대상으로 태풍에 동반된 복합기상재해의 제반 분석을 수행하여, DB를 구축하였다.

영향 예보는 재해 발생에 대한 경고를 넘어, 해당 지역의 취약성을 고려하여 지역적으로 차별화된 영향을 제공하는 예보이다. 따라서 영향 예보의 기반으로 개인 및 지자체의 입장에서 직접 활용 가능함을 목적으로 둔 본 연구의 TRS에서는 태풍에 동반된 복합기상재해에 대한 기상학적 위험성을 산정하고, 지역 특성인 취약성을 반영하여, 지역 맞춤형 위험지수를 산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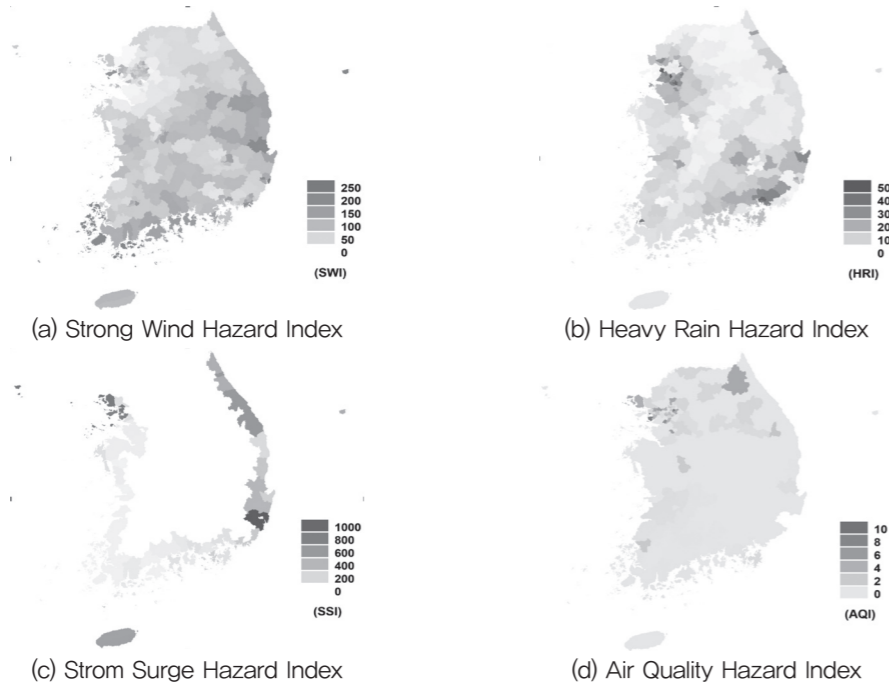


〈그림 8-1〉 TRS 시스템의 구조 및 흐름도



〈그림 8-2〉 TRS 시스템의 구조 및 흐름도

특히, 지역의 특성(도시화, 도시·산업구조, 침투·침수율, 인구밀집도)등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지수를 개발하여 개인 및 지자체 수준에서 활용 가능한 방재 정보를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림 9〉 TRS를 활용하여 산정되는 복합기상재해 위험지수

3. 결론

기후변화에서의 기후위기로의 변화, 고령인구의 증가와 도시화, 산업 고도화와 인구 밀집 현상은 기상재해 발생 시기 대규모의 피해를 유발하는 등 기상현상으로 인한 영향과 피해 원인이 날로 다양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상현상의 발생 시점 혹은 유무 등을 전달하던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정보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기상현상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한 영향 예보 서비스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에 세계기상기구를 중심으로 기상재해의 피해 저감을 위해 의사 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영향 기반의 사전 방재 예보 서비스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전 세계적으로 현상 예보에서 영향 예보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영향 예보와 관련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 태풍 영향 예보의 부재를 보완하고, 실제 영향 예보를 수행하기 위하여 NOAA WRN과 AMBASADDOR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TRS를 개발하였다. TRS는 태풍에 동반되어 한반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복합기상재해의 재해요인과 취약요인을 고려하여 위험지수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 TRS가 제공하는 위험지수는 영향 예보의 개념에 적합한 기상재해 발생과 강도에 대한 경고를 넘어 해당 지역의 취약성을 고려하여, 지역적으로 차별화된 영향을 제공하는 사전 방재정보로서, 태풍 영향 예보의 기반으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 태풍 영향 시기에 발생하는 복합기상재해로 일반적인 인식에서의 강풍, 호우, 해일을 비롯하여 고농도 대기오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실제 위험지수 또한 지역적 편차를 보이며 높은 지역들이 나타났다.
- 활용방안 및 실용화 계획
MDRT의 연장선으로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관련 연구를 통해 보완한 후, 실제 TRS를 활용하여 모바일 날씨 앱 및 웹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태풍'이라는 특수한 기상상황에서의 개인 및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방재기상정보만큼은 사용자가 위치한 지역에서의 복합기상재해에 대한 정보를 비롯한 다수의 활용 가능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10〉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태풍의 진로와 현재 강풍 분포와 강수 분포는 다른 앱과 동일하게 제공이 되며, 지역적 취약성이 적용된 위험지수를 활용한 복합기상재해의 행정구역별 시간 자료, 한반도 전체 분포도, 본인이 속한 행정구역의 위험수준에 따른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0〉 TRS를 활용한 가상의 앱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전혀 시작조차 되지 않았던 태풍 영향 예보의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는 TRS를 구축하였다. 빠른 시간 내에 시스템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다소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는 WRN과의 협력을 통해 추후 보완하고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기상청은 태풍에 대한 특보로 주의보, 경보 수준으로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형지물이 복잡하고,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지역적인 기상특성이 매우 크게 나타나 동일한 기준을 대상으로 예보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따라서 추후 행정구역별 위험 수준을 산정하고 새로운 기준을 제안하는 연구와 함께 TRS를 개선한다면 실제 태풍의 영향 예보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시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IPCC, 2007: Climate Change 2007: The Physical Science Basis, Contribution of Working Group I to the Fourth Assessmen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Solomon, S., D. Qin, M. Manning, Z. Chen, M. Marquis, K.B. Averyt, M.Tignor and H.L. Miller (eds.)].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United Kingdom and New York, NY, USA.
- IPCC, 2015: Climate Change 2015: The Physical Science Basis, Contribution of Working Group I to the Fourth Assessmen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 Jung, W. S., 2015, An Estimation of Extreme Wind Speed of Typhoon Affecting the Damage of Public and Industrial Facilities, Journal of the Environmental Sciences, 24(9), 1199–1210.
-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KMA), 2005, Survey for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Typhoon Center and Long- and Short-time Research projects on Typhoon, KMA, pp188.
- Na, H. N., Jung, W. S., 2019, Characteristics of Monthly Maximum Wind Speed of Typhoons, Journal of Environmental Science Internationa, 28(4), 441–454.
- Na, H. N., Jung, W. S., 2019, Assessment of the Suitability of the Typhoon Disaster Prevention Model according to the Typhoon Maximum Wind Speed Radius and Surface Roughness Length,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Atmospheric Environment, 35(2), 172–183.
- Na, H. N., Jung, W. S., 2020, Autumn Typhoon Affecting the Korean Peninsula – Past and Present Characteristics,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Atmospheric Environment, 36(4), 482–491.
- 기상청, 2009, 자연재해저감을 위한 방재기상정보활용과 재해평가모형개발,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 대기환경정보연구센터, 기상청, CATER 2006–3303, pp217.
- 기상청, 2011, 태풍백서, 기상청 국가태풍센터, 11–1360016–000001–01, pp345.
- 기상청, 2012, 자연재해저감을 위한 방재기상정보활용과 재해평가모형개발 : 복잡재해평가모형 개발과 방재정보개선,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 대기환경정보연구센터, 기상청, CATER 2006–3303, pp176.
- 소방방재청, 1999–2010, 재해연보(1999–2010), 소방방재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1–1660000–000032–10.
- 소방방재청, 2006, 태풍위험도 추정을 위한 알고리즘 분석 연구, 소방방재청, pp 279.

360.esg

이혜림, 김동희, 류정화, 박민경,
이승혜, 장지혜, 조수빈, 진혜연, 황보현

ESG에 대해 시민사회, 청년세대 등이 함께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 평가하여 ESG 이해 돕기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여주는가?

360.esg

이혜림, 김동희, 류정화, 박민경, 이승혜, 장지혜, 조수빈, 진혜연, 황보현

1. 서론

가.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최근 몇 년 사이 기후변화 및 환경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ESG 경영 및 ESG 평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세계 주요국에서의 ESG 관련 규제 역시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당국 또한 1) 기업지배 구조보고서 의무화 확대, 2)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2019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은 ‘기업지배 구조보고서’의 거래소 공시가 의무화되었고, 향후 의무 공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26년부터는 코스피 전체 상장기업에 대해 공시 의무화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러한 ESG의 보고 및 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그 종류와 수가 매우 많지만, 금융권이나 시민단체 등 각자의 목표나 관점에 따라 중점적으로 보는 기준이 다르다. 보고 및 평가의 일환으로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 또한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의무사항까지는 아니며 보고 내용도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 대부분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작성할 때 참고하는 이니셔티브는 주로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SASB(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 Board),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ISSB(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 Board) 등이 있으나, 작성 의무도 없고 검증을 받을 의무도 없는데, 이러한 이니셔티브들에 따라 내용이 정확히 작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미비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같은 기업임에도 평가 기관에 따라 상반된 평가 결과가 나오거나 일부 항목에 대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고, 이 과정에서 ESG 워싱의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더 나아가 K-ESG와 같은 국가의 특성에 맞춘 가이드라인을 포함하여 평가 기관별 및 업종별로 점점 더 다양

한 기준들이 나오고 있는바, 이렇게 다양한 ESG 평가 가이드라인의 특색과 내용에 따라 어떻게 기업 평가가 다르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동시에 ESG 평가에 있어서 투자자 및 공급망, 사회, 시민단체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중점적으로 바라보는 기준이 저마다 다르기에, 주요 기준들이 공통으로 중시하는 사항이나 기준별 포괄 범위, 지표 등의 차이를 비교 분석해 본다면 산재해 있는 기준들에 대한 이해를 돕고 통일성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ESG 평가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의와 분석은 향후 더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고서 내용이 주로 투자자와 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그들이 중요하게 보는 점들이 더 강조되거나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에는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에 있어서 큰 관심과 우려를 가진 일반 시민들이자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 연구자,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360.esg’ 연구회는 ESG 평가 가이드라인을 재무적 부분 외 360도의 다양한 시야와 관점에서 보고, 이를 기반으로 한 문제 제기와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그 결과물을 정리하여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블로그에 공유하고 피드백을 받음으로써, 일반인들도 ESG와 ESG 평가에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데에 기여하고자 한다.

나. 연구의 목적

1) ESG 가이드라인의 이해 및 비교분석

국가별, 업종별, 평가 기관별로 마련된 여러 ESG 평가 가이드라인을 비교 분석하여 각 가이드라인이 강조하고 있는 점 및 상호 간의 차별되는 부분에 대해 학습한다. 또한 새롭게 도입되는 K-ESG 가이드라인을 다른 ESG 평가 가이드라인과 비교 분석하고 발전 방향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ESG 경영 및 ESG 평가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친환경 경영 또는 탄소중립 목표 등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내부적으로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에 심각성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투자자들이 지속 가능한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기업에 요구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많은 ESG 평가 가이드라인은 투자자 및 금융기관의 관점에 맞춰진 경향이 있다. 하지만 기업의 이해관계자는 투자자나 내부 경영자들만이 아닌 근로자, 소비자, 지역 커뮤니티, 국내외의

고객 및 협력사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존재한다. 따라서 기업의 ESG 경영은 투자자들의 수익성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 나아가 미래 세대의 건강과 행복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이에 '360.esg' 연구회는 ESG 평가 가이드라인을 재무적 관점만이 아닌 소비자 및 시민, 특히 청년 세대의 입장에서 좀 더 다양하고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2) 가이드라인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평가

앞서 연구 분석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일부 산업군의 대표적인 기업들을 선정하여 이들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직접 평가해 보고 기업의 정보 공개 또는 ESG 기준에서 보완할 부분을 제안한다.

기업의 ESG 경영을 평가하는 데에는 공개/공시된 기업 자료의 분석, 미디어 분석, 기업 담당자 인터뷰, 설문조사, 현장실사 등 여러 방법이 있다. 그중 '360.esg' 연구회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우선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기업 홈페이지 등 일반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채널에 모두 공개되어 있고, 그러한 이유로 홍보의 목적까지 고려하여 작성되는 경우도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위장 환경주의, 즉 그린워싱의 가능성이 높은바, 보고서 분석을 통해 그린워싱에 대한 확인이 가능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광고나 홍보물, 미디어에서 다뤄지는 정보 등에 비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는 기업 경영 일반에서 시작하여 보고서에서 사용되는 가이드라인 및 적용되는 내용 전반이 모두 포함되므로, 기업의 ESG 경영을 더 포괄적으로 검토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본론

가. 이론적 배경

1) 보고 지표 및 공시 기준

수많은 기업들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지만, 보고서 발간 여부와 공시해야 할 내용은 현재 모두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표준화된 형식이나 내용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이 보고서 작성 및 자료 공시 시 참고하는 공통 기준들이 있는데 그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Global Reporting Initiative(GRI, 글로벌 보고 이니셔티브)와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SASB, 지속가능성 회계기준 위원회)에서 작성된 지표들이며, 기후변화 부분에 특화된 공시 기준으로는 TCFD(Task Force on Climate Related Financial Disclosures)가 있다.

가) Global Reporting Initiative(GRI, 글로벌 보고 이니셔티브)

글로벌 보고 이니셔티브, GRI는 1997년에 설립되었다. 이곳에서 개발한 GRI 표준은 경제, 환경, 사회 분야에 걸친 다양한 보고 지표들을 제공한다. 2023년 1월부터는 개정된 기준이 적용될 예정으로, 기존의 Universal Standards(필수사항과 원칙, 조직에 대한 정보 등)와 Topic Standards(경제, 환경, 사회 등)에 더하여 새롭게 생긴 Sector Standards로 구성된다. 산업 부문별로 특화된 지표들인 Topic Standards의 경우 현재 석유 & 가스, 석탄, 농축어업 세 산업의 표준이 발표된 상태이고 앞으로 40개 산업 표준으로 확장될 예정이다.

GRI 표준은 재무적인 영향에 국한하지 않고 조직이 관계를 주고받는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 즉 해당 조직이 사회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고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표준은 37개 주제로 나뉜 100여 개가 넘는 지표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표마다 상세한 보고 원칙이 있고 항목 요구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다. 다만 GRI 지표들을 반드시 모두 보고할 필요는 없다. Universal Standards 내 지표들은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지만 Topic Standards 중에서는 각 조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들을 선정하고 보고하면 된다. 조직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주제들을 material topic이라고 하며 이를 선정하는 과정인 "중대성 평가"가 GRI 표준의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기존에는 "조직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영향에 중요한 정도" 및 "이해관계자들의 평가와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두 가지 원칙으로 고려하였으나, 2023년 개정되는 표준부터는 비즈니스 영향과 이해관계자 영향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비즈니스가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 자체를 가장 중요하게 보는 점, 그리고 사업 전반에 있어서 기업의 활동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도 강조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한편, 이러한 material topics를 선정하는 과정 및 선정 과정에 고려된 이해관계자들과 전문가들에 대해서도 보고가 되어야 하며 1) 조직의 활동과 비즈니스 관계에서 경제와 환경, 사람들, 특히 인권에 미치는 영향들을 어떻게 식별했는지(이 영향들에는 실질적인 영향과 잠재적인 영향, 부정적인 영향과 긍정적인 영향을 모두 포함), 2) 조직이 항목들의 중요도에 따라 영향의 우선 순위를 어떻게 정했는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대다수의 기업들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마지막 부록 페이지 등에 GRI 대조표를 작성하여 각 GRI 지표에 해당하는 내용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보고서의 페이지나 홈페이지 등 위치를 표시해 두었다. 다만 해당 페이지에 가면 비슷한 내용이지만 GRI 기준이 요구하는 정확한 수치 등의 요구사항을 제시하지 않거나 일부만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부정적인 내용(예컨대 기업 활동으로 인한 환경 피해 등)의 경우 언급이 거의 없고 긍정적인 내용, 그리고 현재 달성한 성과보다는 앞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대한 선언적 언급이 많은 경향이 있다.

나)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SASB, 지속가능성 회계기준 위원회)

SASB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보고할 기업 공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개발된 지표들이다. 산업별로 조직의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볼 수 있도록 이와 연계된 주제들 위주로 10여 개 정도의 간결한 지표들이 보고 대상이다. 산업별로 중요 지속가능성 이슈가 크게 다르기에 SASB 표준들 또한 산업별로 대단히 상이하다. SASB의 홈페이지¹에서 77개 산업별 표준을 검색해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정성적, 정량적 내용을 모두 아우르는 GRI와 달리, 정량적 수치가 대부분이며 기업의 '재무적 요소'에 영향을 미칠만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기에 기업이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총체적으로 보려는 GRI와는 그 목적이 다르다.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를 대상으로 하지만 산업별로 가장 중요한 지표들만 간소하게 추렸기에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등도 공통적인 항목이 아니라 보고 있으며, 해당 항목이 평가 대상이 아닌 산업도 많다.

다)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TCFD,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무 정보 공개를 위한 태스크포스)

TCFD는 대표적 ESG 공시 프레임워크 중 하나로, 기업들의 사업 영위로 인한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SG 트렌드화로 최근 기업 및 기관의 TCFD 지지 선언이 증가하여 95개국 3,400개 이상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국내에서는 106개 기관이 참여 중이나 연계 보고 시점에 이르지 않아 아직 19개 기관에서만 연계 보고를 진행하였음). TCFD는 해당 기업이 기후변화로 인한 리스크와 기회요인을 식별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기업의 재무적 가치로 정량

1 <https://www.sasb.org/standards/download/?lang=en-us>

수치화하여 리스크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TCFD 가이드라인에는 거버넌스, 전략, 위기관리, 목표의 4개의 항목이 있으며, 각각에 해당하는 세부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거버넌스-전략-위기관리-목표 산출이라는 프로세스를 통해 기업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갖추도록 돕는다.

라) K-ESG 가이드라인

2021년 12월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ESG 인프라 확충 방안'의 중점 과제로 K-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K-ESG 가이드라인은 글로벌 지표와의 정합성 및 한국 고유의 특수성, 법·제도적 정합성을 고려하여 만들어졌다.

K-ESG는 ESG 경영과 투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대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목표 설정과 실행에 대한 경험, 정보 등의 부족으로 인한 산업계·기업들의 평가, 대응이 어렵다는 반응에 따라 추진되었다. 또한 국내의 평가 지표가 600여 개 이상으로 난립하는 가운데, 어떤 평가 지표에 따른 평가와 공시 작업을 하는 것이 좋을지 등 지표의 선택과 이해와 관련한 기업들의 부담 가중과 혼란 증가도 문제였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부담을 보다 줄이고 ESG 경영에 조금 더 빠르게 동참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게 되었다.

K-ESG는 국내외 주요 13개 평가 지표와 공시기준을 분석하고 공통/핵심사항 61개를 도출하여 (1단계) 글로벌 ESG 지표 정합성 검토, (2단계) 국내 산업계 ESG 특수성 반영, (3단계) 국내 ESG 관련 법/제도 정합성 검토를 거쳐 구성되었다. 향후 글로벌 동향과 변화를 반영하여 1~2년 주기로 개정판을 발간할 예정이며, 올해부터 업종별/기업 규모별 가이드라인도 별도 마련하는 계획을 공유했다.

K-ESG 가이드라인은 크게 정보공시, 환경, 사회, 지배 구조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되며, 하부의 27개 범주, 61개 진단 항목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K-ESG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최소 수준의 공통지표 23개 선별, 발표하기도 했다.

동 가이드라인은 ESG 평가 대응 지침서로써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세부내용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 스스로 ESG 성과와 현황을 자가 진단해 보고, 목표 수립, 효율적 이행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산업 특수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아 산업 전반에 적용하는 범용적 가이드라인으로써만 한정된 기능을 갖는다. 또한 항목별 가중치도 따로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추후 산업별 가중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으나 아직 미정인 상태다.

그렇기에 K-ESG는 개별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지원이라기보다는 “ESG 평가에 얼마나 잘 대응 하느냐”라는 ‘평가’ 자체에만 많은 무게가 실려 있다. 따라서 글로벌 ESG 평가와 그 신뢰도라는 측면에서도 크게 의미가 없고, 무효용의 안내서 느낌이 들기도 한다. 오히려 가이드라인이 하나 더 추가되어 기업들의 혼란만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 가이드라인이 한국생산성본부 제작 기반으로 발간되었는데, 해당 기관의 홍보 및 영업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

2) 평가 지표

전 세계적으로 ESG 평가 기관은 600여 개에 달한다. 이들 각 평가 기관들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주요 ESG 이니셔티브 등을 바탕으로 하되, 구체적으로는 각기 다른 평가 지표들을 활용한다. 평가 지표, 평가 방식 및 평가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를 위해 국내외 평가 기관의 평가 지표 중 아래의 기관 및 평가 지표들을 대표로 각 선정하여 알아본다.

가) MSCI ESG

MSCI ESG 등급은 재무적으로 관련된 장기적 ESG 위험에 대한 회사의 탄력성을 측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MSCI ESG 등급은 위험과 기회의 관점에서 기업의 ESG 경영을 평가한다. 지금까지 비재무 영역으로 여겨진 ESG가 기업에 재무적으로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기업에 비즈니스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핵심 질문을 통해 MSCI ESG 등급을 통해 알고자 하는 바를 구체화할 수 있다: 1) 산업 내 기업이 생성하는 부정적인 외부 효과 중 중장기적으로 기업에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2) 반대로,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ESG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기회로 바뀔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반영하기 위해 MSCI ESG 등급은 방법론적 측면에서 리스크와 기회에 대한 노출 점수, 리스크과 기회에 대한 관리 점수, 산업 특화 주요 영역별 점수를 도출한다. 리스크가 높더라도 관리를 잘하면 평가 점수가 높고, 반대로 리스크가 낮아도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평가 점수는 낮을 수 있는 구조이다.

최종적으로 동종 업계 내 상대평가를 통해 7개 등급으로 평가한다. 등급은 크게는 업계 상위(Leader), 평균(Average), 하위(Laggard)의 3개 분류가 있으며, AAA, AA는 상위, A, BBB, BB는 평균, B, CC는 하위 그룹에 해당한다. 또한, 주요 이슈 풀 총 35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산업별로 주요 이슈를 선정하여 해당 이슈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나) 한국기업지배 구조원 KCGS ESG

KCGS ESG는 한국기업지배 구조원(Korea Corporation Governance Service, KCGS)이 개발한 ESG 평가 지표이다. KCGS는 국내 기업들에게 바람직한 지배 구조를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2002년에 설립되었다. 2003년 기업지배 구조 평가를 시작하였으며, 2011년에는 평가 항목에 사회책임과 환경경영을 포함하면서 ESG 평가를 실시하게 되었다.

기본적으로 약 900개의 국내 상장회사들을 평가하며, 평가를 위한 기초 데이터로 해당 회사에서 작성한 설문 응답, 공개된 기업공시자료, 기관 자료 및 미디어 자료 등을 활용한다. 환경, 사회, 지배 구조 각 영역의 특성에 맞는 평가 모형 모델을 개발하였는데, 국내 법제도 및 국제 규범뿐 아니라, KCGS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KCGS 모범규준도 활용한다.

평가 결과는 7단계 등급으로 나누어져 부여되는데, 평가를 실시한 모든 기업에 대한 평가 등급 결과를 KCG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개별 평가 결과 보고서가 제공된다. 평가가 완료된 후 별도의 평가 피드백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 동안 해당 기업이 추가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서 기존의 답변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KCGS가 평가 등급을 조정/변경할 수도 있다.

다) 다우존스 지속가능성 인덱스(DJSI, 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es)

DJSI는 미국의 S&P의 자회사인 Dow Jones Indices사와 지속가능경영평가 기업인 RobecoSAM이 함께 개발한 ESG 평가 지표이다. DJSI는 전 세계 2,500여 개 시가총액 상위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며, 국가마다 로컬 파트너를 선정하여 함께 평가한다. 한국에서는 한국생산성본부가 로컬 파트너로 지정되어 있어, 한국 단위의 ESG 평가인 국가 단위 다우존스 경영지수, DJSI Korea를 통해 국내 기업을 평가한다.

환경, 사회, 지배 구조 외에도 경제 측면을 함께 평가하는데(Governance & Economic Dimension), 평가를 위한 데이터는 KCGS와 유사하게 평가 기업으로부터의 설문 응답, 회사 발간자료(공시 등) 및 미디어 자료이다. DJSI의 평가 설문은 공통 항목과 산업별 항목으로 나누어 구성되고, 환경, 사회, 지배 구조+경제의 각 영역에서 산업별 항목 설문의 비중이 다르다. 평가항목의 세부 항목에 따라 가중치도 다르게 설정되어 평가에 반영된다.

평가 결과는 DJSI의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개별 기업을 검색하여 전체 등급, 영역별 점수, 업계 평균 점수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하여 해당 기업의 ESG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다.

라) 국민연금 평가 지표

국민연금 평가 지표의 목적은 책임 투자 및 수탁자 책임 원칙(스튜어드십코드)을 바탕으로 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이다. 2016년 12월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및 2018년 7월 국민연금-스튜어드십코드 채택을 계기로 ESG 책임투자 관련 논의가 본격화되어 2019년 11월, 지속가능성 및 ESG요소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기금운용원칙이 개정되었다. 2021년 5월 ESG 평가체계가 개선되어 평가 지표 변경 및 평가 방법이 개선되고 평가대상 또한 확대되었다.

국민연금의 ESG 통합 운용은 ESG 평가 결과(등급/점수)를 투자가능 종목군 편입 및 투자의사결정 과정에 고려하고 선별 투자(screening) 및 나아가 투자 제한 전략(Negative screening)을 통해 이루어진다. 선별 투자와 투자 제한 전략은 ESG 관점에서 긍정 또는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특정 산업 및 기업을 투자 후보군에 포함 또는 제외하는 방식이다. ESG 평가체계는 14개 항목 및 61개 지표로 이루어져 있다.

환경 관련 평가 지표는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로 자산에 직접 가해진 영향(물리적 위험),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비용(전환 위험)을 포함하며, 환경사고 및 환경 관련 법률 위반 등을 모니터링하고 중대성(심각성/재발 가능성)을 평가한다. 사회 관련 평가 지표는 임직원, 공급망, 소비자 등 내외부 이해관계자와 연관된 지표들로, 기업 성과와 상호 간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평가한다. 공급망 전반에 내재한 위험을 관리하여 장기적 지속가능성 또한 제고한다. 이를 위해 근로자의 인권 및 노동문제, 산업안전사고, 불공정거래, 불완전판매 등의 사례를 모니터링한다. 거버넌스 관련 평가 지표는 건전한 기업 지배구조, 즉 기업 내 자원의 적절한 배분 시스템을 평가하기 위함이며 지배주주의 불법행위 등을 모니터

링한다. 거버넌스 중심의 평가 및 주주 관여 활동을 통해 환경, 사회 부분의 가치를 확대 반영한다. 기후변화(탄소중립) 및 산업안전이 추가되며 중점 관리 사안이 개선되었다.

2022년 2월 기준 국민연금의 운용자산은 약 920조 원(국내 주식 155조 원, 채권 330조 원 투자)으로, 국내의 기타 다수 연기금과 투자사들에 벤치마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만큼 국내 시장에서 국민연금의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으며, 향후 한국 지속가능 금융의 표준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국민연금은 폐쇄적인 평가체계로 일관하고 있는바, 평가모형이나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모습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역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여겨진다. 또한 시장의 기대보다는 그 파급 효과가 실질적으로 미미하다는 문제도 아쉬운 점이다. C등급 기업은 별도 검토 보고서 제출로 같음하면 투자를 유지할 수 있고, D등급(BM 대비 초과편입X) 또한 종목 비중 자체가 낮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기존의 보수적이고 방어적인 위험관리 차원의 운용에 그치지 않고 투자자의 의사결정을 바꿀 만큼의 재무적 요인으로서 평가 지표 및 평가 결과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 공통적 시사점

아직 ESG 평가 기준이 표준화되었다거나 공통되는 기준이 없는 관계로, 평가 기관마다 상이한 평가 지표와 그에 따른 결과로 인해 기업도 ESG 평가에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한국에서는 ESG 업무에 투입되는 인력이나 비용이 많지 않고 관련한 업무 시스템이나 프로세스도 아직 정착되지 않아 해당 업무 담당자의 맨파워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이러한 상이한 평가 지표는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문제는 ESG 평가에 잘 대응할 수 있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을 나누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즉, 인력과 자금이 비교적 넉넉한 대기업은 ESG 평가 작업에 잘 대응할 수 있어 좋은 ESG 평가 결과를 받지만,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은 평가 결과 역시 좋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오랜 기간에 걸쳐 만들어진 해외의 ESG 평가 기준을 당장에 국내에 그대로 들여와서 따르라고 하기에는 실무상 어려움이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실효성이 있는 ESG 평가 지표 항목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인 ESG를 받아들이고 모든 기업에서 완전히 정착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바, 현재가 과도기임을 고려하여 ESG 평가에 대응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무조건적으로 외부 평가 기관이 만든 외부 기준만으로 따르기보다는, 기업들 스스로가 중심이

되어 ESG 체계와 평가 기준을 만들어 대응하는 것도 고려해 볼 사항이다.

나. 국내외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사례 분석

앞서 연구 분석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일부 산업군의 대표적인 기업들을 선정하여 이들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직접 평가해 보고 기업의 정보 공개 또는 ESG 기준에서 보완할 부분을 분석해보았다. 산업별로 공개하는 정보나, 중요한 이슈(material issue)에 차이가 있으므로 연구회에서는 IT산업, 자동차산업, 미디어·엔터테인먼트 등 세 가지 산업을 선정하였다. 기업들은 각자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나, 동종업계 간 비교·분석을 통해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1) IT산업

ESG 경영이 확산되면서 IT 기업들 또한 데이터 센터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사회적 책임 강화 등 비재무적 가치 관리를 시작했다. IT 분야에서는 해외의 Meta와 국내의 카카오를 분석 대상으로 선택하여 해당 기업의 홈페이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지지하는 프레임워크 등 공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ESG 경영 및 관련 활동을 탐구하였다. 더불어 '360.esg' 연구회의 관점에서 바라본 개선점을 논의하고 현재의 ESG 정보 공시에 활용되는 각종 보고서 작성 방향성에 관한 논의 내용을 담았다.

가) Meta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운영하는 Meta는 대형 글로벌 기업임과 동시에 수많은 개인 정보와 데이터를 다루는 기업으로, 이와 관련된 정보를 다양한 형식으로 공시한다. 또한 별도 인권 섹션을 만들어 ESG 보고서와는 별도로 인권 보고서를 발간하며, 이외에도 홈페이지에 내부 정책, 활동, 정보 등을 게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Meta 인권 보고서에는 COVID-19 팬데믹 사태 속 직원들의 생명 및 건강을 포함한 인권 보장 내용이 담겨 있으며, Meta의 제품 및 서비스와 연관성이 있는 특정 국가, 지역, 단체 등에서 발생한 인권 문제도 언급한다. 이외에도 데이터 보안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별도 웹 페이지를 구성하여 관련 정책과 활동을 공시하고 있다.

나) 카카오

카카오는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비즈니스로 시작하였으나 현재는 전자상거래, 금융, 게임, 각종 콘텐츠

츠 사업으로 영역이 확장되었다. 따라서 특정 사업 영역에 대한 특성을 드러내기보다 카카오 그룹 내 사업 전반에 대해 서술하는 형식으로 보고서를 구성한다. 또한 사업 전반에 걸쳐 social 영역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이는 사항들을 포함하였으며, 홈페이지의 디지털 권리, AI 윤리 등에 대한 별도 섹션에서 데이터 및 프라이버시에 관한 내부 정책과 활동을 소개한다. ESG 보고서 상에서도 개인정보, 데이터 보안 및 콘텐츠 다양성, 중요 발언 근절 등의 디지털 윤리 등에 대한 각 사내 정책과 가이드라인들을 간략히 소개하고 있으나, Meta와 비교했을 때 내용이 제한적이고 일반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다) 중대성 평가결과 비교

Meta와 카카오는 유사한 플랫폼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각 기업에서 수행한 중대성 평가 결과를 통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ESG 이슈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다. 두 회사 다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과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을 두 개 축으로 하여 중대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Meta에서는 Critical/Very Important/Important 3개로 이슈를 분류했으며, 총 28개 이슈 중 8개 이슈가 Critical 카테고리에 포함되었다. 카카오에서는 총 32개 관련 이슈 중 10개를 중요 이슈로 선정했다. 카카오는 Meta와 달리 비즈니스 측면에서 기술혁신, 이용자 만족도, 제품 및 서비스 품질에 대한 내용도 이슈풀에 포함시켰다.

라) 시사점

유형의 재화를 생산하지 않는 IT 기업의 경우, 건설업, 제조업, 운송업 등 타 산업군이 발생시키는 부정적 외부효과(환경오염, 중대재해 발생 등)와 직접적 연관이 적어서 ESG 대응에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Meta와 카카오 모두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스템이 운영되기 때문에 대형 데이터 센터 운영 및 유지 시 다량의 온실가스 배출은 불가피하다. 해당 플랫폼의 사용자가 증가하면 그에 비례하여 사용하는 에너지와 배출하는 온실가스 또한 증가하게 된다. IT 기업들도 앞다투어 탄소중립, 더 나아가 탄소 네거티브를 선언하는 이유가 이해되는 대목이다. 결국 기업이 지속가능성에 가장 크게 기여하기 위해서는 제품 및 서비스 사용량을 무한정 증가시키지 않아야 하는데, 이는 기업 및 경제 성장과 결부되어 있어 강한 반발을 불러올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 기업들이 추가 성장 및 추가 이익을 포기할만한 인센티브가 부재한 상태로 단순히 지속가능성을 위해 변화를 꾀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를 대체할 새로운 사회·경제적 체계가 구축되지 않는 이상 기업 운영 체계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기업

이 현상 유지 수준의 성장 정도만 고려한다 할지라도 더 깊은 고민이 수반될 것이다. 물론 파타고니아의 '이 재킷을 사지 마세요' 슬로건을 제시한 파타고니아와 같은 사례도 존재하지만, 이는 아주 특수한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편, IT 기업이 사업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 및 역량으로 탄소배출 등 기후위기 및 정의로운 전환 이슈가 사회적 어젠다로 부상할 수 있도록 플랫폼, 공급망, 영향력을 적극 활용하여 ESG에 대응할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적 어젠다의 확산이 가장 빠르게 일어나는 곳이 SNS 등의 소통 플랫폼이므로, 사회적(social) 측면에서 IT 기업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다양한 정보와 의견 교류가 이루어지는 플랫폼 특성상, 이들의 사회적 측면의 역할 수행은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IT 기업에서 기후위기나 정의로운 전환에 적극 대응할 수는 있으나 기후위기 부정론, 소비주의 장려 등의 내용의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유통되지 못하게 될 경우, 법적 권리 침해 문제의 가능성이 있다. Meta는 거짓 정보 최소화를 중대성 항목으로 포함하고 야생동물 밀거래 방지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카카오는 표현의 자유를 조금 더 강조하고 있으며, 이용자 안전을 위한 '카톡 안녕가이드'를 제시하고 있다. Meta에 비해 카카오는 웹툰, 웹소설 등 제공하는 콘텐츠 서비스의 범위가 넓지만 콘텐츠의 정치적 공정성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Meta와 카카오 모두 다양성 및 포용성의 가치에 대한 언급은 하고 있으나 임직원 대상이 아닌 콘텐츠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의 부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카카오의 경우 여성향/남성향 콘텐츠 분류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젠더 고정관념이나 성차별, 외모지향, 혐오/증오를 부추기는 콘텐츠에 대한 필터링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이는 기업 입장에서 화제성 혹은 '잘 팔리는 콘텐츠'를 포기할 수 없다는 점, 해당 콘텐츠 상의 제한 등이 있을 경우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도 가치충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외에도 카카오 보고서에서 사회 일반과 연관 지을 수 있는 사업 내용이라면 가치창출과는 별개로 모두 social 부문으로 포함시킨다는 인상을 받았다. 예를 들어 카카오뱅크의 mini 서비스는 청소년을 타깃으로 하여 간소화된 본인 인증 절차로 보다 쉽게 디지털 금융에 접근가능한 신규 서비스인데, ESG 보고서의 social 활동으로 포함되었다. 하지만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일반적인 비즈니스 활동과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ESG 보고서에서 다룰 만큼의 가치를 창출했는지

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 마찬가지로 이용자 만족도 향상 방안으로서의 AI 도입 고객센터 운영, VOC 반영에 관한 내용도 social 부문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경영 활동 일반 혹은 기업 이익 증대를 위한 일반적인 활동으로 이해된다. 이렇게 기업들의 일반 비즈니스 활동이 모두 social 부문에 포함될 수 있다면, ESG 보고서에 S 부문이 매우 방대해질 수 있고 전체 보고서 구성에 다소 불균형이 있을 수 있다.

〈표 1〉 Meta와 카카오의 중대성 평가 분석(※ 중요이슈는 밑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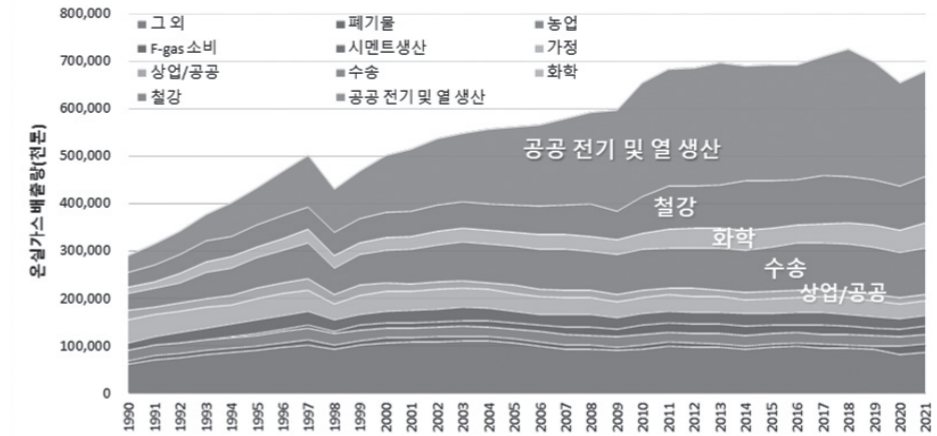
| | Meta | 카카오 | 공동 사항 | |
|----|------|--|--|---|
| 환경 | 이슈 | · Net Zero Commitment · 넷제로 · Data Center Efficiency · 데이터 센터 효율성 · Water Stewardship · 물 스튜어드십 · Climate Change 기후변화 · Operational Waste · 운영상의 폐기물 | · 기후변화 리스크 대응 · 에너지 효율 관리 · 제품 및 서비스 친환경성 · 효율적 수자원 관리 · 환경경영체계 확립 · 폐기물 저감 · 생태계 보호 | 두 기업 모두 에너지 효율과 같이 사업과 밀접하게 관련 있어 보이는 항목에 대해서도 비즈니스 영향도를 낮게 선정한 점으로 미뤄 보아, 현재로서는 에너지 소비가 두 기업에게 사업상의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만약 탄소세가 높게 책정될 경우 판도가 바뀔 가능성 있음 |
| | 시사점 | → 기후변화, 데이터 센터 효율성 등 환경 관련 이슈의 이해관계자 영향도는 높으나 비즈니스 영향도는 전부 낮게 도출됨 | → 기후변화 관련 이슈는 중대 이슈에 포함되지만 그 외의 환경 관련 항목은 메타와 마찬가지로 비즈니스 영향도가 낮게 도출됨 | 두 기업 모두 에너지 효율과 같이 사업과 밀접하게 관련 있어 보이는 항목에 대해서도 비즈니스 영향도를 낮게 선정한 점으로 미뤄 보아, 현재로서는 에너지 소비가 두 기업에게 사업상의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만약 탄소세가 높게 책정될 경우 판도가 바뀔 가능성 있음 |
| 사회 | 이슈 | · Community Investment and Engagement · Accessibility · Access to Internet · Data Privacy and Security · Small Business Support · Minimizing Spread of False Information · Human Rights · Human Capital/ Employee Relations/ Talent Development · Employee Engagement ·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DEI) · Social and Environmental Justice | · 노동권행 및 임직원 인권 ·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보완 · 사회/환경적 문제해결 기여 서비스 개발 · 인재영입 및 성장지원 · 파트너 동반성장 · 소셜임팩트 창출 · 임직원 복지 개선 및 공정한 보상 · 표현의 자유 보호 · 이용자 안전 · 임직원 안전/보건 · 건강한 IT 생태계 조성 · 다양성 및 포용성 · 디지털 접근성 & 리터러시 · 시 윤리 · 협력사 ESG 전파 | |

| | | | |
|------|-----|---|---|
| 사회 | 시사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랫폼 사업 특성과 연계하여 데이터 및 정보 보안 항목이 포함되었고 직접적인 사업영역을 넘어선 사회에 대한 영향력 관련 항목들도 다루어짐 → DEI도 언급되었으나, 내부 구성원 측면이 아닌 넷플릭스나 디즈니처럼 콘텐츠에 반영되지는 않음. 콘텐츠를 직접 생산하는 기업이 아닌 공유 플랫폼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DEI 추구할 때 정교하게 접근할 필요 있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eta에서는 잘못된 정보 최소화를 강조한 반면, 카카오페이는 표현의 자유 보호를 우선시하며 정보와 관련해 Meta의 입장 대척점에 있는 이슈를 가져가고 있음 → Meta와 마찬가지로 다양성 및 포용성 이슈가 카카오 내부적으로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미흡 → 협력사 및 파트너 관련 항목 포함 |
| | 이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ransparent Reporting · Fair and Responsible Tax Practices · Corporate Governance · Trust and Integrity · Competitive Behavior · Public Policy Engagement and Advocacy · Stakeholder Engagement · Supplier Engagement and Responsible Sourcing · ESG Product Solutions · Content Governance · Risk Management · Responsible Product Design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한 거래 및 경쟁 · 윤리경영 · 컴플라이언스 · 전사 리스크 관리 · 이사회 구성 및 운영의 투명성 · 주주 가치 증진 및 소통 강화· 이해관계자 참여 |
| | 시사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eta 플랫폼을 통한 콘텐츠 확산 시 비인간적 /폭력적 내용을 배제하고 내부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제품 및 서비스 구현에 대해 다룸 | |
| 거버넌스 | 이슈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 혁신 · 이용자 만족도 제고 · 제품/서비스 품질 |
| | 시사점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G와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항목들로 위 3가지 항목을 중대 이슈 풀에 포함하고 있으나, 결국 시장에서 기술력, 제품 및 서비스 퀄리티, 고객만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업 영위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필요 있음 |

2) 자동차산업

가) 자동차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자동차 업체들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살펴보기 전에 자동차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살펴보았다. 2021년 기준 한국의 탄소배출량 총 6.8억 톤 중 수송부문에서 약 14%를 차지했다. 지난해 대비 배출량이 +2% 증가했는데 팬데믹 이후 이동수요 증가 영향 때문이었다.



〈그림 1〉 2021년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자동차산업의 치명적인 문제는 생산과정에서 배출하는 것보다 판매 후 소비자의 주행 과정에서 배출하는 간접배출이 절대적으로 크다는 점이다.

| (tCO2-eq, tCO2-eq/%) | | GM | VW | Toyota | HM |
|----------------------|----------|--------------|-------------|-------------|-------------|
| 2020 | socpe1+2 | 3,813,946 | 7,140,000 | 5,680,000 | 2,396,316 |
| | scope3 | 296,411,327 | 411,130,000 | 397,940,000 | 100,536,484 |
| 2021 | socpe1+2 | 3,403,600 | 7,160,000 | 4,900,000 | 2,384,204 |
| | scope3 | Not Reported | 364,140,000 | 341,350,000 | 101,790,793 |

〈그림 2〉 자동차산업 주요 기업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 2, 3)

자동차산업에서 탄소 감축을 위한 주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1) 내연기관 차량의 전기화(전동화), (2) 공급망 탈탄소화 : 재생에너지 확대, (3) 자원 사용의 순환체계/지속가능성 강화이다. 이 점에 중점을 두고 완성차 업체들의 탄소 감축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나) 완성차 업체들의 탄소 감축 현황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내용을 통해, 부문별 주요 완성차 업체들의 현황을 비교, 분석해 보았다.

내연기관 차량의 전기화(전동화)

| (tCO ₂ -eq,t/대,천대) | | GM | VW | Toyota | HM |
|-------------------------------|----------|--------------|-------------|-------------|-------------|
| 2020 | scope1+2 | 3,813,946 | 7,140,000 | 5,680,000 | 2,396,316 |
| | scope3 | 296,411,327 | 411,130,000 | 397,940,000 | 100,536,484 |
| | 대당배출 | 0.559 | 0.779 | 0.634 | 0.642 |
| 2021 | scope1+2 | 3,403,600 | 7,160,000 | 4,900,000 | 2,384,204 |
| | scope3 | Not Reported | 364,140,000 | 341,350,000 | 101,790,793 |
| | 대당배출 | 0.541 | 0.927 | 0.641 | 0.616 |
| 2019 | 총판매량 | 7,718 | | 8,977 | 4,476 |
| | 친환경차 | 86 | | 1,632 | 89 |
| | (%) | 1% | | 18% | 2% |
| 2020 | 총판매량 | 6,826 | 9,156 | 8,958 | 3,745 |
| | 친환경차 | 203 | 450 | 1,922 | 129 |
| | (%) | 3% | 5% | 21% | 3% |
| 2021 | 총판매량 | 6,295 | 7,725 | 7,646 | 3,891 |
| | 친환경차 | 493 | 703 | 1,957 | 190 |
| | (%) | 8% | 9% | 26% | 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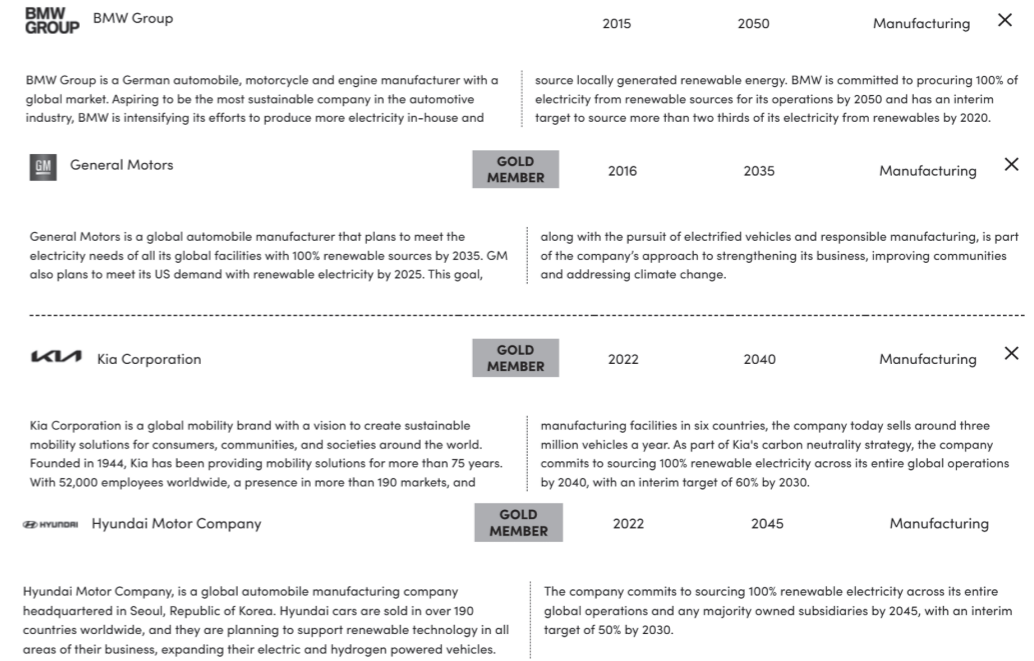
〈그림 3〉 주요 메이커별 전체 판매량과 친환경차 판매량, 비율 추이

전동화 전환의 초기이다 보니 대당 배출량의 유의미한 변화를 판단하기 어려웠다. 또한 친환경차에 대한 정의, 분류가 회사마다 달라 회사의 보고 데이터를 단순 차용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데이터, 기준 지표의 표준화 필요성을 실감했다.²

공급망 탈탄소화 : 재생에너지 확대

재생에너지 비율을 기재한 곳은 GM 외 없었고, 그나마 데이터를 표기한 GM도 완전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었다. 도요타, 현대차의 경우 직접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구축한 부분에 대한 텍스트만을 제공해서 전체적으로 재생에너지 구축, 발전 비율의 확대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수치적 확인이 불가능했다. 전반적으로 회사마다 에너지 사용량과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단위를 서로 다르게 표기하여 비교,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2 GM은 LPG차량도 친환경차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도요타는 Hybrid-EV 판매가 많은 점이 친환경차 비율에 반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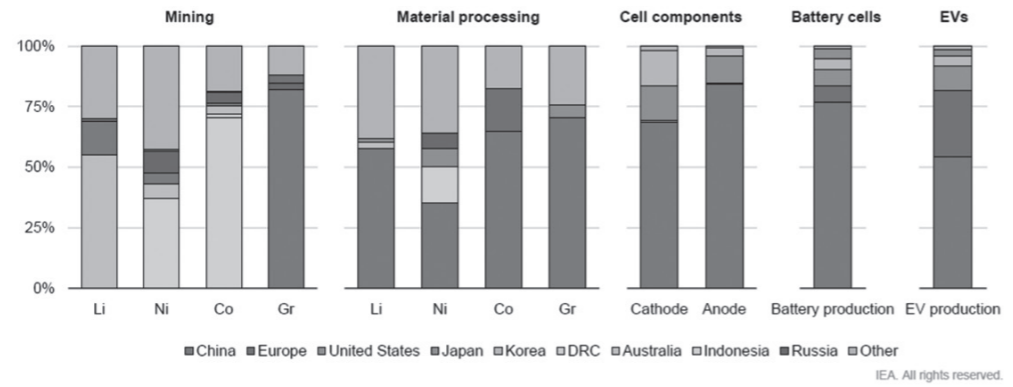


〈그림 4〉 RE100 선언한 자동차 기업들

자원 사용의 순환체계/지속가능성 강화

EV 내 배터리 소재 수급 불확실성 확대, 러-우 전쟁발 부품/소재 수급 차질 부각에 따라 자원 사용의 지속가능성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EV에 사용되는 자원 사용의 선형 체계를 향후 순환 체계로 바꾸고 자원 사용량을 줄이는 것 또한 탄소 감축과 환경의 지속가능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완성차 업체들의 경우 올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는 주로 지난해의 활동 내용에 대해 기록하기 때문에 아직 자원 사용의 순환에 대한 시장 조사나 전략을 언급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최근 배터리/OEM의 자원 업스트림 사업, 폐배터리 자원 추출 및 재활용/재사용 산업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어 내년 보고서에 관련 내용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 Li: 리튬, Ni: 니켈, Co: 코발트, Gr: 흑연, Cathode: 양극재, Anode: 음극재
 자료: I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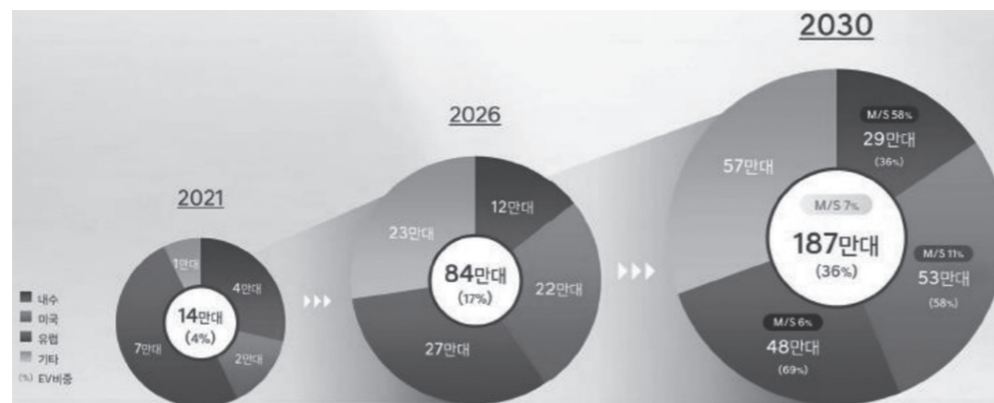
〈그림 5〉 EV 밸류체인별 의존도 현황

다) 현대차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분석

국내 대표 자동차 기업인 현대차의 2021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분석해 보았다.

보고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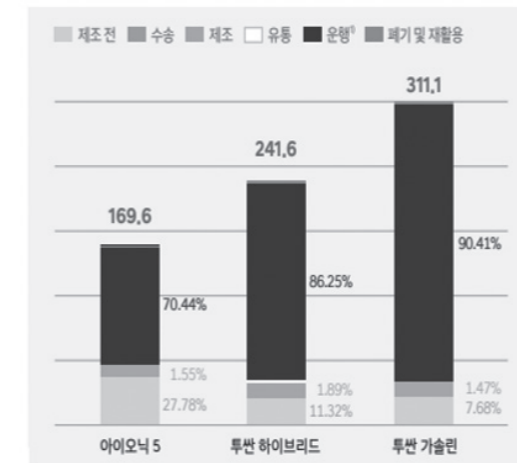
2021년 현대차는 전동화 전환 목표와 계획을 발표했다. EV 판매 목표는 2021년 14만 대, 2026년 84만 대, 2030년 187만 대이다.



〈그림 6〉 2021 현대자동차 EV 판매 목표

현재 EV 전체 시장 내 점유율이 7%, 전기차 판매 비중 36%이며, 현대차 11차종 및 제네시스 6차종을 출시할 계획이다. 또한 LCA 분석을 통해 전기차의 실제 배출량 낮음을 증명, 확인했다.

전과정 단계별 지구온난화 영향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 gCO₂-eq/km)



* 운영 단계에는 차량의 동력이 되는 에너지를 생산·유통하는 과정(Well-to-Tank)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림 7〉 현대자동차 주요 모델 LCA 분석결과

이슈운 점

Scope 2 기준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과 그에 맞춘 감축 활동 중심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실제로 Scope 3, 즉 주행 과정에서의 배출량이 총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배출량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또한, 탄소중립 선언과 감축경로, 계획에 대해 스토리텔링은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실제 성과나 그 효과가 나타났는가에 대해서는 아직은 회의적이다. 그런 위상이 되지 않으려면 올해, 내년의 활동과 감축 성과(2023년 보고서로 확인)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회사 계획

탄소 저감과 관련한 정량 데이터가 부족하여 추가 정보에 대한 요청이 많은 편이다. 따라서 중장기 목표치와 이행방안에 대해, 좀 더 촘촘하고 구체적이고 보다 적극적인 로드맵 정보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이행 현황에 따른, 혹은 목표 달성에 따른 환경적 영향, 탄소 배출 예상 규모 수치화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의 탄소중립추진팀에서 SBTi 인증 획득을 위해 기준에 맞추는 작업 추진 중이며, 이에 연계한 상세 세부 목표(상향) 조정이 예상된다. 조정작업 후 시장 및 투자자에 관련 내용 공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 테슬라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분석

보고 내용

가장 대표적인 전기자동차 회사 테슬라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분석해 보았다. 테슬라는 2030년까지 연간 2,000만 대를 판매(2021년 94만 대)하고, 연간 1,500GWh의 에너지 저장고를 배치(2021년 4GWh 대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모델 3과 모델Y에 대해서 LCA 평가를 진행하고, 그 외 다른 제품에 대해서는 Scope 1과 Scope 2 배출량을 산정했다. 테슬라 제품을 판매하는 국가(미국, 유럽, 중국, 호주 등)별로 EV(전기차)와 ICE(내연기관차) 차량의 배출량을 비교했다. 다른 자동차 회사는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미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는 테슬라는 태양광 시스템 설치와 같은 재생 에너지 발전 비율을 높이는 데 목표를 둔다.

아쉬운 점

Scope 3에 대해 소비 과정에서의 배출, 공급망에서의 배출 두 가지 범주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언급은 하고 있지만 학술적인 개념이고 추정치와 가정치 사용에 실제와 큰 오차가 생길 것을 우려해 Scope 3 배출량을 계산하지 않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값을 마지막에 부록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데이터에 대한 그래프나 그림이 부족해 눈에 띄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래프나 그림이 부족하다.

마) 시사점

자동차 업체들의 재무/비재무 정보 기본 지표는 “자동차 판매량”이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 영향으로 모든 업체들이 코로나 이전 수준을 하회하고 있었다. CO₂ 배출량의 경우, 판매 정체와 함께 배출량 규모도 단기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었다. 친환경차 판매 비중이 상승하고 있으나 아직 미미한 비중으로 해당 배출량 감축에 기여하는 바는 없었다. 또한 대부분 Scope 2 기준으로 대부분의 정보 공시하고 있으며 친환경차 범위도 자의적이었다.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공시 범위 지정 및 이러한 일관성 확보를 통한 비교 가능성 제고가 시급하다. 또한, 간접배출을 줄이기 위한 과제로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가 필수이나 의무사항이 아닌 만큼 재생에너지 관련 정보 자체가 턱없이 부족했다. 전기차로의 사업모델 전환 과정에서 공급망 안정성도 중요해지고 있으며 향후 자원 관리가 관건이다. 산업 특수성과 별도로, 지표 단위의 표준화를 통한 비교 가능성, 일관성 제고가 요구된다.

3) 미디어·엔터테인먼트산업

엔터테인먼트 미디어(E&M) 시장은 성장세가 뚜렷하다. 2021년에 10.4%, 2022년에 7.3% 성장하여 2.5조 달러 규모로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6년까지 연평균 4.6%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삼일회계법인, 2022). 그러나 미디어 기업은 제조, 금융 등의 산업과 달리 ESG에 대한 실천 방법과 논의가 미흡하다(박영주, 2021). 올해 국내 엔터테인먼트 회사로서는 첫 번째로 JYP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추가로 해외 사례로서 디즈니와 넷플릭스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CSR 리포트, ESG 보고서)를 비판적으로 분석해 보고 각각의 보고서가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미디어·엔터테인먼트산업에 대한 SASB 공시 기준 분석

SASB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산업과 인터넷미디어산업으로 나누어 공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SASB 기준 MEDIA & ENTERTAINMENT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2018)에 따르면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 뉴스, 음악, 어린이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여 케이블 또는 방송미디어를 통해 콘텐츠를 배포할 수 있다. 책, 신문, 정기간행물, 라디오 등도 포함하며, 인터넷을 통한 콘텐츠 배포와 관련한 사항은 인터넷 미디어 및 서비스에서 다루고 있다. 주요 주제는 미디어 다원주의, 저널리즘 무결성, 지적재산권 보호 및 불법복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아래와 같다.

미디어 다원주의

SV-ME-260a.1. (1) 경영진, (2) 전문가 (3) 기타 모든 직원에 대한 성별 및 인종/민족 비율
SV-ME-260a.2. 뉴스 미디어 콘텐츠의 다원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설명

저널리즘 무결성

SV-ME-270a.1. 명예훼손 및 비방 관련 법적 소송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 총액
SV-ME-270a.2. 임베디드(기업에 내재된) 광고 수익
SV-ME-270a.3. (1) 진실성, 정확성, 객관성, 공정성 및 책임성, (2) 콘텐츠의 독립성 / 잠재적 편견의 투명성, (3) 개인 정보 보호 및 제한과 관련된 뉴스 프로그래밍의 저널리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접근 방식

지적재산 보호 & 미디어 불법복제

SV-ME-520a.1. 지적 재산(IP)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접근 방식에 대한 설명

해의 사례에서 기준으로 삼은 또 다른 SASB 기준 산업은 인터넷미디어 서비스이다. SASB 기준 INTERNET MEDIA & SERVICES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2018)에 따르면 인터넷 미디어 부문에는 검색 엔진 및 인터넷 광고 채널, 온라인 게임 및 소셜 미디어와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제공하는 회사가 포함되며 주로 무료 콘텐츠에 대한 온라인 광고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운영된다. 주요 주제는 하드웨어 인프라의 환경 발자국, 데이터 개인 정보와 광고 표준 및 표현의 자유, 데이터 보안, 직원 관련, 지적 재산권 보호 및 경쟁 행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아래와 같다.

하드웨어 인프라의 환경발자국

TC-IM-130a.1. (1) 총 에너지 소비량, (2) 전력망 전력 비율, (3) 재생 가능 비율

TC-IM-130a.2. (1) 총 회수된 물, (2) 총 소비된 물, 백분율

TC-IM-130a.3. 데이터 센터 요구 사항에 대한 전략적 계획에 환경 고려 사항 통합에 대한 논의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 광고 표준 및 표현의 자유

TC-IM-220a.1. 행동 광고 및 사용자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 및 관행에 대한 설명

TC-IM-220a.2. 정보를 2차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용자 수

TC-IM-220a.3. 이용자 개인정보 관련 법적 소송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 총액

TC-IM-220a.4. (1) 사용자 정보에 대한 법 집행 기관의 요청 수, (2) 정보가 요청된 사용자 수, (3) 공개된 비율

TC-IM-220a.5. 핵심 제품 또는 서비스가 정부에서 요구하는 모니터링, 차단, 콘텐츠 필터링 또는 검열의 대상이 되는 국가 목록

TC-IM-220a.6. 콘텐츠 삭제에 대한 정부 요청 수, 요청 준수 비율

데이터 보안

TC-IM-230a.1. (1) 데이터 침해 수, (2) 개인 식별 정보(PII) 관련 비율, (3) 영향을 받는 사용자 수

TC-IM-230a.2. 제3자 사이버 보안 표준의 사용을 포함하여 데이터 보안 위험을 식별하고 해결

하는 접근 방식에 대한 설명

직원 채용, 포용 및 성과

TC-IM-330a.1. 외국인 근로자 비율

TC-IM-330a.2. 백분율로 표시한 직원 참여도

TC-IM-330a.3. (1) 경영진, (2) 기술 직원 및 (3) 기타 모든 직원의 성별 및 인종/민족 그룹 대표 비율

지적 재산권 보호 및 경쟁 행위

TC-IM-520a.1. 반경쟁행위 규제 관련 법적 소송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 총액

| 주제 | SASB코드 | 지표 | 보고 위치 | 보고 내용 |
|------------------------|--------------|---|-------|---|
| 하드웨어 인프라의 환경 발자국 | TC-IM-130a.1 | (1) 에너지 총 사용량, (2) 전력망 전력 비율, (3) 재생 가능 비율 | 42 | 21년 해역을 포함해 전역 1,482MWh를 사용하였으며, 이중 94%인 1,393MWh, 한국 내 사용전력 전량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였습니다. |
| | TC-IM130a.2 | (1) 총용수취수량, (2) 총용수 사용량, 물 스트레스가 높은 수원 지역의 비율 | - | 21년 총용수 취수량은 6,026m³ 입니다. |
| 개인정보보호, 광고 표준 및 표현의 자유 | TC-IM-220a.1 | 맞춤형 광고 및 사용자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 및 관행에 대한 설명 | 58 |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을 준수하며, 이와 관련된 내부관리체계 및 방침을 수립하였습니다. |
| | TC-IM-220a.2 | 2차 목적으로 개인 정보가 이용된 건수 | - | 0건이며, JYP엔터테인먼트는 이용자가 사전에 동의한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활용합니다. |
| 정보 보안 | TC-IM-220a.3 | 이용자 개인정보 관련 법적 소송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 총액 | 58 |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및 개인정보 관련 법적 소송은 없었으며, 이에 따라 금전적 손실 또한 0원입니다. |
| | TC-IM-230a.1 | (1) 데이터 침해 수, (2) 개인 식별 정보(PII) 관련 침해 비율, (3) 이에 영향을 받는 사용자 수 | 58 | 정보 보안과 관련한 피해 발생은 최근 3년간 0건입니다. |
| 직원 채용, 포용 및 성과 | TC-IM-330a.1 | 외국인 근로자 비율 | 49 | 외국인 직원은 전체의 1.9%입니다.(2021년 기준) |
| | TC-IM-520a.1 | 반경쟁행위 규제 관련 법적 절차로 인한 금전적 손실 총액 | - |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이 없어 이로 인한 법적 절차로 인한 금전적 손실액은 0원이며, 상세 내용은 2021년 JYP엔터테인먼트 사업보고서 '03. 제재 등과 관련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미디어 다원주의 | SV-ME-520a.1 | 회사 콘텐츠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보장함에 대한 설명 | 24 | JYP엔터테인먼트는 자체사 JYP디플러시즘을 통해 창작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체계적으로 보호합니다. |
| | SV-ME-260a.1 | (1) 경영진, (2) 사무직/기술직, (3) 기타 직원에 대한 성별, 인종별, 민족별 비율 | 49 | 21년 기준 여성 직원의 비율은 60%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본 보고서 IV.2.(1) 임직원에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
| | SV-ME-260a.2 | 뉴스/미디어 콘텐츠 내 Pluralism 관련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설명 | 59 | 물리적 지역적 제한없이 다양한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공역 포함 및 다국어 지원, 비대면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

〈그림 8〉 SASB 대조표

나) JYP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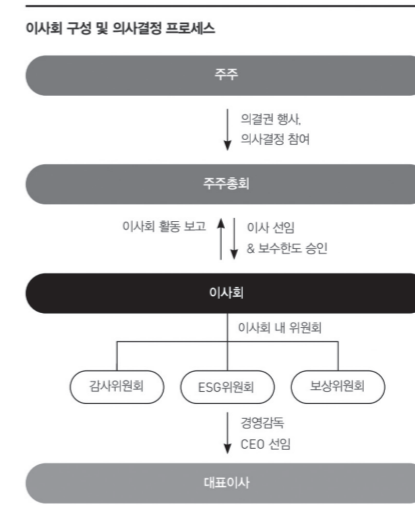
보고 내용

JYP는 국내 엔터테인먼트 기업 최초로 ESG 보고서를 발간했으며, RE100을 이행하였다. 매출은 크게 음반 사업, MD 판매 및 IP 라이선싱, 공연 등 매니지먼트로 나눌 수 있다. 매출 구성비는 각 58%, 28%, 18%를 차지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 영역에서는 '기후변화 대응'과 '친환경 가치 확산'을 중심으로 환경경영을 추진한다. 체계적이고 빠른 대응을 위해 ESG 협의체 산하에 환경 전담조직을 구성하였다. 환경 전담조직은 전사적 에너지 절감 목표를 수립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이행과정을 관리하며, 친환경 가치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의 역할을 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사용량 저감과 재생에너지 전환을 통해, 국내 엔터테인먼트 기업 중 첫 번째로 RE100을 이행하였다. 또한 2020년부터 글로벌 환경 네트워크 '1% for the Planet' 멤버로 활동하고 있다.



〈그림 9〉 JYP의 환경 경영



〈그림 10〉 JYP의 이사회 구성 및 의사결정 프로세스

사회 영역에서는 JYP의 핵심 경쟁력인 '인성과 실력 기반의 아티스트 육성체계'를 통해 Leader's code에 기반한 인성과 윤리 가치를 지닌 아티스트를 육성한다. 또한 안전한 근무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임직원 다양성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2년 상반기 기준, 전체 임직원 중 약 62%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2년 상반기 기준 여성 팀장 비율 42%이다.

지배 구조 영역으로는 2022년 3월 여성 사외이사를 신규 선임하여, 이사회 내 여성 이사 비율은 25%이다. 또한 이사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이사회 내 사외 이사 비율을 50% 수준으로 확대하였다.

시사점

JYP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친환경' 활동, '친환경' 재료, '친환경' 콘텐츠 등 정확한 환경 영향을 파악하기 어려운 애매한 용어를 지나치게 자주 사용하고 있다. 특히 '친환경' 콘텐츠와 같은 경우 친환경에 대해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유튜브 등 디지털 콘텐츠를 생산해 이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면 트래픽이 증가하며 탄소 배출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친환경' 콘텐츠가 되려면 적어도 촬영 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는 책임져야 한다. 예를 들면 다수의 촬영팀이 장거리 이동을 하며 배출한 탄소 등을 계산하고 책임져야 한다. 환경적 콘텐츠를 다뤘다고, '친환경' 콘텐츠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같은 맥락으로 친환경 플라스틱을 이용한 MD 제작과 에코백, 텀블러와 같은 굿즈 생산도 친환경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

다) Disney CSR report 분석

보고 내용

보고서는 2020년 10월 4일부터 2021년 10월 2일까지의 내용을 보고하고 있다. 데이터는 SASB, GRI, CDP, TCFD, UN SDGs 등의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보고되었다. 디즈니에서는 인적자본 관리, 다양성, 평등, 포용, 기후변화(human capital management,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and climate change) 문제를 포함한 주제를 CSR 초점 영역으로 선택하고 우선순위 문제로 선정하였다. 디즈니의 목표는 이야기의 힘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inspire a better world through the power of stories)이며 기업, 이야기, 제공 콘텐츠 및 커뮤니티에서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을 수용함으로써 소속감의 세계를, 지구를 보호하기 위한 실천을 통해 균형을 이루는 세계를, 지역사회와 특히 어린이 지원을 통해 희망의 세계를 만들고자 한다. 특히 지구를 보호하기 위한 균형을 이루는 세계를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물과 바다, 쓰레기, 재료, 지속가능한 설계 부문에서 실천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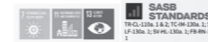
| World of Belonging | | Diversity, Equity & Inclusion | | | |
|---|---|--|--|--|---|
| Through authentic stories, experiences, and products, and our new <i>Reimagine Tomorrow</i> digital destination, we champion representation in media and entertainment, advance opportunities for diverse communities, and embrace a diverse and inclusive workplace. | | | | | |
| DEI Transparency Enhanced through our new Diversity Dashboard | 46% of Employees Self-identify as people of color in the U.S. ¹ | 50% of Employees Self-identify as women globally | 7 of 11 Board Directors Represent gender, racial, or ethnic diversity, including Chairman & committee chairs | HBCU Engagement Deepened through Disney on the Yard launch | Inclusion Standards Introduced to drive representation in front of and behind the camera |
| World in Balance | |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 | | |
| Through our 2030 Environmental Goals, we are working to reduce emissions, use and waste less, lower the impact of our products, build sustainably, and inspire communities to protect the magic of nature together. | | | | | |
| Solar Arrays Installed On Castaway Cay and at Hong Kong Disneyland | New Solar Announced Including two new 75MW facilities in Florida, expected in 2023 | Plastic-free Packaging Introduced for our line of classic dolls | 61% or 80,000+ Tons Of total Company operational waste diverted from landfill | Sustainable Seafood Made up 95% of seafood served in our U.S. parks, resorts, and cruise line ² | \$120M+ Invested In community conservation efforts since 1995 |
| World of Hope | | Community | | | |
| We support communities around the world in ways only Disney can, leveraging the power of our stories and beloved characters, reach of our platforms, and employee and cast member talents. | | | | | |
| \$290M+ Charitable Giving Total in FY21, including \$150M+ directed to underrepresented communities ³ | 400,000+ Disney-themed products delivered to 500+ children's hospitals in the U.S. & Canada | 5 Hospital Installations Brought Disney experiences to 4 children's hospitals in the U.S. and 1 in Singapore | 320+ Tons Food Donated By Disney Parks to support communities impacted by COVID-19 (~540,000 meals) | 340,000+ Service Hours Contributed by employees and cast members through Disney VoluntEARS | Nearly \$95M Matched In employee giving through Matching Gifts & VoluntEARS grants in the past decade |

<그림 11> Disney CSR 보고서 주요 성과

2030 Environmental Goals

배출(Emissions)

- 온실가스 직접배출 0
- 100% 탄소 재료 전기
- 저탄소 연료 혁신
- 기후자연 솔루션에 대한 투자



물과 바다(Water & Oceans)

- 지역화된 유역 관리 전략 구현
- 지속 가능한 해산물의 공급원



쓰레기(Waste)

- 소유하고 운영하는 공원과 리조트에 쓰레기 매립 제로



재료(Materials)

- 재활용, 인증 또는 검증된 지속 가능한 종이 및 목재 사용
- 제품 및 포장에 재생 플라스틱 30% 이상 사용
- 재사용, 재활용 또는 퇴비를 위한 포장 설계
- 섬유에 재활용되거나 지속 가능한 내용을 사용
- 제품의 지속 가능한 생산 프로세스



지속가능한 설계(Sustainable Design)

- 새로운 프로젝트는 재료에 가까운 온실가스 배출을 달성할 수 있도록, 물 효율성을 최대화하도록, 재료 웨이스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
- 미국과 유럽의 새로운 건설 프로젝트에 건설 폐기물의 90% 전환 달성



<그림 12> Disney 2030 환경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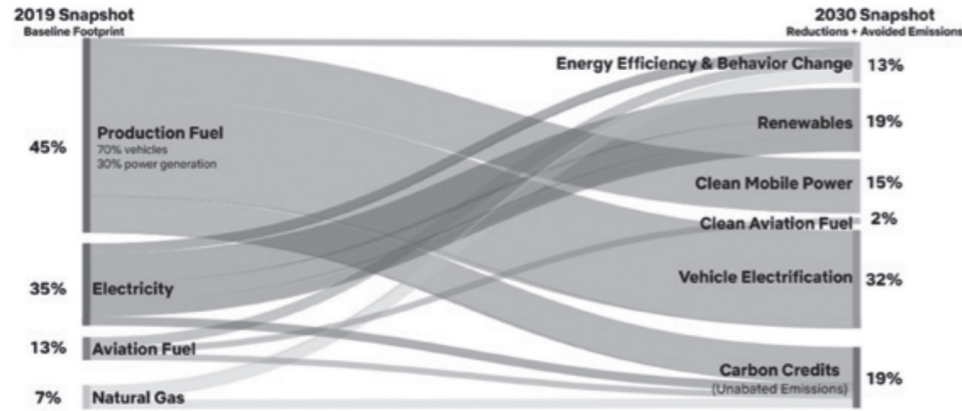
시사점

디즈니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ESG report보다 CSR 보고서의 성격이 강해 보였다. 또한 목표나 성과에 대한 내용을 대부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거나, 가늠하기 어려운 수치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성별 및 인종 다양성 부문에 대한 평가에서 전년 대비 크게 발전하고 있지 않다. SASB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인터넷 미디어 서비스 산업 기준에 주목하다 보니 테마파크와 리조트, 레스토랑, 장난감, 소비재 제품 생산 등의 산업군은 상대적으로 적게 포함하고 있다.

라) Netflix ESG 보고서 분석

넷플릭스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역할을 하는 Netflix Environment, Social & Governance Report를 2019년부터 발간하기 시작하여 최근 3회차인 2021년 버전을 보고했다. 넷플릭스는 SASB의 인터넷 미디어 서비스,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산업군 기준을 사용하여 기업의 비재무성과를 보고한다.

Our Current 2030 Low-Carbon Transition Plan



〈그림 13〉 SASB의 인터넷 미디어 서비스,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산업군 기준

| TOPIC | ACTIVITY METRIC - INTERNET MEDIA & SERVICES | 2020 | 2021 | SASB CODE |
|---|---|-------------|--------------------------------------|--------------|
| ENTITY-DEFINED MEASURE OF USER ACTIVITY | Subscribers | 204 million | 222 million | TC-IM-000.A |
| TOPIC | ACCOUNTING METRICS - INTERNET MEDIA & SERVICES | 2020 | 2021 | SASB CODE |
| ENVIRONMENTAL FOOTPRINT OF HARDWARE INFRASTRUCTURE ¹ | Total energy consumed (MWh) ² | 26,196 | 33,407 | TC-IM-130a.1 |
| | Percentage grid electricity | 100% | 100% | |
| | Percentage renewable | 100% | 100% | |
| ENVIRONMENTAL FOOTPRINT OF REMAINING SCOPE 2 ³ | Total energy consumed (MWh) | 68,089 | 123,148 | |
| | Percentage grid electricity | 100% | 100% | |
| | Percentage renewable | 100% | 100% | |
| | Discussion of the integration of environmental considerations into strategic planning for data center needs | | See 'Our Footprint Boundary' section | TC-IM-130a.3 |

〈그림 14〉 SASB의 인터넷 미디어 서비스,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산업군 기준

넷플릭스 보고서의 대부분은 환경 부분이 차지한다. 탈탄소화 로드맵, 과학기반목표, 비즈니스연대 ESG투자자의날 개최, 기후변화 관련 스토리텔링 작품 등 지속가능성에 기반한 기업의 경영활동을 환경분야로 내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넷플릭스는 Yes and And라는 기후대응전략 슬로건 하에 3R; reduce; 탄소배출 2030까지 45% 감소, Retain 열대우림과 같은 생태계 보호, Remove 맹그로브 숲 등 생태계 재건 프로젝트 시행으로 대기 중 탄소 제거 등의 노력을 통해 2022까지의 탄소중립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넷플릭스는 SASB 기준에 따른 환경지표도 보고하고 있는데, 환경지표에 있어 스코프 1, 2에 대한 재생에너지 비율이 100%이며 탄소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서 콘텐츠 제작, 기업 운영, 스트리밍서비스에서 최적화(비용 효율; 현지 인력 고용, 카풀 지원금, 대중교통패스 제공, 캐시서버 운영 등), 전기화(Electrify, 모바일 배터리 사용, 전기차 무료 충전 제공 등), 친환경 에너지화(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 등)의 3단계 탄소 배출 저감을 실천하고 있다.

사회 영역에서 넷플릭스는 콘텐츠를 생산 유통하는 기업으로서, 스토리텔링에 있어 포용성과 다양성을 중시하며 지속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 'Breaking boundaries', 'Don't look up' 등 영화, 다큐멘터리, 드라마와 같은 다양한 장르 및 형식을 넘어 지속가능성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또한 성, 인종 등의 불평등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데이터 프라이버시, 광고 표현의 자유 등 TX-IM 220a1, a6에 해당하는 항목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보고 내용

| TOPICS | ACTIVITY METRIC - MEDIA & ENTERTAINMENT | 2020 | 2021 | SASB CODE |
|---|---|-------------|-------------|--------------|
| Total recipients of media and the number of subscribers | Subscribers | 204 million | 222 million | SV-ME-000.A |
| TOPICS | ACCOUNTING METRICS MEDIA & ENTERTAINMENT | 2020 | 2021 | SASB CODE |
| MEDIA PLURALISM* | Percentage of gender and racial/ethnic group representation for management, professionals, and all other employees | | | SV-ME-260a.1 |
| | Women (Global) | 48.7% | 51.7% | |
| | Women in management (Global) | 47.8% | 51.1% | |
| | Black/African Americans (US) | 8.6% | 10.7% | |
| | Black/African Americans in management (US) | 10.9% | 13.3% | |
| | Hispanics/Latinx (US) | 7.9% | 8.6% | |
| | Hispanics/Latinx in management (US) | 4.3% | 4.4% | |
| | Asians (US) | 24.0% | 23.5% | |
| | Asians in management (US) | 15.3% | 16.2% | |
| | American Indian or Alaska Native (US) | 0.3% | 0.3% | |
| | American Indian or Alaska Native in management (US) | 0.0% | 0.1% | |
| | Native Hawaiian / other Pacific Islander (US) | 0.5% | 0.5% | |
| | Native Hawaiian / other Pacific Islander in management (US) | 0.6% | 1.0% | |
| | Middle Eastern / North African (US) | 0.8% | 1.3% | |
| | Middle Eastern / North African in management (US) | 0.3% | 0.3% | |
| | Description of policies and procedures to ensure pluralism in media content | | | SV-ME-260a.1 |

〈그림 15〉 Netflix SASB기준에 따른 사회지표1(미디어 엔터테인먼트)

| TOPICS | ACCOUNTING METRICS - INTERNET MEDIA & SERVICES | 2020 | 2021 | SASB CODE |
|--|---|------|------|--------------|
| DATA PRIVACY, ADVERTISING STANDARDS & FREEDOM OF EXPRESSION | Description of policies and practices relating to behavioral advertising and user privacy Our service is subscription-based and we do not allow third-party advertising on Netflix. When members sign up for the service we ask for very little information: email, name and method of payment. We do not collect socio-demographic data like gender or race for the purposes of our viewing recommendations system. Our Privacy Statement provides a detailed explanation of our privacy practices, including: the information Netflix collects or receives from each member; how we use and disclose it (including advertising that we conduct off Netflix to promote our service); and the controls each member has in relation to this information. | | | TC-IM-220a.1 |
| | Number of government requests to remove content, percentage compliance with requests We offer creators the ability to reach audiences all around the world. However, our catalog varies from country to country, including for rights reasons (i.e., we don't have the rights to show everything in every country where we operate). In some cases, we've also been forced to remove specific titles or episodes of titles in specific countries due to government takedown demands. | 4 | 7 | TC-IM-220a.6 |
| DATA SECURITY | Description of approach to identifying and addressing data security risks, including those of third-party cybersecurity standards The company has a Vice President of Information Security who oversees a team of employees dedicated to information security. We strive to protect sensitive information through various means, such as technical safeguards, procedural requirements and policies, a program of monitoring to detect and address unauthorized modification or misuse, continuous testing of aspects of our security internally and with outside vendors, a robust incident response program, and regular training for employees. | | | TC-IM-230a.2 |

〈그림 16〉 Netflix SASB기준에 따른 사회지표 2(인터넷미디어)

거버넌스 부문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이사진들이 참여하는 회의가 진행되며 소통, ESG투자자의 날, 부패 정책 관련 교육시행 등을 포함하나 지적재산권(SY-ME-520a1) 위주로 간략히 서술되어 있다.

| TOPIC | ACCOUNTING METRICS - MEDIA & ENTERTAINMENT | 2021 | SASB CODE |
|--|--|------|--------------|
|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 MEDIA PIRACY | Description of approach to ensuring intellectual property (IP) protection We regard our trademarks, service marks, copyrights, patents, domain names, trade dress, trade secrets, proprietary technologies and similar intellectual property as important to our success. We use a combination of patent, trademark, copyright, trade secret laws and confidentiality agreements to protect our proprietary intellectual property. We employ a variety of methods to monitor potential infringement of our intellectual property, including searches conducted internally and by external vendors. A particular focus is preventing uses of our intellectual property that may lead to consumer fraud. | | SV-ME-520a.1 |

〈그림 17〉 Netflix SASB기준에 따른 거버넌스 지표

시사점

전반적으로 넷플릭스의 보고서는 간단하며 명확하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넷플릭스는 환경지표 위주로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콘텐츠 및 기업 운영에 대한 탄소 배출 저감 방안은 구체적이며 직접적으로 작성된 점이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 사회 및 거버넌스는 SASB 지표상의 최소한의 정보만을 보고한 것이 아쉽다. 또 같은 탄소 배출 관련해서도, 스트리밍서비스에 대한 탄소 배출 저감 방안은 친환경 에너지 사용 권장, 고객에게 정보공개 권장 등으로 다소 추상적이며 실질적 탄소 배출저 감과 연결 짓기 어려운 면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마) 미디어·엔터테인먼트산업 관련 ESG 지표의 한계

E&M 분야는 최근 급속히 성장 및 변화하고 있는 산업군이며 제조 산업과 같이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생산 및 소비가 아닌 가상의 공간을 활용하고 생산 및 서비스된 제품이 무형하다는 특성에서 지속가능경영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GRI 또는 SASB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도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정도를 분석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대부분 ESG 보고서는 제조업을 기반으로 작성하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경향을 본 보고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일반적인 제조업이나 금융 기업과는 다르게 물질적인 것

보다 비물질적인 영향이 더 크다는 특수성이 있다. 때문에 이러한 산업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현재 보고서는 개인 정보와 저작권 정도의 내용을 좁은 수준으로 포함하는 데 그치고 있다. 현재 포함하고 있는 내용 외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계약 구조, 다루는 콘텐츠 등을 포함하지 못한 보고서로 보인다. 또한 엔터테인먼트 업계 특성상 환경(Environmental)보다 사회(Social) 측면을 중요하게 바라봐야 한다. 사람을 통한 사업을 하며, 엔터테인먼트의 활동이 대중, 특히 청소년들에게 주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부분 역시, 구체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은 면이 있다.

엔터테인먼트를 대상으로 한 평가 기준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발견하였다. 제조 산업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GRI 지표 등을 사용하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비물질적 부분의 영향력이 과소평가 될 수 있다. 기존 지표들이 환경(Environmental) 외에 사회(Social)나 지배 구조(Governance)를 구체적으로 계량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 이는 기존 지표들의 한계점으로, 인간 철학과 사회적 담론을 포함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 연구가 필요하다.

JYP가 활용한 GRI 기준에 따라서는 E&M 기업 활동의 비재무지표를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항목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해외 사례에서는 SDGs 및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지속가능경영 보고지표인 SASB를 활용하여 국내 사례보다는 구체적이었으나, 전반적으로 지속가능경영성과 보고에는 부족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었다. 즉, SASB 기준은 지속가능경영 지표들을 매우 간단하게 다루고 있으며, 인터넷미디어가 아닌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산업 지표에서는 구체적 환경적 영향에 대한 지표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두 산업군의 지표가 다원주의를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social 지표를 어느 정도 고려하고 있으나 매우 간략하게 다루고 있으며, 대체로 지적재산권 및 보안에 집중되어 전반적인 지속가능경영을 다루기에는 산업군 지표가 제한적이다. 산업 변화에 발맞춘 SASB 지표의 개선이 필요하며, 국내 기업에서도 산업군의 특성을 반영한 지표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

다. 우리의 관점으로 본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나아가야 할 방향

1) 기존 지표를 활용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문제점

ESG가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으며 ESG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에도 많은 인력과 자원이 투입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ESG 출현의 본질보다는 '보고서를 위한 보고서, 공시를 위한 공

시, 또는 '평가를 위한 보고/보고서'가 우선시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본래의 ESG 취지와 목적에서 동떨어진 왜곡된 ESG가 고착될 위험이 있다. 당장 보고서를 발간하는 실무진 입장에서 현실적인 시간적, 인력 제한으로 인해 적극적인 ESG 개념에 대한 수용 및 연구보다는, 평가 대응을 위한, 혹은 면피용 결과물로서 ESG가 다뤄진다는 측면도 부각되고 있다.

한국보다 앞서 ESG 경영을 도입한 해외 기업들의 사례에서는 기업마다 고유한 문화와 역사를 반영하여 그 기업의 특색을 확인할 수 있는 동시에, 전사적으로 적용 가능한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녹아있는 보고서나 온라인상의 정보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반면 국내에서는 기업 내부의 자원과 인력을 직접 투입하여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고민보다는, 보고서 발간 유무가 일단 중요하다는 정도로 해석하며 최소한의 투자로 보고서를 만드는 것 자체에 의의를 두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ESG 보고서와 공시는 마치 정해진 공식처럼 정형화되고 표준화된 내용과 형식에 머물 수밖에 없다.

2) (아직은) 세상에 없는 보고서? -바람직한 ESG 정보 공시의 방향성

현재까지 공시된 대다수의 국내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들은 국제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ESG/지속가능성 관련 지표들(GRI, SASB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지표가 요구하는 내용들을 충실히 보고하기보다는 일부, 특히 부정적인 내용보다는 홍보성이 짙은 활동이나 선언들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보고서의 전체적인 목차, 전개 방향, 공시 방향성을 포함해, 보고서의 구성, 포맷, 디자인, 삽입된 이미지까지 정형화되어 있는 경향이 있었다. 더불어 자동차 업체들의 보고서 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탄소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발전량, 친환경차의 범위 등 정량적인 보고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중요한 값에 대해서도 관련 정의나 단위가 통일되어 있지 않고 상세 사항의 부족으로 단위 변환도 쉽지 않아 데이터의 비교가 쉽지 않았고, 일견 내용이 자의적이거나 근거 데이터가 부족한 경향이 있다.

정형화된 보고서가 물론 다른 보고서들과의 비교를 수월하게 하고, 보고서 작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여 작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각 기업의 역사, 문화, 특성, 현실 등을 제대로 포함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본래 역할을 고려했을 때, 투자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에게 기업의 진정한 가치와 역할, 활동을 전달하고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정형화된 보고서보다는 기업 스스로 고민하여 효과적인 보고 방식을 갖추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IT 및 엔터테인먼트/미디어 산업 보고서 분석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의 평가 지표나 제조업

등을 염두에 두고 개발된 보고 지표(GRI 등) 및 정형화된 보고서 형식으로는 무형의 서비스 제공을 사업의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특색이나 추구하는 가치를 온전히 담아내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현재 국내의 ESG 관련 지표는 600개 이상이며 계속해서 새로운 보고/평가 기준과 방법론이 업데이트되고 있다. 그러나 ESG 개념의 근원이 투자 부문에서 시작되었기에 무형의 가치를 단순히 정량적인 수치로 나타내면서 (혹은 수치로 표현이 쉬운 항목들만 평가 대상으로 고려되면서) 환경과 사회가 가지는 본질적 가치가 평가 절하된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이에, 지속가능성에 대한 특정 활동의 기여도를 평가함에 있어 지구적인 관점 혹은 인간 행위의 영적/윤리적 관점을 지표에 도입하거나 이에 바탕을 둔 새로운 지표의 도입도 가능할 수 있다. 결국 변화를 위해서는 개인으로부터 출발하는 인식의 변화가 필수인데, 이것은 기존 제도의 보완 정도를 넘어서는 근본적인 가치관 혹은 윤리관의 재정립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UN에서 논의된 바 있는 지구 헌장(Earth Charter) 혹은 자연과의 조화(Harmony with Nature) 이니셔티브 등을 참고하면 지구적인 관점에서 기업 경영을 검토하는 새로운 지표의 개발에 대해 논의가 가능할 수 있다. 해당 이니셔티브들에서는 인간과 자연의 실존적, 문화적, 영적인 연결 혹은 유대를 바탕으로 자연의 권리, 전 지구적인 관점에서의 인간의 위치와 역할 등을 검토한다. 이러한 접근법이 다소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업 활동과 연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한편,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공시 의무가 있다 해도, 그 공시의 방식을 지금과 같은 보고서 형식으로만 한정 지을 필요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부 기업들은 지속가능성 관련 사항들을 좀 더 세분화하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있는데, 필요에 따라 수시로 업데이트하는 등 정보 수요자의 요구에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더욱 효율적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3. 결론

기업의 지속가능성은 비단 기업 경영자만의 문제가 아닌, 기업의 모든 이해관계자와 사회 전반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분야이다. 이에 따라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그 기준에 맞는 정보의 가공과 공시 역시 중요성을 갖는다. 그 중요성에 걸맞게 현재 수백 개의 다양한 보고 및 평가 지표들이 개발되었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보완, 업데이트되고 있다.

이에 '360.esg' 연구회는 지속가능경영 관련 보고 및 보고서의 작성에 참고할 수 있는 관련 지표들과 평가 지표들을 살펴보고, 해당 지표들이 측정하고자 하는 중요한 기업 가치와 그 특색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이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전 세계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GRI, SASB, TCFD 등의 글로벌 보고 지표 및 MSCI와 DJSI와 같은 글로벌 평가 지표를 분석해 보았으며, 국내 지표로서는 K-ESG 가이드라인, 국민연금 평가 지표 및 KCGS ESG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지표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발간된 국내외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분석하고 우리 연구회의 시각을 더해 개선 방향을 제안해 보았다. IT, 자동차, 엔터테인먼트/미디어, 세 개의 산업 내 국내외 기업들을 선정하여 이들 기업들의 보고서를 분석하면서, 각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기업 운영을 위해 중시하는 가치와 구체적인 활동들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ESG 경영 혹은 지속가능성에 관한 보고와 공시에 대한 기업들의 역사가 길지 않은 만큼(특히 국내 기업들), 정보 수요자 혹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아직은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적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의 평가 지표 혹은 정형화된 보고서 양식이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 기업의 가치와 특색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어떠한 가치와 내용을 담아서 지표를 설정하느냐가 기업 활동을 진정히 지속가능성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수 있다는 점 등을 염두에 두고 그에 맞는 새로운 정보 공유 및 경영을 하는 것이 향후 기업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보고서 또는 다른 정보 보고/공시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고민 이전에, 기업들의 ESG 경영 도입 목적이 단순히 평가를 잘 받는 것이나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이윤 추가와 리스크 헤지에만 머물지 않고, 진정으로 환경·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사업의 영위일 때, '그린워싱'이라는 의심의 꼬리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이번 연구로 확인하였다.

참고문헌

- 박영주, 2021 해외 미디어 기업의 ESG 활동 - 넷플릭스의 ESG보고서 분석 https://www.kca.kr/Media_Issue_Trend/vol46/download/KCA_Media_Issue_Trend_vol46_featured_report_02.pdf (2022. 10. 3.)
- 삼일회계법인 2022, PwC의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및 미디어 전망 2022-2026 균열의 시작: 새로운 경쟁 환경에서의 혁신 및 성장 https://www.pwc.com/kr/ko/insights/industry-insight/enm/samilpwc_enm-outlook2022.pdf (2022. 10. 3.)
- 현대차 지속가능경영보고서 <https://www.hyundai.com/kr/ko/company-intro/report/manage-report.html> (2022. 10. 2.)
- GM 지속가능성 보고서 <https://www.gmsustainability.com/> (2022. 10. 2.)
- SASB 기준 Service_MEDIA & ENTERTAINMENT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 (2018) https://www.sasb.org/wp-content/uploads/2018/11/Media_Entertainment_Standard_2018.pdf (2022. 10. 3.)
- SASB 기준 Technology_INTERNET MEDIA & SERVICES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2018) https://www.sasb.org/wp-content/uploads/2018/11/Internet_Media_Services_Standard_2018.pdf (2022. 10. 3.)
- Tesla Impact Report https://www.tesla.com/ns_videos/2021-tesla-impact-report.pdf (2022. 10. 2.)
- TOYOTA 지속가능성 보고서 <https://global.toyota/en/sustainability/report/sdb/> (2022. 10. 2.)
- Volkswagen 지속가능성 보고서 <https://www.volkswagenag.com/en/sustainability/reporting-and-esg-performance/sustainability-report.html> (2022. 10. 2.)

교통약자의 안전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아젠다 연구모임

문영임, 김지우, 김지혜, 박숙미, 손영은, 신성훈

교통약자의 교통복지 제고를 위해 해외사례 비교 검토를 통해
교통약자의 안전 및 이동권 향상 방안 제안

'사람 중심'의 교통복지 고찰을 통한 교통약자 안전 및 이동권 향상 방안 연구

교통약자의 안전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아젠다 모임

문영임, 김지우, 김지혜, 박숙미, 손영은, 신성훈

1. 서론

1) 연구목적

우리나라 교통약자는 전체 인구의 29.7%의 비율인 약 15,401천 명으로, 노인, 장애인, 어린이, 영유아 동반자, 임산부 등 상당수의 인구가 이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토교통부, 2021). 또한 급속한 출산율 저하 및 고령화 진전으로 인해 교통약자의 수는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그 속도가 빠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시민사회의 성숙에 따라 복지 욕구에 대한 표출이 적극적인 형태로 변화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01년 오이도역의 장애인 승강기 추락 사건 이후 이동의 자유는 인간의 권리라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해당 사건을 기점으로 이동권 투쟁이 촉발되었고, 지하철 내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엘리베이터와 경사로가 설치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이도 사건 이후 20여 년이 지난 현시점에서도 여전히 사회 곳곳에 이동권 투쟁이 일어나고 있어 교통복지는 여전히 답보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지하철 외 다른 교통수단의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무장애화(Barrier-Free) 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전국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2021년 기준 30.6%에 머물러 있으며, 2020년 기준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된 고속·시외버스는 전체 시외버스의 0.44% 수준이다. 이는 교통정책에서 경제적 편익이 낮은 교통복지는 후순위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다(모창환, 2013).

교통약자의 교통복지가 개선되지 않을 시 향후에는 더 큰 사회문제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3명 중 1명이 교통약자로 분류되고 있으며, 2026년에는 인구의 20%가 노인이 되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어 교통약자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향후 5년 동안 고령자 교통약자의 수는 연평균 5.18% 급증하여 약 180만 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국토교통부, 2021). 따라서 국민의 안정권과 이동의 자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통복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져야 하며, 교통약자에 대한 제도 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사람 중심'의 교통정책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다. '사람 중심' 교통정책은 2003년부터 논의되어 온 정책으로 보행자 및 이용자 중심의 교통문화를 전개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 이낙연 국무총리가 '사람 중심'의 교통정책을 지향한다고 밝혔고(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7.07.27.일자), 이후 서울시, 대전시, 울산시, 대구시, 부산시, 군산시, 진안군 등 지자체에서는 '사람 중심' 교통정책을 구체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 중심' 교통정책은 정책적 슬로건은 있으나 개념의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사람 중심' 교통정책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한국의 기존 교통정책은 자동차 중심이었고 이제 사람 중심의 교통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며(청주시, 2012; 진안군, 2008; 권영중·김영국·강수희, 2013), 보행자 및 이용자 중심의 교통 인프라를 건설하거나 친환경 보행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는 사람 중심 교통정책에 대한 개념적 정의가 부재하고 선진국 사례들을 소개하고 이를 도입하는 방향의 개선방안 논의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건영(2003)의 연구는 지속가능한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보행자 전용도로를 만들고 친환경적 교통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람 중심이라는 말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조남건(2003)은 교통약자의 현황과 제도의 문제점과 교통약자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지만, 사람 중심의 교통정책이라는 개념적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사람 중심' 교통정책의 구체적 제도에 대한 논의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람 중심' 교통정책의 개념 정의는 없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된 다수의 교통정책은 선진국의 사례들을 소개하고 이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성장해왔다. 그러나 제도를 도입할 때 이 제도를 만들게 된 철학적 토대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람 중심' 교통정책 역시 선진국의 교통 제도의 직접적 도입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고 있지만, 이들이 기반한 철학과 배경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구체적 제도 이면에는 철학과 세력이 있다. 철학을 충분히 논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만 도입하게 되면 정책이 내용적으로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 더 나아가 철학적 논의가 충분히 되어야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질 수 있고, 이에 대한 정책적 지지가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교통정책에 있어서 '사람 중심'의 개념적 정의가 필요하고 이를 현실화시킬 제도는 무엇인지를,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정치과정이나 요건을 고민해 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모임에서는 미국, 영국, 스코틀랜드, 독일의 교통복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교통복지 논의에 있어서 상기 국가들은 이념적으로 진보적이며, 사회운동이 많았던 곳으로 교통약자를 위

한 정책 요건과 기반을 살펴보기에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부재한 개념인 '사람 중심'의 교통정책의 정의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특히 경제적 효율성과 효과성으로 인해 후순위로 물러나 있는 교통약자의 교통복지 제고를 위해 '사람 중심'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 것인가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교통약자의 안전 및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교통약자의 안전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이동권 보장을 대표하는 두 정책인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을 중심으로 관련 법제도 및 보급 현황, 쟁점 사항 등을 탐색해 보고, 해외의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개선되어야 할 정책적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본론

1) 이동권

인간은 누구나 지역사회 내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자립하기 위해 원활한 사회참여를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어떠한 물리·환경적 제약 없이 오직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목적지까지의 이동수단 및 동선을 확보할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이동권은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큰 장벽으로(권선진, 2002),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면 자신의 의지대로 사회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허창덕, 신주영, 2011)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이동권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현재 법률적 차원의 이동권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정의되고 있다. 동법 제3조(이동권)에 따르면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법제처, 2022). 즉 이동권은 보행권과 교통권을 포함한 개념으로 공간 이동상에 있어 교통약자가 수단 및 동선에 제약을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이동권에 대한 논의는 장애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그중 괄목할 만한 흐름은 1993년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에서 “각국 정부는 필요 발생 시 장애인에게 이동 및 기타 권리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 줄 입법을 채택하거나 체계화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선언문을 통해 최초로 등장하였다. 이후 국제연합 제48차 총회 결의에서 제5조 접근성으로 “장애인의 기회균등화에 대한 표준규칙”이 채택되

었다. 또한 2006년 UN총회에서 채택된 「장애인권리협약」(CRPD) 제12조(접근권)와 제20조(개인의 이동)에서는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장애물을 제거하고 접근권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개인의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당사자국들이 효과적인 조치를 강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동 협약에서 정의하고 있는 효과적인 조치에는 장애인 이동을 지원하는 이동보조기구를 포함한 다양한 이동수단의 접근성 보장, 장애인 및 전문가들을 위한 이동기술의 훈련, 이동기구를 생산하는 주체의 장애인 이동성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장애인 이동권 확보하려는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김용진 등, 2019).

우리나라의 경우 1984년 휠체어 장애인인 김순석이 '서울거리의 턱을 없애 달라'는 유서를 쓰고 자살한 사건, 1992년 당시 강남대학교 학생으로 뇌성마비 장애를 가진 백원옥이 전통스쿠터를 타고 가다 난간에 부딪혀 사망하는 사건 등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정부 차원에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에 대한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였다. 이후 2001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설교통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이유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지 않자 장애계는 '저상버스를 도입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한다.'를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2002년 헌법재판소에서 저상버스를 도입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을 계기로 이후 장애인을 중심으로 이동권과 관련된 법적 논의 및 쟁취 투쟁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최초로 이동권이 정의되었으며, 이 법 제정 전까지는 이동권이란 접근권의 하위개념으로 논의되었다. 접근권이란 이동에 필요한 보행로 등 도로·지하철을 포함한 각종 교통수단에서부터 정보통신시설 및 주거 등 공공건축물에 이르기까지 생활을 하면서 반복해서 사용하는 생활 필수시설에 장애인이 접근·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강병근, 1998). 따라서 접근권은 이동권을 포괄하는 상위개념으로, 이동권은 접근권이 보다 구체화된 형태로 나타난 권리로 정의할 수 있다. 한편 서구에서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교통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주로 이용자의 이동권, 교통수단 및 재화의 수송방식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선택, 교통수단 및 이용방법에 대한 정보 획득의 권리 등이 이에 포함된다(진장원, 2000).

2) 교통복지 대상에 대한 이해

교통약자의 개념은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좁은 의미에서의 교통약자(Mobility Handicapped People)란 신체적 측면에 초점을 맞춰 교통수단 및 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용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사람, 제약받는 사람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의 교통약자(Transportation Poor People)는 신체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 상황 및 사회적 상황에도 초점을 맞춰 교통수단 및 시설 이용에 애로사항을 느끼는 사람으로 확대하여 해석할 수 있다(이신혜, 2009).

(1) 신체적 교통약자

우리나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는 교통약자를 장애인·고령자·임산부·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어린이 등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교통약자는 기능적 장애(impairment), 능력적 장애(disability), 사회적 불리(handicap) 측면에서 장애를 겪고 있다. 기능적 장애는 심리적, 신체적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장애로부터의 회복을 위해 의료적인 치료를 한다. 능력적 장애는 기능적 장애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감소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회복을 위해 의료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장애 관련 보조기구를 이용한다. 사회적 불리는 기능적 장애, 능력적 장애로 인해 사회적 측면에서 겪는 불리함을 의미한다. 사회적 불리에 대한 회복을 위해서는 의료적 치료, 장애관련 보조장구 뿐만 아니라 생활에서의 편리함, 사회적 측면에서의 배려 등의 문화 개선이 있어야 한다(이신혜 2009).

(2) 경제적 교통약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경제적 교통약자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며 국민기초수급자에게도 교통부분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에 있으나 일반적으로 경제적 교통약자의 범주로서 자가교통수단을 운영할 수 없는 저소득층, 대표적으로 정부가 최저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한정하고 있다. 교통비 지출을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및 전철, 택시, 기차 등)과 개인교통(자동차 구입 및 유지비용, 오토바이, 자전거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총교통비 지출은 감소하고, 전체 교통비 지출 중 대중교통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3) 지역적 교통약자

지역적 교통약자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싶어도 긴 배차 간격과 적은 운행횟수로 불편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 대표적인 지역적 교통약자는 농어촌지역의 벽·오지 지역주민을 들 수 있다. 교통취약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인구밀도가 현저히 낮으며 인구 규모도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개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자동차 보유 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런 자동차 보유율의 증

가는 대중교통수단의 수요 감소로 이어졌고 나아가 대중교통 공급의 양적·질적 저하로 이어져 대중교통 이용자의 불편으로 귀결되고 있다. 정부가 벽지명령 손실보상 등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나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한정적인 배차로 필요시 이용할 수 없는 단점 등으로 서비스 만족도는 매우 낮다. 이로 인해 거주민들은 다시 이동권 확보를 위해 자가용 보유를 늘리면서 또다시 대중교통 수요의 감소로 이어지는 반복적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3) 국내 교통약자 이동권 관련 법률

본 장에서는 기본권, 「교통기본법입법예고안」,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을 중심으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대한 논의는 1990년대 이후 확장되어온 장애인 운동 및 자립생활 이념에 근거하여 비교적 최근 법률에서 찾아볼 수 있다(최운영, 양정빈, 김자영, 2021).

(1) 기본권으로서의 이동권

인권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나 가지고 있는 권리” 즉 천부권이며, 기본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기본적 권리”를 의미한다. 인권과 달리 기본권은 인권 사상의 영향을 받은 권리로 실정법인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권리이다. 따라서 인권은 자연법이고 기본권은 실정법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법령에서는 이동권에 대한 독자적 헌법규정과 직접적 기본권 보장 정책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동과 관련된 기본권은 개별규정을 통해 도출해야 한다. 헌법으로부터 규정된 기본권은 행복추구권, 자유권, 평등권, 청구권, 참정권, 사회권 6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인 행복추구권과 정치·경제·문화 모든 상황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인 평등권은 선언적 개념이다. 자유권은 세부적으로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주거의 자유 등이 있고, 청구권은 재판청구권, 국가보상 청구권 등이 있으며, 참정권은 선거권이다. 사회권은 교육받을 권리, 근로할 권리, 노동3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이 있다.

즉 「헌법」상 개별적 권리인 기본권 속에서 이동권은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한 전제로 작용한다(박창석, 2021). 즉 이동권은 「헌법」에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헌법에서 규정된 개별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권리인 까닭이다. 특히 대표적인 기본권인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참정권 보장을 위해서는 이동권 확보가 필수적이며, 1987년 「헌법」 개정 시 주거권이 사회권의 범주로 포함된 이후 이동권을 기본권 내 포함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움직임 또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2)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관련 법률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공식적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등에서 권리로서의 장애인 이동권을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추가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먼저 2005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되었으며, 현재까지 이동권을 보장하는 대표적인 법률로써 이와 관련된 다수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해당 법률에서는 교통약자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저상버스 도입,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 즉 특별교통수단을 도입·운영하여야 한다(법제처, 2022)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즉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김광주, 김용태, 2020). 여기서 이동편의시설은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모유 수유를 위한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또한 동법 제3조에서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제정 및 시행은 이동권을 쟁취하기 위한 다수의 장애인 및 단체의 노력을 통해 이루어진 성과이다. 물론 제정 당시 장애계가 지속적으로 주장한 핵심적인 조항들이 누락되고, 국가의 의무가 임의 규정으로 명시되는 등 많은 논란도 야기되었지만 현행 국내법상 최초로 ‘이동권’을 법령으로 명시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2021년 동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저상버스 도입 및 지역 간 이동편의제공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대상으로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이밖에도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지역의 교통서비스 개선대책은 모든 국민들이 이용가능한 대중교통 수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대중교통 이용권과 관련하여 “모든 국민은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있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로 명명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장애,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지역적 사정 등에 따라 보행과 관련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보행권이 명시되어 있다(〈표 1〉 참고).

〈표 1〉 국내 법률 내 이동 및 교통 관련 권리

| 구분 | 정의 | 비고 |
|----------|--|--------------------------|
| 교통약자 이동권 |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3조 |
| 교통권 | 국민들이 보편적인 교통수단을 제공받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육상, 해상, 항공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 등을 이용하여 이동할 권리 | 교통기본법입법 예고안 제3조 |
| 대중교통 이용권 | 모든 국민이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있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 |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
| 보행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의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및 복리 증진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진흥하여야 한다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 |

출처 : 경기복지재단(2017)

한편, 「장애인복지법」 제22조에는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제23조(편의시설)에서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라는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24조(안전대책 강구)에서 국가가 이동에 불편함이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안전대책을 강구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는 장애인 이동편의제공, 장애인 보장구 제공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차별행위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즉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른 이동권 보장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이 규정되어 있다.

이상과 같은 법령의 제정 및 시행은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국가와 우리사회 전반의 관심의 고조와 이동권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동의 자유, 이동권 보장에 대한 권리는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차별없이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국내법상 교통약자 이동권은 교통약자, 보행자, 대중교통이용자에 한정된 권리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는 이동권을 일반 국민의 보편적 이동권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한치영, 김금환, 2012).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정 이후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관련된 정책들이 시행되고 보장되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그 내용 또한 보완할 점이 다수 존재함에 따라 장

애인 이동권 보장 정책이 향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시 민관 및 교통약자 당사자의 적극적인 참여 및 노력이 필요하다.

4) 국내 교통약자 이동권 및 교통수단 관련 정책

(1) 이동권 확보를 위한 교통수단 관련 정책 방향

모든 공공정책은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복지 증진 효과 및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방향성을 설정하고 있다. 자원 할당 기준 및 범위는 정책이 지속가능하게 추진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자원이 항상 부족한 현실에서 정책의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가는 상당히 주요한 문제이다(이동석, 2018). 이에 현재 국내에서는 사회보장 정책의 추진 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이론에 입각하여 해당 정책의 대상 및 서비스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이처럼 보편주의 대 선별주의 원리는 정책 및 급여를 누구에게 제공할 것인가 즉 서비스 사용자를 선정하는 방법으로 주로 사용되어 왔다. 선정 기준에 따라 전체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정책을 실행할 수도 있으며, 구성원 중 일부만 정책 대상으로 한정하여 실행할 수 있다.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원리에 대해서는 합의된 정리가 없으며, 이들 논지는 대립되는 논리로 이해할 필요도 없다(윤홍식, 2011). 실제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어떤 보편주의 정책도 사실은 선별주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어 실제 제도적 차원에서는 두 원리가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으로 결합되어 공존한다(이상은, 2021). 대표적인 연구자 Titmuss(1974)는 '긍정적 차별'을 통해 급여가 똑같이 분배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더 큰 욕구를 가진 사람들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해야 하는가의 이슈에 있어서 더 큰 욕구를 가진 사람들에게 긍정적 차별(positive discrimination)로 더 큰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마찬가지로 Skocpol(1991)도 보편주의 안에 표적주의(targetting within universalism)의 개념을 통해 저소득층만을 위한 정책보다 보편주의 내에서 추가적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렇듯 기존 연구자들은 정책의 적용대상 측면에서 취약계층과 그 상위의 대상까지 포괄적인 적용범위에 포함하면서도 급여방식에 있어서는 욕구 정도에 따라 빈민이나 장애인 등 선별적 대상에게 추가적인 급여를 제공하는 보편주의 안에서의 긍정적 차별의 방식을 제안한 것이다(이상은, 2021). 이처럼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는 정책 내용에 따라 사회복지 정책 내에서 상호보완적으로 실현되고 있다.

이동권 확보를 위한 교통수단 관련 정책, 통칭 교통복지도 사회복지의 일종으로 국민의 교통활동에 관한 복리를 향상시키는 것이 요체이며, 국민 모두가 적정 수준의 교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

템을 갖추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장원재, 2013). 이러한 기초 아래 대중교통의 보편성 확보는 다양한 유형의 교통약자의 신체적·물리적 환경을 최대한 고려하여 이들이 신체적·심리적으로 차별받게 될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보편적 대중교통 정책과 함께 동일한 교통 환경이라도 장애 정도에 따라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거나 특별한 욕구를 가진 교통약자를 지원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특별한 장치를 장착 또는 개조한 특별차량과 인력을 투입하는 선별적인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2) 이동권 확보를 위한 교통수단 관련 정책의 흐름

그간 우리사회에서 이동권 보장과 관련한 정책들은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다. 우리사회가 이동권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은 장애인편의시설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면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장애인편의시설이라는 용어는 1981년 「장애인복지법」의 모체인 「심신장애자복지법」에서 처음으로 언급되며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심신장애자복지법」 제13조에는 “도로·공원·공공건물·교통시설·통신시설·기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심신장애자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설비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편의시설의 개념을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개념적인 내용만 규정되어 있을 뿐 이에 대한 자세한 지침 및 규칙은 명시되지 않은 관계로 이는 선언적 내용에만 그치는 한계점을 보였다(최정원, 2002).

이러한 비판으로 인해 1989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장애인편의 시설 설치 규정이 강화되었으며, 1994년 장애인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대한 규칙이 제정되었다. 이를 계기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었고, 1997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실행되면서 이동권 및 접근권을 법적 권리로 보장하기 시작하였다. 해당 법률은 시행 후 장애인의 건축물 내 물리적 접근권이 크게 제고되는 효과성을 가져왔으나, 교통수단 자체에 대한 접근권과 관련해서는 적극적 의무사항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수의 문제점들이 도출되었다(최정원, 2002; 이동석, 2018).

이러한 상황에서 2000년대 초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장애인의 사망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장애인 이동권에 관한 논의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었으며, 관련 장애인단체의 연대를 기점으로 2005년에 이르러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 및 편의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되었다. 또한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2007년부터 매 5년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이후 교통수단에 대한 교통약자의 접근권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장애인 이동권 관련 정책이 수립되기 시작했으며, 특히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이에 대한 사업의 예산 또한 크게 증가하였다(김기식, 정유진, 2021).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2026)이 시행되고 있는데, 해당 계획에서는 ‘모든 사람이 차별없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라는 비전과 함께 특별교통수단·저상버스 등 도입 확대, 이동편의시설 개선을 통한 물리적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 거버넌스 정비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 개선 등 시스템적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 교육 및 홍보 강화를 통한 심리적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항 마련 등의 추진전략·과제를 수행하고 있다(국토교통부, 2021).

후술한 바와 같이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수단 정책 흐름은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도입이 주축이 되어 실행되고 있다. 이는 교통약자를 포함한 비장애인이 보편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교통수단임과 동시에 이러한 교통수단이 동일한 환경에서 장애 정도에 따라 더욱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특정 장애인을 위한 상호보완의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이다.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통약자 지역 내 이동 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교통수단으로 버스와 지하철로 나타났다. 장애인은 장애인콜택시를 포함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비중이 타 교통약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국토교통부, 2021). 이러한 결과는 교통약자를 제외한 일반시민의 조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일반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지하철과 버스, 택시 순으로 나타나(서울시, 2021), 교통약자와 일반국민의 대중교통 이용 수단이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통약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고, 일반국민이 유사하게 대중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보편적 교통수단인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를 중심으로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3)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가 일반 국민과 동등하게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회정책 실현이 수반되어야 한다. 2000년대 이후 장애인 당사자를 중심으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수단의 도입 및 확대, 여객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 편의성 증진, 휠체어 이용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보편적 교통정책으로는 저상버스 도입·확대하였고, 이와함께 선별적 교통정책으로써 특별교통수단의 보급 및 운영 정책을 시행 중에 있다. 두 정책은 공통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자원할당 기준에 있어서는 차별점을 보인다(이동석, 2018).

저상버스는 지하철과 함께 국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보편적인 대중교통 수단으로, 승객이 승하차하기에 편리하도록 버스 내 계단을 최소화하고 차실 바닥 높이를 낮게 제작한 차량이다. 저상버스는 장애인을 포함한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로 정의된 특정 대상뿐만 아니라 비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승객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이다(국토교통부, 2013).

저상버스 도입 및 확산을 위해 현재 정부에서는 운수사업자 및 교통수단 관련 단체 등과 해당 노선을 점진적·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및 시행 중에 있다. 먼저, 운송사업자에게 저상버스 도입비용 일부를 보조하는 저상버스 도입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반·저상버스 차액의 일부인 약 92백만 원을 지자체 매칭(서울 40%, 기타 지자체 50%)으로 보조하고 있다. 도입 초기인 2004년부터 2021년간 5,856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0년 말 기준 전국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28.8%에 도달하였다. 또한 2020년부터 도시 규모에 따라 다양한 차량을 지원하고 있으며, 마을·농어촌 구간 운행에 적합한 중형 및 광역버스 노선에 적합한 2층형 저상버스 도입을 지원하고 있다(국토교통부, 2021). 또한 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시내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를 도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예산지원 확대 방안을 협의 중에 있다. 뿐만 아니라 저상버스 도입 확대를 목적으로 친환경 버스 지원정책과 연계하여 전기, 수소 저상버스를 우선 지원하여 보급률 확대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지역별 편차 해소를 위해 저상버스 도입 관련 지원예산을 지역별 차등적으로 배분하고 있다. 이와 함께 휠체어 탑승 가능 장거리 이동 시범사업을 통해 서울-부산-강릉·전주·당진 4개 노선에 7대 시외버스를 운영하고 있다(국토교통부, 2021).

한편 저상버스 도입 시 소요되는 비용 절감 및 도입기간 단축, 이용자의 편의와 실질적인 정책의 효과를 증대하고자 특별교통수단 운행 제도가 도입되었다. 특별교통수단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차량을 의미한다(국토교통부, 2013). 현재 특별교통수단 정책은 시·군 단위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2021년부터 약 46백만 원을 국가와 지자체 매칭(서울 40%, 그 외 지자체 50%)으로 보조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운영비는 시·군에서 부담한다. 최초 시행연도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총 430억 원 가량이 지원되었으며, 2020년 말 기준 법정대수 대비 84.6% 수준으로 전국 단위로 도입되었다. 또한 2018년 지자체 간 운영방식 상이로 인한 불편 최소화를 위해 표준조례를 마련되었으며, 이용자의 대기시간 증가에 따른 불편해소를 위해 법정대수 상향, 콜센터 이용접수 창구 단일화 방안을 조정 및 검토 중이다. 또한 시·군간 연계를 강화한 광역권 특별교통수단 운영 확대를 위해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의무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와 같은 내용은 2021년 12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을 통해 해당 사항이 법령에 명시되었다.

보편적 공공부문과 특별교통수단의 효과성 비교에 있어 보편적인 공공부문의 서비스 제공보다는 개인의 교통수단 이용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는 주장(지우석, 김정산, 박경철, 2015)과 함께 일각에서는 저상 시외버스 도입보다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범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예산 효율상 교통약자가 더욱 편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는 등 보편적 이동권 보장정책인 저상버스와 선별적 성격의 교통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선호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이동석, 2018).

5) 국내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관련 쟁점 사항

본 장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교통수단 정책인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을 중심으로 각각의 정책 현안 및 쟁점사항들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1) 저상버스 보급 현황 및 실태

보편적 대중교통인 저상버스는 대중버스의 차량 내 계단을 최소화하고, 차체가 낮아서 중증장애인의 버스 승·하차가 편리하도록 제작된 차량으로, 휠체어나 유모차 등이 쉽게 탑승할 수 있어 교통약자 뿐만 아니라 모든 승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국토교통부, 2013). 이 때문에 저상버스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에게 매우 유용한 대중교통 수단이며(조영길, 정세영, 2014),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도입되었다.

2015년 서울시는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서울시 선언'을 통해 2025년까지 서울시내 버스와 관련 저상버스로 100% 도입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이후 2021년 11월, 국토교통부에서는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 발표를 통해 2026년까지 서울 시내버스 모두를 저상버스로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020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서울 시내버스 운행 노선 수는 모두 356개이며, 이 중 저상버스 도입 노선은 286개로 나타나 향후 70개 노선에 저상버스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울시 저상버스 운행 불가 노선 현황' 자료를 통해 세밀히 살펴본 결과, 2021년 1월 기준 도로 여건 때문에 저상버스 도입 불가 판정을 받은 노선은 총 62개로 파악되었다(국토교통부, 2021). 도입 불가 노선은 도로 폭이나 경사로 등 노선별 도로 사정에 의해 도입 자체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며, 이러한 도로 사정이 해결하지 않으면 정부 및 지자체의 약속은 100%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저상버스 도입률과 관련 지역 간 큰 편차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2021년 12월 기준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지역인 특별시, 광역시의 저상버스 보급률은 40% 수준이나 농어촌의 복합버스

운행 비율은 평균 10%에 불과하다(국토부, 2021). 대표적으로 서울시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57.8%인데 반해 충청남도는 10.0%로 미비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도농복합지역의 경우 1억 원을 초과하는 차량개조비 대비 정류소 간 운행거리가 길고, 도로 상황도 여의치 않아 이윤창출의 어려움 등을 사유로 운송업체 측에서 해당 노선 운영을 기피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결과이다. 이렇듯 저상버스의 낮은 보급률 및 지역 간 편차, 이로 인한 이용의 어려움은 장애인의 이동의 자유와 관련한 기본권의 침해일 뿐만 아니라 저상버스의 도입 취지인 교통약자의 이동권 및 사회참여 보장이라는 목적 달성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수도권 대중교통의 교통복지 정책방향 연구(2017)'에 따르면 경기도의 휠체어 사용 장애인 중 26%만이 저상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대도시에 비하여 규모가 작은 중소도시 거주 지체장애인의 경우 저상버스 이용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시외버스와 관련해서는 안전상의 이유로 저상버스는 도입되지 않고 있으며(국토교통부, 2016), 이에 따라 이동에 가장 불편을 겪고 있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경우 한정된 지역 내에서의 이동만 가능한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저상버스 도입률 제고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으로 직결되지 않는 현실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2019년 장애인 이동권 강화를 위한 개별적 이동수단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어려운 사유로 배차간격, 노선, 운전자의 편견과 불친절, 안전장치 및 편의시설 미비, 잦은 고장 등(김용진 등, 2018; 문창근, 황정훈, 김갑수, 2008. 10.; 박광욱, 2018; 이동석, 2018; 이병화, 김채만, 박예은, 한아름, 2017)이 주요한 요인으로 언급되었다. 이는 선진국의 경우 저상버스가 교통약자와 일반국민을 포함하여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보편적인 교통서비스로 정착되었지만, 우리나라는 법령에 따른 형식적인 저상버스 보급으로 인해 오히려 교통약자들의 대중교통 이용 권리를 침해하고, 나아가 기본권 충족에 충실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 특별교통수단 보급 및 이용 실태

버스와 지하철의 접근이 어려운 교통약자들은 특별교통수단을 유일한 이동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8항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의미한다(국토교통부, 2013).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휠체어를 탑승시킬 수 있는 특별한 장치를 장착한 차로 이를 '특장차'로 부르기도 한다(빈미영, 박충훈, 박기철, 2015).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 운행 규모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장애인 1, 2급 150명당 1대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특별교통

수단 운행 법정대수로 지칭한다(국토교통부, 2019). 저상버스 대비 특별교통수단 이용에 대한 장애인의 선호도는 높은 편이며, 정부 차원에서도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점차적으로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보급률을 확대해가고 있으나, 이용자들이 체감하는 가동률 및 이용 만족도는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 또한 다수 존재한다.

먼저 특별교통수단 이용 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역별 천차만별인 보급률의 편차를 지적할 수 있다.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의 전국 보급률은 2019년 기준 73.6%로 법정대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법정대수를 충족한 지자체는 경기도가 105.9%(1,071대)로 유일하며, 부산시의 보급률이 49.2%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특별시 59.7%, 인천광역시 57.5%, 충북과 충남은 각각 56.2%, 경북 57.1%로 60% 미만의 낮은 보급률을 보였다(국토교통부, 2020). 한편 시도별 차이보다 동일 시·도내 시군구별 보급률 차이는 더 심각한 상황이다. 2021년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특별교통수단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상남도 내 18개 시·군 중 3분의 1인 6곳(사천, 의령, 함안, 창녕, 고성, 하동)은 법정 차량 운행 대수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정 보급대수만큼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차량구입 비용뿐만 아니라 콜센터, 운전원, 상담원, 운행관리인력 등이 수반되는 관계로 재정이 어렵거나 혹은 지자체장의 도입 의지가 약할 경우 이들 수단의 도입이 미뤄지는 연유로 발생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한편 특별교통수단의 차량 배치 알고리즘 또한 특별교통수단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문제의 기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장애인 콜택시는 접수순서, 대기시간, 거리를 합산하여 이용자와 차량을 연결하는데, 직선 반경 5km를 훌쩍 넘겨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된다. 이에 배차 시스템 개선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고관우와 황경수(2014)의 연구에 따르면 안정성은 높게 평가하고 있으나 예약 및 이용절차와 관련해서는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의 경우 지역 간 이동을 거부 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지자체별로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의 특성으로 인해 벌어지는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국단위로 적용 가능한 통합 가이드라인 및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내 운전 인력 충원 또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운행 사항(2021)'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서울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 내 차량은 620명, 운전원은 721명으로 시간대별 운행 현황은 출근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오전 10시 사이에는 평균 267대가 운행하고, 대기 시간은 40-48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퇴근 시간대인 오후 5시-저녁 7시의 운행 차량

은 262대, 대기시간은 37분-48분으로 집계되었다(서울시, 2021). 이러한 수치는 이동 수요가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대의 경우 전체 차량대수 대비 절반에 못 미치는 차량만이 운행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서울 및 수도권 밖 지역 이동지원센터에서는 더욱 열악할 것으로 사료된다.

6) 해외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법률 및 정책

해외의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법률은 헌법 내에 이동(movement)과 이동권(mobility rights)에 대한 독립적인 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거나 이동의 자유 혹은 권리에 대해 선언한 국가와 이동권을 인권평등사상에 기초하여 규정하여 장애인 차별금지에 관한 사항을 법률자체 및 하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로 간주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국가로 나뉜다. 헌법 내에 이동권에 대해 규정한 국가로는 독일, 핀란드, 프랑스 등이 있으며, 이동권을 인권평등사상에 기초하여 규정한 국가로는 미국, 영국, 스코틀랜드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법률의 유형 차이에 따라 독일, 미국, 스코틀랜드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 독일의 무장애 이동성 법률 및 정책

독일은 헌법 내에 이동권에 대한 독립적 조항을 별도로 규정하여 이동의 자유 혹은 권리에 대해 선언한 국가이다. 독일의 헌법인 사회법전 제12권 제54조 제1항과 사회법전 제9권 제55조 2항 7호 및 제57조는 교통약자가 공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동등하게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사회법전은 장애인의 재활과 참여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참여를 위한 지원을 의학적 재활, 근로 생활의 참여, 생계 보장적 참여를 통해 보장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적 조화 추구를 법의 목적으로 설정된 법률이다.

정책을 살펴보면, 먼저 저상버스의 경우 여객운송법 제8조 제1항을 2013년에 실행함으로써 2022년 1월 1일까지 독일의 모든 지자체의 대중교통(시내·시외버스, 트램, 지상철, 연방 주 내 운영되는 단거리 기차)의 완전한 배리어프리 구현을 의무화하였다. 만약 지자체에서 경제적 또는 기술적 문제로 인하여 정해진 기간까지 100% 배리어프리를 실현할 수 없다면 해당 지자체에서는 그 이유를 상세하게 밝혀야 한다. 특히 승객운송법(Personenbeförderungsgesetz) 개정으로 인해 독일의 수도인 베를린에서는 이미 2009년부터 모든 시내버스가 저상버스화되었고, 2016년에 착수한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배리어프리 사업'을 통해 2020년 1월부터 독일 전역의 대부분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가 배리어프리화되었

다. 이들 버스에는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좌석이 최소 2개 이상 배치되어 있으며, 휠체어 이용자는 수동식 발판과 자동 리프트를 통해 기본 버스를 포함한 2층 버스도 승하차할 수 있어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다. 한국의 저상버스 기술 및 디자인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발판 자동방식이 수동식이기 때문에 고리를 잡고 인도 바닥에 내려놓기만 하면 되고 비교적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어 일반승객도 손쉽게 조작이 가능하다. 승·하차 시 차체가 기울어져 버스와 정류장 사이에 단차가 없어지도록 설계되어 휠체어 이용자, 이동용 보조기, 유모차 승객들이 불편함 없이 탑승할 수 있다. 트랩 역시 승강장과 트랩 사이의 단차가 적은 저상 플랫폼이 마련되어 있어 탑승에 무리가 없다. 버스 바닥에 이들 이용자를 위한 표시가 있어 승객들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가도 비켜줘야 한다.

무엇보다 시내버스 이용 시 휠체어 이용자가 가장 먼저 승차하는 시스템으로, 일반 이용자와 휠체어 이용자가 버스에 승차하려는 경우, 운전사는 우선 앞문을 잠근 채 가운데 문만 개방하여 휠체어 이용자의 탑승을 먼저 도와주는데, 이 과정에서 발판 조작 과정이 수동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경우에 따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도 불구하고 휠체어 이용자 승하차에 대한 불평을 하는 승객이 없으며, 휠체어 이용자나 활동보조사도 승객들에게 양해를 구하거나 미안하다고 말하는 경우가 없다. 이는 사람으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인 이동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에선 2021년 10월 장애인 시민단체 Aktion Mensch의 실태 조사에서는 아직도 많은 버스들이 배리어프리로 개조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어 투자와 보완을 요구하였고, 2024년 모든 버스 내 배리어프리 목표가 달성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위해 2022년에만 6만 유로(약 8000억원)의 공사비용을 측정, 추가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특별교통수단으로 볼 수 있는 개별적 이동수단(Fahrdienst)과 관련해서는 독일은 사회복지법 제83조 이동에 대한 지원(Leistungen zur Mobilität)에 따라 학교·직장·병원에 갈 때 혹은 여가활동을 할 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혼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이용하나 특히 장애인이 많이 이용하고, 장애인 증명서에 '이동제한(Gehbehinderung)'을 뜻하는 "G"표식이 명시되어 있으면 본인부담금이 없다. 신청은 관할 사회복지청에서 담당하며, 이용료는 건강보험사에서 이동수단 업체에 지불한다. 출퇴근이나 등하교를 하여야 하는 경우 대개 노동청이나 보험사로부터 차량 이용비를 일부 변제받을 수 있다. 또한 중증장애인이 여가시간에 문화생활을 즐기고 싶거나, 친척을 방문하거나 또는 장을 보러 갈 때 특수차량이나 택시 등을 이용할 경우, 그 비용은 지자체에서 일부 부담한다.

(2) 미국의 장애인 보호법에 의한 대중교통 이용권

미국의 교통약자 이동권 관련 법률 및 정책은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서비스를 인권평등사상에 기초하여 정책 시행 중이며, 교통약자 관련 법률이 장애를 가진 미국인법(American Disability Act; ADA)에 기초한다. 해당 법률은 1990년 7월 26일, G. H. W. Bush 대통령이 미국 장애인위원회(National Council on Handicapped)에서 제출한 입법 건에 관하여 최종 서명한 끝에 제정된 법률이다. 장애인법 제2장 공공서비스(Public Service), 제3장 민간사업체를 통해 운영되는 공공 서비스(Public accommodations and services operated by private entities) 내 이동 관련 조치가 포함되어 있는데, 특히 제2장에서 미국 교통국(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이 5개의 장애인 대중교통 이용권 영역(ADA와 대중교통 수단, 교통시설에 대한 출입, 고정노선, 차량, 보조 대중교통 서비스)을 구성하였다. 미국에서는 교통약자를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을 교통약자로 정의하여 비교적 넓은 범위에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장애인법 법률 제정을 통해 장애인 등 이동약자가 탑승 가능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를 명시한 대표적 국가로, 저상버스와 리프트 버스, 2층 버스가 활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장거리 버스들은 리프트를 활용하여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광역버스에 해당하는 Commuter Bus의 상당수는 1층 저상버스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고정 노선 체제'를 운영하는 모든 공공사업체는 보완적 수단으로써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해야 한다. 장애인의 주거환경 및 장애 정도에 따라 고정된 노선에서 운영되는 버스 승하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고자, 대중교통이 지정된 노선에서 약 1.2km 이상 떨어져 있을 경우 특별교통수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로 인해 공공 운수 사업체의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별도로 요구하였다. 본 서비스는 80세 이상의 노인 및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으며, 장애인법에 따라 승인교통수단은 고정 노선을 달리는 버스의 운행 경로 외 승하차 위치가 집 밖이고 운전기사가 이용객을 집까지 바래다주는 등의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curb-to-curb).

미국의 대중교통 수단 이용 원칙을 살펴보면, 교통약자가 고정 노선 시스템을 이용하여 일반인들과 통합된 사회에서 생활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아주 특별한 사례(중증장애인 등)에 한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허용한다. 고정 노선 시스템의 운영자는 교통약자 탑승 거부나 하차 요구를 할 수 없고, 차내 교통약자 이동 기구를 위한 공간을 1개 이상 확보해야 하며, 리프트는 항상 이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교통약자의 탑승 및 고정 도움 요청이 있을 때에는 운전자는 운전석을 벗어나서 도와주어야 하며, 50% 이상 요금을 할인해 주어야 한다. 대중교통 수단 차량은 차내에 이

동기구 고정 공간이 1개 이상 있고, 표준 휠체어 무게를 들어 올릴 수 있는 리프트가 있어야 하며, 차내 안전한 이동이 가능한 미끄럼 방지 재료와 손잡이, 표지판, 조명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한 보조 대중교통 시스템은 고정 노선 시스템과 동일한 서비스(운행 시간, 서비스 교통구 등)를 제공해야 하며, 정신장애나 이용 목적을 이유로 승차를 거부할 수 없으며, 도움을 주는 사람 및 동물과의 동승은 무료로 허용되나 친구의 동승은 유료로 허용된다.

미국은 장애유무와 관계없이 교통약자와 비장애인 모두 함께 이용가능한 택시인 '엘로우캡'이 있는데, 뉴욕을 시작으로 주요 도시 택시 중 상당수가 휠체어 마크를 부착하고 있으며 전체 엘로우캡 택시 중 50%를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 가능하도록 확대하였다. 또한 리치먼드시는 특별교통수단 관련 다양한 특별교통수단 서비스(CARE, CARE PLUS, CARE ON-DEMAND)를 제공하여 고객이 원하는 경우 비용을 지불하면 보다 유연하게 경로를 설정하여 이용할 수 있다. 1회 이용비용은 약 3,704원이며, CARE PLUS서비스의 경우 헨라이코 카운티 주민은 1회당 약 3,704원, 리치먼드시 주민은 1회당 약 7,407원을 지불해야 한다. 최근 스마트카드를 도입하여 보다 편리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다.

(3) 스코틀랜드의 사람 중심 교통복지

1970년대 말 영국의 장애인 자립생활운동이 시작되었고 스코틀랜드에서는 1980년대 초에 장애인 자립생활동이 시작됐다. 이후 영국 인구조사국의 조사에서 “부적절하게 설계된 버스가 이용을 어렵게 만드는가?”란 질문을 던졌고 응답자 다수가 “그렇다.”고 답해 장애인 이동권 제한의 원인이 부적절한 버스 설계에 있다는 인식이 일반화되기 시작했다. 이후 1995년 장애인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DDA)과 함께 교통복지가 시작되었으며, 2010년에는 차별에 관련된 모든 법을 종합한 2010 평등법(The Equality Act 2010)으로 통합되었다.

관목할 점은 스코틀랜드의 교통복지의 인간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 평등의 조건을 만들어가는 '사람 중심의 교통복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어떤 시민이라도 가족, 지역사회, 작업장 더 넓은 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욕구에 기반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관점을 지향하고 있다(Scottish Government, 2016). 이동의 문제에서 접근성의 문제로 확장, 접근성의 목적이 교육, 직장, 교류 등과 같은 생존적인 문제에서 여가생활까지 확장하였다.

교통약자의 정의는 2010 평등법을 통해 교통부는 교통약자를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이동의 제약을 받는 사람, 위협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사람, 경제적으로 소외된 사람, 보이지 않는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 지리적으로 교통수단 이용이 여의치

않는 사람까지 포함하였다. 이동성 제약을 받는 사람은 한국의 교통약자와 같이 장애인, 고령자, 임신부, 유모차를 동반한 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자, 유아와 동반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경제적인 이유로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와 치매, 자폐, 공항장애, 우울증, 정신장애, 학습장애 등 '보이지 않는 장애'를 갖고 있는 시민도 교통약자로 인식하고, 나아가 농어촌지역과 같이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까지 교통약자로 포함하였다.

교통복지 제도 및 현황으로는 교통복지 대상에 따라 이동·안전·경제·지리적 문제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실천하고 있다. 물리적 접근성을 해결하기 위해 교통 서비스의 접근성, 도로의 접근성, 인도 점자블록, 사이클링 할 수 있는 도로 구조, 공간의 나눔, 버스의 오디오나 시각적인 알람 시스템, 버스의 물리적 구조, 택시나 렌터카의 장애인 이용을 높이기, 철도역의 접근성 향상 등을 포함하는데, 특히 전체 버스의 98%가 경사판과 차체가 기울어지는 '닐링 시스템(Kneeling System)'을 구축한 저상버스, 전체 택시의 47%가 휠체어 이용이 가능, 60%의 기차역은 무장애 환경을 구축하였다. 안전의 접근성 향상으로 장애인, 여성과 BAME(흑인, 아시아인과 소수 인종)는 혐오와 성범죄에 노출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들의 안전을 위해 유인 버스정류장, 조명 및 보안카메라 설치, 버스나 기차에 경찰이나 가디언을 배치하였다. 경제적 접근성의 향상으로 경제취약계층에게 운임을 할인하고, 버스 패스의 경우 오전 9시 반 오후 11시 사이 버스를 이용할 경우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동반자가 필요한 장애인의 경우 승인을 받아 동반자를 위한 무료 버스 승차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레일카드 혜택을 통해 기차요금의 3분의 1을 할인받을 수 있고, 레일카드가 없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의 경우 표준요금의 34%를 할인받을 수 있다. 저소득 청소년의 경우나 교육을 받기 위해 장거리를 가야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교통수단을 제공하거나 무료교통권을 이용할 수 있다. 지리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교통소외지역의 경우 버스 등을 대체할 수 있는 택시 버스, 다이얼 라이드 서비스 및 커뮤니티 교통 서비스와 전기자전거, 자전거, 오토바이 등의 이동수단을 제공 중이다.

더불어 교통 관련 종사자의 교육과 훈련을 통해 장애를 공감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운영지침 등 매뉴얼을 제공하고 교통약자가 되어보는 체험식 교육을 통해 교통약자의 입장을 공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스코틀랜드 교통복지의 선별주의에서 보편주의로 확장되는 특성을 보이며 장애인에서 모든 시민으로, 특수교통수단에서 대중교통으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이동권에서 접근권으로, 생존에서 여가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초창기에는 특수교통수단의 제공으로 해결하려 하였으나 모든 교통수단의 장애물을 없애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와 함께 모든 교통정책의 의사결정 구조에 장애인 및 교

통약자 당사자 참여한다. 스코틀랜드의 행동계획은 Scottish Accessible Transport Alliance라는 이용자 중심의 비영리조직에서 발행하고 있으며 이동권과 접근성에 대한 위원회에 단체와 개인 80여명이 참여 중이다. 위원회 구성은 총 14명 중 7명 이상이 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각, 청각, 학습, 휠체어, 농어촌, 치매 등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거나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고 여가를 위한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해 스코틀랜드 정부는 '우리 없인 우리에게 대한 것은 없다'라는 당사자주의 중심에 기반한 보고서(Go Further: Scotland's Accessible Travel Framework)를 발간하고 있으며, 운송서비스 단체, 지방정부, 장애인단체 등이 참여 중이다.

3. 결론

본 연구는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에 대한 관련 법령 고찰과 더불어 이동권 보장 정책을 대표하는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관련 쟁점사항을 분석하였으며, 나아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법률의 유형에 따른 해외사례를 탐구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저상버스의 적극적인 도입 및 확대를 위한 관련 환경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목적으로 교통수단을 통해 시행되고 있는 정책은 크게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으로 나누어진다. 두 정책 모두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공통된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자원 할당의 기준에서는 상반된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특별교통수단 보급 확대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관련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나, 특별교통수단 중심의 정책 기조 수립은 보편적 대중교통 정책 수립 시 교통약자의 편익이 배제될 수 있는 약점 또한 지니고 있다. 이에 중장기 관점에서는 대중교통수단을 주 이동 서비스 수단으로 활용하고 특별교통수단을 보조 수단으로 하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특별교통수단을 확충하여 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 개선방안을 모색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스코틀랜드의 경우 교통약자의 범위와 개념을 보다 확장시켜 보편적 권리를 확장시켰으며, 독일은 교통약자 및 교통수단 관련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대중교통수단의 완전한 배리어프리 구현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이를 통해 교통약자가 일반 국민과 함께 삶을 공유하고 동등하게 사회참여 및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에 우리나라도 일반 국민을 포함한 교통약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의 적극적 도입 및 운영을 위해서는 관련 환경개선이 필요하다. 즉 저상버스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버스정류장 주변 도로 및 정류장 내 접

근성 제고를 위한 환경 개선,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성이 제고된 버스 이용 예약시스템 도입, 장애 유형 및 특성에 따른 저상버스 이용 매뉴얼 제작 및 배포, 저상버스 운전자 대상 장애인식 개선 교육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특별교통수단 관련 이용자의 편리 및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특별교통수단은 특히 교통약자 중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선호하는 교통수단이며, 중증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특별교통수단과 관련해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법정 보유대수 기준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즉 보행상 장애 판정 기준 대비 보유대수 효율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수요 대비 지자체별 법정 보유대수 기준을 세분화하여 법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현재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는 1·2급 중증장애인 뿐만 아니라 지자체별 조례 등을 통해 노약자, 임산부, 일시적 장애인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로 인해 한정되어 있는 공급수에 비해 이용자 범위는 점차적으로 교통약자 전반으로 확대되어 가는 추세이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절실히 필요한 중증장애인의 이용 대기시간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교통약자별 특성 및 이용 수요에 따른 맞춤형 특별공급수단 지원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미국은 장애인법을 통해 대중교통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에 대해서 공공형 택시를 포함한 특별교통수단을 제공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미국의 리치먼드시는 장애인의 니즈에 맞게 특별교통수단 관련 다양한 특별교통수단서비스(CARE, CARE PLUS, 및 CARE ON-DEMAND)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고객이 원하는 경우 비용을 지불하면 보다 유연하게 경로를 설정하여 이용할 수 있는 CARE ON-DEMAND는 기존 특별교통수단을 택시와 같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셋째, 교통약자 이동 관련 전달체계(이동지원센터 등) 지원 강화 및 지역 간 연계 가능한 교통체계 통합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효율화를 위해 지자체마다 이동지원센터를 구축 및 운영하고 있으며, 시·군 차원에서 연계 또는 통합하여 광역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약자들의 장거리 이동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 간 이동하는 경우 교통약자들이 이동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국토교통부, 2021). 이에 교통정보시스템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 간 이동지원센터를 유기적·통합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필요하다. 즉 광역교통망을 묶어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광역이동지원체계 구축이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장애인의 이동수요를 광역망 내에서 조사하고 교통약자에 대한 광역

이동지원은 기존처럼 지방비에 국비 매칭방식의 보조금으로 진행되기보다 국비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 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교통약자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이동권 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모두를 위한 택시' 즉 유니버설 디자인 택시의 보급이 시급히 필요하다. 장애인의 이동 지원은 법률에 따라 공공 영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나,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공급난 문제를 풀기 위한 해결책으로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 부문의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를 위한 범용 택시가 도입된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이동권 증진을 기대할 수 있다. 해외에서는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 택시가 보급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UD택시, 영국의 블랙캡, 미국의 옐로우캡이 있다. 이들 택시는 휠체어 장애인의 택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대중이 이용하는 택시에 휠체어 탑승 기능을 추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정부의 계획과 지자체의 재정 지원, 국내 자동차 회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즉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두의 위한 택시' 운영을 위해서는 택시 개조 및 운행 관련 정부의 지원 및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범용 택시의 도입은 교통약자도 일반시민과 같이 장소와 시간에 제약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책적 움직임은 궁극적으로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섯째,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개선 및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사회구성원의 합의 및 관심이 제고된다면 기존의 비장애인 기준의 교통기반 시설을 중심으로 장애인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동등한 이용자로 설정하여 접근성 제고에 있어 관련 정책 및 제도를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대중의 전환을 위해서는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누구나 기본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음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이에 휠체어 공간 차지, 교통약자 승하차 시 시간 지연 등에 대한 인식 전환 캠페인 등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운전자 및 운송사업자 및 교통수단 관계마다 대상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관련 인식 및 업무 교육이 필요하다. 저상버스 운행 전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대부분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어 보다 체계적인 교육 커리큘럼 수립이 요구된다. 또한 향후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 시 강력하게 조치하며, 이용자가 쉽게 이의제기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캐나다의 교통국(Canadian Transportation Agency)은 장애인이 교통시

설에 대한 이의제기나 진정을 신청할 시 적극적인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캐나다 교통국은 홈페이지를 통해 장애인의 불편사항을 접수받고 있으며, 30일 이내에 불편 사항에 대한 응답을 회신한다. 장애인이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할 경우 장애인 교통 규정에 따라 운송회사에 행정적·금전적 처분을 통해 이를 정정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나아가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변화가 이루어지기까지 법적 다툼은 모두 해당 관계부처에서 주도하고 있다. 또한 스코틀랜드도 교통약자를 불리하게 만드는 구조 및 편견 개선을 위해 교통 관련 종사자뿐만 아니라 중등학교에서 시민교육이라는 교과목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해 배우고 편견과 혐오에 대해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교통복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이용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며, 합리적 이의제기 시스템 구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교통약자 이동권 관련 정책 수립 및 법·제도 개선 시 교통약자 당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교통약자는 교통약자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이동권을 가진 주체이므로 교통 정책 과정에 참여할 당위성과 근거를 가지고 있고, 정책의 효과 측면에서도 실제 교통 서비스를 이용하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서비스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교통 서비스를 평가하고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체계가 미흡하다(국토교통부, 2021). 따라서 교통약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정책적 통로를 마련하여 장애계, 관련 부처, 교통 서비스 제공자 등 정책 관계자가 지속적으로 소통 및 협력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미국의 CCAM이나 스코틀랜드는 장애인당사자 자문협의체를 마련하여 정부 부처와 함께 의견을 조율하여 통합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교통약자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한다는 것”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기회 균등과 적극적인 사회 참여의 실현이며, 이를 위해서는 이동의 자유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즉 이동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인간의 고유한 권리이며 평등의 척도로써 작동되며 사회의 통합에 기여하는 근본적인 수단으로 작용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가 법적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사람 중심의 교통복지 관점에서 관련 정책 및 서비스가 어떻게 수립되고 실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 및 논의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병근, 1998. 『장애인 편의시설과 건축』, 서울: 파라다이스복지재단.
- 강병도, 박형원 (2017., 『국내 교통약자 이동수단 현황 및 휠체어 탑승버스의 필요성』, 『오토저널』, 39(11., 47-50.
- 고관우, 황경수, 2014., 『장애인의 특별교통수단 만족도가 장애수용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5(4), 1963-1970.
- 국토교통부 (2013.,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관련 Q&A.” 정책마당, 정책Q&A. http://www.molit.go.kr/USR/policyTarget/m_24066/dtl.jsp?idx=520에서 2022. 7. 29 인출
- 국토교통부, 2016, 『2016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세종: 저자.
- 국토교통부, 2019, 『장애인 이동권 강화를 위한 개별적 이동수단에 대한 실태조사』, 세종: 저자.
- 국토교통부, 2020, 『2020년 특별교통수단 운영 현황』,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제출 자료. 세종: 저자.
- 국토교통부, 2021, 『2020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세종: 저자.
- 국토교통부, 2021, 『2020년 특별교통수단 운영현황』, 세종: 저자.
- 김기식, 정유진, 2021, 『장애인 이동권 관련 재정·조세 지출에 대한 비판적 검토 보고서 : 장애인 차량 조세 감면을 중심으로』, 서울: (재)데미레연구소.
- 김광주, 김용태, 2020, 『교통장애인의 교통위험과 이동권 확보에 관한 정책사례분석』, 『사회융합연구』, 4(3), 69-80.
- 김명수, 2009, 『장애인 기본권의 기초로서의 접근권에 관한 고찰』, 『세계헌법연구』, 15(1), 1-24.
- 김상구, 조홍중, 2012,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실태에 관한 연구』,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55(3), 185-211.
- 김용진, 김강원, 남세현, 이미정, 이호선, 장영재, 배상우, 최용빈, 2019, 『장애인 이동권 강화를 위한 개별적 이동수단에 대한 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김채만, 한아름, 이병화, 박예은, 2017, 『수도권 대중교통의 교통복지 정책 방향: 대중교통요금 및 이동장애인을 중심으로』, (정책연구 2017-83). 경기: 경기연구원
- 권선진, 2002, 『장애인의 편의는 모든 이의 편의-장애인편의시설 평가와 과제』, 『월간복지동향』, 46, 20-23.
- 권영중, 김영국, 강수희, 2013, 『사람 중심의 도시교통기반시설에 관한 기초연구』, 한국교통연구원.
- 모창환, 2013, 『신정부의 교통복지 정책방향』, 『월간교통』, 3, 49-52.
- 문창근, 황정훈, 김갑수, 2008, 『교통약자의 통행특성 및 통행패턴에 관한 연구』, 『대한교통학회 제59회 학술대회 자료집』, pp. 134-142. 경기: 한국국제전시장, KINTEX.,
- 박창석, 2021, 『기본권으로서의 장애인의 이동권』, 『법학논총』, 38(4), 77-110.
- 법제처, 2022,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 법제처, 202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빈미영, 박충훈, 박기철, 2015,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정책연구 2015-74]. 경기: 경기연구원
- 서울특별시, 2021, 『2021년 대중교통 이용 현황』, 서울: 저자.
- 서울특별시, 2021,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운행 사항』, 서울: 저자.
- 윤홍식, 2011, 『보편주의를 둘러싼 주요쟁점: 보편주의 복지정책을 위한 시론』, 『한국사회복지학』, 63(2), 57-79.
- 이건영, 2003, 『지속가능한,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만들자』, 『국토』, 264, 2-3.
- 이동석, 2018,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17개 시도별 교통수단정책 분석 -“보편주의 하에서의 표적화”를 중심으로』, 『입법과 정책』, 10(3), 327-349.
- 이병화, 김채만, 박예은, 한아름, 2017, 『수도권 대중교통의 교통복지 정책 방향: 대중교통 요금 및 이동장애인을 중심으로』, (정책연구 2017-83). 경기: 경기연구원.
- 이상은, 2021, 『보편주의 대 선별주의: 개념의 다차원성, 역사적 사용, 그리고 이슈들』, 『사회과학논총』, 24, 161-185.
- 이성일, 2000,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향상을 위한 보편적 설계에 관한 연구』, 『대한산업공학회지』, 26(4), 402-410.
- 이용주, 조성진, 장정아, 최기주, 2018, 『휠체어 장애인의 장거리 통행실태 및 특성 분석: 서울시를 중심으로』, 『대한교통학회 제78회 학술대회 자료집』, pp. 115-120. 강원: 도로교통공단 본부.
- 이유신, 김한성, 2018, 『장애인 이동성의 사회경제적 요인: 장애인실태조사 및 위치정보를 활용한 연구』, 『장애와 고용』, 28(3), 59-83.
- 이현숙, 2019, 『사람 중심의 교통복지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스코틀랜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웰니스학회지』, 14(1), 15-31.
- 장원재, 2013, 『[Theme 4] 미래형 교통복지정책 추진 방향』, 『월간교통』, 4월호, 24-29.
- 장정아, 2018, 『휠체어 탑승 가능 시외버스의 도입에 따른 휠체어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 고찰』, 『월간교통』, 12월호, 16-20.
- 장정아, 이규진, 이용주, 2019, 『휠체어이용자가 탑승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시 버스 이용자들의 버스탑승행태변화에 대한 조사』, 『교통기술과정』, 16(2), 24-31.
- 정영득, 2017,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이동권과 삶의 질 연구 -전북권 중심으로』, 『대한안전경영과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pp. 227-234. 서울: 명지대학교 자연캠퍼스
- 조남진, 『2003,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교통정책 방향』, 『국토』, 264, 36-44.
- 조영길, 정세영, 2014., 『중증장애인의 저상버스 이용 실태 및 요구 분석』, 『한국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57(3), 297-312.

- 지우석, 김점산, 박경철, 2015, 『교통약자정책, 교통복지의 시작』, 『이슈&진단』, 173, 1-25.
- 진장원, 2000,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교통체계의 하나로써 녹색교통수단 활성화 방안: 한국에서 녹색교통운동의 태동배경, 추진과정, 그리고 전망』, 『대한교통학회지』, 18(4), 63-72.
- 최윤영, 양정빈, 김자영, 2021, 『충남지역 지체장애인의 이동권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융합정보논문지』, 11(4), 130-136.
- 최정원, 2002,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개선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06, 『공극적으로 LPG정책 가야하는 방향』, 서울: 저자.
- 한동훈, 2021, 『이동용 보조기기 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의 사회참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인천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치영, 김금환, 2021, 『교통복지 관점에서 교통약자 이동권 향상 방안 연구』, 『한국복지실천학회지』, 13, 118-139.
- 허창덕, 신주영, 2011,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국내 정책의 실태와 개선방향』, 『재활복지』, 15(3), 1-25.
- Skocpol, T, "Targeting within Universalism: Politically Viable Policies to Combat Poverty in the United States". In C. The urban underclass,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1991.
- Titmuss, R., Commitment to welfare (2nd Edition., London, UK: George Allen & Unwin, 1974.

대안을그리다

김아현, 권연수, 박가연, 박정안, 윤은빈, 이가은
이수연, 이준협, 이현서, 황서영

대학생기후행동 서울지역과 연결하여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사회로 나아가야 할지 대안을 그려봄

지금 아니면, 내일은 없다.

대안을 그리다

김아현, 권연수, 박가연, 박정안, 윤은빈, 이가은, 이수연, 이준협, 이현서, 황서영

1. 서론

‘대안을 그리다’라는 팀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금 사회는 어떠한 문제점을 가졌는지, 우리는 미래에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은지 고민하고 상상하고자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우리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이라는 의제 하나로 다양한 학교에서 모였다. 각자가 연구하고 싶은 분야는 조금씩 달랐지만, 공통의 고민은 ‘기후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였다. 기존에 제출했던 연구계획은 구성원들 각자가 기후위기에 대해서 더 공부해 보고 싶은 분야를 짜임새 있게 구성하였다. 하지만 연구 1회차 이후 해당 논의들을 뒤로하고, 우리는 어떠한 것을 변화시키길 원하는지, 어떻게 변화를 만들 수 있을지 먼저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기후위기 당사자성

우리가 대안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당사자이자, 미래를 살아가게 될 미래세대이기 때문이다. 많은 과학자는 지구 평균 온도가 1.5도 상승하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가 사회에 발생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과거 역사상 2만 년 전부터 1만 년 전까지 1만 년 동안 지구 평균 온도가 4도 올랐다. 그런데 2022년 지금, 지구 온도는 100년 만에 1.2도가 상승했다. 인간의 인위적 활동에 의한 탄소 배출이 거의 없던 시절 2,500년 동안 1도가 상승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무려 100년 만에 상승시키게 된 것이다. 산업화 이후로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룬 우리나라와 여러 나라들은 엄청난 양의 탄소를 배출했고, 그 결과 오존층이 파괴되면서 해수면이 점점 상승하는 등 엄청난 기후재난, 기후재앙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1.2도가 상승한 2020년 이상 기후로 인한 재산피해액이 이전 10년 평균 피해액의 3배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한다. 기상청은 2022년 8월 31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6차 평가보고서에서 사용된 신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한반도 주변 해역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 1) 해양 기후변화 전망 중 향후 20년(2021~2040년) 근미래의 한반도 주변 해역 해수면 온도와 고도는 현재(1995~2014년) 대비 각각 1.0~1.2도, 10~11cm 상승하리라 전망했다.
- 2) 먼 미래(2081~2100년)에는 저탄소 시나리오에서 각각 1.8도, 28cm 상승, 고탄소 시나리오에서 4.5도, 66cm의 상승 폭을 전망했다. 이는 탄소 감축 노력이 없을 고탄소 시나리오는 저탄소 시나리오에 비해 약 2.5배 정도 해수면 상승 폭이 커진다는 뜻이다. 쉽게 말하자면, 지금과 같이 계속해서 대량생산 및 소비하고, 원자력, 석탄발전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고탄소 시나리오대로 엄청난 기후재앙이 닥친다는 것이다. 향후와 먼 미래를 살아갈 세대, 그리고 그것을 바꾸어야 할 세대가 지금의 20·30세대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당사자이고, 함께 어떠한 대안을 그리며 바뀌나갈지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2022년,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현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은 알면 알수록 기후위기에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안일한 것을 넘어 오히려 기후위기를 가속하는 정책들을 남발하고 있다는 것을 뉴스만 봐도 알 수 있다.

현 정부는 원자력발전소를 확대하는 기후정책을 펼치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었을 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곳 중의 한 곳이 한반도임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방관하고 있다. 또한, 기후재난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받았을 때도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등 국민의 안전권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그중에서 탈탈핵 정책의 행보는 대한민국의 기후정책이 세계 기후정세와 역행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실제로 신한울 3, 4호기 재건설 및 다른 핵발전소를 재가동이 논의되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최근 언론에 보도된 월성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언론사가 가짜 뉴스를 냈느냐, 마느냐에 문제에서 벗어나 방류되었을 때 그 피해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런 현실들을 바탕으로 ‘대안을 그리다’ 팀은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당사자로서, 2022년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갈지 고민해보고자 했다.

2. 본론

1) 기후위기 불평등

우리는 기후위기를 '체감'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이하 IPCC) 보고서에 따르면, 과학자들은 “현재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되면 추가적인 온난화를 일으키고 21세기 동안 지구 기후시스템에 다양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경고하고 있다. 또한 인위적 탄소배출을 멈춰 온실가스 농도가 안정화되더라도 기후변화 과정과 피드백 작용으로 인해 인위적 온난화와 해수면 상승은 수세기 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이러한 기후위기는 자연의 역습이다. 인간은 잘살기 위해 온실가스를 배출했지만, 자연은 기후위기로 인간을 공격한다. 불평등은 사회의 역설이다. 빈곤을 줄이려고 경제성장을 했는데 빈부 격차는 크게 벌어졌다. 기후위기와 불평등은 서로 깊게 얽혀 있다. 그러므로 ‘어떻게 기후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는 어떻게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가와 함께 다루어야 할 문제다.

기후위기로 더욱 피해 보는 사람은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19살 이상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한 '폭염 민감 계층 실태조사(2020)'에 따르면, '일상 공간 온도 견디기 어렵다.'는 질문에 저소득층은 49.1%, 일반집단은 35.2%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그뿐만 아니라 2022년 8월 8일에 있었던 기록적 폭우는 이틀 만에 14명 사망, 6명 실종, 398세대 이재민을 낳았다. 이 중 서울의 폭우재난은 반지하에 살던 발달장애 가족의 목숨을 잃게 했다. 기후재난은 점차 일상이 되고 있다. 그리고 올진 산불, 태풍 힌남노 등 기후재난에서 가장 먼저 위협받는 사람들은 사회적 취약계층이었다. 즉,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대상이 따로 있고 피해받는 대상이 따로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기후불평등'이라고 한다.

기후위기의 피해는 가난한 국가와 가난한 사람들이 받지만, 주된 원인은 돈이 많은 자들과 돈이 많은 국가가 만든다. 2022년에 일어난 기후재난은 1.2도가 상승한 시작점에 불과하다. 앞으로 어떠한 기후재난이 발생하여 생명을 빼앗아 갈지 우리는 짐작할 수 없다. 다만, 기후위기는 앞으로 더 강하게, 빈번하게 우리에게 나타나리라는 것은 알 수 있다. 지금처럼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고 기후위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전·사후 대비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꼭 필요하다.

재난은 모두가 동등하게 겪는 일이지만, 그 위험도와 피해의 정도는 동등하지 않다. 기후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중교통 시설이 부족한 지역은 대피하기 어렵고, 병원이 부족한 지역은 치료받기 어렵다. 특히 2018년 여름에 폭염이 닥쳤을 때 경기도에서 24명, 경북지역에서 21명이 사망했는데, 주변에 의료시설이 부족한 것이 그 원인으로 꼽혔다. 그 이유는 서울은 100명당 11개의 응급실이 있는 반면에

전북 지역에는 0.26개의 응급실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간극을 좁힐 필요가 있다.

2)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 대학생 당사자

기후위기 심각성을 인지하는 것은 우리가 피해를 받을 '당사자'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2022년을 살아가는 남녀노소 모두가 당사자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여러 분야의 주체들은 능동적인 운동 참여를 독려하며 각자의 현장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는 당사자로 연소한 세대만이 당사자로 인식되고 있지만, 이러한 목소리들이 모여 아동, 농민, 기존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등 다양한 사람들도 충분히 당사자로서 자의식을 끌어낼 수 있으리라는 것이 지금의 생각이다. 그렇다면 대학생인 우리는 어떤 것을 지금 할 수 있을까?

1980년대까지의 운동을 보면 지식인의 책무가 운동의 동기가 되었다. 그리고 현 정치권 인사들을 보면 '학생운동가 출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기성정치인들을 볼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운동'이란 변화를 위해 행동하는 사람들이다. 세상이 조금 더 진보적으로 변화하고,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는 것이 바로 운동이라는 결론을 토의 끝에 내리게 되었다. 그리고 그 운동은 지금의 제도 속에서 순응하며 변화를 만드는 것을 넘어서 불복종 운동까지 전개되었을 때 가능하다. 불복종 운동이란 지배 권력의 공권력 행사 등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자신에게 예상되는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를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국가 권력 질서에 저항하는 운동이다. 이에 대해 미국의 사상가 헨리 소로는 그의 에세이 <시민 불복종>에서 '옳지 못한 국가 권력에 대해서는 시민이 불복종한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하며 불복종 운동에 대한 도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불복종 운동은 대한민국에도 있었다. 3.1운동, 5월 광주민주화항쟁, 6월 민주항쟁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그리고 그중 5월 광주민주화항쟁은 대학생들이 전남대를 시작으로 국가권력에 대항하였으며, 이후에 시민들까지 모두 함께 전남도청 앞에서 끝까지 맞서 싸웠다. 그리고 항쟁의 마지막 날 시민군 대변인이었던 윤상원 열사는 “우리는 오늘 패배하지만, 내일의 역사는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 것입니다.”라는 이야기를 남겼다. 결과로서는 국가 권력에 패배했지만, 항쟁 기간 광주에서 보여주었던 질서정연한 모습과 광주 공동체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시사점을 남겨주었다.

최근 발생한 불복종 운동사례로 우리는 칠레의 '30페소 시위'를 주목했다. 보수정권이 오랫동안 집권했던 칠레는 1970년 잠시 진보적 정치를 지향하는 사회주의 정치인 아옌데가 집권했지만 1973년 피노체트 군부 쿠데타로 군부정권이 집권하며 다시 보수화되었다. 쿠데타 이후, 남미 최초로 신자유주의가 도입되었다. 1990년대 군부독재가 끝나고 민주주의가 들어섰지만, 신자유주의는 존속되면서 최근 까지도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었다. 칠레에서 주목할 점은 2019년 '30페소 시위'에서 민중들이 대동단결하여 불평등을 타파하기 위해 투쟁하였고, 이러한 염원을 담아 전 세계 최연소 대통령까지 당선시켰다는 것이다. '30페소 시위'는 지하철 요금 30페소(약 50원) 인상에서 시작되었다. 칠레는 OECD 평균보다 GDP가 높은 국가였지만, 월급의 3분의 1을 교통비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얼마나 불평등이 심각한지 알 수 있다. 정책 발표 직후 중고등학생들이 지하철역에서 시위를 시작하였으나 정부는 무력으로 진압하고자 했다. 이에 분노한 시민들이 '더 이상 못 참겠다!'며 거리로 나온 것이다. 정부는 시위를 잠재우기 위해 '새로운 사회적 의제' 일부를 발표했다. 하지만, 시위는 잠잠해지지 않았고 더 크게 확산하기 시작했다. 30페소 시위는 교통 요금 30페소 인상에 대한 저항을 넘어 지난 30년에 대한 저항운동이었기 때문이다.

칠레의 대표적 노래이자 구호는 "단결한 민중은 패배하지 않는다."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단결한 민중'이다. 하나의 요구를 더 큰 목소리로 외치는 과정에서 실제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이 담겨있는 구호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위의 칠레 사례를 통해 어떠한 기후의제가 대중의 관심과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또한 어떻게 더 많은 대중들과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끊임없이 생각해야 하는 시점임을 깨달아야 한다. 석탄발전소 폐쇄, 기후재난으로 인한 농가 피해, 송전탑 건설 반대 등 각각의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한곳으로 모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구호가 있어야 하며, 그 구호로 어떤 것이 좋을지 사회 구성원들과의 합의가 필요하다.

그 합의의 과정은 곧 우리에게 승리로 다가올 것이다. 우리는 2016년 촛불에서 변화의 가능성을 보았지만, 아직 전체 민중이 단결해 승리한 경험은 없었다. 이제는 승리의 경험을 만들어야 하는 시점이다. 칠레에서 최초의 중고등학생들이 있었듯이, 기후의제에 심각성을 느낀 대학생 당사자들이 시작점이 되어 대학 내에서의 변화를 요구하며 사회적 변화를 만드는 방법을 고민해 보는 것을 이후 과제로 남기게 되었다.

3. 결론

녹색연합에서 만 14 이상 69세 이하 일반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후위기 심각성과 기후정책에 대한 인식조사(2021)'에 따르면, '귀하는 기후위기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느끼십니까 혹은 심각하지 않다고 느끼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심각하다'라는 답변이 68.3%, '약간 심각하다'라는 답변이 29.3%에 달할 정도로 기후위기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이제 대다수 사람이 기후위기를 인지하고 있지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정부와 기업에서는 기후위기 해결방안으로 탈핵, ESG 경영 등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지금 사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은 기후위기를 조금 늦출 뿐, 혹은 늦추지도 못하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다. 또 개인적 실천인 텀블러 사용, 분리수거 잘하기 등으로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만든다.

'대안'이란 어떤 일에 대처할 방안을 말한다.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근본적인 소비, 생산을 줄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빈번한 기후재난으로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고, 95% 이상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느끼는 지금, 기후정책은 정당의 성향과 관계없이 일관된 정책의 방향을 가지고 추진되는 것이 필요하다. '내가 안 하더라도 누군가가 해주겠지.'가 아니라 나부터 실천하고 함께 행동함으로써 그 대안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우리는 '안전한 사회'에서 살아갈 것이다. 안전의 문제는 생존의 문제이다. 지금까지의 기후위기 대응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탄소배출 및 에너지 소비에 대한 기업 규제'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 그리고 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후위기 대응 회의체에는 각 계층의 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학생 청년이 기후위기의 당사자로서 사회에 목소리 내는 것을 넘어 대학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 성북구에서 가장 많은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K 대학교의 경우 지난 상반기 '탄소중립 캠퍼스로 나아가기' 위해 교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계획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계획이 안일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 2045년보다 더 빠르게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지만, 그것을 당기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 그 대학 당사자들 더 넘어 다른 대학에서 연대해 성과를 이뤄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기후위기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사회에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는 것을 넘어 우리가 속한 공동체 대학의 변화를 만들기 위한 시작을 할 때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히 알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각자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을 넘어 함께 연대하여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방법을 찾아야 한다.

참고문헌

- 가난하거나 어리거나...기후위기와 불평등은 얽혀 있다,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31762.html> (2022.8.13.)
- 국가통계포털 (응급의료현황통계, 2020기준)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1&tblId=DT_41104_411&conn_path=I3
- 한재각, 「기후정의, 한티재, 2021.02.27.
- 깨지고 갈라지고...월성원전 방사능 오염수 줄줄 샌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409625_35744.html (2022.10.01.)
- 녹색연합&Gallup, 2021 기후위기 심각성과 기후정책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보고서, 2021, 9p-10p.
- 신자유주의 실험장이었던 칠레, 스스로 굴레를 벗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87502 (2022.08.23.)
- “지구온도 1.2도 상승에 파키스탄 강우량 75% 늘어”,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916500105> (2022.09.08.)
- 채수미, 최지희, 최소영, 황남희, 우경숙, 정휘철, 『폭염 민감계층의 건강피해 최소화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59P
- 「제29차 시민정책포럼 차기정부의 기후환경정책 과제」 강연 (2020.03.17.)
- 조천호, 『파란하늘 빨간지구(기후변화와 인류세, 지구시스템에 관한 통합적 논의)』, 동아시아, 2019.03.29.
- 칠레, 지하철 요금 '50원 인상'이 역사를 바꿨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517642?sid=10> (2022.08.23.)
- 폭우 속 '반지하' 비극...발달장애 가족 마지막 길,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MYH20220812016400641> (2022.08.23.)
- IPCC, 2007: Summary for Policymakers. In: Climate Change 2007: The Physical Science Basis, Contribution of Working Group I to the Fourth Assessmen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Solomon, S., D. Qin, M. Manning, Z. Chen, M. Marquis, K.B. Averyt, M. Tignor and H.L. Miller (eds.)].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United Kingdom and New York, NY, USA, 13-17p
- "2040년 우리나라 해수면 높이 11cm↑...온도 1.2도↑"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364886632432896&mediaCodeNo=257&OutLnkChk=Y> (2022.09.09.)
- 道“환경파괴 더이상 외면 못해”...지구 지키기 선도
<https://www.dk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6802> (2022.09.09.)

모비딕

김형진, 김지연, 노수빈, 윤나은, 임현경, 조민주

다양한 분야에서 등장하는 비거니즘 담론의 인식을 탐구해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전환 정책을 모색함

전환의 상상력으로서의 비거니즘에 대한 고찰

비거니즘의 확장성 탐구

모비딕

김형진, 김지연, 노수빈, 윤나은, 임현경, 조민주

1. 서론

지구 위 모든 생명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기후위기, 팬데믹과 같은 거대한 문제는 현대 인간 문명의 지속 불가능성에 대한 대안을 요구하며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문한다. 특히, 비거니즘(veganism)은 인간의 가장 일상적인 행위인 먹는 활동에 문제를 제기하며 생태문명으로 향하는 전환의 시작을 식탁으로 삼을 것을 주장한다.¹ 동물을 억압하는 방식이 환경 문제, 불평등과 차별 등 우리 사회의 문제를 초래한 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러한 교차적 문제를 인지하고자 하는 것이 비거니즘의 전환적 관점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도 급격한 경제성장과 함께 육식 문화가 자리 잡으며 육식이 건강하고 바람직한 것이라는 공식이 널리 퍼졌다. 현대인들의 편리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 의류, 각종 공산품, 오락에까지 동물이 이용되는데 이 사실은 체계적으로 가려져 문제시하지 못하도록 은폐되어왔다(Singer, 1975). 인간과 자연의 이분법에 기반한 자본주의 가부장제를 비판하는 에코페미니스트들은 여성해방과 자연해방이 운명공동체라는 것을 지적했다(Warren, 1987; Gaard, 2002; 미즈, 2014). 또한 현대 자본주의 소비사회는 동물 착취를 통해 지탱되어 왔으나, 축산 자체와 자본주의의 지속 불가능성으로 인해 기후위기 및 인수공통감염병과 같은 문제가 드러나게 되자 과도한 육식 문화에 대한 반성과,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다시 탐색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운동으로서의 비거니즘이 부상하게 되었다. 특히 최근 채식주의의 '제3 물결'이라 할만한 청년 여성의 채식 인구 증가는 탈육식에 대한 페미니즘적 접근에서 비롯되었다(Wrenn, 2019). 성차별이나 인종차별이 부당하다면 종차별도 부당하다는 관점과(Singer, 1975), 여성을 억압하는 방식과 동물을 억압하는 방식의 유사성을 발견하고 가부장제

1 영국의 비건 협회(The Vegan Society)의 정의에 따르면 '비거니즘'이란 "음식, 의복 또는 기타 목적을 위해 동물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착취와 학대를 가능한 한 실행 가능한 한 배제하려는 철학이자 생활 방식"이다.

에 저항하려는 접근에서의 동물해방운동인 것이다(Adams, 1990). 즉, 비거니즘은 전 지구적 차원의 위기와 개별 생명체 차원의 고통을 동시에 주목하며 인간과 동물, 나아가 자연과의 연결성에 주목하므로 생태주의와 페미니즘 그리고 동물 연구를 가로지르는 확장적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들어 동물권·채식에 대한 많은 저서와 번역서가 출간되며 대중적인 인지도를 얻고 있지만, 비거니즘에 대한 국내의 학술적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기후정의·생태주의·페미니즘과 같이 지금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논의에서도 동물은 자주 주변화되고 비거니즘 철학 및 실천이 충분히 조명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거니즘은 종종 단순한 소비 양식의 변화나 유행으로 치부되는 실정이다. 이처럼 비거니즘에 대한 협소한 이해를 극복하고 비거니즘의 확장성을 탐구하고자 우리 연구모임이 출발하였다.

먼저 국내의 비거니즘 관련 연구 동향이 어떤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RISS에서 '비건', '채식주의' 등을 검색어로 하여 571개의 국내 학술 논문을 수집하였다. 그리고 서지정보와 필요한 경우 초록 및 본문을 읽고 토픽별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논문 수가 많은 순으로 '철학, 윤리'(n=149), '문화 비평'(n=85), '건강, 영양'(n=83), '시장, 개발'(n=65), '법, 행정'(n=60), '종교'(n=46), '문화'(n=34), '사회, 정치'(n=28), '심리, 행동'(n=14), '교육'(n=7) 등 10개 토픽으로 파악되었다.

크게 동물권·동물윤리 연구의 관점과 비인간 연구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과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볼 수 있었다. 공통점으로는 인간 예외주의의 문제를 인식하고 인간과 비인간(동물·사물)의 주체성을 주목하고 있었다. 차이점으로는 동물권 연구의 경우 인간과 동물의 동질성을 강조하여, 인간과 동질성을 가지는 존재의 윤리적 지위에 대해 끊임없이 논쟁하고 있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맹주만, 2007; 최훈, 2009; 문성학, 2018; 박형신, 2021). 비인간 연구의 경우 인간과 비인간의 이질성을 기반으로 동물뿐만 아니라 자연, 사물, 인공지능의 행위성에 대해 고찰하며 역으로 인간 내부의 차이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다(홍성욱, 2021; 김애령, 2014). 이렇게 개관하는 작업을 통해 비거니즘이란 인간중심적 사고방식, 정치, 사회, 문화, 법 제도, 시장 등의 영역에서 공고한 기존 질서에 물음표를 그리는 실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우리 연구모임에서는 몇 가지 비거니즘과 관련된 쟁점을 선정해 탐구하였다. 먼저, 비거니즘과

이론적 배경을 공유하는 에코페미니즘에 대해 살펴보고 에코페미니즘의 비거니즘적 함의를 탐구하였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비거니즘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정치적 비거니즘의 개념을 조사하고, 이에 기반해 채식주의자의 정치적 참여와 사회운동으로서 실천적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육 현장에서 비거니즘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를 논의하며 비거니즘이 나아갈 방향을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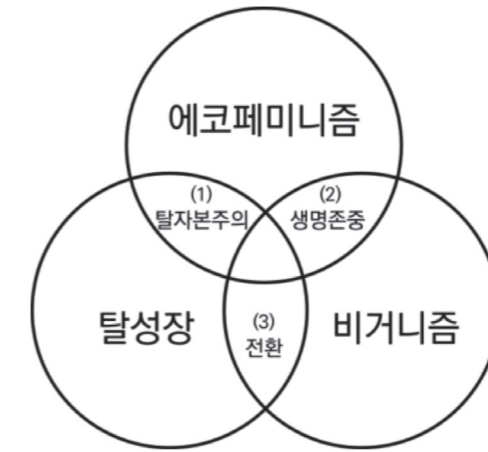
2. 본론

1) 비거니즘과 에코페미니즘

반다나 시바와 마리아 미즈의 말을 빌려 에코페미니즘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세계를 새로 잔다', '상처를 치유한다', '망(web)을 새로이 연결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Shiva & Mies, 2014). 에코페미니즘은 자본축적을 위해 전 세계 인간과 자원의 통제에 기반을 두는 새로운 세계질서가 대두함에 따라 점점 비가시화되는 다른 전 지구적 과정들을 가시화하기 위한 개념이다.

근대 과학은 마치 보편적 가치로부터 자유로운 지식체계이며 객관적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에코페미니즘의 관점에서 환원주의적 혹은 기계적 패러다임은 자연과 여성의 종속을 수반하는 서구적인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기획물로 여겨진다. 지식(전문가)과 무지(비전문가), 가치와 비가치로 나누는 것은 지배와 종속의 중심이 된다. 환원주의란 복잡한 높은 단계의 개념을 하위 수준의 더 기본적인 요소로 세분화하여 설명하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환원주의적 패러다임에서 숲은 상업적인 목재로, 목재는 펄프와 제지업을 위한 섬유소로 환원된다. 숲, 토지와 유전 자원들은 펄프의 생산을 증가시키도록 조작되는 것이다. 전체적인 생산성만 증가시킨다면 그것이 숲의 수분 보유량을 줄이건, 숲 공동체를 이루는 생명체의 다양성을 파괴하건 상관없이 '과학적인 산림 관리와 산림개발'의 이름으로 합법화된다. 재생력의 터전으로서 종자와 여성의 육체는 최후의 식민지가 된다. 전문가들이 가치를 생산하고 추가하는 수동적인 장소로 바뀌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비거니즘, 에코페미니즘, 그리고 탈성장 담론이 공유하는 반환원주의적 맥락을 살펴볼 것이다.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 성장주의 체제에서의 탈피, 그리고 자연 해방과 생명 존중이 바로 그것이다. 세 가지 개념의 관계는 <그림 1>과 같이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비거니즘, 에코페미니즘, 탈성장의 관계

(1) '에코페미니즘'과 '탈성장'이 말하는 '탈자본주의'

에코페미니즘에서는 서구의 보편주의 이데올로기를 경계한다. 서구 산업화 모델은 물질적·경제적 개발과 경쟁을 강조하여 이윤 지향적 산업을 위해 생물적·문화적 다양성을 파괴한다. 이러한 동질화 전략은 미국식 코카콜라, 패스트푸드 모델을 떠오르게 한다. 문화의 차이에만 치중하는 동안 지역 문화는 이윤 지향적 산업에 해체된다. 지역문화들은 조각조각 나뉘어 그 단편들이 세계시장에서 팔릴 만한 상품이 될 때 비로소 가치를 지닌다. 음식이 민속음식이 되고, 전통 설화가 민속학이 되고, 기술이 관광객에게 팔 민속품 생산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다시 문화적 다양성은 표준화되고 동질화된다(Shiva & Mies, 2014). 탈성장 담론에서 역시 자본주의 경제 성장 체제가 말하는 '성장'을 비판한다(Hickel, 2020). 성장주의 체제는 유한한 지구에서 무한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해왔으며 GDP는 좋은 경제활동과 나쁜 경제활동을 구분하지 않는다.

즉 전쟁, 범죄, 환경 파괴 등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행동도 경제 성장에 반영된다.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없어지는 오래된 문화, 조상의 기술, 사라지는 언어와 음악, 그리고 자연에 대한 폭력이 지워지게 되었다. 성장을 가능케한 에너지와 물질은 주로 원주민 거주 지역이나 소위 저개발 지역의 상품 개척 경로로부터 추출한 것이며 이들 지역은 채굴 사업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된다(Shiva & Mies, 2014). 에코페미니즘에서 말하는 자급적 관점에서 자유란, 필요의 영역을 정복하거나 초월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제약 안에서 자유, 행복, 윤택한 생활에 대한 비전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문화상대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 세계 여성들 간, 여성과 남성 간, 인간과 자연 간 다양성과 상호연관성을 살펴야 한다. 이들을 묶어주는 기반은 무엇인가? 바로 공생이다. 의·식·주, 애정과 보살핌과 사랑, 긍

지와 정체성, 지식과 자유, 여가의 기쁨과 같이 살아있는 연관성은 문화, 이데올로기, 인종, 정치, 경제 체제와 계급을 불문하는 것이다.

(2) '탈성장'과 '비거니즘'의 관점에서 본 '전환'

탈성장은 국내 총생산 증가를 목표로 두지 않고 경제활동을 궁극적으로 감소시켜 사회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Hickel, 2020). UN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가 발표한 5차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1980년 이후 이산화탄소 배출이 30년간 가장 급속히 전개되었으며 그 원인이 경제성장이라고 보았다(IPCC, 2014). 탈성장운동은 지금까지 유럽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1972~2002년까지 개발 중단과 세계 재생을 위한 국제회의의 논의가 있어 왔다(Hickel, 2020). 2000년대 초반 프랑스 리옹에서는 차 없는 도시, 거리 공동식사, 음식협동조합, 광고 반대 캠페인 등이 진행되었고 2004년 이탈리아에서는 녹색 및 반세계화 운동 슬로진으로 탈성장을 사용하였다. 탈성장 사회로의 이행은 삶을 단순하게 만들고 모두가 더 적게 가지고 살아가는 사회로 전환하는 것이다(박이은실, 2022). 사회구성원들이 스스로 충분히 가졌고 더 이상 축적하지 않는다는 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를 상상하고 건설하는 것이다. 탈성장 사회는 항상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법칙을 따르지 않는다. 탈성장 사회에서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산활동은 이루어진다. 하지만 오직 팔기 위한 물품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튼튼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논의한다(Hickel, 2020).

비거니즘 역시 절벽을 향해 질주하는 성장 경제 모델에 의문을 제기한다. 성장이라는 단 하나의 이데올로기를 유지하기 위해 고려되지 않았던 주변을 살펴보면 식생활 문화의 전환, 동물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전환을 요구한다. Adams(1990)는 비거니즘을 가부장제에 대한 저항이자 억압받는 존재에 대한 해방운동이라 하였다. 뿐만 아니라 성장 경제와 착취라는 중독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계에 대한 상상력을 제시한다. 비거니즘은 세계를 새로이 구축하는 '망'이라는 점에서 전환적 관점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에코페미니즘'과 '비거니즘'의 관점에서 본 여성과 자연에 대한 '생명 존중'

비거니즘은 에코페미니즘과 함께 자연의 해방을 외친다는 점에서 맥락을 함께 한다. 자본주의 가부장제 혹은 근대 문명은 현실을 구조적으로 양분 또는 위계화하여 서로 적대시하는 우주론과 인류학에 근거한다(Shiva & Mies, 2014). 예를 들면, 흙의 적대적 이해관계, 진화론의 적대적 생존법칙 등이

있다. 남성들이 자연으로부터 취한 것에 대해 더 많은 혹은 동등한 몫을 요구하자는 여성들의 동등화(따라잡기) 정책이 서구 사회에서 상당 부분 성취되자 여성운동에서도 현대 화학, 가사 관련 기술, 제약업 등이 여성을 단조롭고 고된 가사노동으로부터 해방시켜줄 것이므로 여성의 구원자라고 선언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환경 파괴가 현대의 가사 관련 기술에 원인이 있으므로 역시 모순점이 있다. 유럽 남성 주체들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희생된 여성, 자연, 식민화된 이민족 등은 자신의 주체성과 자유와 생존기반을 부정당했다. 생명공학, 유전공학과 생식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과학과 기술이 성차별적이고 과학의 전체 패러다임 자체가 가부장적, 반자연적, 식민주의적인 것이며 자연의 생산력과 여성의 생식력을 박탈하고자 하는 것임을 발견했다.

자본주의 구조 안에서 여성과 동물의 몸은 전쟁터가 된다. 부위별로 해체되면서 개별 존재의 의미는 사라지고 생명이 아닌 상품으로 환원되어 소비된다(Adams, 1990). 에코페미니즘은 자본주의와 상업주의의 결합 앞에서 제도적·구조적으로 벌어지는 생명 파괴를 비판한다(강남순, 2016). 강남순(2016)은 어떤 생명이 다른 생명보다 중요하다고 전제하는 것을 생명의 위계주의라 하였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명들의 함께-살아감'이라는 의미에서의 생명 존중과 생명 돌봄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2) 비거니즘과 정치

정치적 비거니즘(political veganism)의 개념은 비거니즘이 단순히 개인 식생활이나 생활 방식의 선택, 혹은 정체성만의 영역이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변화를 위한 행동주의의 한 형태임을 나타낸다(Cochrane & Cojocar, 2022). 해당 개념을 통해 비거니즘은 정치적 연대의 한 형태로 기능한다는 점이 드러나는데, 비건들은 다양한 종류의 정치 참여를 통해 억압이나 착취, 환경 문제나 공장식 축산을 둘러싼 정치·사회·경제적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비거니즘은 동물성 식품 및 동물 착취와 관련된 제품을 거부하는 개인의 소비 행위가 정치적 이유 및 신념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소비주의(political consumerism)의 하나로 묘사되기도 한다(Jallinoja et al., 2020). 정치적 소비주의는 개개인의 일상적 구매행위 혹은 구매하지 않는 행위가 보다 나은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주의 수단으로 나타나는 것으로(천혜정, 2019) 비통상적 정치 참여 유형으로 여겨진다. 즉 비거니즘은 점점 더 개인화되어가는 정치적 행동을 반영하고, 윤리적 문제 및 시장의 관행을 바꾸기 위해 수행된다는 점에서 정치적 소비주의와 같이 비통상적인 정치 참여로 초점이 맞춰지는 경우가 많다(Kalte, 2021). 그러나 정치적 비거니즘의 담론은 소비주의와 같은 비통상적인 형태의 정치 참여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다 넓은 범위의 정치적 연대까지 포함하고자 한다. 행동주의의 한 형태로서

비거니즘은 제도적 변화를 이끌 수 있는 통상적 형태의 정치 참여와 시민 연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 용할 수 있는 모든 정치적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Cochrane & Cojocar, 2022).

정치적 비거니즘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2010년대 후반부터 다루어지기 시작했는데, 실증적 데이터 수집을 통해 비건들의 정치 참여 양상을 살펴본 연구(Martinelli & Berkmaniene, 2018; Kalte, 2021; Bertuzzi, 2017)와 비거니즘의 정치적 소비주의 및 정치적 연대와 관련된 담론을 살펴본 연구(Cochrane & Cojocar, 2022; Jallinoja et al., 2020) 등이 있다. 비거니즘에 대한 데이터 수집 연구는 여러 측면에서 조사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일반적으로 비건 커뮤니티 내에서 다루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큰 규모의 데이터를 모으기가 쉽지 않고, 사람들이 스스로를 비건이라고 정의하는 데 수많은 변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신뢰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Martinelli & Berkmaniene, 2018). 따라서 비거니즘과 관련된 정량적 연구는 기존에 수행된 조사를 활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점에서 비교적 최신에 수행된 비건 데이터 수집 연구들은 비거니즘 관련 연구 분야에서 중요한 의미와 활용 가능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Deborah Kalte(2021)는 비건 생활 방식이 점점 더 개인화되어가는 정치적 행동을 반영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스위스의 채식주의자 648명을 대상으로 정치 참여에 관한 실증적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비건은 매우 다양한 형태의 정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시위나 온라인 정치 토론과 같은 공공연하고 담론적인 형태의 정치 참여 영역에서 더 활발하게 활동하는 경향을 보인다(Kalte, 2021).

Cochrane과 Cojocar(2022)는 비거니즘의 중요한 역할이 비거니즘 가치와 정치적 관행 사이의 불일치를 강조하는 것임을 설명하고, 인간에 의한 동물 억압을 해결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연대해야 함을 주장한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비건들은 다른 비건들과 정치적 행동의 이상을 공유하고 실천한다는 사실에서 만족감을 얻고 있으며, 기존의 윤리적 비거니즘 담론을 넘어 정치적인 비거니즘으로 담론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비거니즘을 사회 정의를 위한 정치적 투쟁과 연대 실천으로 재개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Cochrane & Cojocar, 2022).

3) 비거니즘과 사회운동

기후위기가 단지 먼 곳의 빙하가 녹는 문제가 아니라 매우 가까운 곳에서 약한 존재들부터 위협한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래서인지 지난 9월 24일 열린 '9·24 기후정의행진'에는 동물권, 빈곤, 여성, 장애인 등 매우 다양한 종류의 사회운동 단체들이 모습을 보였다. 차별과 억압의 교차성을 발견하고 연대를 이루는 것은 기후위기로 대표되는 지구적 문제에 대항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일 것이다. 그런

데 연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이 장에서는 비거니즘이 다른 운동과 결합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보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이하 앰네스티)를 사례로 연대의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볼 것이다.

인류는 인류로서 존재하기 위하여 그간 끊임없이 특정 부류를 타자화하며 생존해왔다. 젠더, 인종, 민족, 종 등에 따라 타자화의 대상이 분류되곤 한다(이윤희·이영학, 2017). 이와 같은 타자화 '동지'로서 비거니즘과 인권운동은 일종의 결을 같이 한다. 동물권 활동가들 역시 사회운동으로서의 동물권 운동의 보편성을 말하며 동물의 권리 문제가 다른 사회 문제와 연관되는 시스템의 문제임을 지적한 바 있다(조중현, 2013). 비거니즘과 인권 운동 모두 구조적 억압에 대한 저항이다. 또한 무한한 자원을 전제하고 수탈과 착취, 대량생산과 대량폐기, 소외와 배제를 일삼게 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운동이기도 하다. 이를테면 공장화, 자동화된 축산업은 기존의 농촌 구조와 공동체를 파괴하였고, 먹거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채식보다 자본 종속 사회의 잘 팔리는 이미지이자 스펙타클로 육식을 택함으로써 빈곤 문제를 악화시켰으며, 이 모든 과정에 환경오염 및 동물학대, 서식지 파괴 등이 동반되었다(이윤희·이영학, 2017).

동물권 운동만의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 있다. 아무래도 인간 사회에 말을 걸 수 없는 동물들을 대리하여 활동가들이 운동주체가 되므로, 다른 권리 운동보다 타자중심성이 두드러진다는 것이다(이윤희·이영학, 2017).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동물권 운동은 사회운동 내에서도 또다시 타자화되고는 한다. 이에 따라 모든 소수자 권리의 가장자리에 인간 외 동물의 권리가 있다고 여겨지며, 동물권 운동가들은 그 안쪽의 다른 소수자 운동들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연대하게 되는 것이다(이윤희·이영학, 2017). 동물권 활동가 전범선은 동물해방을 말하면서 모든 인간의 해방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다. 비건이라면 생명 살해 외의 다른 사회적 불평등에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부 평등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에 대항하기 위한 전략이 지배에서 협력과 자립의 문화로 가는 식으로 유사하기 때문이다(전범선, 2022). 이와 같은 논지라면, 인권 옹호자들도 자연스럽게 비거니즘을 옹호하거나 비건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육식이란 이미지가 될 정도로 축적된 자본으로서(채윤, 2021)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이 고기를 먹기 때문에 고기를 먹게 되므로(Leenaert, 2017) 비건과 논비건의 교류, 비거니즘의 옹호자와 다른 사회운동의 옹호자들과의 교류는 매우 중요하다.

이미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파브릭에서는 다양한 사회운동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대안사회를 만들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던 바 있다(사지원, 2020). 거주지에서 노동과 문화활동을 하고, 이때 노동과 문화활동은 별개의 개념이 아니며 자연과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보자는 것이 해당 시도의

목적이었다. 노동자들은 오래 방치된 산업체 건물 등을 일터 겸 주거지로 삼았다. 산업체 건물에서 노동자들이 일률적으로 수행해야 했던 기계적 역할에서 벗어나 새로운 주체로서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곳을 입증하기 위해, 자본가들의 건물 투기 및 재건축을 막고 노동자 구역에 문화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낡은 건물을 재활용하여 지역의 역사성을 보존하기 위해, 오염의 근원으로 간주되는 공장도 생태적으로 유지가 가능함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프라이부르크 파브릭은 현재까지도 대안운동을 통해 탄생한 사회문화센터로 기능하고 있다(사지원, 2020). 이와 같은 사례는 인권 분야에서도 특히 비거니즘과 맞부딪히는 노동자 권리와 대화에 있어 주요한 시사점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다.

앰네스티는 160개 국가에서 약 1,000만 명 이상의 회원 수를 보유한 인권단체로 한국지부의 경우 2022년에 50주년을 맞았다. 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정부 지원금 없이 1970년대 민주화 운동부터 코로나19, 기후위기, LGBTI, 인권옹호자, 여성, 사형, 고문, 북한인권, 기업책무, 양심 사상 표현의 자유, 난민/이주민, 분쟁지역 민간인 보호, 집회시위의 자유, 안보와 감사를 의제 삼아 활동을 전개해왔다. 최근 국제앰네스티는 기후위기를 주요 사업 의제 중 하나로 채택하며 본격적인 캠페인 활동에 나섰다. 특히 청소년 및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액티비즘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앰네스티에서 강조하는 '운동'은 파티 같은 것이다. 누구나 의제의 옹호자 및 활동가가 될 수 있고, 파티 같은 사회운동을 감각하며 서로 연결되고 그로써 운동을 지속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이는 앰네스티의 공식적인 정관은 아니나, 유스(청소년 및 청년)들과의 세대적 교류를 중시함에 따라 젊은 세대들이 다수 일하고 있는 한국지부의 분위기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다. 물론 파티 같은 운동 중에도 어떤 표현이든 서로를 존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 비거니즘이 늘 함께한다.

비거니즘은 동물의 착취와 죽음에 반대하는 라이프스타일로, 식생활 이상의 범위를 포괄한다(Mann, 2014). 비거니즘과 인권운동을 나란히 두고 보았을 때, 이 둘은 동물의 권리를 더 우선시하거나, 인간의 권리를 더 우선시하고자 하는 라이벌 관계가 아니다. 다만 동물권의 쟁점으로 보았을 때, 동물권은 인간중심주의를 경계하며 특히 동물 학대로 인한 환경 오염 등의 문제가 다시 고스란히 인간에게 환원되는 문제 때문에 동물 학대를 멈추어야 한다는 식의 논지가 종차별주의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한다. 이렇듯 다소 별개의 프레임 및 목표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비거니즘과 인권운동은 크게 사회운동이라는 분류 아래 공통적으로 속해있다. 앰네스티도 처음부터 비거니즘을 고려하진 않았다. 지금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운동 이념이 아니다. 그러나 시대적 특성과 함께하는 활동가들의 일상적 교류에 따라, 비거니즘과 반종차별주의는 최근 몇 년 사이에 활동가들 사이에 내부적으로 자연스럽게 확산되어 이제는 모든 앰네스티의 행사 때마다 당연하게 고려되는 사항이 되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에는 언어를 활용한 이해의 과정이 있었다. 이제 앰네스티는 비거니즘과 인권의 교차성에 대한 보다 섬세한 탐색과 식생활을 넘어선 비거니즘의 실천에 대한 확장의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4) 비거니즘과 교육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문제에 직면하면서 세계는 건강뿐 아니라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핵심 가치로 삼은 식생활 정책과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이예린, 2020). 육류 섭취를 줄이는 것이 효과적인 기후위기 대응책이라는 것이 인정되며(UN FAO, 2013; Poore and Nemecek, 2018; Scarborough et al., 2014), 15개 시·도 교육청에서는 2021년 주 1~2회 '채식의 날'을 운영하여 채식을 제공하는 학교급식을 도입하였다. 학교에서 급식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학생들이 식습관, 예절, 영양에 관한 지식 등을 종합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풍성한 교육의 장이다. 그러므로 채식급식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한다는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먹거리의 생산 과정을 생각해보게 하고 생태적 감수성을 함양할 수 있는 생태 전환교육의 의미에 부합한다. 따라서 2021년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기후위기대응 채식선택 급식 운영'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었으며 '그린 급식의 날(서울특별시교육청)', '다채롭데이(경상남도교육청)', 'V.T.S DAY(Vegetarian Trip of School meal, 인천광역시교육청)' 등을 운영하고 있다.

Colombo(2021)에 따르면 학교급식은 건강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급식을 통해 중요한 삶의 기간 동안 올바른 식이 습관이 형성된다면 이는 성인이 되어도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스웨덴에서 4주간의 실험을 통해 학생과 직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학교 급식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한 방해물과 촉진자를 탐색하였다. 그 결과 새로운 메뉴에 대한 경험, 지속가능한 식단의 의미, 식물성 식품을 받아들이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식물 기반 식단을 늘릴 수 있는 기회, 식생활 변화를 위한 지원 및 환경 조성의 필요성 등의 5가지 범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세부 항목 중에서는 채식 급식을 통해 학생들이 식물성 식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먹거리의 소중함과 문제에 대해 성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 활동과의 결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스웨덴과 포르투갈에서 학교 급식의 지속가능한 전환을 위해 시스템적으로 접근한 Graça et al. (2022)은 주요 행위자를 학교, 지역사회, 정부 단위로 나누어 필요한 역할을 제시하였으며 공통적으로 학교 시스템의 변화, 지원 체계 마련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한국의 대부분의 교육 현장에서는 채식 급식은 운영했으나 식생활 환경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학생들의 불평과 잔반량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채식 급식을 통해 학생들이 육류 섭취와 기후위기의 관련성을 알 수 있도록 교육하는 선도학교들도 있으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비

거니즘은 대부분 제외되어 있다. 지속가능한 급식으로의 전환을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학교, 전문가, 정부 수준의 일치된 행동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학생, 교직원 교육과 학교 관리자의 강력한 리더십 및 지원을 다른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채식 급식이 채식 선택권을 보장하고 비건 학생들도 편안하게 급식을 먹을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가려면 아직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어떤 방향을 최종 목적으로 설정해야 할지 제대로 고민해야 할 것이다.

3. 결론

이상 비거니즘과 다양한 의제들의 접점과 방향을 검토하고 어떻게 연대하며 함께 확장될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비거니즘의 문제의식이 단지 비거니즘의 것만이 아니라 차별과 억압, 생명위계주의와 자본주의 경제성장에 저항하는 사회 운동의 흐름과 공유되고 있는 것임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사회운동 조직과 정치, 교육 현장이라는 구체적인 공간에서 비거니즘을 둘러싼 논의의 지형 변화를 살펴보았다. 앰네스티 내부에서는 동물권 문제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비거니즘이 확산되어 자연스럽게 실현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생태 전환교육의 현장인 학교 급식에서는 일부 학교에서 선도적으로 채식급식을 도입하고 있었지만 식생활 환경 교육의 미흡함과 학교, 전문가, 정부 수준에서의 불일치된 행동으로 인해 채식 급식이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었다.

종합해 보면, 비거니즘이 지금 시대에 매우 중요한 실천 및 철학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회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거니즘이 에코페미니즘 및 탈성장과 연계하는 새로운 세계를 그린다는 점은 전환의 사회로 향하는 또 하나의 상상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과정에서 이 연구는 그동안 학술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비거니즘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았다는 의의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비거니즘과 연결되는 영역들과의 교집합을 찾음으로써 연대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의 한계로는 구체적인 하나의 이슈에 집중하여 경험적 수준의 연구를 진행하지 못한 점이 존재한다. 이 연구의 연장선에서 향후 비거니즘에 대한 더욱 심층적이고 풍부한 연구들이 수행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국내 문헌

- 김애령, 2014, 『사이보그와 그 자매들: 해러웨이의 포스트휴먼 수사 전략』, 『한국여성철학』, 21, 67-94.
- 맹주만, 2007, 『피터 싱어와 윤리적 채식주의』, 『철학탐구』, 22, 231-258.
- 문성학, 2018, 『동물 윤리학과 '가장자리 경우 논증』, 『철학연구』, 148, 129-156.
- 박이은실, 2022, 『2022년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여름강좌 강의록』, 비공개.
- 박형신, 2021, 『동물권리운동의 가치정치와 먹기의 감정 동학』, 『사회와이론』, 40, 133-174.
- 사지원, 2020, 『노동·문화예술·생태가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프라이부르크 파브리)-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하나의 모델』, 『문화콘텐츠연구』, 19, 7-30.
- 서울특별시교육청, 2022, 『먹거리 생태전환교육에 대한 인식 조사』, 1-33.
- 이윤희·이영학, 2017, 『액티비즘 아카이브로서 동물권 운동 아카이브』,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7(4), 27-49.
- 인천광역시교육청, 2021, 『채식 급식 정책토론회 자료집』, 3-7.
- 인천광역시교육청, 2022, 『2022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22-32.
- 조중현, 2013, 『동물 옹호의 논의와 실천을 통해 본 동물권 담론의 사회적 의미』, 『법학논총』, 30(1), 111-131.
- 채운, 2021, 『행성적 도시화와 비인간 동물의 삶, 도시권 운동의 생태적 확장』, 『뉴 레디컬 리뷰』, 87, 237-264.
- 천혜정, 2019, 『정치적 소비주의, 소비자불매운동 그리고 소셜미디어: 소셜 미디어 이용 동기 및 정치사회자본을 중심으로』, 『소비자문제연구』, 50(2), 55-88.
- 최훈, 2009, 『맹주만 교수는 피터 싱어의 윤리적 채식주의를 성공적으로 비판했는가?』, 『철학탐구』, 25, 195-214.
- 홍성욱, 2021, 『포스트휴먼 테크놀로지』, 『인문학연구』, 35, 3-35.

단행본

- 강남순, 『에코페미니즘과 생명돌봄의 의미』, 『덜 소비하고 더 존재하라: 에코페미니스트의 행복혁명』, 여성환경연대, 도서출판 시금치, 2016.
- 전범선, 『왜 살림인가?: 비거니즘과 적녹보의 통합』, 『물결』, 2022 봄호, 두루미, 2022.
- Adams, C. J., 『The sexual politics of meat: A feminist-vegetarian critical theory』, Continuum, 1990. (『육식의 성정치: 여혐 문화와 남성성 신화를 넘어 페미니즘-채식주의 비판 이론을 향해』, 류현 번역, 이매진, 2018.)
- Hickel, J., 『Less is more: How degrowth will save the world』, Random House, 2020. (제이슨 히켈, 『적을수록 풍요롭다: 지구를 구하는 탈성장』, 김현우·민정희 역, 창비, 2021.)

- Leenaert, T., 『How to Create a Vegan World: A Pragmatic Approach』, Lantern Publishing & Media, 2017. (토바이어스 리나르트, 『비건 세상 만들기』, 전범선·양일수 역, 두루미, 2020.)
- Mies, M., 『Patriarchy and Accumulation on a World Scale』, Zed Books, 1998. (마리아 미즈,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여성, 자연, 식민지와 세계적 규모의 자본축적』, 최재인 역, 갈무리, 2014.)
- Shiva, V., & Mies, M., 『Ecofeminism』, Bloomsbury Publishing, 2014.
- Singer, P., 『Animal Liberation』, HarperCollins, 1975. (피터 싱어, 『동물 해방』, 김성한 역, 연암서가, 2012.)
- Wright, L., 『Framing vegan studies』, 『The Routledge Handbook of Vegan Studies』, Routledge, Abingdon, Oxon; New York, NY., 2021, 3–14.

국외문헌

- Bertuzzi, N., “Veganism: Lifestyle or Political Movement? Looking for Relations beyond Antispeciesism”, *Relations*, 5(2), LED Edizioni Universitarie, 2017, 125–144.
- Cochrane, A., & Cojocar, M. D., “Veganism as political solidarity: Beyond ‘ethical veganism’”. *Journal of Social Philosophy*, 00, John Wiley & Sons, Ltd, 2022, 1–18.
- Colombo, P. E., “Barriers and facilitators to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sustainable school meals: a qualitative study of the OPTIMAT™-interven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Nutrition and Physical Activity*. 2021, 18–89.
- Gaard, G., “Vegetarian ecofeminism: A review essay”. *Frontiers: A Journal of Women Studies*, 23(3), 2002, 117–146.
- Graça, J., Roque, L., Guedes, D., Campos, L., Truninger, M., Godinho, C., & Vinnari, M., “Enabling sustainable food transitions in schools: a systemic approach”. *British Food Journal*, 2022, 7–22.
- IPCC, “AR5 Synthesis Report: Climate Change 2014”, 2014.
- Jallinoja, P., Vinnari, M. V. & Niva, M., “Veganism and Plant-Based Eating : Analysis of Interplay Between Discursive Strategies and Lifestyle Political Consumerism”. *Oxford Handbook of Political Consumerism*, Oxford Handbooks, Oxford University Press, 2020, 157–179.
- Kalte, D., “Political Veganism: An Empirical Analysis of Vegans’ Motives, Aims, and Political Engagement”, *Political Studies*, 69(4), SAGE Publications, 2021, 814–833.
- Mann, S. E., “More than just a diet: An inquiry into veganism”. Unpublished bachelor thesis, University of Pennsylvania, Philadelphia, 2014.
- Martinelli D. & Berkmaniene, A., “The Politics and the Demographics of Veganism: Notes for a Critical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semiotics of law*, 31(3), 2018, 501–530.

- Poore, J., & Nemecek, T., “Reducing food’s environmental impacts through producers and consumers”, *Science*, 360(6392), 2018, 987–992.
- Scarborough, P., Appleby, P. N., Mizdrak, A., Briggs, A. D., Travis, R. C., Bradbury, K. E., & Key, T. J., “Dietary greenhouse gas emissions of meat-eaters, fish-eaters, vegetarians and vegans in the UK”, *Climatic change*, 125(2), 2014, 179–192.
- UN FAO, “Tackling climate change through livestock: a global assessment of emissions and mitigation”, <https://www.fao.org/3/i3437e/i3437e.pdf>, 2013.
- Warren, K. J., “Feminism and ecology: Making connections”. *Environmental ethics*, 9(1), 1987, 3–20.
- Wrenn, C. L., “Building a Vegan Feminist Network in the Professionalized Digital Age of Third Wave Animal Activism”, 2019. DOI: 10.31235/osf.io/jtps8

생.상.모(생태적 상상 모으기)

임보람, 권미란, 김선, 전주희

문학적·미술적 상상력을 통해
지구적 환경 변화와 기후위기 상황에 대한 담론을 모색하며
이를 생태 문화적 차원으로 담론화하기

생태적 상상 모으기

생상모

임보람, 권미란, 김선, 전주희

1. 서론

코로나팬데믹과 함께 나날이 고조되어가는 기후환경의 위기로부터 본능적으로 체감되는 자연현상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지구는 2021년 환경 위기시계가 가리킨 9시 42분에 따르면 이제 꽤 위험한 곳이다. 혹한의 추위와 열파 더위, 이 극한의 현상은 현시대의 모습이다. 사실로서의 역사는 인류의 공동 과제가 되었다. 이에 오늘날의 국제 사회는 2050탄소 중립 선언, 그린 뉴딜 등을 주장하며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맞서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 G20 국가 중 네 번째인 화석연료 투자국으로, 세계 7위의 탄소 발생국이다. 기후위기의 '가해 국민'으로서 이 위기에 누구보다 민감하게 대응해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다. 기후위기의 문제는 결국 국 인문학자에게 언제나 '함께 살아감(living-with)'에 대한 근본적 문제로 돌아가게 한다. 기후위기에 대한 성찰은 나의 삶만이 아니라 이웃들, 그리고 우리가 몸을 부대끼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와 세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에서 비롯된다. '세계-내-존재'로서, 우리의 문제가 결국은 나의 문제임을 잊지 않기 위해, 타자에 관한 철학적 사유를 굳이 떠올리지 않더라도, 나와 이웃을 연결하는 감각, 그 감각의 지속을 추구하는 '생태적 상상력'을 모색해야 한다.

〈생·상·모〉는 '함께 살아감'이 인문학자에게 부여되고 추구되는 학문의 근본적인 지향점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한다. 그러므로 인문학 공동체로서 〈생·상·모〉는 이러한 어젠다에 실천적 담론을 형성할 필요성을 인식한다. 바로 '생태적 상상 모으기'로부터 전 지구적 환경 변화와 기후위기 상황에 대한 담론을 찾아 조사하고, 문학적·미술적 상상력을 발휘하고 공유하면서, 현재 위기에 대응하고 있는 다양한 작품을 찾아 함께 읽는다. 이를 통해 생태적 상상력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 이를 생태 문화적 차원으로 확장하여 담론화하고자 한다.

특히 〈생·상·모〉는 연극, 고전문학, 현대문학, 미술 전공자가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문학과 미술, 그리고 이들의 미학으로부터 얻어지는 다채로운 시각들을 공유할 것이다. 이는 〈생·상·모〉가 지향하는 다양성의 장을 형성한다. 곧 전 지구적 기후위기에 대한 생태문화적 대응 방식을 보여주는 작품들을

함께 읽고 각자의 의견을 나누는 커뮤니케이션은 그 자체로 다채로울 것이다. 더불어 〈생·상·모〉는 환경 운동과 관련한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는 인문학자들이 모여 서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 인류에게 요구되는 '함께 살아감'의 실천 윤리와 그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

2. 본론

본 연구모임은 연극, 고전, 현대문학, 미술 전공자가 함께 하여 전 지구적 기후위기에 대한 생태문화적 대응 방식을 보여주는 다양한 작품을 함께 살펴보고, 또한 '위기'를 진단하는 여러 학자들의 논의를 점검함으로써 요약 발표와 생산적 토론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1) 『인간 없는 세상』

『인간 없는 세상』은 본 연구모임의 출발점이 된 책이다. 이 책의 핵심 질문은 이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인간이 모두 사라진다면, 지구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질문의 답을 찾는 여정이, 본 연구모임의 목적이 될 것이다.

"한 세대 전 인간은 핵전쟁에 의한 절멸의 위기를 넘겼다. 그런데 이제는 본의 아니게도 우리 자신이 속한 지구를 너무 오염시키고 뜨겁게 데워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자문을 하기에 이르렀다. 또 우리는 물과 토양이 유실되도록 마구 써버렸다. 아마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수많은 생물종들을 짓밟아 없애버렸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추측을 해본다 해도,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걸 완강히 거부하려는 태도 때문에 판단이 흐려지기 십상이다. 우리는 파국의 조짐이 주는 공포에 질리지 않도록 그것을 간단히 부인하거나 무시해 버리는 성향이 있는데, 그런 성향에 워낙 오래 길들여진 탓에 서서히 망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 모두가 느닷없이 사라져 버린 뒤의 세상을 상상해 보자는 것이다. 그것도 내일 당장 말이다. 상상하는 김에 자연이 우리의 멸종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번성할 수 있는 방법도 꿈꿔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도 결국은 포유류의 일종이며, 모든 생명체는 자연이라는 화려한 축제에 초대된 손님이다. 우리가 가버리고 나면 우리가 못다 한 역할 때문에 지구가 조금은 더 빈약한 곳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 없는 세상이 거대한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대신, 우리의 부재를 안타까워할 수도 있지 않을까?"(22-35)

1 엘런 와이즈먼 지음, 이한중 옮김, 『인간 없는 세상』, 알에이치코리아, 2020.

앨런 와이즈먼은 『인간 없는 세상』 프롤로그에서 사파라족 아나 마리아 산티의 목소리를 통해 인간에 의해 인간과 자연이 파괴되어온 역사를 지적하며 인간의 멸종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와이즈먼이 제안하는 ‘인간 없는 세상’에 대한 상상은 인간과 문명에 대한 부정과 비난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비판적 상상력을 제공하며 ‘인간 있는 세상’(최재천)이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의 모색이다.

2) 『생명의 그물 속 자본주의』²

『생명의 그물 속 자본주의』는 우리가 자본주의라고 부른 관계들의 모자이크가 자연을 통해서 작동하는 방식에 관한 책이면서 자연이 더 한정된 영역인 자본주의를 통해서 작동하는 방식에 관한 책이다. 이런 이중 운동—자연을 통한 자본주의의 운동과 자본주의를 통한 자연의 운동—이 무어가 ‘이중 내부성’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2008년 이후, 이른바 ‘자연과 사회’³라는 별개의 영역들에서 범람하는 불안정성과 변화는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되었다. 무어는 ‘사회’와 ‘자연’이 지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문제의 일부라고 주장하는데, 요컨대 이항(二項)적 자연/사회의 근대 세계의 거대한 폭력과 불평등, 억압에 직접 연루되어 있다. 그래서 무어는 자연을 외부적인 것으로 여기는 관점이 자본 축적의 기본 조건이라고 주장한다.

자본주의의 지배적인 착상은, 자본주의는 자연을 자기 뜻대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 즉 자연은 외부적이고 경제성장, 사회발전이나 어떤 다른 고등 선(善)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코드화되고 수량화되며 합리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프로젝트로서의 자본주의다. ‘생명의 그물’은 자연 전체인데, 여기서 자연은 결단코 소문자 자연이다.⁴ 간단히 서술하면, 인간은 환경을 형성하고 환경은 인간—그리고 인간 조직—을 형성한다.

세계생태론은 한 가지 낡은 주장과 한 가지 새로운 주장을 제기한다. 한편으로, 그 새로운 패러다임은 자본주의와 자연, 권력, 역사에 관한 관계적 사유의 풍성한 모자이크에서 전개된다. 다른 한편으로, 세계생태론에 따르면, 자연의 관계성을 파악하려면 자연-속-인류를 세계 역사적 과정으로 파악

하는 방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오늘날 위기는 복수의 위기가 아니라 단일하면서 다면적인 위기다. 그것은 자본주의 및 자연의 위기가 아니라 자연-속-근대성의 위기다. 그 근대성은 자본주의적 세계생태다.

우리는 생명 형성의 관계를 명명하는—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대화를 구축하는—방법을 갖추어야 한다. 이런 관계로, 종은 환경을 형성하고 환경은 종을 형성한다. 그것은 무기적 현상에도 열려 있는 관계인데, 이를테면 지각판 이동, 궤도 변동, 유성, 그 밖의 다수의 현상 역시 환경을 ‘형성한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 형성에 관한 열린 구성, 즉 유기적인 것과 무기적인 것의 경계가 항상 이동하고 있다고 여기는 구상으로 시작한다. 그것은 기본 단위가 없는 중층적 관계인데, 오로지 관계들의 그물들 속 그물들, “세계들 속 세계들”이 있을 뿐이다.

무어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일부 사람들이 이 논변을 거대사와 거대 이론의 다른 한 사례로 읽고 싶은 유혹을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무어가 보기에 거대사나 거대 이론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데, 오로지 역사 지리적 패턴들에 관한 우리 지식을 특징짓는 역사와 이론이 존재할 뿐이다. 계급과 인종, 젠더—그리고 물론, 다른 것들—의 패턴들은, 특정한 역사적 체계들과 특정한 역사적 자연들에서 권력과 부를 재생산하는 규칙과 패턴들, 즉 생산과 재생산의 규칙과 패턴들을 정확하게 묘사하고자 하는 방법을 통해서 더 잘 볼 수 있게 된다.

이원론은 우리가 ‘사회적’ 관계를 이해할 때 더 큰 특정성을 참작하지 않게 하는데, 그 나름의 이유는 이원론이 인간 분화가 오이케이오스 바깥에서 이루어진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원론은 자본 축적을 구성할 뿐 아니라 계급과 젠더, 인종, 민족의 지속하는 패턴들도 구성한다. 무어가 보기에, 자연-속-인류/인류-속-자연이라는 분화된 통일체들을 특별히 우선시하는 시각의 영향으로 인해 이원론적 관점으로 돌아가는 일은 불가능해졌다. 자본주의적 문명은 인간을 자연에서 분리하기보다는 오히려 개체의 생명활동을 이전보다 훨씬 더 조밀하고 지리적으로 더 확대되었으며 더 친밀한 상호 연관성을 갖춘 생명의 그물에 얽매이게 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시대에 적절하고 우리 시대의 해방운동에 적실한, 지구적 위기에 대한 해석이다. 그것은, 우리가 자본주의의 발전적 위기-본원적 축적과 상품화의 새로운 과정을 통해서 해소될 수 있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본이 거대한 위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의 불가역적인 쇠퇴로 특징지어지는 획기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지에 관한 미결의 물음이다.

이 책은 위기에 관한 책이지, 통상적으로 이해되는 ‘사회적’ 위기와 ‘생태적’ 위기에 관한 책은 아니다. 무어는 ‘사회’와 ‘자연’이 현존한다고 믿지 않는데, 적어도 자연 없는 인간과 인간 없는 자연이라는

2 제이슨 W. 무어 지음, 김효진 옮김, 『생명의 그물 속 자본주의』, 갈무리, 2020, 17-66쪽.

3 한국어판에서 첫 글자가 볼드체로 강조된 자연이라는 낱말과 사회라는 낱말은 각각 근대성의 “자연의 이분화 도식” 또는 “데카르트적 이항 구조”에 의해 구성된 대립쌍 추상관념인 대문자 자연(Nature) 또는 대자연과 대문자 사회(Society) 또는 대사회를 나타낸다. 한편으로, 또 하나의 이항 구조를 이루는 ‘자연’과 ‘인류’ 또는 ‘인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첫 글자가 볼드체로 강조된 인류와 인간은 각각 대문자 인류(Humanity)와 대문자 인간(Humans)을 나타낸다.

4 다시 말해서, ‘생명의 그물’은 곧 생태를 가리킨다. 특정적으로, ‘생명의 그물’이라는 어휘는 과학철학자 프리초프 카프라(Fritjof Capra)가 고안한 용어로 ‘체계론’에 바탕을 둔 생태적 세계관을 표상한다.

그 용어들의 지배적인 용법으로는 믿지 않는다. 또한, 무어는 이들 용어가 한낱 '사회적 구성물'에 불과하다고 믿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들은 폭력적이면서 실제적인 추상관념이다.

사회와 자연이 폭력적인 것은, 그 용어들이 개념적 명료성을 위해 실재를 너무 많이 제거한다는 의미에서이다. 그리고 사회와 자연이 실제적인 것은, 그 용어들이 우리의 지식 구조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의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권력 관계와 생산 관계에서도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힘이라는 의미에서다. 무어는 사회와 자연이라는 근대성의 가장 신성한 대립 쌍을 기피함으로써 모든 형태의 위기-권력의 생산의 체계적 조직의 전환점으로 해석되는 위기-를 인간 자연과 비인간 자연의 다발로 이해한다. 이것은 다양한 과정을 반드시 수반하는 거대 진술인데, 그 요점은 통상적인 지혜를 물구나무 세우는 것이다. 자연-속-자본주의의 위기는 자본주의가 자연에 행하는 바의 위기라기보다는 오히려 자연이 자본주의를 위해 행하는 바의 위기다.

이제 그 논변은 이렇게 반복될 수 있다. 인간이 자연의 일부라면, 역사적 변화-역사로서의 현재를 포함하는 변화-는 환경을 형성하는 인간과 인간을 형성하는 환경의 변증법적 운동을 통해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 두 가지 작용 단위체-인류/환경-는 서로 독립적이지 않고, 오히려 신체에서 생물권에 이르기까지 모든 층위에서 서로 스며든다.

많은 환경학자가, 다면적 대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단일한 대상으로서의 '그' 환경을 폐기함으로써 환경학의 강력한 통찰을 포기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한다. 무어는 정반대의 말이 더 그럴듯하다고 생각하는데, 요컨대 자연 전체의 실제적인 관계적 운동이 자연/사회라는 선형적인 분열로 인해 보이지 않게 된다. 이것은 외부적 자연-무어가 '자연 일반'으로 부른 것-의 요소들을 근대적인 사회적 관계에 덧붙이는 녹색 관행과 단절한다. 자연은 변량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특수한 역사적 과정들-이 책에서는 세계 축적-이 인간 자연과 비인간 자연의 다발임을 예증함으로써 시작할 수 있다. 이 다발은 상징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발제된다.

3) 『사피엔스가 장악한 행성』⁵

상상하기도 힘들 만큼 오래된 지구의 역사를 단 하루로 압축하면, 지금의 우리와 비슷하게 생긴 최초의 인류는 고작 자정에서 4초 전에 나타난다. 우리는 지질학적으로 최근에 나타난 존재지만, 우리의 고향 행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5 사이먼 L. 루이스·마크 A. 매슬린 지음, 김아림 옮김, 『사피엔스가 장악한 행성』, 세종, 2020, 7-46쪽

이는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동안 누적된 인류의 영향이 지구의 역사에서 전 행성 규모의 지질학적 사건과 나란히 나타난다. 과학자들은 이 새로운 시대에 '인류세(Anthropocene)'라는 이름을 붙였다. '인류'와 '최근의 시간을 가리키는 그리스어를 조합한 단어다. 인류세란 호모 사피엔스가 지질학적 초강대자가 되어 지구를 오랜 발전 단계에서 새로운 길로 이끈 시기를 묘사한다. 인류세는 인류의 역사, 생명의 역사 그리고 지구 자체의 역사에서 전환점이다. 그리고 생명의 연대기와 인류의 이야기에서 완전히 새로운 장이다.

이러한 행동에 대한 분석은 동물의 한 유형인 인간이 과연 특별한 존재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몇몇 사람들은 미래에 환경과 운명을 최고로 통제하는 것을 새로운 인류세라고 여긴다. 이때 인류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기술을 영리하게 배치하고 전개해 '신종(神種)'인 호모 데우스(Homo deus)가 될지도 모른다.

반면에 인류가 이끌어낸 새로운 세는 자연을 지배하고 장악할 수 있다는 궁극적인 어리석음이자 오만함의 절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우리가 어떤 관점을 취하든, 인류세라는 어렵게 들리는 과학적 용어의 표면 아래에는 인류와 우리가 살아가는 행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가장 깊은 두려움이나 유토피아적 비전, 과학과 정치, 철학과 종교가 자극적으로 뒤섞여 있다.

이 책에서는 인류세가 시작된 날짜를 구하는 간단한 방법을 제시하려 한다. 지구가 새로운 상태에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전에 지구 역사가 '세'를 정의했던 방식대로 하나의 세를 정의하기 위해 지질 퇴적물을 찾을 것이다. 인류의 영향을 받은 새로운 퇴적층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려 주는 지질학적 퇴적물의 특정한 화학적, 생물학적 변화가 선택된다. 이 표지는 전 세계 다른 퇴적물의 변화와도 관련이 있어야 한다. '황금 못(golden spike)'이라고 불리는 이 표지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린다. '이 시점 이후 지구는 새로운 상태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이다.

인류세는 최근 몇 년 사이 과학 분야에서 나타난 가장 시선을 사로잡는 개념 가운데 하나다. 이것은 세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려면 이 개념이 지성적인 탐구를 거쳐야 하고, 지속적으로 인류의 집단적인 행동을 변화시킬 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도 인류가 직면한 전 지구적 환경 위기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류세는 그런 보기 드문 힘을 가질 수도 있다. 이 개념을 인정하면 우리는 우리가 창조한 전 지구적으로 상호 연결된 거대 문명이 몰고 온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미래 세대에 어떤 세상을 물려줄 것인지에 대해 생각할 수밖에 없다. 어쩌면 우리가 스스로 부여한 '지혜로운 인간'이라는 뜻인 호모 사피엔스라는 이름에 걸맞게 그 미래를 변화시키는 데 이 개념이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인류세라는 개념이 우리 자신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몇 안 되는 과학적 발견 중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4) 『Environment and Narrative』⁶

『Environment and Narrative』의 서문에서 저자는 환경의 위기가 서사적 위기와 맞닿아 있으므로 서사(narrative) 및 서사 이론에도 강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한다. 저자는 생태서사학(Econarratology)의 방법론적 가능성을 제시하기 위해 서사적 특성이 환경적 이해를 전달할 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생태계를 인지하고 그것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되며, 서사는 환경과 관련되어 정치적·윤리적 아이디어를 담고 있는 저장소라고 언급한다. 이 책의 여러 저자들에 따르면 서사 속에 묘사된 ‘환경’들을 접하면서 독자들은 실제 삶에서의 태도와 행동에도 영향을 받게 된다. 이는 생태서사학이 새로운 서사의 창출을 요구할 뿐 아니라 기존의 서사들에 대한 ‘더 나은’ 해석을 시도하고 더 풍부한 이론화를 제시해야 함을 의미한다.

3. 결론

본 연구모임의 첫 발제 텍스트는 『인간 없는 세상』이었다. 이 텍스트의 핵심 질문인, 인간이 없다면이라는 질문에 도움을 얻어 본 연구모임은 인간이 주체가 아니라 인간을 제외한 지구의 모든 비인간들이 주체인 생태학을 상상해 보고자 했다.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상상력에서 비롯된 담론들이 비록 비현실적일지라도, 이 상상의 활동이 생태 파괴로 인간종의 소멸을 언급해야 하는 현 상황에 접근하는 또 다른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이다.⁷

6 Erin James and Eric Morel, *Environment and Narrative: New Directions in Econarratology*, The Ohio State University Press, 2020, pp.1-2.

7 영문학자이자 급진적 생태이론가인 티머시 모턴(Timothy Morton)은 인간과 자연의 이분적 사유를 비판하면서 비인간적 존재들과의 연대의 가능성을 도모하고자 했다. 그래서 자연을 인간중심주의 개념으로 보고 자연이 등장하지 않는 생태계를 주장했다. 그는 ‘저월(低越, subscendence)’ 개념을 제시하는데, 저월이란 초월적 일자를 향하는 상승 운동의 대립으로서 공생적 실재, 생명체들의 상호의존 관계로의 하강 운동을 말한다. 생명 “전체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미결정적인 요소들을 가진 더미(heaps)”이며 “나의 일부는 다른 생명체들에 속해 있거나, 다른 생명체와 공통적이거나, 혹은 다른 생명체 그 자체”이다. 따라서 전체는 언제나 그 부분들의 합보다는 더 작으며 “인류는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인간들보다 존재론적으로 더 작”으며 인간은 늘 인간적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물이다. 이러한 사유는 ‘기후’ 개념을 거주 문제로 보는 브뤼노 라투르(Bruno Latour)의 사유와 맞닿는다. 라투르는 기후를 “넓은 의미에서 인간과 인간 삶의 물질적 조건 사이의 관계”로 정의하면서 오늘날의 “이주, 불평등의 폭발적인 증가, 신기후체계”는 “서로 다르지 않은 하나의 위협”이라고 경고한다. 라투르는 “거주 가능한 땅이 어디에 있고 누구와 공유할 수 있을지를 공통으로 발견”하는 것이 “유일한 탈출구”라고 주장하며 ‘대지(Terrestrial)’ 개념을 제안한다. 대지는 “지구와 토지에 묶여 있지만, 국경과 일치하지 않고 모든 정체성을 초월한다”. 대지의 것들에게는 “자신이 생존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다른 존재가 필요한지 알아야 하는 민감한 문제가 있”으며

향후 연구활용 계획

본 연구모임을 통해 기대하는 결과물과 활용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 위기, 자연을 주제로 하는 문학작품과 그러한 담론이 전달하는 메시지의 사회적 효과를 탐구함으로써 수용자 관점에서 실천적 수행을 유도할 수 있는 보다 나은 메시지 전략의 양식을 제안할 수 있다. 효과적인 설득을 가능하게 하는 모델의 제안은 ‘함께 살아감(living-with)’이라는 의제 안에서 ‘행동하기’를 지향하는 본 연구모임의 취지에 부합할 것이다.

둘째, 환경 위기와 관련하여 사회적, 시대적으로 유의미한 문학작품과 미술작품을 선정하여 다양한 전공자의 시점에서 그것의 가치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팟캐스트’를 제작·제공할 수 있다. 현대의 환경 문제는 누구에게나 경각심을 일으키는 문제가 아니다. 또한 누군가에게는 매우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로 인식된다. 대중이 환경 문제를 인식하는 온도의 합의점을 찾기 위해 문학과 미술을 활용한 문화 예술 콘텐츠를 생산함으로써 환경 주체의 지면과 구성을 확대한다.

셋째, 환경·문학·미술의 조합을 지향하는 융합적 주제의 논문을 학회에 발표함으로써 학계에 새로운 시각을 시사하고 본보기가 될 수 있다. 이는 향후 학계에서 다양한 학제적 조합을 고무할 수 있다.

넷째, 기후 위기를 대응하는 예술가들의 실천 방식을 미술사적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환경 문제에 관한 생태 문화적 대응의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예술가의 개인별, 그룹별 활동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의 양상과 그 차이를 살펴볼 수 있다. 동시대의 예술가들이 자연과 인간의 문제를 다루는 방식을 과거와 그것과 비교해 봄으로써 환경 문제를 풀어나가는 시대적 차이를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예측되는 새로운 환경 예술의 개념과 특성을 정립한다.

다섯째, 본 연구모임에서 예측하는 새로운 환경 예술의 개념과 특성을 다른 환경 운동 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콘텐츠화하고 공유함으로써 학술적 결과가 사회적 자원으로 순환할 수 있도록 한다.

다른 존재들의 리스트를 통해 “거주지(dwelling place)”를 스케치해간다. “이것은 하늘의 새뿐만 아니라 노동자에게도, 토양의 박테리아뿐만 아니라 웰스트리트 임원들에게도, 동물뿐만 아니라 숲에도 적용된다. 당신은 무엇을 원하는가? 어떤 능력이 있는가? 누구와 함께 지낼 준비가 되었는가? 누가 당신에게 위협이 되는가?” 이는 “자연적 매개자와 공감하며 조화롭게 지낼 수 있다는 사고”의 소산이 아니며 “기대어 사는 법”에 대한, “다른 행위자들 사이에 자리잡기 위한 “모든 탐구 능력”을 끊임없이 요구한다.

예티-YETEE

이정민, 강지연, 김민성, 김재령, 손재경, 안정옥, 장기환, 최영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정책의 영향을
탄소배출량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산업 추이에 대한 미래예측 모델 연구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도입에 따른 국가 에너지 발전 산업 전망 연구

에티-YETEE

이정민, 강지연, 김민성, 김재령, 손재경, 안정옥, 장기환, 최영조

1. 서론

현재 전 세계는 지구의 평균온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인류 공동의 목표를 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다. 2015년 12월, 유엔 기후 변화 회의에서 채택된 파리 협정에 따라 각국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5년 6월 최초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수립한 이후, 몇 차례의 로드맵 및 감축목표를 수정하였고, 최근 2021년 12월 감축목표 상향안을 제출하였다. 또한 2021년 10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하였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비롯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는 등 법제적 환경을 정비하고 있다.

이렇듯 수많은 계획과 법률이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산업구조 및 국민의 생활양식 체계를 친환경적으로 전환할, 실질적인 방법론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양한 방법 중 유럽을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등 여러 나라에서 추진되는 정책은 국가 내 사업체가 행하는 모든 경제활동을 친환경적인지 그렇지 않은지 분류·구분하고 그에 따라 지원 또는 규제하는 일명 녹색분류체계(Green Taxonomy)이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친환경을 뜻하는 Green과 분류체계를 뜻하는 Taxonomy가 합쳐진 녹색분류체계는 기존의 전통적인 환경 규제 정책과는 성격이 다르다. 대한민국의 녹색분류체계는 2021년 12월 발표된 분류체계 가이드라인에 이어 최근 정권 교체에 따라 변화가 예고되어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모임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가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정책이기에 이 정책이 실제 국내 에너지 산업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살펴보고자 한다.

2. 본론

1) 연구 배경

한 국가가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과정 중 발생하는 여러 장애물 중 하나는 친환경적인 경제활동이 아님에도 친환경적인 활동처럼 홍보하는 녹색위장행위(Green Washing)이다. 국가를 넘어 기업에게도 환경 문제에 대하여 책임성 있는 행동이 요구되는 오늘날, 실제로 친환경적이지 않은 활동을 친환경적으로 오인하게 하는 활동이 방지될 경우 환경 목표를 실천해야 하는 국가 입장에서 난항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러한 녹색위장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지속가능한 경제활동”과 “그렇지 않은 활동”을 절대적인 기준을 통해 공식적으로 분리하고 이에 대한 증거로서 각 기업이 지속가능한 활동으로의 투자 비중이나 세부적인 사업 계획 등 재무정보를 공시하게 하는 녹색분류체계가 여러 나라에서 도입되고 있다. 이는 환경 목표 달성을 위해 기업의 경제활동 중 투입이나 산출과정에 직접적으로 국가가 개입·규제하던 전통적인 형태의 환경 정책과는 다르게, 지속가능한 활동에 대하여 재무정보를 공시하고 이에 투자자들이 지속가능성·친환경성을 기준으로 하는 기업 평가를 토대로 투자하도록 유도한다. 녹색 경영을 수행하는 기업은 용이하게 투자 자금을 조달해 성장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기업 또는 기업 행위는 시장에서 투자자들에게 외면받아 성장이 저해된다. 녹색분류체계는 직접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은 활동에 규제를 하거나 지속가능한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투자시장에서 지속가능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나은 투자 환경 속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 자연스럽게 녹색활동이 산업 전반에서 행해지도록 이끌어내는 정책이다.

녹색분류체계를 추진하는 국가는 이를 보조하기 위해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녹색화를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활동을 하는 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채권 등 금융상품을 만들고 그들이 기업의 녹색경영에 따른 투자를 지속하도록 한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전환금융(トランジションファイナンス / Transition Finance)이나 Zero Emission Challenge, 중국의 녹색채권(绿色债券 / Green bond), 유럽의 Fit For 55(탄소감축입법안) 등이 있다. 현재는 대부분의 나라가 국가 주도로 대규모 자금을 시장에 풀어 유망한 녹색활동 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민간에서 활발히 투자할 수 있도록 돕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녹색분류체계는 국가 산업 전체에 걸쳐 녹색활동을 분류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그중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높은 에너지 발전 산업의 경우 녹색분류체계가 실제 도입될 경우 변화가 불가피하

다. 특히 에너지 발전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원자력이나 화력 개발의 경우 대부분의 발전을 국가에서 주도하고 있으며, 전력 공급 계획 등 산업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국가 계획에 따라 에너지원별 발전량이 상이해진다는 점에서 민간 투자를 자극하는 분류체계가 해당 산업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주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한민국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민간 주도로 성장하는 전략을 취한 만큼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을 위해 필연적으로 발전해야 하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분류체계로 인해 어떠한 변화를 겪을지 주목해 보고자 한다.

2) 국가별 분류체계 현황

(1) 유럽

녹색분류체계 도입에 선도적으로 나선 곳은 유럽이다. 유럽은 2016년 [지속가능한 유럽의 미래를 위한 과제 정책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기업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녹색위장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녹색분류체계의 제도와 세부적인 규정 수립을 위한 활동을 계속해왔다. 특히 2019년 유럽 합의체를 통해 체계의 형태와 규정을 수립하고 산업별·분야별 기술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실무에 적용될 수 있을 수준의 전문화된 규정인 기술선별기준(TSC: Technical Screening Criteria)을 구체화하고 있다. 그리고 2020년 택소노미 규정을 공식 발표하며 녹색산업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온실가스 감축 등의 기후변화 억제,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으로 인정하기 위한 4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경제활동 유형별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경제활동이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에 상당한 기여를 직접 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활동의 기여가 가능하게 돕는 수권활동(Enabling Activities)을 분류체계에 포함하거나, 분류체계의 대상으로 유럽연합 회원국 및 자국 내 투자자를 비롯해 유럽연합에서 금융상품을 고려하는 외부의 시장 참여자, 기업도 대상으로 삼는 등 지금까지 여러 나라에서 도입되고 있는 분류체계 중에서 가장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분류체계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수립된 분류 기준들의 경우 상당히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보호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준 중에는 수자원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태양광 집광 시설을 설치할 경우 주변의 이해관계자와 시설의 설치 및 수자원 활용 계획이 논의되었는지 확인하거나, 에너지 발전 시설로 인해 수중 소음이 예상될 경우 수상생물에게 끼칠 영향을 고려하는 등 실제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이 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기준을 세부적으로 수립하고 있다.

2021년 6월 법안을 통해 택소노미의 세부 규정을 명문화하였으나, 최근 2022년 9월 핵연료를 활용

한 에너지 발전 시설을 녹색분류체계에 안에 포함시키면서 많은 논란이 발생했다. 기존의 원자력발전 시설과 새로이 설치하는 시설의 분류기준을 달리하며 원자력발전 사업을 단계별로 세분화하여 기준을 수립하였지만, 원자력발전이 생애주기에 따른 탄소배출량(LCE: Life-cycled Carbon Emission)으로 볼 경우 탄소배출량이 적지 않다는 주장에 따라 원자력발전이 녹색활동이 아님에도 원활한 전력 공급을 위해 타협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 일본

일본은 2020년 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개발한 전환금융 지침에 따라 금융시장의 녹색화를 촉진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기존의 분류체계가 기업의 경제 활동을 분류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면 일본의 전환금융 체계는 기업을 활동 외에도 자산 자체의 지속가능성을 분류하는 기준도 포함하고 있다. 특징적인 면은 산업 전체에 걸쳐 분류 기준을 세우고 녹색활동 여부를 나누는 분류체계들과는 달리 탄소집약적인 활동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또한 국가에서 직접 녹색경영을 선도하는 기업을 지정·공표하고 민간자금의 유입을 국가 주도로 유도하는 프로그램인 Zero Emission Challenge를 통해 유망 기업을 직접 육성하는 형태의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개인 금융자산 중 현금·예금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이 민간자본을 녹색활동 기업으로 유입시키는 것이 전환금융의 큰 과제이다. 이에 전환금융 체계는 기업이 재무정보를 공시할 때의 기준·방법이 상세하게 수립해 공시정보의 투명성을 강화했고, 정부 차원에서도 녹색혁신기금을 조성하는 등 녹색금융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3) 중국

중국은 2015년 중국공산당이 경제발전의 주요 이념 중 녹색발전을 제시한 이후 녹색채권이나 녹색대출 등 녹색활동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초기 “산업 수준 등 국가 여건에 부합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수립해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키거나, 금융기관의 평가 항목 중에 녹색대출 실적을 포함해 부실대출을 다수 발생시키는 등 기준과 제도가 미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후 화석연료를 분류체계에서 제외하고 EU의 녹색분류기준과 유사하게 기준으로 조정하는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장 내외부에 민간투자재원이 풍부하고 환경 문제 및 녹색 산업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 이러한 욕구를 녹색산업으로 흡수시키기 위해 선제적으로 녹색채권을 주도했고, 중국은 세계 상위권 수

준의 녹색채권 발행국이 되었다. 녹색채권의 다원화를 위해 국가 이외의 채권 발행 주체가 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유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국유기업 및 은행에서 투자를 주도하고 있어 국가 주도의 투자 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3) 연구 목적

현재 시점에 공개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최근 발표된 원자력발전을 분류체계에 포함하는 수정안을 포함하여)가 국내에 적용될 경우 에너지 발전 산업별로 탄소배출량 및 발전설비, 단가 등 정책 영향을 받는 부분을 구체화하고 에너지원별로 정책에 따라 발전량 등의 수치가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해보고자 한다. 이어 분류체계의 정책 영향 정도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계획의 성과를 살펴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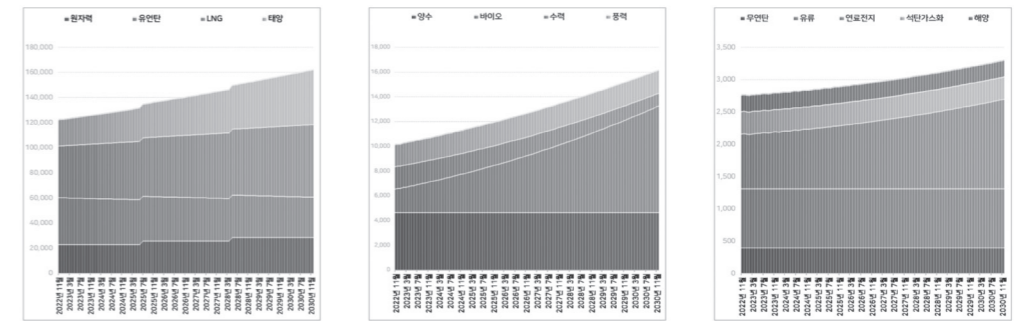
4) 연구 방법

먼저 팀원 간의 토론을 통해 녹색분류체계가 도입될 경우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영향을 받을 변수를 구체화했다. 지속적인 토론 결과, 녹색분류체계가 지향하는 정책 목표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 발전 등 탄소중립에 필수적인 분야에 투자가 증가할 것이고 이 투자는 실제 현장에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단가가 줄어들거나(해당 기술의 발전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량이 증가할 것으로(친환경 에너지 발전을 늘리기 위해) 본다. 친환경 에너지 발전단가가 줄어들고 발전설비가 증가하는 것은 발전량 자체를 늘리는 결과를 이끌어내, 에너지 발전 사업 전체의 탄소배출량을 저감할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발전량의 총량 안에서 에너지원별 구성비에 따라 변화하는 에너지 발전 사업 전체의 탄소배출 규모를 파악하여, 2030 온실가스 감축계획의 목표 달성 여부 등을 판단한다. 지금까지 누적되어 있는 시계열 데이터는 벡터자기회귀모형(VAR: Vector Auto Regression)모형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현재 연구하고자 하는 에너지 발전 산업의 경우 한 에너지원의 변화가 다른 에너지원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하나의 데이터에 기초한 회귀모형만 볼 경우 실제 환경의 추세와 크게 상이해진다. 예를 들면 원자력발전량이 크게 증가한 경우 국가에서 소비하는 전력량이 크게 변동하지 않는 한 총량이 유사하기 때문에 다른 에너지원의 발전량이 감소한다. 한 에너지원의 과거 데이터를 고려하면서도 다른 에너지원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의존성이 존재하기에 각 데이터셋을 다변량 시계열 데이터로서 추세 예측하고자 한다. 누적된 과거 데이터의 분량과 예측 모델의 신뢰도를 고려해 2030년까지 예측한다.

5) 연구 결과

(1) 발전설비

전력거래소의 전력통계정보시스템 상의 연료원별 발전설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다른 데이터와는 다르게 발전설비의 경우, 2022년 9월 발표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다뤄진 발전설비 구성 중 미래의 설비량이 제시된 원자력발전, 석탄발전, LNG복합은 계획에서 제시된 수치를 사용하였다. 이는 해당 발전방법의 대부분을 국가가 주도하고 있어 큰 변화가 없는 이상 계획대로 설비량을 조정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 이외의 데이터는 과거 추세에 따라 예측했다. 예측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용량 단위에 따라 구분하여 그래프로 나타냈다.



〈그림 1〉 연료원별 발전 설비 용량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VAR 모형에 따라 예측할 경우 원자력발전과 LNG복합은 감소세를 보이지만 계획에 따라 증가세가 되었고, 반대로 유연탄 발전은 기존에 증가세를 보였으나 계획에 따라 감소세가 되었다.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태양력발전과 바이오발전이 높은 증가세를 보이나, 2030년 12월 기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은 58.9GW로 전력수급기본계획 중 신재생에너지 2030년 목표 발전설비용량인 71.5GW에는 미치지 못한다. 계획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녹색분류체계를 통해 민간의 시장참여가 다른 분야에 비해서 용이한 태양광발전 분야에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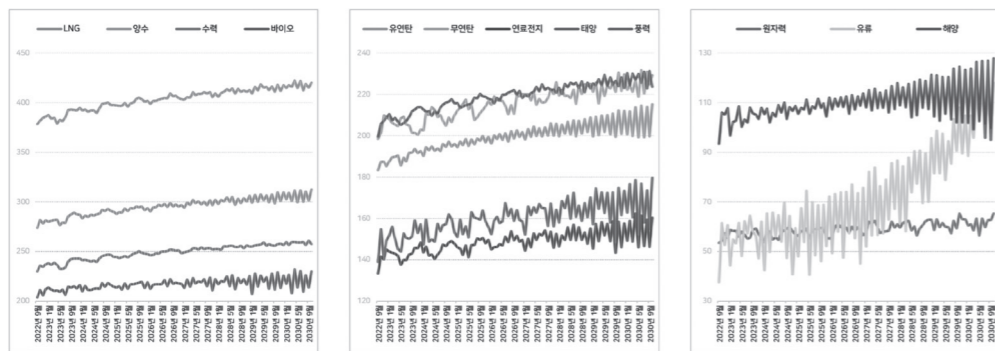
(2) 정산단가

전력거래소의 전력통계정보시스템 상의 연료원별 정산단가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계절적 요인에 따라 전력 소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산단가가 또한 계절에 따라 오르고 내리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다만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2022년도는 원자력을 제외한 거의 모든 에너지원에서 이례적인 단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

〈표 1〉 최근 연료원별 정산단가 동월 대비 비교

| 기간 | 원자력 | 유연탄 | 무연탄 | 유류 | LNG | 양수 | 신재생 | | | | | | | |
|-------|------|-------|-------|-------|-------|-------|-------|-------|-------|-------|-------|-------|-------|-----|
| | | | | | | | 연료전지 | 석탄가스 | 태양 | 풍력 | 수력 | 해양 | 바이오 | 폐기물 |
| 22/08 | 60.9 | 189.8 | 214.3 | 611.5 | 274.3 | 376.9 | 192.1 | 210.4 | 212.1 | 207.3 | 218.4 | 186.9 | 252.0 | 0.0 |
| 21/08 | 41.0 | 100.1 | 111.0 | 532.4 | 141.9 | 163.8 | 92.7 | 92.8 | 97.9 | 100.7 | 114.4 | 91.6 | 156.9 | 0.0 |
| 20/08 | 69.7 | 79.9 | 84.9 | 299.9 | 103.5 | 126.4 | 61.4 | 61.9 | 67.9 | 68.0 | 75.4 | 60.3 | 117.8 | 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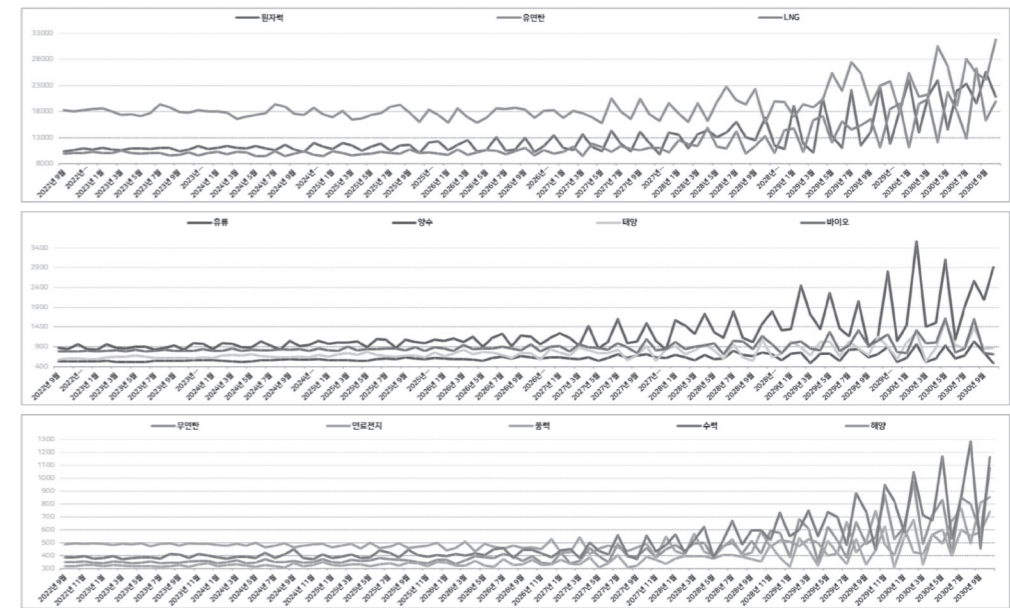
정확한 예측을 위해서는 전쟁의 영향으로 인해 변동된 수치를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나, 그 영향의 정도와 범위를 수치화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렵고 통제로 인해 정보가 왜곡될 수 있어 시스템에 공시되어 있는 자료를 그대로 분석하였다. 예측 결과 모든 에너지원의 그래프는 우상향하는 형태를 띠고 있으며, 원자력의 경우 1년을 주기로 단가가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며 에너지원 중 가장 완만한 형태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원자력발전을 위한 연료를 확보하는 것이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안정적이고 가격 변동의 폭도 크지 않아 정산단가가 큰 변동 없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유류의 경우 가장 큰 변동폭을 보이며, 신재생에너지 중 태양광발전 분야가 가장 큰 증가폭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유연탄·무연탄·LNG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폭으로서, 태양광발전의 발전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 주도의 태양광 집광시설을 설치하는 등 대규모 시설을 확장하거나 관련 핵심기술 투자를 통해 정산단가를 낮춰야 한다.



〈그림 2〉 연료원별 정산단가

(3) 전력거래량

전력거래소의 전력통계정보시스템 상의 연료원별 전력거래량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전력거래량은 소비를 위해 거래소에서 연료원별로 거래된 전력량을 수치화한 것으로 정산단가와 유사하게 계절적 요인에 따라 전력 소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동이 발생하고 있다. 예측 결과 2030년에 유연탄을 비롯해, 원자력, LNG복합 발전은 2022년 대비 약 10,000kWh 수준의 전력거래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반면, 태양광을 비롯한 수력,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전력거래량은 증가량이 적게 나타나고 있다. 지속가능한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규모가 비대한 원자력이나 LNG복합으로 투자역량이 몰리지 않고 신재생에너지로 집중될 수 있도록 해 신재생에너지 산업 자체의 규모를 키우고, 활발한 거래가 가능하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3〉 연료원별 전력거래량

3. 결론

연구를 시작한 계기에 한국의 녹색분류체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변수인 원자력발전이 녹색활동으로 인정받지 않았다는 부분이 정권 교체에 맞물려 기초가 급격히 변화했고, 이로 인해 연구 주제 자체가 기존에 계획했던 주제와 일부 달라져 연구 결과가 초기 계획 대비 아쉬움이 있다. 특히 에너지 발전 관련한 정책, 제도에 변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전 정부의 전략을 기준으로 연구를 진행해

도 이를 현장에 적용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많은 연구결과이다.

또한 현재의 연구 방법 중에는 통제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 탄소배출량이라는 수치는 온전히 탄소노미의 영향만 받는 것이 아니라 탄소배출량 저감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탄소중립 정책들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고 단순히 탄소노미만을 기준으로 탄소배출량을 예측하는 행위는 부적절해 보인다는 내부 의견도 있었다. 국내의 탄소배출권 제도, 탄소인지세, 그린 뉴딜 정책을 넘어 해외의 에너지 관련 정책들이 국내 에너지 발전 산업의 탄소배출량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이후에 이에 유관한 정책들을 망라하여 예측 시나리오를 고민해 보아도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에너지 발전 산업의 경우 단순히 에너지를 직접 발전하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발전의 기반이 되는 ESS(Energy Storage System) 및 전력 수송 기술, 에너지 활용을 위한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등 기반 기술이 탄소배출량에 끼치는 영향이 분명히 존재하나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어 추후 에너지 산업 분야 내에서의 분석에 그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반이 되는 기술도 예측 모델에 포함해야 한다.

참고문헌

- 임소영, 그린뉴딜의 기준, 녹색 분류체계의 글로벌 동향과 시사점, KIET, 48-57 pp., 2020
- Jacobson, M.Z., 100% Clean, Renewable Energy and Storage for Everyth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w York, 427 pp., 2020.
- 이원호, 중국의 녹색금융 현황 및 전망, KDB미래전략연구소, 2021
- 김남호, 녹색금융 법제 도입 추진과 녹색분류체계의 역할,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33-40 pp., 2021
- 동경사무소, 일본의 기후전환금융 기본지침, 2021
- European commission,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21/2139, 2022
- European commission, amending Delegated Regulation (EU) 2021/2139, 2022
- 환경부 등,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 2021
- 환경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2021
- 환경부 등,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안, 2021
- 환경부 등,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안), 2022
- 산업통상자원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 2022

언론과환경포럼

정희정, 김아영, 박상욱, 선정수, 송찬영, 송현숙, 신동호, 신혜정
안종주, 윤지료, 이정훈, 임항, 전성철, 조영리, 최우리, 홍성철

환경·보건 분야 기자들이 모여 솔루션 저널리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바람직한 보도 사례 공유를 통해
올바른 기사 작성을 이끌고 나아가 공동 가이드북을 집필함

기후위기와 팬데믹 시대, 언론 보도의 개선을 위한 제언

초보 기자를 위한 환경·보건 분야 보도 매뉴얼 개발 연구

언론과환경포럼

정희정, 김아영, 박상욱, 선정수, 송찬영, 송현숙, 신동호, 신혜정
안종주, 윤지로, 이정훈, 임항, 전성철, 조영리, 최우리, 홍성철

1. 서론

2020년 10월 28일, 정부는 대통령의 국회 시정 연설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밝혔다. 그로부터 꽤나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기후변화는 여전히 '이상 기상현상 보도'의 양념으로 쓰이고 있다. 올여름도 폭우도 사망자와 이재민이 발생하고, 엄청난 피해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에 기후변화가 있다"고 하는 식이다. 기후변화 그 자체를 다루려는 시도는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실제 지면이나 방송에 그 기사가 잡히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과연 편집회의에 들어가는 이들의 무관심만 탓할 수 있을까. 여전히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온실가스 감축을 이야기할 때 빠짐 없는 북극곰과 북극 물든 지구를 보여주는 수준에 그치는 것도 주된 이유 중 하나이다. 이러한 보도는 결국 '중요하고 심각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게 당장 내 일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공고하게 만들었다. 북극이나 적도의 상황만을 이야기하면서, 동물이나 식물의 상황만을 전하면서 시민사회의 폭넓은 공감대를 불러올 수는 없다. 취업, 직장생활, 코로나 방역, 내 집 마련, 육아, 은퇴 설계 등등... 이미 우리 개개인은 매일 전쟁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으니 말이다.

우리가 여전히 북극곰 사진에 머무는 사이, 해외에선 탄소를 매개로 한 대전환을 이루고 있다.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날로 높아져, 유럽에선 화석연료보다 더 많은 전기를 만들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가 늘면서 자연스레 관련 기술은 발달했고, 관련 산업의 양적·질적 성장은 발전단가를 낮추는 결과를 불러왔다. 저렴한 데다 온실가스 배출도 없으니 더 많은 이들이 재생에너지를 찾는 선순환의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선 재생에너지가 분쟁의 대상, 정쟁의 대상이 됐다. 발전믹스의 차원에서 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이 서로 '내가 차세대 주요 발전원이야' 다투고 있고, 그러한 다툼은 관련 산업계나 학계를 넘어 정치권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그리고 언론사들은 정치권과 마찬가지로 진영을 나눠 '재생

에너지가 더 좋다.' '원전이 더 좋다.' 이야기한다. 전 세계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을 수 없는, 한국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새 정부 들어 담당 부처에선 부서 이름 속 '에너지전환' 표현 지우기에 여념이 없다. 마치, '있었는데 없는' 녹색성장과도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는 '백년대계' 에너지정책의 현주소이다. 이념이나 정치와 관계없이, 글로벌 용어로 쓰이는 표현인 에너지전환이 특정 집단의 캐치프레이즈로 여겨지는 것이다.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에너지전환은 기존 기자들의 업무 플로우 상에서 '기상청 출입기자'나 '환경부 출입기자' 혹은 '산업부 출입기자'만이 다룰 문제가 아니다. 이는 환경뿐 아니라 산업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며, 통상과 외교, 안보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문제다. 다층적 접근이 필수적인 것이다.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에너지전환은 타협이나 정치적 기교로 풀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지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명확히 정해져 있고, 지구의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높아지기까지 우리가 향후 뿜어낼 수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얼마인지도 이미 과학적으로 규명된 상태다. 그 수치를 넘으면 끝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당근과 채찍이 마련되어야 할지, 의도치 않은 부수적 피해가 어디에서 발생할지, 그 피해를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상하고 지원해줄지. 타협과 정치로 풀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러한 것들이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몇 퍼센트로 할지는 이미 과학적으로 답이 나와 있는 것이고, "40% 감축은 과도하다.", "정부가 과속을 하고 있다." 등등의 비판은 보도가 아니다. 아무런 근거 없는, 특정 이익단체의 입장을 그대로 전하는 문장일 뿐이다. 결국, 이 시점에서 이 분야를 담당하는 기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끝없는 연구와 취재, 이를 통한 확고한 관점의 확립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를 넘어 해외 각국에서 이와 관련한 연구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각각을 단편적으로 보서는 시청자나 독자에게 왜곡된 정보를 전달할 수밖에 없다.

동시에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이 전 세계적인 의제로 거듭나기 위해선 이 이슈가 '지나치게 숭고한 일'로 남아서도 안 된다. 지구를 위해 기꺼이 희생을 감수할 사람도, 자기 스스로를 위해 욕심을 내려는 사람도 모두가 동참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언론과환경포럼'이 (재)숲과나눔에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통해 첫째, 미세먼지, 기후변화, 코로나19 등 환경보건 분야 보도의 문제점을 모색해 보았다. 잘못된 보도는 지나친 공포심을 갖게 하거나 원인을 외부로 돌려 내부의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도록 하는 등 잘못된 보도 프레임으로 접근하여 문제의 원인을 엉뚱하게 진단하게 된다는 주요한 시사점을 찾아냈다. 이러한 원인도 찾아보았는데, 기자가 인터넷 위주의 언론 산업의 변화로 속보 경쟁에 내몰리다 보니, 심층적인 보도보다는 단편적이고 파편적이며, 자극적인 보도를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21년 연구에 이어 언론사 환경·기후 분야 전문기자들이 후배 기자에게 줄 수 있는 조언을 담아 보다 실증적인 취재 현장에서의 교훈을 도출하고자 했다.

연구는 포럼 회원들이 취재 현장에서 느낀 점과 연구를 통해 얻는 내용에 대해 발제하고 함께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발제 주제는 환경·기후위기·탄소중립 보도의 문제점, 초보 기자들에게 주고 싶은 조언, 환경 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 먹거리와 기후위기의 관계, 코로나19 보도의 문제점, 전문가와 일반인의 인식 차이를 고려한 보도 등이었다. 본 연구에는 현직 기자들이 실제 취재 과정에서 느낀 어려움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언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보고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경·보건 분야 보도를 담당하게 될 초보 기자들을 위한 매뉴얼북으로 제작할 계획이다.

2. 본론

1) 환경 보도 어떻게 할 것인가?

(1) 환경 보도의 역사

〈한겨레〉에서 기후변화팀장을 역임하는 등 만 11년간 환경 기사를 써온 최우리 기자는 환경 기자의 시작은 환경 뉴스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한겨레〉는 애니멀피플팀, 기후변화팀 등 기존 신문사 조직에 없는 부서를 만들었다. 기후변화팀에서 기사를 쓰면서 맞닿은 고민은 기자는 과학자와 대중의 중간 지대에서 이를 잘 설명하는 연결고리가 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었다. 그러려면 대중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과거 환경 뉴스부터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 문제를 다루는 기자들이 숙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명제는 2022년 현재 ‘과학이 말하는 기후 위기란 무엇인가?’이다. 독자의 수용성을 생각할 때 복잡한 과학 기사 같지 않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후 기사를 쓰는 것은 기후·환경 기자들의 매우 큰 과제이다. 그러려면 역사 공부를 하듯 과거의 이야기들을 이해하는 게 최우선 과제이다.

일반 환경, 동물권 뉴스도 마찬가지다. 한국 사회의 현대사 그 자체가 곧 환경 파괴 흐름에 저항하는 역사이기도 했다. 수많은 환경 갈등 사례가 떠오른다. 경부고속도로 건설, 수도권 아파트 개발, 낙동강 폐놀 유출 사건, 대기오염과 미세먼지, 청계천 등 하천 복원, 경부고속철도와 천성산 도롱뇽 소송, 가슴기 살균제 참사, 방사능 폐기물장과 각종 발전소 건설 과정에서의 환경 갈등, 재생에너지 입지 지역 내 주민 수용성 문제, 신공항 건설 갈등, 개고기, 안락사, 동물병원 수가 등 다양한 뉴스들이 있었다. 그때마다 어떤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가 합의점을 찾았는지, 혹은 합의점을 찾지 못해 여

전히 대립하고 있는지를 과거 기사나 각 분야 전문가들이 내놓은 대중서를 통해서 그 역사와 시사점을 쉽게 알아볼 수 있다. 과거에도 이런 논란이 있었고 그때 정부나 기득권 집단이 잘못 판단한 적이 있다면 이를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을 것이고, 그때 성공적으로 갈등을 해소했다면 이 역시 주요한 선례로 삼아 대안을 판단할 수 있다.

(2) 외국 자료의 인용

정책 기사는 역사성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인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기후변화나 생태, 동물권과 같은 환경문제는 사실 한국 사회보다 외국에서 더욱 활발히 논의하고 있고 과학적 연구도 외국의 연구가 더 앞선 것이 많을 수밖에 없다. 성실한 환경 기자라면 외국 학술 논문과 외신을 참고하고 이를 인용하는 노력을 할 것이다. 한국 독자들에게 외국에서의 논의 과정이나 그들이 찾은 답을 전하는 것 역시 하나의 사실을 전하는 보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순히 외국 사례를 전하는 것이 충분한 보도인지 한 번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2021년 11월 영국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를 취재하면서 스코틀랜드의 육상풍력발전단지를 다녀오고 전문가들을 만나고 온 적이 있다. 한국에 닿을 시 사점을 알아보러 갔는데 한국전력이 독점하는 한국과 이미 민영화된 영국의 전력시장 상황은 많이 달랐다. 스코틀랜드는 북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한국 해안 상황과 달랐고 국토 면적 대비 인구수가 한국보다 스코틀랜드가 적다는 점 등 양국은 서로 다른 점이 꽤 많았다. 단순 비교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한국과 다른 상황을 고려해가며 영국 상황을 소개하며 한국의 현저한 재생에너지 비중을 다시 진단했다. 또 영국 풍력발전단지 취재만 전하지 않고 한국의 재생에너지 업계와 정부 쪽 고민 등도 담아 이를 보완했다. 만약 단순 비교만 했다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덮어놓고 재생에너지 확대 주장만 하는 기사를 썼다는 비판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외국 자료를 인용하는 것은 너무나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외국 사례가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3) 환경 기사의 현장 그리고 맥락

좋은 환경 기사의 힘은 우선 현장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 과학적 연구를 통해 집계한 데이터도 그 자체로 힘이 있지만 결국은 독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쓰는 것이 전문가가 아닌 환경기자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때 기자의 무기는 현장이다.

2021년 한겨레 신년 기획으로 작성한 〈기후위기와 인권〉 기획보도는 기후위기로 고통받는 생생한 주변 이웃들의 이야기를 담은 기사였다. 현장에서 느끼는 작은 기록과 팩트를 모아 이를 근거로 환경 문제가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환경문제가 인권 문제일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보여주려 노력했다. 이상기후와 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종종 있지만 날씨가 좋으면 또 금세 잊는다. 항상 눈앞에 당장 보이지 않는 기후변화라는 변화를 삶의 문제로 보여주려는 노력을 한 시도 역시 모든 이야기의 출발은 현장, 당사자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사를 쓸 때 현장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환경 기사는 숨은 맥락을 설명해주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역할도 중요하다. 현장으로 다 보여줄 수 없는 다소 복잡한 이야기, 혹은 이미 현장이 사라져버린 이야기는 관련 취재원들의 이야기로 사건을 재구성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2018년 지리산에 살던 반달가슴곰 KM-53이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수도산에서 발견됐을 때 반달가슴곰 기사가 굉장히 많이 쏟아져나왔다. 현장 취재도 주요한 보도일 수 있지만, 늘 반달가슴곰을 눈앞에서 취재할 수는 없다. 국내 반달가슴곰 종 복원 역사와 성과, 같은 반달가슴곰인데 사육되고 있는 외래종 반달가슴곰과 동물원 반달가슴곰의 사연을 조명한 기사 등은 이 사건을 이해하는 후속 보도로 주목받았다. KM-53이 다른 반달가슴곰과 달리 수백 킬로미터를 혼자 여행한 것을 볼 때 야생에서의 곰의 이동 반경이 얼마나 넓어질 수 있는지, 동물 복지나 정부의 종 복원 사업 차원에서 어떤 과제가 있을지 등까지 질문한 기사들이 이 이야기를 더욱 풍부하게 했다.

(4) 대안 모색자로서의 기자의 역할

최우리 기자는 환경 기사를 쓸수록 답을 찾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당사자가 자연물인 경우가 많고 농어민뿐 아니라 일반 시민과 산업계, 정부 등 모두가 이해관계자이다. 그래서 환경 기사를 쓰는 기자로서 '세상 모든 것은 연결돼있고 답은 쉽게 찾아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떨치기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답을 내리기보다는 대안을 모색하는 친절한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2021년 문재인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꾸준히 발표하면서, 새뚱이 떨어진 새만금 태양광 현장을 고발한 한 언론사의 단독 보도가 화제였다. 앞선 언론사의 보도로 많은 시민이 태양광 무용론을 떠올렸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와 새만금 사업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말을 들어본 결과 진실은 다소 달랐다. 그 결과 이 태양광 사업 현장은 아직 시범운영 중이어서 전원 연결이 안 돼 있어 패널이 뜨거워지지 않기 때문에 새가 바다 위 섬처럼 이용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리고 관리하지 않

기 때문에 패널 청소도 따로 안 하는 실정이었다. 다른 태양광 패널과 달리 새뚱으로 범벅이 될 수 있는 조건이었던 셈이다. 그렇다고 앞선 보도가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니었다. 태양광 발전, 특히 해상 태양광 패널 위로 언제라도 새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근본적 문제 제기 자체는 언론으로서 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했다. 후속 보도를 하면서, 이런 맥락을 충분히 담으면서, 미국 에너지부 등 세계 각국이 태양광 발전을 확대하면서 겪을 수 있는 새뚱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함께 전했다.

(5) 전문성 제고를 위한 방안

환경에 대해 관심은 있지만 웬지 어려워 보이고, '할 수 있을까?'라고 묻는 후배 기자들과 만나서 듣는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환경 기사를 쓰는 데 어떤 장애물이 있는데,' 이 고민이 가장 많다. 시간적 여력이 있다면 대학원을 다니는 것은 자율이고 스스로 성장하기 위해 내릴 수 있는 좋은 결단이 될 수 있다. 최우리 기자 역시 기본 전공은 인문학과, "환경은 살면서 배우고 있는 학문이자 삶의 태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좋은 환경 기사를 위해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기자로서 소신이 필요하다. 기자는 학자와는 달라야 한다. 저널리스트로서 일을 계속 한다면 늘 현장과 뉴스를 따라 생각하고 움직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학술적인 내용이라도 더 쉽게 쓰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똑같은 공부를 했어도 이를 기사화할 수 있는 능력은 저널리스트만이 가진 능력이니 이 능력 역시 개발이 필요하다. 환경 전공이 아니고 석, 박사학위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족한 기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저널리스트로서 훈련이 부족하고 성실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한 기사를 쓰는 경우가 더 많았다.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사실을 정리하고 이를 통해 정책적 판단을 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보니 환경 기사를 환경, 과학 분야 석사 이상의 기자가 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많이 배우면 학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도 쉬워지고 어렵고 복잡한 논문을 쉽게 소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자격이 환경 기자로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필수 조건은 아니다. 기사를 쓰면서 수많은 환경문제 중에서 본인의 전공 분야를 더욱 섬세하게 다듬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6) 생활과 환경 보도

환경 기사는 환경 담당 기자가 아니어도 쓸 수 있다. 최우리 기자가 속한 〈한겨레〉는 환경 뉴스에 대한 역사와 전통이 깊은 언론사로 환경 전문 기자 선배들이 대를 이어오고 있다. 환경 뉴스에 관

심이 있었던 최우리 기자는 9-10년 차가 되어서야 환경 담당 기자가 될 수 있었다. 최우리 기자는 사회부 경찰팀이나 서울시청팀, 법조팀에 있을 때에도 좋아하는 일을 하며 기회를 기다리면서 꿈을 키웠다. 최 기자는 기회는 쉽게 오지 않지만, 좌절하지 말고 혼자 재밌는 일을 찾아서 시작하길 권한다. 그는 환경 아닌 다른 부서에 있을 때 도시에서 양봉을 하며 책 〈달콤한 나의 도시양봉〉을 쓴 일이 지금까지 인생에서 꽤 잘한 일로 꼽는다. 서울에서 일하는 기자로서 생산적인 일을 하고 싶어서 양봉을 배웠다. 2년 동안 벌과 이웃이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법을 고민하다보니 정책과 제도, 갈등 해결 방법 등을 다양하게 알게 되고 공부하게 됐다. 이전부터 환경 문제에 관심이 있었지만 직접 체험하며 생각을 정리하다 보니 다시 보이는 게 참 많았다. 반려동물과는 사뭇 다른 벌과 함께 지내다 보면 또 다른 생명을 이해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수밖에 없고 과학적 연구들을 탐닉하며 양봉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됐다. 그 과정이 환경 기자가 아닐 때에도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었고 기자로서 환경 문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 이 외에도 주말마다 여성 농민들과 텃밭을 가꾸는 일도 하고 유기동물 보호소 봉사활동을 다니며 취미 활동을 해왔다. 환경 기사를 쓸 수 없는 다른 부서에서 어떤 기사를 쓰더라도, 세상의 많은 일들이 환경이라는 주제로 모두 다 연결돼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기자로서, 환경 문제를 환경활동가나 환경에 정통한 학자들만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 연습을 많이 하게 된 것 같다. 현재는 기후변화팀을 거쳐 경제산업부에서 일을 하다보니 더욱 느끼는 게 많다. 만약 환경이나 동물권 뉴스에 관심이 있다면, 다른 부서에 있더라도 이런 활동을 하면서 기사 마감과 상관없이 직접 체험해보는 것도 권한다. 직접 경험하는 것만큼 기자로서 좋은 취재는 없다.

2)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 보도 어떻게 할 것인가?

종편 채널 <jtbc>에서 환경 분야 심층취재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박상욱 기자는 “당장의 극한 기상 현상을 설명하고, 그 위험성과 앞으로의 전망을 보도하는 일은 기후위기와 그로 인한 각종 재난 재해에서 언론이 해야 할 의무”라고 말한다. 또한, 눈앞의 극한 기상현상이 사라졌다고 기후위기 보도가 뉴스에서 사라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현상은 또 다시 되풀이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내일부터 당장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인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수백 년간 대기에 머무는 온실가스의 누적효과로 당분간 온난화는 우리의 발목을 붙잡게 된다. 우리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잊지 않도록 어젠다를 제시하고, 기후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제안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 두 가지 일을 수행하기 위해선 기자 개개인의 연구 노력이 필수다. 기후위기 회

의론과 같은 비과학적 주장에 과학으로 맞서는 일은, 다양한 입장의 전문가들을 만나 의견을 묻고 이를 종합하는 것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에 정치적·이념적 편가르기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중심을 잡는 것은 끊임없는 고민과 공부만으로 가능하다. 이것이 곧, 우리나라 기후위기 보도의 개선과 혁신의 첫 걸음이 될 것이다.

(1) 기후 위기 보도의 문제점

기후위기는 더 이상 먼 나라 혹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집중호우, 슈퍼태풍, 가뭄, 폭염, 한파, 폭설... 기후위기로 인한 극한 기상현상은 해마다, 계절마다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속한 동아시아 지역은 극지방이나 적도지방에 비해 ‘안전지대’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실상은 전혀 다르다. 우리나라와 동아시아의 기온 상승 속도는 전 지구 평균을 크게 웃돈다. 해수면 및 해양열용량의 증가, 해수면의 상승 속도 또한 마찬가지다. 이미 우리나라의 여름은 1981~1990년 113일에서 2011~2020년 127일로 14일 길어졌고, 겨울은 102일에서 87일로 보름이나 줄었다. 같은 기간, 폭염일수는 9.8일에서 14.9일로, 열대야일수는 4.1일에서 9.9일로 증가했다. 그럼에도 많은 시민들이 여전히 기후위기 보도를 ‘해외 토픽’처럼 여기는 것은 우리 언론의 책임이 크다. 그 결과,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이들은 크게 늘었지만 대응의 시급성엔 공감하지 않는 이들이 여전히 많다. ‘우리의 문제’, ‘나의 문제’로 여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극한 기상 현상만이 우리의 문제일까. 그렇지 않다. 기후위기로 인한 식량안보의 악화, 대규모 기후 난민의 발생, 노동생산성의 저하 등의 문제들 역시 우리 모두가 직면한 문제이다. 이미 식량 자급률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기후위기는 우리나라의 식량 생산량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식량 자원을 수입하는 다른 나라의 생산량에도 영향을 미친다. 인류 생존에 있어 필수 요건 중 하나인 식량의 불안정은 결국 이주를 부추기는 요인이 된다. 여전히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기온 상승과 호우의 증가 등 외부 환경의 악화는 노동생산성의 악화와 직결된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문제를 맞닥뜨리게 된다.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1990년대를 기점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젠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넘어 국제사회의 감축 동참을 압박하기 위한 정책과 이니셔티브까지 쏟아져 나온다. 탄소세, CBAM(탄소국경조정), RE100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의 이러한 변화는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다. 30년 전부터 한국 언론은 이러한 변화를 보도해왔다. 1990년, 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국제협약이 구체화됐다는 국내 보도가 쏟아졌다. 1994년, 미국과 EU가 탄소세 도입을 검토중이라며 석유화학, 전자제품, 자동차 등 우리나라

라 주력 상품의 수출이 연간 16억3천만 달러 줄어든 것이라는 국내 연구결과 역시 보도됐다. 기후변화 협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온실가스배출 저감계획을 수립하고, 청정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 대책기구를 구성한다는 우리 정부의 발표는 1998년에 나왔다. 2020년대에 나온 일련의 보도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 탄소 배출 규제를 위한 국제협약은 신기후체제로, EU가 도입한 제도의 이름은 탄소세에서 탄소국경조정제로, 우리나라가 조직한 범정부 대책기구는 탄소중립위원회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다.

해외의 이러한 변화를 정부뿐 아니라 언론마저 외면하면서,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는 30년의 시간을 허비하게 됐다. 남들이 30년 전부터 시작해서 남은 30년 동안의 상대적 여유를 확보했다면, 우리는 이를 앞으로 30년도 채 남지 않은 시간 안에 마무리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한국 언론이 해외의 온실가스 감축 및 각종 대외 정책을 전하기만 했을 뿐, '우리의 문제'로, '오늘의 문제'로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18년 대비 40% 줄여야 하는 상황에 놓였고, 기업은 국내 재생에너지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RE100에 가입하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도 언론은 이를 여전히 '우리의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22개 기업이 RE100에 가입할 때까지도 RE100은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나왔던 시사 용어' 취급을 받았고, 국내 23번째 가입 기업이 나오면서야 RE100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비중 있게 다루기 시작했다. 만약 언론이 30년 전과 같은 우를 또 다시 범한다면, 한국은 기후약당으로 불리는 것을 넘어 수출 경쟁력을 잃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으며, 온갖 극한 기상 현상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딜로이트가 예상한 '기후위기 대응에 실패할 경우 한국 경제에 발생하는 비용'은 무려 935조 원에 달한다. 언론이 이 비용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이 비용을 2,300조 원의 이익으로 바꾸는 데에 일조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결심과 행동에 달려 있다.

(2) 솔루션 저널리즘으로 접근

박 기자는 "다행히 앞길이 막막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수많은 국제기구와 글로벌 석학들이 머리를 맞대고 각종 대책들을 고심하고 있다. 다만, 우리는 이러한 고민의 결과를 소개하기보다 자극적인 기후재난 모습을 한참 보여준 뒤 '이게 다 기후변화 때문입니다.'라며 보도를 마무리하는 데에 더 익숙해져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런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전문가들이 내놓은 솔루션의 가치를 판단하고, 이를 충분히 이해해 전하는 언론의 능력은 점차 퇴보했다. 달라지는 기후 그 자체를 연구하는 일도, 이를 조금이라도 저지하기 위한 대책을 연구하는 일도 수십년 간 고도화했는데, 이를 전해야 하

는 메신저는 이러한 변화를 쫓아가지 못한 것이다.

결국 기후위기도, 기후위기 해결책도 '전문가만의 것'이 되어버렸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각해진 것이다. 이는 앞으로의 해결책을 정하는 과정에서 공론화와 공감대 형성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부를 것으로 우려된다. 지금이라도 언론이 이를 막기 위해선 그동안 미뤘었던 '공부의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전문가만의 것'을 '우리 모두의 것'으로 풀어내고, 각각의 해결책이 갖는 의미와 한계, 장점과 단점을 명확히 분석해야 한다.

(3) 스토리텔링

통계와 수학, 과학의 결정체라 할 수 있는 기후위기 보도에도 스토리텔링은 결코 빼놓을 수 없다. 이는 기후위기 당사자인 독자 또는 청취자, 시청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함이다. 이 과정에서 유념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 우리 모두가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너와 나, 우리 모두의 기후위기이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탄소중립 역시 우리 모두의 탄소중립이기 때문이다. 탄소중립까지 남은 시간은 20년도 채 되지 않는다. 환경에 관심이 있는 이들만 동참해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스토리텔링의 시작이 '송고함 내려놓기'에서 비롯되는 이유이다. 기후위기 현상과 해결책은 '전문가의 영역'으로 치부돼 외면됐고,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이행은 '환경문자의 영역'으로 치부돼 대중의 참여를 막는 요소가 됐다. 이를 해소하려면, 우리의 일상 속 수많은 선택과 그 선택이 기후위기와 연결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물건을 사거나, 투자를 하거나, 제품을 이용하는 과정 모두에서 우리의 행동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변화로 이어진다. 성공적인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 욕심 없이 지구를 위해 기꺼이 무언가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도 소중하지만, 그동안 이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도, 양보나 포기를 할 생각 없는 욕심 많은 사람도 중요하다. 때문에 기상학적, 대기과학적 접근을 넘어 인문학적, 경제적, 외교적 접근 등 다학제적 접근을 통해 이야기를 풀어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4) 전담 조직의 구성

박상욱 기자는 이러한 다학제적 접근을 위해선 언론사 내의 전담 조직 구성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강조한다. 현재 기후위기 보도를 주로 하는 언론인은 대체로 환경, 기상, 산업 부문을 담당하는 이들이다. 하지만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은 외교 문제임과 동시에 안보 문제로 비화할 수도 있다. '그럼, 전에 없던 새로운 TF를 만들라는 것이냐'는 반문이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전담 조직을 구성하는 데에 있

어 각 언론사는 하나의 벤치마킹 사례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바로 국제부다.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을 다루기에 국제부 소속 언론인은 다양한 분야에 걸친 취재를 진행한다. 어제까지 외교 안보 문제를 다루다가도 오늘은 미 연준의 금리인상과 같은 경제 문제를 다루기도 한다. 물론, 각 언론사의 조직 구조나 규모에 따라 전담 조직을 구성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엔 기존의 각 부서 기자에게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살피도록 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5) 적극적인 협업

꼭 기후위기 보도만이 아니더라도 최근 언론계에선 적극적인 협업이 강조되고 있다. 기존의 지면 또는 방송을 뛰어넘어 디지털에 기반한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함에 따라 기자와 디자이너, 개발자 등이 서로 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3) 환경 보도의 전문성 제고 방안

〈테일리한국〉 송찬영 전문기자는 국내 포털에서 ‘환경기자’를 검색하면, 일부 환경관련 기사를 쓰는 기자들 콘텐츠가 제한적으로 제공될 뿐이라고 말한다. 이는 같은 검색창에 ‘정치기사’를 검색하면 각 언론매체들의 정치기사 보기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유쾌하지 않지만, 이러한 이유는 언론사의 환경기사가 독립적인 카테고리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 국회도서관에서 논문을 검색해 봐도 환경 관련 기사와 관련한 논문은 물론 언론 비평도 찾기 쉽지 않다. 그만큼 언론 학에서도 환경 분야는 관심이 덜하거나 어렵게 생각하는 홀대받는 분야로 취급당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언론사 조직에서도 사회부 내에 하위 분야로 편제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세종시 환경부 출입기자들 중에서도 환경부 이외에 적어도 1~2개 더 출입부서를 갖는 경우가 흔하다.

(1) 환경 보도의 영역

환경기자의 일상을 보면 정부 부처에서 나오는 정보를 따라 받아쓰기에도 시간이 모자란다. 데스크나 팀장으로부터 인터뷰와 기획기사를 요구받지만, 이러한 능력 있는 기자가 되려면 근무시간 이후의 개인시간을 할애해야만 한다. 더구나 의욕이 있어도 개념이나 전문용어에 막히기 일쑤다. 인터뷰를 하더라도 개념에 약하면, 인터뷰이의 전언을 확인 없이 받아쓸 수밖에 없다. 환경 분야 역시 상당 부분 과학 기술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이 벽을 넘지 않고서는 진정한 환경기자로 거듭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 영역은 권력과 사회 부조리를 감시, 견제, 비판하는 ‘감시견(watch dog)’ 역할을 손에 잡힐

수 있도록 할 수 있기에 가장 순수하면서도 가장 열정적인 기자들이 선호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환경은 우리 삶을 둘러싼 주변의 모든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크게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자연환경은 생태계를 포함한 지구상의 모든 생물과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생활환경은 인간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물, 대기, 소음 악취 쓰레기 등을 일컫는다. 기자들의 구체적 감시 영역이라 할 수 있는 환경오염은 인간의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대기·수질·토양 오염 등 인간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뜻한다. 환경오염원은 이러한 오염의 원인물질을 발생시키는 행위나 물질이라 할 수 있다.

환경기자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자연환경이나 생활환경에 손상을 가하는 요인과 관련한 정책을 감시하고, 해결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주요 취재 영역은 정책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그 산하기관, 기업 등 사회 각 부문에서 파생하는 환경오염 현상을 대상으로 한다.

(2) 학문으로서의 환경의 영역

학문영역에서 ‘환경’의 위상을 살펴보면, 환경학, 환경공학, 환경위생학, 환경보건학, 산업환경, 해양환경, 환경관리, 환경에너지, 환경생태 등 대학에 개설된 학과 명칭에서 볼 수 있듯, 주로 이공계열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환경 오염요인이 다양화 복잡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지식이 종합적으로 요구되는 까닭에 다학문 분야로 변모하고 있다. 대상이나, 문제 발생 원인에 대한 접근이나 해결 방식의 경우 상당부분 과학기술과 연관돼 있지만, 환경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인식 수준이 제고됨에 따라 인문사회학자들과의 학제 간 공동연구 또는 학문 간 융합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기후변화’ 영역은 이런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듯 ‘복합학’ 형태를 띠고 있다. 기후라는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이학적 접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학적 사고, 파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와 그 안에서 인간의 심리문제까지 다양한 학문적 접근이 필요한 것이 기후변화 학문이라는 것이다. 국내 기후변화 연구자들의 최대 조직인 (사)한국기후변화학회는 ‘복합학’을 대상 학문체계로 설정하고 있으며, 과학기술부 산하 학술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3) 환경기자로의 전문성 제고 방안

환경기자로써 전문성을 가지고, 자신만의 글쓰기를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은 환경변화와 환경정책의 변화는 이른바 ‘흐름’이 있다는 것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정 환경이슈에 따라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기도 낮아지기도 하며, 이에 따라 정책 담당부처의 정책 방향이 수시로 바뀐다. 예를 들어

2020년 10월 대통령의 '탄소중립' 선언 이후로, 우리 사회의 환경 관련 핵심이슈는 '기후변화'나 '탄소중립'이 돼 왔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뿐만 아니라 정부의 다른 부처나 기관 역시 탄소중립을 매개로 각각의 정책을 생산 발표해 왔다. 이러한 흐름을 잘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 탄소중립이란 주제를 당시부터 지금까지 놓치지 않고 집중해왔다면, 최소 탄소중립에 관한 나름의 시각을 형성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양한 환경이슈 중 자신이 흥미를 느끼고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은 분야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험상 환경전문기자라고 해서 환경과 관련한 내용을 다 알 수는 없다. 전문가로 인정하는 '박사'의 경우 자신이 연구한 해당 분야에 한해 잘 아는 것이지, 모두를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환경기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자신 있는 분야를 가지는 것이 필수적이다. 환경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 일부 기자들이 책을 출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역시 자신만의 전문 분야를 개발했기에 가능한 일이다.

환경정보는 어디서 구할 것인가? 그 답은 의외로 가까이에 있다. 바로 환경부 등 해당부처나 산하 기관에서 발행하는 보도자료이다. 시간상 보도자료 앞부분만을 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첨부하는 설명 자료에 심층취재를 위한 자료가 있다. 최근에는 부처들이 기자들을 상대하는 방법으로 '단톡방'을 이용하고 대면을 꺼리는 추세다. 보도자료를 활용하면 담당자 연락처를 손쉽게 얻을 수 있으며, 보충취재도 용이하다. 보도자료에 담당자가 언급된 것은 '친절하게 궁금한 것을 물어봐도 된다.'는 의미다. 필요하다면, 그들로부터 관련 전문가가 누구인지, 연락처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 수 있다. 남들이 흘려보내는 보도자료 다시보기를 통해 새로운 아이템을 구하는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간다면 SNS를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SNS는 페이스북이나 트윗을 의미한다. 환경 관련 기관의 공식 SNS나 자신이 관심 있거나 지금의 핫 이슈와 관련한 이슈 스피커들과 친구 맺기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잘 빠르게 접할 수 있다. 가령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 가지 않더라도, 현지를 방문한 국내외 연구자,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SNS를 통해 당사국총회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자신만의 분야가 있다면, 그 분야의 국내외 연구자, 관련기관, 시민단체, 기업 관계자들과 친구를 맺는다면 다른 누구보다도 발빠른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는 셈이다.

(4) 연구 자료의 획득

깊이 있는 분석적 정보를 얻고자 한다면, 연구자들의 연구보고서나 학위 또는 학술논문을 볼 필요가 있다. 환경 관련 최신 연구보고서는 환경정책연구원이나 국립산림과학원 등 관련 정부출연연구소 누리집에 직접 접속해 구할 수 있다. 또는 'KoreaScience'나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에 관심연구기관

보고서 신청을 통해 최신의 연구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다. 구글링이나 네이버나 다음, RISS(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운영하는 학술연구정보 서비스)나 DBpia(민간 학술연구정보 서비스) 같은 학술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해서도 관련 논문을 구할 수 있다. 다만,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이나 민간 학술데이터베이스 검색은 유료라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학생이나 연구자, 교수 등은 학교나 연구기관을 통해 무료로 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지만, 기자는 그러한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RISS나 DBpia 같은 학술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해 자신의 논문을 찾아낸 뒤, 관련학회 누리집을 직접 방문해 논문을 다운받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면, 국내에서 발간하는 학술논문 대부분을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내 과학관련 기사 중 Nature, Science, Cell 등의 외국 저명저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지적돼온 바 있다. 서양적 사고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점으로 지적받아왔다. 그러나 이들 학술지들은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 논문을 게재하므로 질 높은 논문을 손쉽게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익하다. 또 각각 분야의 누리집을 운영하고 있고, 최근에는 국내 번역 사이트 등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접근도 용이한 편이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오픈액세스(Open Access)'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미국이나 국내 대학입시를 위한 편법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는 오픈액세스 저널은 사실 '약탈적 학술지'(predatory journal)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오픈액세스는 해외 학술출판사들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저널의 종수를 늘리고 구독 비용도 크게 올리는 것에 대해 학문의 유통을 자유롭게 하자는 취지로 생긴 운동이라 할 수 있다. 단 논문의 질을 보장받으려면 논문의 피인용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꼼꼼히 챙겨보는 것이 필요하다. 검색은 Google Scholar나 arXiv, Scopus를 통해 할 수 있다.

환경기자 중 최근에는 자신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언론진흥재단 등에서 진행되는 전문가 특강에 참여하거나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진학=전문성' 등식이 꼭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문적인 환경 글쓰기를 향하는 기자들의 열정만큼은 대단하다는 생각이다. 그동안 발전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던 환경 영역에 햇볕이 들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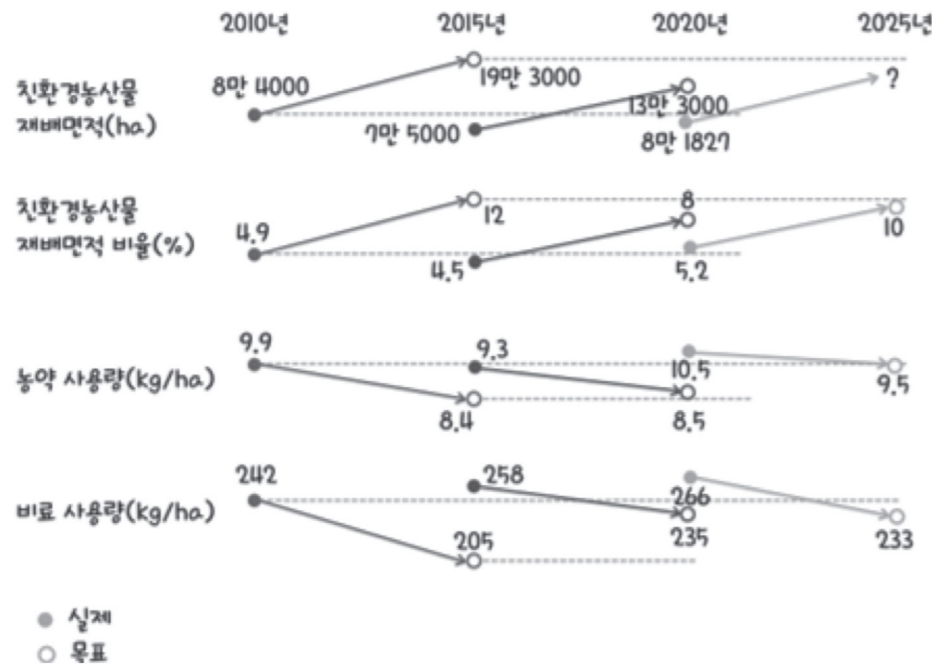
4) 먹거리 속 기후위기 문제

(1) 왜 먹거리일까?

기후변화 문제를 고민하다보면 자연스럽게 먹거리에 관심을 갖게 된다. 비단, 축산업뿐 아니라 수산

업, 농업까지 탄소 배출과 떼놓을 수 없다. 통상 기후변화의 21~37%가 먹거리 때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한국 통계에서는 고작 3%를 차지할 뿐이다. 그 이유는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고 식료품을 대부분 해외에서 들여오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의 친환경 농업 육성 계획은 목표가 달성된 적이 한번도 없다. 친환경 농산물 재배 면적, 농약과 비료 사용량 등의 목표는 한번도 달성되지 않았고 새로운 계획이 수립될 때마다 매년 하향 조정되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해당 계획의 수립과 관련해 보도자료도 배포하지 않았다. 기계적으로, 반복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뿐 공무원들은 실행 의지가 없는 것 같고 그에 대한 감시와 평가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림 1〉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의 목표와 실제

(2) 축산업

엄밀히 말하면 육식이 문제라기보다 우리의 식탁에 오르기 위해 공장식 사육의 대상이 된 소와 닭, 돼지가 소불고기, 치킨, 삼겹살의 모습으로 우리 식탁에 오를 때까지 인간을 제외한 모두, 지구와 동물에 얼마나 부담을 안겼는지 말이다. 상품성 뛰어난 지금의 비대한 소를 헤비 메탄으로 만든 것은 결국

고기를 향한 우리 인간이다. 소뿐 아니라 1990년대에도 돼지고기는 원 없이 먹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때보다 2.5배나 더 많은 돼지가 사육되고 있다. 돼지 분뇨가 이토록 강력한 메탄 배출원인 이유는 역시 슬러리 형태의 분뇨 저장방식 때문이다. 아마존의 나무가 사라지는 이유가 가축의 사육 때문이라면 이제 심각성을 느끼지 않을까?

(3) 농업

고기만 줄인다고 해결이 될까?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 농업 부문 배출에서 육식과 채식의 비중은 44대 56으로 채식이 오히려 조금 더 높다. 밥상 위 기후변화 문제를 단순히 육식이나 채식이라는 문제로만 접근해선 안 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시장에서 '갑'은 서울 송파구에 있는 가락동 경매 시장이다. 전국에서 가장 좋은 농수산물은 긴 이동과 이들이 정하는 상품성을 맞추기 위해 유기농의 길은 멀어진다. 우루과이라운드로 농산물 시장이 개방이 되었을 때,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설원예를 장려해 논밭보다 비닐하우스를 늘리게 된 이유다. 비닐하우스는 상당한 전기와 연료를 투입해야하기 때문에 논지보다 에너지 사용량이 훨씬 높아 탄소 배출이 많을 수밖에 없다.

(4) 어업

한국은 대만과 스페인, 중국과 더불어 가장 급격하게 이동거리가 증가한 나라다. 이렇게 먼 거리 조업을 가능하게 만든 중요한 배경에는 각종 보조금이 있다. 농업과 비교해도 어업의 면세용 사용은 크게 뒤지지 않는다. 국내 농업의 부가가치가 어업보다 10배 더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업은 같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훨씬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어업의 상당량을 차지하는 원양어업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통계에서 '0'으로 집계한다.

(5) 먹거리 산업의 변화

결국 축산업, 농업, 어업까지 어떻게 기르고 잡을 것인지 산업의 문제로 귀결된다. 수직농장, 오염물질 없이 전기로 움직이는 배, 대체육 등 시스템의 변화는 시작되었다. 먹거리는 단순히 맛이나 살기 위해 먹는 것이 아니다. 무엇을 먹을지는 정부의 정책과 기업의 광고, 사회와 문제적인 압력과 수준에 의해 복합적으로 추구되어 진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먹을 것인지를 결정할 때, 탄소 배출과 지구, 동물 모두를 생각한 선택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5) 코로나19 보도 어떻게 할 것인가?

(1) 코로나19 보도의 문제점

감염자와 사망자 수에 초점을 맞춘 경쟁적 보도 '경마 저널리즘', 낙인과 혐오, 공포, 불평등, 소외를 부추기는 보도에 대해 반성하고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재난 상황이 발생했든, 감염병 상황에서도 언론은 사망자 수에 초점을 맞춰서 보도를 하는데, 10년 전에도 그랬고 365일 계속 경마 저널리즘 식으로 보도하고 있으니 문제다. 역사적으로 감염병이 확산될 때 낙인과 혐오, 공포, 불평등, 소외와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것이 큰 문제이고 이번 코로나19도 마찬가지였다. 구치소에서 대규모 확산이 일어났을 때 언론이 균형 있게 보도해야 했는데 오히려 문제를 부추긴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이 있어야 한다. 방역이 강화되면서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받는 이들도 많아지고 불만도 커졌다. 예를 들어 “왜 4명 이상 모이면 안 되냐, 왜 9시까지만 영업을 해야 하나, 바이러스가 9시 전에는 조용하다가 9시부터 활개를 친다는 거냐”는 식으로 불만을 터뜨릴 때 언론에서 그 이유에 대해 잘 설명을 해줬어야 한다. “영업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바이러스가 전파될 시간을 줄이는 것이고 그것에 동참하는 것은 우리가 바이러스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데 기여를 하는 것이다. 동석할 수 있는 사람 수를 제한하는 것도 감염자 수를 줄이는 데 큰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4인이 같이 식사하면 4명이 걸리고 8명이 함께 먹으면 8명이 걸리게 되는데 2배 차이가 난다.” 이런 식으로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조치로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는 사람들에게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그런 부분 문제에 언론이 제대로 보도를 했다면 국민들의 반응과 태도도 변화되었을 것이고 정부 대책도 달라졌을 것이다.

(2) 전문가와 일반인의 인식 차이

① 위험커뮤니케이션

개인의 위험 인식은 심리, 사회, 정치적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다(Slovic, 2000). 위험커뮤니케이션의 시작은 같은 위험이라 할지라도 사람마다 자신이 처한 상황과 사회·정치적인 맥락에 따라 심리적으로 다르게 느낄 수 있다는 인식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개인의 위험 판단 과정에서 새롭거나 위협이 될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한 경우 이를 판단하기 위해 정보의 습득은 필수적이며 위험 정보 탐색과 처리는 중요하다(McComas, 2006). 미디어 프레임은 위험을 보도함에 있어 이슈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문제의 해결방법과 그에 이르는 경로, 나아가 개인의 도덕적 가치관까지 영향을 주게 된다(Entman, 1993). 즉, 미디어가 위험을 인식함에 있어 어떤 측면을 강조하는지, 어떻게 내용을 구성하는지, 어떤 형식으로 뉴스가 전달되는지에 따라 위험 인식이 달라진다.

② 위험 인식의 측정

전통적인 의미의 위험 측정 방법은 치사율, 사망률, 코로나19 확진자수 등 질병률로 표현한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사람의 인식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뿐더러 위험을 과소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위험 상황은 여전히 관련 정책 수립과 집행 상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위험 인식을 측정하는 심리 측정패러다임(Slovic)은 이러한 전통적인 의미의 위험 측정 방식에 대한 반성에서부터 시작된다. 위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걱정이나 불안 정도 등 심리적 영향, 미디어 활용에 대한 정보 습득 차원 등이며 이는 위험 인식 도구의 측정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③ 개인의 위험 인식도 항상 옳지 않다.

그렇다면, 개인의 위험 인식은 늘 옳은 기준이 되는 것일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미세먼지가 예전보다 나빠졌다고 하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18)의 조사와는 달리, 지난 10년간 미세먼지는 꾸준히 좋아졌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꾸준히 늘어나는 대기오염물질인 오존은 상대적으로 덜 관심을 받고 있어 그에 대한 위험 인식은 낮게 형성되어 있다. 즉, 위험 인식은 사람과 미디어의 관심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④ 보건환경 인식 조사 결과

2021년 11월 한 달간, 서울시민 1천 명과 전문가 321명을 대상으로 보건환경 위험 요인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 그 결과 서울 시민은 미세먼지보다 감염병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했으며, 기후변화에 대한 위험 인식이 높았다. 그러나, 인지도는 미세먼지, 기후변화 다음으로 감염병으로 조사되어 감염병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요한 결과는 환경과 보건(식품) 분야에서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사람들의 위험 인식이 높았는데, 아직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인체 위해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했을 때, 이에 대한 우려가 높아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연구와 정책이 필요한 것을 반증한다. 또한, 대부분의 결과에서 전문가와 일반인의 위험 인식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⑤ 앞으로 생각해 볼 문제

첫 번째, 위험 인식에 대한 전문가와 일반인의 차이가 보건환경 위험 관련 보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미세먼지, 코로나19 등 대부분의 정보가 공공기관이나 전문가에 의존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편향된 인식을 미디어를 통해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문가의 코멘

트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인식도 함께 보도에 담을 필요성이 있다. 두 번째, 미세먼지는 사회재난이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확산은 재난 상황이다. 따라서 보건환경 보도는 재난 보도의 성격을 띤다. 2014년 9월 16일 한국기자협회는 세월호 전원 구조 오보에 대한 반성으로 비윤리적인 취재 금지, 무리한 보도 경쟁 자제, 취재원에 대한 검증, 선정적 보도 지양 등을 정한 '재난보도준칙'을 정했다. 따라서 보건환경 보도는 재난보도준칙에 따라 보도되어야 한다.

3. 결론

이 연구는 환경 분야 보도를 시작하는 기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매뉴얼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환경과 보건 분야에 취재 경험이 풍부한 전·현직 기자들이 각자 관심 있는 주제를 온라인 화상 모임을 통해 발표하고 토론한 내용을 담았다.

연구는 총 5개 소주제로 나누어 진행됐다. 첫 번째 환경 전반의 보도에 대한 부분은 <한겨레 신문사>에서 기후변화팀을 이끌면서 그동안 만 11년간 환경 기사를 써온 최우리 기자가 맡았다. 최 기자는 2020년 이후 언론사에 훌륭한 환경전문기자가 많아졌다고 평가하면서, 환경 기사를 쓰고 싶은 기자들에게 소속 부서와 상관없이 생활 속에서 환경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꾸준히 할 것을 조언했다. 두 번째 주제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 보도는 종편 채널 <jtbc>에서 환경 분야 심층취재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박상욱 기자의 연구를 중심으로 구성하고자 했다. 아직도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보도가 당장의 노력이 효력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현 상황에 대해 지적하면서, 이러한 태도가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이 선진국에 비해 30년 이상 늦어졌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방관자적인 태도의 언론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세 번째, 환경보도의 전문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는 <데일리한국> 송찬영 전문기자가 정부기관의 보도자료와 오픈 소스를 통한 연구 자료의 활용 방안 등 현실적인 대안을 다수 제시했다. 네 번째는 기후위기 문제를 먹거리를 통해 바라본 <세계일보> 윤지로 환경팀장의 연구를 담았다. 에너지와 2차 산업이 기후위기를 초래했다는 기존의 인식과는 달리 축산업과 농업, 어업까지 탄소발생에 책임이 있고, 먹거리 산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위험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 코로나19 보도에 있어서 전문가와 일반인의 인식의 차이를 연구한 내용을 담았다. 서울시 조영리 주무관은 전문가와 일반인 위험 인식의 차이가 있어, 언론보도 시 전문가만의 코멘트는 편향된 인식을 전달할 수 있으며, 사회재난으로서 일반인들이 겪는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 고려해 사회적인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의 보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환경 분야 보도를 시작하는 기자에게 줄 수 있는 조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았다. 첫째, 전문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자로서의 메신저 역할이다. 환경 분야 보도를 오래한 기자들도 입을 모아 할수록 더 어렵고 그 문제의 해결은 더욱 쉽지 않다고 말한다. 그래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학위나 전문 분야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겠지만, 굳이 학위 과정이 아니더라도 관련 보도자료에 나온 취재원, 국내외 학술자료 등으로도 충분히 지식을 습득할 수 있으며, 이를 현실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적절히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해외 저명 논문이나 사례를 무조건적인 대안으로 제시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현실과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고 검토하여야 기사의 효용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또한, 전문가에만 의존하는 환경 보건 보도는 자칫 편향된 시선만으로 세상을 평가하게 만든다. 환경 보건 보도는 재난 보도의 형태를 갖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 시민의 인식의 선상에서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우리나라 기후위기 문제 해결은 이미 많이 늦었다. 아직도 기후위기 문제를 한철의 이상 기후 현상이나 멸종위기 동물의 문제로 상정하는 태도가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을 늦춘 이유가 될 수 있다. 이때 언론 역시, 당장 먹고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태도가 우리나라가 기후위기 대응에 늦은 원인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셋째, 환경은 우리의 모든 생활과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부터 날씨까지 결국 사람이 사는 모든 환경이 곧 기자의 소재가 될 수 있다.

끝으로, 환경 기사는 환경 전문가 관련 출입을 하는 기자뿐 아니라 관심 있는 기자라면 누구나 쓸 수 있다. 위에 언급한 것처럼 환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과 연결된 주제이기 때문이다. 환경 문제를 말하면 먹고사는 문제에 비하면 한가한 소리라고 말하는 이에게 이렇게 말해 줄 날이 올 것이다. 환경이 문제의 해결 없이는 먹고사는 문제도 없을 것이라고, 환경이 정치나 산업처럼 이른바 메이저 섹션의 위치가 될 날이 머지않았다.

참고문헌

- Entman, R. M., & Rojecki, A. (1993). Freezing out the public: Elite and media framing of the US anti-nuclear movement.
- McComas, K. A. (2006). Defining moments in risk communication research: 1996–2005. *Journal of Health Communication*, 11, 75–91.
- Slovic, P. E. (2000). *The perception of risk*. Earthscan publications. 이영애 (역) (2008). <일반인을 위한 위험판단 심리학>. 서울: 시그마프레스

출산과출생 정책연구회

문주현, 김새롬, 김정우, 김진우, 김진환, 박지원

인구정책으로 분류되는 저출산 대응 정책이 갖는
보건학적 함의를 탐색하고
이들 정책이 인구집단의 건강과 의료 이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의 출산율 정량분석 연구동향

주제범위 문헌고찰

출산과출생 정책연구회

문주현, 김새롬, 김정우, 김진우, 김진환, 박지원

1. 서론

1) 연구배경

현대사회에서 국가별 인구정책은 빈곤탈출과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었다. 이 때문에 과거 빈곤퇴치와 국가발전을 목적으로 강력한 산아제한정책과 가족계획사업을 펼쳤던 한국은 이제 성장동력의 약화를 우려하며 출산장려정책을 쏟아내고 있다(양영철, 2019). 특이한 점은 임신과 출산에 밀접한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연구 지형이다. 한국의 보건의료체계에선 분만취약지나 고위험산모 및 저체중아 등 응급의료로서 분만에 대한 관심에 비해 소위 '저출산 현상'이나 출산장려정책에 관한 연구와 논의는 제한적이다. 이는 인구통제라는 정책과제를 달성하고자 의료기술과 보건사업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던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사이 임상전문가와 보건정책 연구자들에 의해 생산된 지식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정연보, 2020; 조영미, 2006).

꾸준히 출산에 관한 연구가 활발한 학제로는 인구학, 경제학, 정책학이 있다. 국가의 정책과제와 목표를 결정하고 그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TFR)이 흔히 쓰이기 때문이다. 거시적 관점에서 여성이 일생에 걸쳐 출산할 자녀의 수로 정의되는 합계출산율을 추정하는 것은 현재에서 20년 뒤, 40년 뒤 미래 인구의 부양부담과 경제성장을 전망하고 대비하는 과정이다. 하지만 여성과 태어나는 신생아의 건강과 인권에 앞서 기성세대를 부양하고 노동시장에 참여할 노동자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김영미, 2018; 신경아, 2010).

정부가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근거해 각종 지원책과 법제도를 강화하기 시작한 2006년 즈음 수행된 선행연구들은 여성 1인당 1.8명에서 2.0명을 적정인구를 위한 합계출산율로 추정했다(구성열, 2005; 전광희, 2006). 그러나 한국은 1984년 1.74명으로 하락한 이후 회복 없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06년 당시 이미 1.13명이었고 약 15년이 흘러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발표된 2020년에는 0.84명으로 감소했다(국가통계포

털, 2022). 저출산 현상, 인구위기, 인구축적, 인구절벽 등으로 표현될 만큼 기록적인 하락세로 인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현물지원과 현금급여를 포함해 '각종' 유인책과 관련 사업을 끊임없이 도입하고 강화했다. 하지만 누구를 대상으로 한 어떤 정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평가하는게 무색할만큼, 매년, 매분기 합계출산율은 새롭게 기록을 갱신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에도 비용대비 효과 측면에서 출산장려정책은 실패했다는 회의적인 평가나 대상에 따라 혼재되거나 미비한 효과만을 보인다는 실증이 존재했다(이철희, 2018; 양영철, 2019). 이는 어떤 정책이나 사업도 모든 인구집단에게 동시에 제공되어 동일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단 점에서 기존 출산장려정책의 부진은 누구나 예상가능한 범위 내 결과로 볼 수 있다.

한편,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 감염병과 기후재난, 생산체계 및 노동환경의 변화는 생산인구의 노동력증대가 경제성장을 견인할 것이라는 공식을 뒤엎고 있다. 이 때문에 근거기반 정책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과거 20년간 출산율을 다룬 양적분석 연구에서 다룬 이론과 가설을 탐색하고 자료원, 변수, 분석 방법의 대표성 및 신뢰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연구자들은 주제범위 문헌고찰을 수행해 출산율에 관한 지식의 공백을 점검하고 향후 보편적 건강보장과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추구하는 보건학자로서 출산과 출산율에 관한 보건의료체계와 관련 정책의 정책적 과제, 전략,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지난 20년간 출산율 변수를 활용한 국내 양적 분석 논문을 대상으로 주제범위 문헌고찰을 수행하였다. 문헌고찰에 앞서 연구자들은 연구설계와 분석층위에 따라 국내에서 '여성'이 일생에 걸쳐 출산한 자녀의 수로 정의될 수 있는 연구주제를 정리하고 실제 문헌고찰 결과와 대조하였다. 또한, 연구의 과정과 결과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기존 문헌의 학제적, 이론적, 분석적 특성을 공유하고 토론함으로써 기존 연구에서 드러난 관점의 편향과 지식의 공백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 '저출산 현상'의 원인과 전망에 대한 근거 수준을 식별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제도나 사업의 대상, 전략, 성과지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들이 검토한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 한국의 출산율을 연구하는 사람의 특성과 연구목적은 무엇인가?
- 선별된 연구의 이론적 배경과 주요 가설은 무엇인가?

- 출산율을 조작적으로 변수화한 경우에 정의, 대상, 자료원, 분석방법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 한국의 출산율을 다룬 연구의 경향이나 지식의 공백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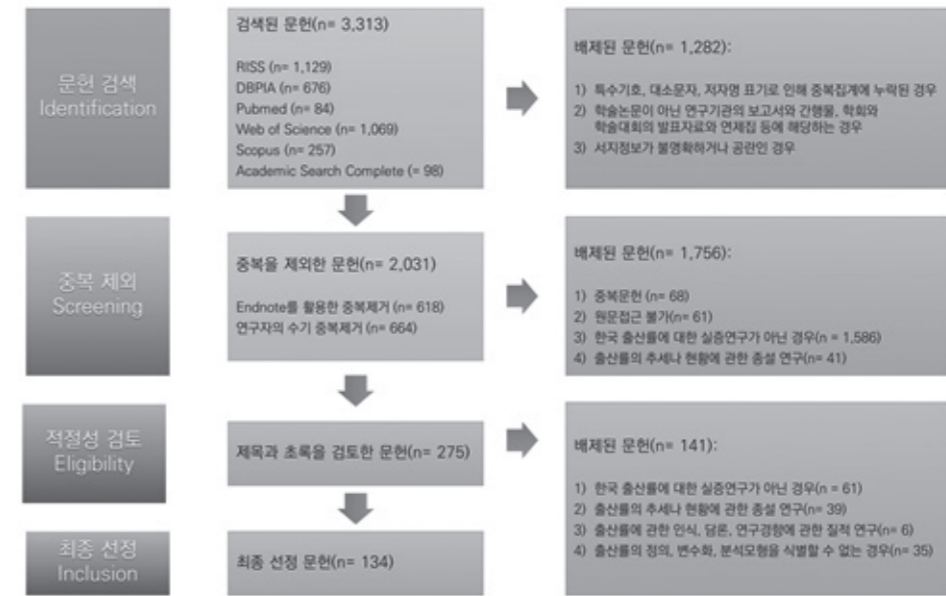
2. 본론

1) 연구방법

연구는 격주로 최대 2시간 진행하는 화상회의와 매달 최소 2시간 대면 혹은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되는 종합회의에 기반해 수행되었다. 6인의 연구자는 연구경험과 합의된 연구기여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역할을 배분하였다: (1) 연구계획 대비 추진일정을 관리하고 전체 업무를 관리하는 1인, (2) 자료를 수집하고 문헌을 고찰하는 등 실무를 담당하는 3인, (3) 정기적인 토론을 통해 중간산출물과 연구 과정을 검토하는 2인, 연구계획 당시 출산과 출생을 주제로 모성사망률, 영아사망률 등 보건의료 분야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지표에 관한 복수의 문헌고찰에 대해 논의한 끝에 시간적, 물리적 자원의 한계를 고려하여 출산에 관련된 주제범위 문헌고찰에 집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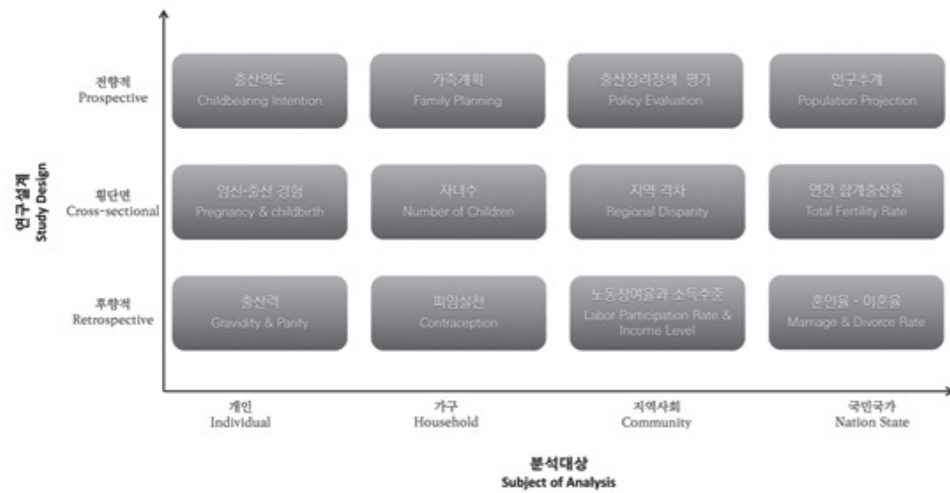
주제범위 문헌고찰에 앞서 연구자들은 '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es extension for Scoping Reviews(PRISMA-ScR) Checklist'와 보건의료 분야에서 수행된 연구사례를 학습하고 토론하였으며, 연구진행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Tricco et al., 2018).

'2002년부터 2021년까지 과거 20년간 출산력을 분석한 양적논문'을 고찰하기 전, 연구대상이 될 논문을 식별할 네 단계(문헌검색, 중복제외, 적절성 검토, 최종 선정)를 거쳤다(〈그림 1〉). 검색어는 실험적 검색과 화상회의를 활용해 보완했다. 첫 번째 문헌검색 단계에서 국내 검색엔진 2개와 국외 검색엔진 4개, 총 6개 검색엔진에 국문과 영문 검색어를 입력해 총 3,313개 문헌이 검색됐다. 두 번째 중복제외 단계에선 복수의 검색엔진에서 중복검색된 경우를 식별하고자 문헌관리프로그램인 Endnote로 자동중복제거 기능을 적용한 뒤 제목, 출판년도, 저자를 차례로 정렬해 수기로 중복문헌을 제거했다. 세 번째 적절성 검토 단계에선 제목과 초록을 검토해 연구방법으로 '출산력 지표를 활용한 양적 분석'이 아닌 논문을 모두 제거했다. 배제기준에 따라 제거된 논문으로는 (1) 연도별 합계출산율 추세만 도표로 제시한 논문, (2) 출산력에 관한 저자의 사실, 논평, 종설 논문, (3) 보도자료나 전문가 인터뷰 등 질적 자료를 분석한 논문, (4) 출산력 지표에 대한 정의, 측정 기준과 방법, 분석모형에서의 활용을 식별할 수 없는 논문이 있었다.



〈그림 1〉 문헌선정 흐름과 단계별 기준

또한, 연구자들은 개인, 가구, 지역사회, 국가라는 네 가지 층위와 변수를 관찰하고 분석하는 전략에 따라 출산 여부나 출산 규모를 측정하고 추정하는 방법 역시 달라질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이 때문에 한 국가를 대상으로 정량화된 거시지표 합계출산율을 포함해 네 가지 분석대상(개인, 가구, 지역사회, 국가)과 연구설계(전향적 예측, 횡단면 분석, 후향적 평가)에 따라 서로 다른 출산력 지표 및 변수화의 가능성을 〈그림 2〉와 같이 정리했다. 그림의 중심부는 현재나 과거 어느 시점에 출산력에 영향을 주는 영향요인이나 집단별 평균을 비교하는 연구에서 흔히 활용하는 변수나 지표를 나열했다. 이를 중심으로 상단부에는 장래 개인, 가족, 지역사회, 국가의 출산력을 높이거나 낮출 요인이나 그 결과를 예측하기 위한 목적의 연구주제를 배치했고, 반대로 하단부에는 출산에 관한 의사결정의 전제조건이거나 출산력을 변화시킬 구조적 요인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주제를 나열했다.



〈그림 2〉 연구설계와 분석대상에 따른 출산력 연구의 핵심 주제 범위 예상도

2) 문헌고찰 결과

3,313편의 논문 중 최종 분석대상에 포함된 논문은 총 134편이었다. 5년마다 발표되는 저출산·고령 사회 기본계획에 맞춰 시기별 출판논문의 수를 살펴보면(그림 3), 기본계획이 발표되기 이전 출산력 변수를 활용해 양적 분석을 수행한 논문은 연간 한두 편에 그쳤다. 그러나 시기별, 연간 출판논문의 수가 증가하는 경향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다. 단,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 2014년과 남북미 정상회담이 추진된 2019년에는 출판논문의 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한 뒤 반등했다. 이와 같은 지난 20년간 출판논문 수 추이는 출산물에 관한 학술적 관심이 정치·사회적 우선순위와 조응 및 경합함을 드러낸다.



〈그림 3〉 연도별 출산력 지표를 활용한 논문의 출판 편수

134편의 일반적 특성을 탐색하기 위해 저자의 특성 2가지(저자수, 주저자의 성)와 연구수행 특성 2가지(분석목표, 재정적 지원), 분석자료의 특성 1가지(자료원 출처), 출산력 변수의 특성 2가지(대상자 정의, 대상자 연령)를 분류했다. 저자의 경우 단독저자(58, 43.3%)보다 2인 이상의 공동저자(76, 42.5%)가 더 많았다. 공동저자 중 교신저자에 대한 표기가 부재하거나 명확하지 않아 식별이 어려운 경우 가장 앞에 표기된 이를 주저자로 특정했다. 저자의 성은 남성(97, 71.5%)이 여성(27, 20.8%)의 3.5배였지만 저자에 대해 공개된 자료가 제한적이고 이름만으로 성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도 10편(7.7%) 존재했다.

연구에서 변수 간 관계(relation, association)를 규명하고자 했던 연구는 전체의 89건(66.4%), 예측과 추계를 수행한 연구는 28건(20.9%), 출산장려에 관련된 정책을 평가한 연구는 11건(8.2%)이었다. 6편(4.5%)의 논문은 한 편의 논문에 여러 가지 유형의 분석을 수행하였거나 세 가지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실험적 방법을 썼다. 재정적 지원 측면에서, 74편(54.9%)의 논문은 지원을 받지 않았거나 재정지원에 대한 정보를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은 논문이 28편(21.1%), 대학교의 학내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이 20편(15.0%)인 가운데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은 논문은 11편(8.3%), 민간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는 1편(0.8%)이었다.

많은 논문이 자료원의 공식명칭, 조사년도, 활용변수와 같이 원자료의 특성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았으며, 가공방법과 분석모형에서의 활용에 관한 기술도 논문을 재현할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연구자들은 본문에서 저자가 활용한 모든 자료가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국가통계에 해당하고 자료의 공식명칭, 약칭, 약어 등을 식별할 수 있다면 '통계청(국가통계)'으로 분류하고, 출처를 밝힌 자료원에서 파악할 수 없는 변수가 분석모형에 포함됐다면 '저자가공'으로 분류했다. 국가정책연구기관에서 생성·관리하고 있는 노동패널조사자료, 여성가족패널조사자료 등은 '패널조사자료'로, OECD나 World Bank, UN에서 받은 자료는 '국외기관 자료'로, 저자가 설문조사를 수행했다고 언급했으면 '자체조사'로, 그 외 행정부처에서 수행한 사업에 관련된 행정자료나 건강보험 청구자료 등을 활용했다면 '기타'로 분류했다. 그 결과, 자료원 출처의 빈도는 통계청(51, 38.1%), 저자가공(50, 37.3%), 패널조사자료(14, 10.4%), 언급없음(8, 6.0%), 국외기관 자료(5, 3.7%), 자체조사(2, 1.5%), 기타(4, 3.0%) 순이었다.

출산력을 정의, 측정, 변수화한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출산력의 대상자의 결혼여부에 따른 정의와 연령기준을 분류한 결과, 출산력 지표에 대한 대상자 정의를 밝히지 않은 경우가 전체 94편(70.1%)으로 가장 많았고, 결혼상태에 따른 유배우 여성으로 정의한 경우가 25편(18.7%), 미혼여성을 포함한 가입기 여성으로 정의한 경우가 10편(7.5%), 대상자를 특정유형으로 식별할 수 없는 경우가 5편(3.7%)

이었다. 연령 역시 기준을 정의하지 않은 경우가 82편(61.2%)으로 가장 많았고, 정의된 경우가 48편 (35.8%), 식별할 수 없는 경우가 4편(3.0%)이었다.

자료원의 출처와 출산력 지표 및 변수에 포함된 대상의 정의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는 점은 양적 분석으로 얻은 결과의 대표성과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결과해석 및 정책적 제언의 타당성을 낮출 위험이 있으므로 연구의 재현성을 높이기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표 1〉 출산력 지표를 활용한 논문의 일반적 특성

| | 문헌수 (n) | 비율 (%) | | 문헌수 (n) | 비율 (%) |
|---------|---------|--------|-----------|---------|--------|
| 저자 | | | 자료원 출처 | | |
| 단독 저자 | 58 | 43.3 | 통계청(국가통계) | 51 | 38.1 |
| 공동 저자 | 76 | 42.5 | 저자 가공 | 50 | 37.3 |
| 주저자 | | | 패널조사자료 | 14 | 10.4 |
| 여성 | 27 | 20.8 | 언급 없음 | 8 | 6.0 |
| 남성 | 97 | 71.5 | 국외기관 자료 | 5 | 3.7 |
| 식별 불가 | 10 | 7.7 | 자체조사 | 2 | 1.5 |
| 분석목표 | | | 기타 | 4 | 3.0 |
| 변수 간 관계 | 89 | 66.4 | | | |
| 예측과 추계 | 28 | 20.9 | 대상자 정의 | | |
| 정책 평가 | 11 | 8.2 | 언급 없음 | 94 | 70.1 |
| 기타 | 6 | 4.5 | 유배우 여성 | 25 | 18.7 |
| 재정 지원 | | | 가임기 여성 | 10 | 7.5 |
| 언급 없음 | 74 | 54.9 | 식별 불가 | 5 | 3.7 |
| 한국연구재단 | 28 | 21.1 | 대상자 연령 | | |
| 학내연구 | 20 | 15.0 | 정의됨 | 48 | 35.8 |
| 공공기관 | 11 | 8.3 | 정의 불가 | 82 | 61.2 |
| 민간기관 | 1 | 0.8 | 식별 불가 | 4 | 3.0 |

주: 저자 3인의 종합검토 과정에서 합의된 결과를 도출할 수 없는 경우 '식별불가' 처리함
자료: 저자 생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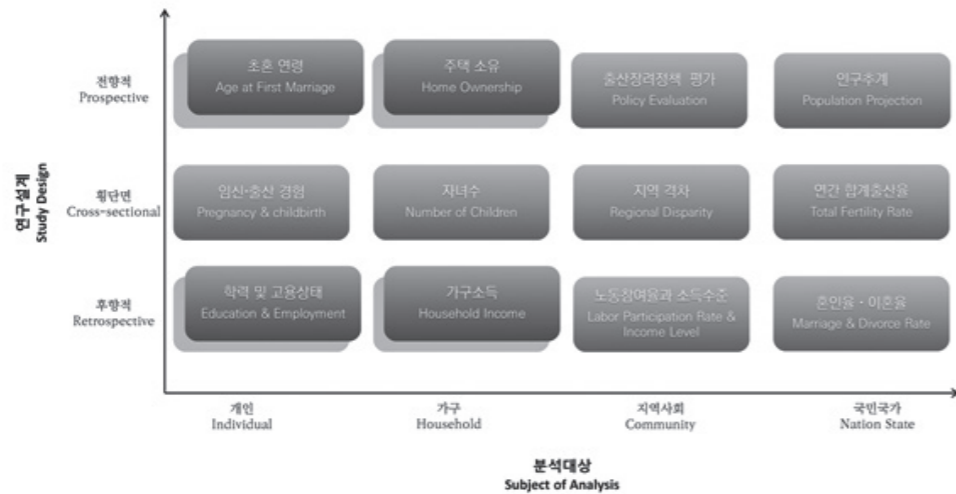
문헌고찰 결과 도출한 주제범위를 예상과 비교한 결과(〈그림 4〉), 국가와 지역사회 단위 출산율에 관한 연구는 어느정도 연구의 틀과 이론이 구체화되어 있었다. 특히 동일한 저자가 주저자, 공저자, 혹은 교신저자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정주기로 반복조사되어 다루기에 익숙한 자료원을 분석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이들 저자들은 특정 주제에 대한 연구자의 전문성을 증명할 수 있었지만 새로운 연구 주제나 연구방법을 시도하거나 과거와 다른 연구결과를 도출하는데는 제한적이었다.

연구의 수행체계와 연구방법에서 드러난 낮은 재현성과 더불어 최근 연구일수록 자료원이 다양해지면서 분석대상의 층위를 구분하지 않고 자료를 가공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개인이나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공개패널이나 국가통계 원자료를 활용한 연구에서 지역변수를 병합해 분석모형에 포함하거나, 반대로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 평균 가구소득과 사교육비 지출, 주택의 전월세매매 가격처럼 개인이나 가구의 특성을 지수화해 시도단위 패널자료를 구축하는 연구가 늘어났다.

이는 자료접근성의 확대로 다양한 요인을 살펴볼 기회가 확대되었다는 의의가 있지만 동시에 대부분의 연구에서 선정한 변수가 여성의 사회경제적 요인만을 강조해 연구의 차별성이 떨어지는 편향적 연구경향도 드러났다. 특히 여성과 가족의 규범과 실천을 강조했지만 여성의 임신, 유산, 임신중지를 포함한 출산력(parity)를 변수화한 논문은 부재했다. 여성가족패널을 활용한 일부 연구만이 여성의 출산의도, 출산한 자녀수와 자녀의 성을 분석에 포함하고 있었다. 특이하게도, 여성 개인의 응답을 분석한 경우 대상의 초혼연령이나 조사참여 당시 연령을 분석모형에 반드시 포함하는 연구조차 출산율을 변수화하기 위해 활용한 대상자 정의와 연령기준은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가구를 다룬 2000년대 초반 연구들은 경제학자 게리 베커의 가족경제학 이론에 기반해 기혼부부가 출산을 계획 및 실천하는 기전을 설명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주택가격이나 사교육비 지출 같은 경제적 부담, 공공서비스 및 복지제도(e.g., 출산장려금, 어린이집, 육아휴직 등) 수혜 여부와 만족도를 분석한 논문들이 늘어났지만 지역 내 아동병원 여부를 변수화한 논문을 제외하면 보건의료 서비스나 사업을 분석한 연구는 없었다.

여성이나 가족을 다룬 연구 모두 북미나 유럽에 비해 현격히 낮은 청소년 출산율이나 미혼여성의 출산율에 대한 한국적 영향요인과 추세변화를 실증한 논문은 부재했다. 정책을 평가한 논문들도 정책 도입 전후 기간을 비교하거나 지역 간, 인구집단 간 평균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달성 정도를 수치화했을 뿐, 정책의 당초 목표치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평가한 논문은 없었다.



〈그림 4〉 연구설계와 분석대상에 따른 출산력 연구의 핵심 주제 범위 결과

3. 결론

2002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20년간 한국의 출산율을 정량분석한 연구 동향을 살펴보았다. 연구자의 특성, 연구설계 및 수행에 관련된 특성, 분석에 활용한 자료 및 출산력 변수의 특성을 분류했다. 20년간 출산율을 분석하는 목적이 해외에서 정립된 이론을 국내자료로 검증하기 위함에서 국내정책의 대상자와 수혜자를 선별하거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함으로 변화하면서 이론적 배경이나 검증하기 위한 가설을 명확하게 제시한 연구는 과거에 비해 줄어들고 있었다. 이론에 기반하지 않은 분석모형과 변수선정은 연구결과의 대표성과 재현성의 저하를 의미했다. 이렇게 수행된 정량적 분석은 대개 “여성이나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고 고용 및 주거 안정성이 떨어지면 출산율이 낮아지며,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는 결과를 반복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저출산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정부의 대안마련을 촉구하는 범용적 진단과 제언이 널리 쓰이고 있음에도 저출산이 왜 위기인지에 대한 답은 찾을 수 없었고, 정부가 마련해야 하는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특정은 불가능했다. 이와 같은 연구지형 속에서 여성과 부부의 건강상태 및 건강행태를 질문하거나 관찰해 분석대상에 포함 한 연구는 드물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인구정책의 대상으로 분류되어 보건학에서 소외되어 왔던 출산율을 ‘여성이 일생동안 낳았거나 낳을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의 수’라는 개념에서 다시 질문하고, 관찰하고, 분석하는 과정의 필요성과 그 중요성을 제시한다.

참고문헌

- 구성열, 2005, 『한국의 적정인구: 경제학적 관점』, 『한국인구학』, 28(2), 1-32.
- 김영미, 2018,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젠더 분석: 저출산 담론의 재구성을 위하여』, 『비판사회정책』, (59), 103-152.
- 신경아, 2010, 『저출산대책의 쟁점과 딜레마: 여성 없는 여성정책』, 『페미니즘 연구』, 10(1), 89-122.
- 양영철, 2019, 『한국인구정책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출산정책 실패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사학지』, 47(47), 129-164.
- 이철희, 2018, 『한국의 출산장려정책은 실패했는가?: 2000년~2016년 출산율 변화요인 분해』, 『경제학연구』, 66(3), 5-42.
- 전광희, 2006, 『인구학적 관점에서 본 적정인구의 추계』, 『한국인구학』, 29(1), 209-39.
- 정연보, 2020, 『생명경제와 재생산: 가족계획 사업의 실험적 성격과 연구자원으로서의 몸』, 『과학기술학연구』, 20(3), 31-64.
- 조영미, 『2006 한국의 출산의 의료화 과정 (1960-2000): 의료, 국가, 여성을 중심으로』, 『여성건강』, 7(1), 29-52.
- KOSIS 국가통계포털, “인구동향조사. 합계출산율.” <https://kosis.kr/index/index.do>, (2022.10.01)
- Tricco AC, Lillie E, Zarin W, O'Brien KK, Colquhoun H, Levac D, et al. “PRISMA Extension for Scoping Reviews (PRISMA-ScR): checklist and explanation”. *Annals of Internal Medicine* 169(7), 2018, 467-473. <doi: 10.7326/M18-0850>

평화떡잎

유재영, 김주현, 문예찬, 송정환, 주재욱

풀씨연구회 1기 활동에 이어
북한의 문화예술을 통해 북한 내부 산림논의 특성을 발굴
남북산림협력에 시사점 제언

김정은 시기 북한 문학작품을 통해서 본 산림정책의 실재

2015년 산림복구 전투를 중심으로

평화떡잎

유재영, 송정환, 문예찬, 주재욱, 김주현

1. 서론

1) 문제의 제기

본 논문은 다음 두 가지 문제의식에 기초한 연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첫째로는 남북 협력 도모의 수단으로서 산림정책이 주목받고 있음에 따라, 북한 내 산림 현황에 관한 제반적 이해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로는 북한 사회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이러한 제반적 이해를 현장 조사와 정량적 평가 등 전통적인 방식으로 확보하기 어렵다. 본 논문은 전자를 연구를 진행하는 데의 함의로 삼았고, 후자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연구의 차별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로써 본 논문은 일차적으로 북한 내 산림 현황을 파악하는 수단으로 김정은 시기 북한 문학작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차적으로 북한 문학작품 내 포착된 북한의 산림정책 이념 등을 포함한 실재를, 북한 학계에서 실증적 보도자료로 여기고 있는 「노동신문」 내 관련 보도자료하고 '문헌 고찰'에 기반한 교차 검증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2) 선행연구 검토

본 논문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는, 본 논문의 소재인 '북한 내 생태 환경 파악'과 관련하여 유사성을 띠는 연구이다. 둘째는, 본 논문이 연구방법론으로서 차용하고 있는 '북한 문학작품 검토'에 기반하여 논의를 이어간 연구이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이 주목하는 소재와 방법론 측면에서 모두 상당히 유사한 연구이다.

연구 소재 측면에서 선행연구자로 지목될 수 있는 사람으로는 전동진·김익재, 허선훈, 오삼언·김은희 등이 있다. 우선 전동진과 김익재는 북한의 산림복원에 관한 연구만을 목표로 삼고 있지 않고, 북한의 산림정책과 기후변화가 북한의 물관리 등 식량안보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을 현존하는 실증자료

에 기반해 해석하는 데 집중하였다. 이로써 이들은 「북한의 산림복원과 기후변화가 물관리 취약성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방향 연구」라는 연구물 시리즈를 발간하였다. 해당 북한 산림정책의 관점에서 연구 보고서 내용의 요지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해당 연구는 기후변화와 더불어 북한의 산림복원 정책의 변화가 물·에너지·식량이라는 넥서스¹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둘째, 1980년대부터 경제난이 본격화됨에 따라 북한은 산림자원을 과도하게 이용하였다. 그에 따라 북한 산림자원은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고, 산림의 농경지화 시도 등이 이루어지면서 사태는 더 심각해졌다.

셋째, 향후 남북 환경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제환경이 변화하여야 하고, 산림 분야 등에서 북한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방안들이 연구되어야 한다. 전동진과 김익재 등이 참여한 해당 연구는 북한이 대대적인 식량 및 에너지 자원 확보에 나서면서 본격화된 산림 황폐화 현상을 규명하고, 더 나아가 이러한 특수한 상황이 다른 필수자원과 어떠한 상호 연계성을 갖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가 북한 산림의 현주소를 파악하기로 위하여 의존하고 있는 자료의 양적·질적 특성상, 정확한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가 어렵다. 예컨대,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연구가 의존하고 있는 통계자료 대부분은 통계청의 북한통계포털에서 수집되었는데, 해당 통계자료는 보완될 여지가 크다고 관계자가 논평한 바 있다.² 더불어 해당 연구가 제안하는데 기초가 되는 넥서스 모델(WEF Nexus Tool 2.0)³의 적용이 애당초 하나 평가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적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실제로 해당 연구에서도 이것과 관련한 한계를 밝히고 있다.⁴

1 "물·에너지·토지는 식량을 생산할 때 반드시 필요한 자원이다. 우리는 한정된 이 세 가지 자원의 순환 고리 속에서 식량이라는 생산물로 삶을 영위한다. 이와 관련 최근 세계적으로 대두되는 개념이 '물(Water)-에너지(Energy)-식량(Food) 넥서스(Nexus)'(이하 WEF 넥서스)다. 넥서스란 '결합', '연결' 등을 뜻하는 말로 WEF 넥서스는 물-에너지-식량의 상호관계를 파악하고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평가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흐름에서 생겨난 개념이다." 유전용, 「기고」 유한한 '물-에너지-토지', 'WEF 넥서스'로 무한히 활용, 《농수축산신문》, 2019년 12월 3일자 (<http://www.af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139>, 2022.10.21.)

2 통계청, 「남북한 통계협력방안 토론회 개최(보도자료)」, 2018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69038&pageNo=26&rowNum=10&amSeq=&sTarget=title&sTxt=%EB%B9%85%EB%8D%B0%EC%9D%B4%ED%84%B0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 2022.10.21.)

3 "WEF Nexus Tool 2.0은 Texas A&M University(Daher and Mohtar, 2015)에서 개발한 웹 기반 WEF 넥서스 시스템이며, 지속가능한 자원관리를 위한 의사결정에 사용되는 자원 분배 전략평가 도구이다." : 전동진·김익재·이문환·명수정·서승범·김예인·조을생·김수빈, 「북한의 산림복원과 기후변화가 물관리 취약성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방향 연구(Ⅲ)」, 기후환경정책연구, 2021, 61쪽.

4 전동진·김익재·이문환·명수정·서승범·김예인·조을생·김수빈, 위의 연구보고서(2021), 61쪽.

다음으로는 허선희와 오삼언·김은희의 연구가 있다. 허선희는 북한 산림정책의 결정과정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심층적으로 고찰하였다. 허선희는 행정학계에서 자주 차용되는 앨리슨(G. Allison) 정책결정모델에 기반한 연구모델을 가지고는 북한 지도부가 산림정책을 구상하는 과정을 설명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북한 내 일련의 사회적 사건들은 “수령의 노작, 담화, 서한, 연설문 등의 문건과 『로동신문』, 『민주조선』 등 언론매체 자료, 『조선중앙년감』 등의 연속간행물, 학술연구지 등 정기간행물, 법령정보, 백과사전류 등의 공간문헌 등”을 검토하였다.⁵ 해당 연구는 재구성된 사회과학 이론에 기초해 북한의 정책결정 과정의 보편적 특징을 확인하고, 이론 적용을 목적으로 북한의 실상으로 풍부한 북한 문헌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이 주목하고자 하는 산림정책은 해당 연구에서는 북한 지도부의 의사결정 과정 분석을 위한 도구로 활용한 측면이 강하다.

또한, 해당 연구는 북한 문헌들을 폭넓게 검토하고 있으나, 특정 시기 및 사건을 중심으로 개별 문헌에 관한 깊은 고찰은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김정은 시기에서의 산림복구의 성과 및 양상을 분석한 오삼언·김은희의 연구는 위성영상과 언론보도 자료에 근거해 북한의 산림정책의 현주소를 묘사하고 있으며 본 논문하고 주제의 맥락이 더 유사하다.⁶ 그러나 아쉽게도 해당 연구가 전제하고 있는 논거에 있어서는 다음 두 가지 의문이 존재한다. 첫째로는 김정은 시기 산림정책의 구상적 완성과 실질적 추진 사이에서의 시간적 괴리가 있을 가능성이 크며, 이러한 질적 고려가 해당 연구에서는 간과된 측면이 있다. 둘째로는 위성영상 자료하고의 비교가 타당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생성된 시기와 해당 자료하고 분석하려는 북한 언론보도 기사 간 시기적 병립이 더 조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해당 연구에서는 2018년까지만 존재하는 위성영상 자료를 통해 2020년 그리고 그 이후의 산림복구 현황까지 시론적으로나마 분석하려 든다. 따라서 허선희보다는 본 논문처럼 김정은 시기 산림정책의 현황을 검토하고는 있으나, 방법론적 한계를 넘어서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부분들이 오삼언·김은희의 연구에서는 나타난다.

지금부터는 연구 방법론 측면에서 유사하였던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먼저 관련 연구자로는 이연재, 김성경, 이우영, 김성희 등이 있다. 이연재는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 문화 예술 담론 특히 주민 생활을 다룬 문학작품을 토대로 북한 사회상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표면적으로 시장 친화적 정책 흐름이 북한 사회 내 포착되고 있다는 기대와는 상충되게 시장화에 반하는 담론이 또한 생산 및 유포되고

있는 것을 규명하였다.⁷ 문학작품 속 서사와 연출을 근거한 해당 연구에서는 북한 내 사회문화 트렌드를 파악하는데, 기존의 설문 기법들이 활용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전제되었을 것으로 보며, 북한 문학계 세계관에 관한 고찰이 문학을 넘어 북한의 현실을 파악하는 매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러한 이연재의 연구는 김성경의 기존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북한 현실 속 사회·정신적 현상을 분석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즉 구체적으로 현실정책을 실증적으로 파악하는 목적보다는 연구 대상의 범주가 더 넓은 측면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문학작품 고찰 측면에서, 연구 대상의 범주가 정신적 영역이 아닌 현실정책에 초점이 더 맞춰져 있는, 북한의 수산업 정책을 문학적 세계관에 근거하여 분석하려고 한 김성희의 연구에 주목하였다.⁸

마지막으로, 본 논문의 소재와 연구 방법론 측면에서 유사하였던 선행연구로는 오태호의 『남북한 소설에 나타난 생태학적 상상력 연구: 호랑이와 새 이미지를 중심으로』와 오창은의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 소설에 나타난 생태 환경 담론의 특성 연구가 있다. 북한 문학작품은 북한 사회를 ‘간접적으로나마 실증적으로 묘사하려는 시도로서 검토되어왔다. 오창은도 자신의 논문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 소설에 나타난 생태 환경 담론의 특성 연구에서 작가 황철현의 몇 가지 특징을 소개하고, 그것이 『푸른 숲』의 북한 사회의 맥락적 이해를 구하는 데 지니는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다. “『푸른 숲』의 작가인 황철현은 ‘은천군 량담리 농장원’으로 소속이 표기되어 있다. 이 작품은 당창건 70돌을 맞아 조선작가동맹이 실시한 ‘전국군중문학작품현상모집’의 3등 입상작이다. 그렇기에 북한 주민들의 일반적 상식을 대변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전문 작가가 아닌 일반인이 쓴 소설이기에, 보다 풍부하고도 진솔한 북한 민중의 정서를 담고 있다(오창은, 2018, 32쪽).” 하지만 이는 첫째로 황철현에 관한 인물사적 정보가 ‘출판물 기재사항’을 넘어서지 못한 점, 둘째로 전문 작가와 일반 작가에 대한 구분 논거가 미흡하고, 그러한 구분이 작가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데 지니는 의미가 불명확한 점에서, 해당 본문에서 정밀한 생애사 분석까지 이루어졌다고 보긴 어렵다.

이중 오창은 연구에 우선적으로 주목하게 된 이유로는 본 연구모임이 관심을 가져온 황철현의 『푸른 숲』이 분석 사례로 소개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해당 연구에서 『푸른 숲』이 사례로서 어떻게 분석되었고, 그것의 성과와 한계를 다음과 같이 나열하였다. 황철현의 『푸른 숲』을 해석하는 데 있어, 기존에 검토되지 않았던 소설에서의 디테일을 주목하였다. 가령 오창은 해당 소설의 여주

5 허선희, 「북한 산림정책의 변천에 관한 연구 : 정책결정과정과정에 대한 다차원적 이해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2020, 국문초록.

6 오삼언·김은희, 「김정은 시대 산림복구의 성과와 양상 분석」, 『북한연구학회보』, 25(2), 북한연구학회, 2021, 80~84쪽.

7 이연재, 「시장화 초기 북한에서의 반시장화 담론 - 1990년대~2000년대 초를 중심으로」, 『역사비평』, 134, 역사비평사, 2021, 423~424쪽.

8 김성희, 「정책의 마음, 문학의 감정: 북한의 수산업 정책과 당성의 문학」, 『통일인문학』, 82,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송향이 근무하는 곳과 박성철이 산림복구 현장에 참여하기 위해 희생해야만 했던 것에 대한 차별화된 해석을 제시한다.

“숲을 사랑하는 처녀 송향은 ‘군산림경영소에서 나무심기 실적이 가장 좋은 ‘조림분조 분조장’이다. 그는 독일보사 신문에도 나올 정도로 성과를 올려 자긍심도 높았다. 송향의 성과를 신문에서 읽은 박성철은 실습생이 되기 위해 명담리를 찾아온다. 박성철은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푸른 산, 푸른 숲”을 염원하며, “벌거숭이가 되어가는 조국의 산들”에 대해 가슴아파했다는 사연을 듣고 감동하여 의사의 길을 포기하고, 산림복구 전투에 뛰어든 인물이다(오창은, 2018, 30).”

이와 더불어, 생태 및 환경 담론을 담아낸 다른 북한 작품하고 비교함으로써, 북한 생태 담론의 변화도 추적한다. 하지만 여전히 해당 연구는 다음 한계를 지니고 있다. 『푸른 숲』이 쓰인 시기와 해당 작품이 배경으로 하는 시기에 출간된 기타 보도자료와 같은 실증적 자료하고의 교차분석이 이루어진 바가 사실상 없으므로, 연구가 나열하는 분석의 진위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데 여러 의문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북한 사회를 더 실증적으로 묘사하는 자료들에 대한 참조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만큼, 이와 관련하여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본 논문의 작성자들이 갖게 되었다. 이로써 본 논문은 기존 선행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선행연구의 한계를 다음과 같이 포착하였다. 앞서 소개한 첫 번째 연구유형에서는 전통적·정략적 도구에 기반한 북한 산림 생태 연구의 한계, 두 번째 연구유형에서는 북한 문학작품에서의 세계관과 북한 사회상의 실상을 산림의 관점에서 충분히 조망하고 있지는 않은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형에서는 북한 산림 생태를 시론적인 수준에서 두 번째 연구유형 방식을 차용하고 있는 한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3) 연구범위 및 방법

본 논문은 2015년 산림복구 전투를 주요 연구 범위로 설정하였다. 연구 범위를 위와 같이 설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산림복구 전투는 김정은 시대의 산림정책을 대표하며, 북한은 2015년 산림복구 전투를 시작하면서 10년 안에 모든 산을 보물산, 황금산으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하였고, 산림조성 10년 계획을 시작하였다(최현아, 임철희 2021). 산림복구 전투의 개념은 2014년 11월 김정은의 중앙양묘장 현지지도를 통해 처음 등장하였으나(최현아 2018), 실질적인 정책 집행이 2015년에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고 북한 신년사에서 산림복구 전투의 언급이 처음 이루어진 연도 역시 2015년이다.

2015년은 북한의 국제사회에 산림 지원을 요청한 시기이기도 하다. 북한은 2015년 11월부터 12월 까지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에서 167만 헥타르(ha)의 산림 조성을 발표하며, 이에 필요한 자원으로 연간 종자 2백 톤(t), 묘목 4억 그루 등을 요청하였다(산림청 2016).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의 국내 정책인 산림복구 전투가 시작하였고, 북한의 적극적인 국제사회 산림 지원 요청이 이루어진 2015년을 주요 연구 범위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북한의 대표적인 산림정책은 산림복구 전투⁹이다. 김정은 시기 들어, 산림복구 전투는 신년사, 로작, 로동신문 등 광범위하게 등장하였으며, 당의 확고한 결심이자 의지로 표현되고 있다. 특히, 산림복구 전투는 역사적이고 애국적인 사업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우선 김일성·김정일 시기 산림보호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선조들의 유훈을 잇는 역사적인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과거부터 오랫동안 일관되게 진행되어온 정책인 만큼 산림조성에 관한 북한 주민들의 노력이 애국 활동 중 하나로 여겨진다. 즉, 산림복구전은 조국의 번영을 위한 애국 사업이며, 산림복구 전투에 나타난 북한주민의 참여, 실적 등은 충성도 및 애국심의 지표로 활용된다(로동신문 2020/02/22; 2020/02/26).

예를 들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 2015년에 사회주의애국림칭호를 새롭게 제정하며, 산림복구에 관한 보상체계를 확립했고 지난 2020년 8월까지 300여 개의 전국 지역단위에 애국림칭호를 수여하였다(로동신문, 2020/08/15). 북한의 산림정책은 분절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연속성을 지니며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김정은 시기 산림정책의 성격은 선조들의 유훈을 반영한 역사적인 과업, 부국강병을 위한 애국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의 산림복구 전투의 주요 특징은 다양한 정책과 연계되는 확장성이라 할 수 있다. 북한 김정은은 산림복구 전투의 성과를 강조하며, 산림보호 및 조성을 도로관리, 강하천정리, 환경보호 사업 등 기타 사업과 연계하며 논의하고 있다. 이 외에도 김정은 시기 산림정책은 산림복구 전투(10년), 산림건설총계획(30년) 등 중장기 계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양묘장 설치, 나무모 생산과 같은 산림녹화 사업을 추구하며, 결과적으로 산림 자원 이용 구조 전환, 다목적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한다(최현아 2018). 즉, 북한에서는 산림보호를 경제성장과 연계하며 국가의 주요 전략적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한편, 북한의 산림정책은 김정은 시기에 들어 강조되고 있으며, 신년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정은 시기 신년사에서 산림정책에 대한 언급이 처음 이루어진 연도는 2014년이며, 그 해 산림자원 보

9 이 장은 문예찬·이현출(2021), 송정환 외 (2021), 문예찬(2022)을 수정 및 보완하여 작성되었음.

호 및 나무 심기 운동이 독려되었다. 북한 김정은은 2015년에 산림복구 전투를 언급하며 전 인민의 산림복구활동의 중요성을 전달하였고, 산림복구 전투는 2015년 이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등 북한 신년사마다 주요 의제로 등장하였다. 김정은은 매년 신년사를 통해 산림복구 전투를 강조해왔으며, 이는 북한에서의 산림 논의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산림정책은 다양한 제도적 기반에서 기인하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법률이다.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1992년 12월 산림법을 처음 제정하였다. 이후 2021년까지 13차례에 걸쳐 법률을 수정하고 보충하였다. 1992년 산림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북한은 토지법조문을 통해 산림의 조성 및 이용, 관리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오삼언 외 2019). 산림법은 산림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있는데, 산림법은 산림조성과 보호, 산림자원 이용에 관한 규칙을 정했으며, 수정보충을 통해 새롭게 시행하는 국가 산림정책의 원칙을 수립하였다. 예를 들어, 지난 2012년 개정된 북한 산림법에는 산림 건설 총 계획의 작성과 실행 원칙에 관한 조항(제4조)이 추가되었다.

〈표 1〉 북한 신년사에 나타난 산림관련 내용 (2014-2019)

| 연도 | 주요내용 |
|------|---|
| 2014 | 산림자원 보호 및 나무심기 운동 독려 |
| 2015 | 수림화, 원림화, 과수원화를 중심으로 산림복구 전투 강조 |
| 2016 | 산림복구 전투 강조 |
| 2017 | 국토관리사업으로서의 산림복구 전투 강조 |
| 2018 | 산림복구 전투 성과를 더욱 확대하면서 이미 조성된 산림의 보호관리 촉구 |
| 2019 | 산림복구 전투 2단계 과업을 적극 추진, 원림녹화 강조 |

※자료출처: 북한 김정은 신년사 원문(2014-2019)

위 표와 같이 북한은 신년사를 통해 산림복구 전투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신년사에 등장한 산림복구 전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림복구 전투성과를 더욱 확대하면서 이미 조성된 산림에 대한 보호관리를 잘하는 것과 함께 도로의 기술상태를 개선하고 강하천정리를 정상화하며 환경보호사업을 과학적으로, 책임적으로 하여야 합니다(김정은 2015).

전당, 전군, 전민이 떨쳐나 산림복구 전투를 본격적으로 벌여야 합니다. 도시와 농촌, 일터와 마을들을 알뜰하게 꾸리며 나라의 자원을 보호하고 대기와 강하천, 바다오염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김정은 2016).

국토관리사업에 온 나라가 떨쳐나서야 합니다. 도들에 현대적인 양묘장들을 꾸리고 산림복구 전투를 끈기있게 밀고 나가며 강하천 관리와 도로 보수, 환경보호 사업을 계획적으로 진행하여 국토의 면모를 더욱 일신시켜야 합니다(김정은 2017).

전후에 복구건설을 한 것처럼 전당, 전군, 전민이 떨쳐나 산림복구 전투를 힘있게 벌려 조국의 산들을 푸른 숲이 우거진 황금산으로 전변시켜야 합니다. 모든 부문들에서 수림화, 원림화, 과수원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일관하게 밀고나가며 평양시와 도, 시, 군소재지들, 일터와 마을들을 보다 문명하게 꾸리고 정상유지, 정상 관리해 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김정은 2018).

산림복구 전투 2단계 과업을 적극 추진하며 원림녹화와 도시경영, 도로관리사업을 개선하고 환경오염을 철저히 막아야 합니다. ... 여러 가지 장애와 난관을 과감하게 극복하면서 철도, 도로, 산림, 보건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협력 사업들을 추진하여 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디디었습니다(김정은 2019).

북한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산림복구 전투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는데, 대표적으로 로동신문에서 지속적으로 산림복구 전투를 강조하고 있다. 로동신문에 등장한 산림복구 전투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한은 “산림복구 전투 승리의 새로운 진격로를”(로동신문 2019/01/03), “사회주의조국강산을 더욱 아름답게 변모시킬 신심과 열의 드높다”(로동신문 2019/01/19), “산림복구 및 국토환경 보호부문 일군회의 진행”(로동신문 2019/02/15), “만년대계의 애국위업인 산림복구 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자”(로동신문 2019/02/28) 등의 기사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산림복구 전투의 중요성을 전달하고 있다.

2. 본론

1) 김정은 시기 북한 문학작품의 내외재적 특징

(1) 『조선문학』의 외재적 특징과 북한 문학 담론의 대표성

북한 문학작품을 폭넓게 검토하는 데에는 물리적 한계가 존재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문학의 사회적 세계관 이해를 위해 문예지 『조선문학』에 주목하였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서는 『조선문학』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¹⁰ “조선작가동맹중앙위원회의 기관지로서 문학예술출판사에서 매월 발행하는 문학 전문잡지이다. 북조선예술총동맹은 1946년 7월 기관지로서 『문화전선(文化戰線)』을 창간하였다. 북조선예술총동맹의 산하 단체인 북조선문학동맹에서 1947년 9월 15일부터 같은 해 12월 25일까지 『조선문학』을 발간하였다. 이후 북조선문학동맹이 조선작가동맹으로 변경되었으며, 1953년 10월부터 ‘조선작가동맹중앙위원회’ 기관지로서 『조선문학』이 재간되어 계속 발행되고 있다.”

더불어 “『조선문학』은 작가들에게 부여된 당의 정책을 문학으로 반영하여 인민들에게 알리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매호 별로 해당 발간 월의 특집 주제가 있어서 그 주제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문학예술작품이 집중적으로 실린다. 통상적으로 1호에는 새해를 맞이한 결의와 각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이 있는 2호에는 김정일 관련 주제의 문학작품, 김일성 주석의 생일이 있는 4월에는 김일성 관련 작품이 실린다. 2012년 12호에는 김정일의 사망을 맞이하여 김정일 추모 작품이, 2013년 1호에서는 새해를 맞이한 김정은 관련 작품이 집중적으로 실렸다. 2013년 7월로 누계는 787호이다.” 이으로써 『조선문학』은 북한 내 발간되고 있는 대표 문예지로서, 북한 내 지배적인 문화·사상적 사회 논조를 견지할 여지가 큰 사료인 것을 알 수 있다.

(2) 『조선문학』의 내재적 서사와 북한 산림복구 정책의 이념

산림복구 전투가 처음 언급된 것은 2014년 11월 11일 화요일 『노동신문』 1면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벌거벗은 산림을 그대로 두고 이제 더는 물러설 길이 없다고 하시면서 전후복구건설시기 온 나라가 떨쳐나 재더미를 털고 일떠선 것처럼 산림복구를 자연과의 전쟁으로 간주하고 전당, 전군, 전민이 총동원되어 산림복구 전투를 벌리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산림복구 전투에서 성과를 거두자면 나무심기를 대대적으로 할뿐만아니라 산림보호이자 토지보호,

10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조선문학』,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48738&cid=46629&categoryId=46629> (검색일: 2022년 10월 22일)

생태환경보호, 경제 보호 사업이라는 관점 밑에 숲을 보호하고 감독통제하기 위한 사업을 강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2014년부터 산림복구 전투를 강조한 김정은 국방위원장 제1비서는 2014년 11월 11일 산림복구 전투를 시작으로, 2015년 신년사¹¹에서 전후복구처럼 산림복구 전투를 통해 북한의 산림복구의 일관적인 수행을 강조하였다.

“전후에 복구건설을 한 것처럼 전당, 전군, 전민이 떨쳐나 산림복구 전투를 힘있게 벌려 조국의 산들을 푸른 숲이 우거진 황금산으로 전변시켜야 합니다. 모든 부문들에서 수림화, 원림화, 과수원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일관하게 밀고나가며 평양시와 도, 시, 군소재지들, 일터와 마을들을 보다 문명하게 꾸리고 정상유지, 정상관리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2015년 3월 17일 북한 국방위원회 산하 인민보안부의 「산림포고문」 발표가 있었다. 주요 골자는 산림복구 전투 방해 및 산림자원 침해 행위 방지였다. “산림포고문에는 산림복구 전투와 관련하여 산림조성사업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하면서 산림과 관련된 시설(양묘장) 내 다른 작물을 키우는 것, 산림 훼손 행위, 산림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¹² 또한 이러한 행위를 했을 때 법적 처벌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소설에 나타난 생태 환경 담론의 특성 연구(오창은, 2017)

산림복구 전투는 북한의 문학 작품에도 반영되었다. 『푸른 숲』(황철현, 《청년문학》 2016년 제3호, 문학예술출판사, 2016.)은 2016년에 나온 황철현 작가의 작품이다. 황철현은 ‘황해남도 은천군 량담리 농장원’ 소속의 평범한 북한 주민 출신이다. 그의 작품은 당시 북한 주민들의 생각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푸른 숲』은 청춘 남녀의 사랑과 산림복구 사업을 연결시킨 작품이다. 박성철은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푸른 산, 푸른 숲”을 염원하며, “벌거숭이가 되어가는 조국의 산들”에 대해 가슴 아파했다는

11 「김정은원수님께서 하신 신년사(전문, 2015.1.1)」, 《조선신보》, 2015년 1월 1일자 (https://chosonsinbo.com/2015/01/kcna_150101-4/, 2022.10.22.)

12 최현아. (2018). 남북한 산림협력 방향과 과제: 국제사회 지원 사업을 바탕으로. 통일정책연구, 27(2), pp. 6

사연에 감동하여 의사의 길을 포기하고, 산림복구 전투에 뛰어든 인물이다.

송향은 군산림경영소 소속 조림분조 분조장으로 지역 기반 인물이며 지역에서 산림 복구를 위해 힘 쓴 인물이다. 박성철은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푸른 산, 푸른 숲”을 염원하는 사연을 듣고 감동하여 산림복구 전투에 임한 인물이다. 즉, 박성철은 당의 정책을 시행하는 외부인이자 국가를 상징한다.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 민중이 국가 기구에 대한 신뢰가 붕괴되었고, 산림복구와 같은 계기를 통해 사후적인 수습 노력이 이어지고 있음을 징후적으로 드러낸다.”(오창은, (2018).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소설에 나타난 생태 환경 담론의 특성 연구. 한국언어문화, 67, 30-32.)

『푸른 숲』을 통해 국가의 산림복구 정책과 북한 민중의 미묘한 대립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다.

김정은 시대 생태 담론의 목표는 푸른 산이다. 2015년 제작된 시 『좋은 봄이다』(김명철, 『조선문학』, 3호(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15))를 보면 북한이 목표하는 미래상을 볼 수 있다. 이 시를 보면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를 상징하는 벌거숭이산과 흙산에서 산림복구를 통해 부강한 조국으로 나아가자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너희들 무성하게 자라/ 울창한 수림이 되면/ 금수강산 이 땅은 더 수려해지고/ 너희들 안겨주는 무진장한 보물로 하여/ 우리 조국은 더 부강해지려니”(오삼언, 2019. 김정은 시대 문학작품 속 생태 담론 고찰. 통일과 평화, 11(2), 287.)

울창한 수림은 곧 부강한 조국을 의미한다. “조국의 앞날은 부강하고 아름다울 것이라는 확신과 무한히 확장되는 발전의 시간대를 담고 있다. 이렇듯 ‘푸른 산’ 이 표상하는 미래의 청사진은 젊고 설레며 세상이 부러워하는 조국이다. “어쩌면 환상 같은 그날의 울창하고 화려한 숲이 방불히 떠올라 꿈에 취한 듯”(정영중, “푸른 산, 푸른 들,” 『조선문학』, 11호(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16)) 하다고 고백한 작품의 화자처럼 생태 담론이 그려내는 미래 청사진은 부강번영한 조국, 화려한 조국이기도 하다.”(오삼언, 2019. 김정은 시대 문학작품 속 생태 담론 고찰. 통일과 평화, 11(2), 287-289.)

김정은 시대의 문학 작품을 보면 크게 세 가지의 산림 관련 생태 담론이 담겨 있다.

* 김정은 시대 문학작품 속 생태 담론 고찰(오삼언, 2019)

고난의 행군 시기 산림 황폐화의 문제점 지적, 속죄의 행위 나무 심기, 김정일 시대 애국주의와 김정은 시대 문학에 담긴 생태 담론은 고난의 행군 시기라 하더라도 산림훼손, 자연 파괴 행위는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행위로 평가하지만 한편으로는 나무를 사람의 피부, 살에 빗대는 비유 등을 통해 강력한 생태 담론을 만들고 있다.

수필 『나무를 심자』¹³에서는 생존을 위한 목적이라고 해도 자연훼손 행위를 했다면 ‘죄’라는 등식을 거침없이 표현하며 자연환경 파괴 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판 분위기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게 한다. 수필은 화자가 고난의 행군 시절 소나무 껍질로 끼니를 해결하다 고향땅을 떠났던 친구 병삼을 우연히 만난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병삼은 고향땅을 찾아 나무 모를 심는 것으로써 나무를 상하게 했던 죄를 실천으로 씻겠다고 결의를 다진다. 수필에 나타난 “껍질을 벗기운 소나무에서는 아픔의 상처인양 진액이 흘렀”고 그 진액은 “내 살점을 저며내는 것 같아 차마 견딜 수 없”던 소행이라는 표현은 산림이 황폐화된 과정을 환기한다. 더 나아가 이 같은 행위를 ‘죄’로 규정하고 속죄의 행위로 ‘나무 심기’를 제시하기에 이른다. 이 수필에서 주목되는 점은 또한 나무를 살에 빗댄 표현이다. 이 비유는 김정은 위원장의 노작에서 비롯된 것으로 짐작된다. 김정은 위원장은 ‘김정일 애국주의’ 관련 노작¹⁴에서 김정일 애국주의를 “내 나라, 내 조국의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까지도 다 자기 가슴에 품어 안고 자기의 터운 피로 뜨겁게 덮혀주는 참다운 애국주의”라고 정의한 바 있다.

단편소설 『숲을 사랑하라』¹⁵에서는 고난의 행군 시절 산림 파괴를 “수치스러운 과거”의 오류로 기술한다. 작품 속 화자는 “산림과 나무가 저절로 자란다 하여 자기 대만 살면 그만이라는 리기심으로 내버려두고 심지어 파괴하는 수치스러운 과거가 더는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면서 고난의 행군 시기의 산림 파괴를 ‘수치스러운 과거’로 규정하지만, 단편소설, 『생활의 선율』¹⁶에서는 “조국의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를 진정으로 자기의 피와 살처럼 안을 때 리수복 영웅과 같이 조국을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조국이라고 떳떳이 부를 수 있는 거다”라며 나무를 살에 비유한다. 이렇게 ‘나무(풀) = 피와 살’이라는 의미를 담은 생태 담론이 태동했다.

13 엄성영, “나무를 심자,” 『조선문학』, 3호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15).

14 김정은,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임원들과 한 담화-2012년 7월 26일), 『조선신보』, 2012년 8월 3일.

15 리명현, “숲을 사랑하라,” 『조선문학』, 1호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16).

16 김창림, “생활의 선율,” 『조선문학』, 11호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17).

단편소설 『산촌의 메아리』¹⁷는 산등성이에 농사를 짓던 당사자가 산림복원 과정에서 갈등하는 내면을 생동감 있게 보여주는 작품이다. 주인공 장명환은 연로보장(은퇴)을 받았음에도 군 식품공장의 원료로 사용되는 강냉이 농사를 산등성이에 10여 년간 지어온 인물이다. 10여 년간 그는 식품공장에 원료를 납품하며 보람을 느꼈지만, 자신의 농사가 이제 와서 잘못된 일로 평가되자, “소중히 쌓아 올린 삶의 긍지와 자부심이 밀뿌리채” 뒤흔들린다. 인생의 노년을 강냉이 농사로 마무리하고 싶었던 장명환에게 고향의 자랑이자, 자신의 자랑이기도 한 친구인 군 인민위원회 위원장 심학진이 나타난다. 그는 장명환에게 산등성이에 강냉이가 아니라 나무를 심자고 권유하면서 군 식료공장에 원료를 납품한 수고를 인정하지만 나무를 심어야 할 땅에 원료를 심었다는 것을 비판한다. 심학진의 권유와 비판에 장명환은 지난 10년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느낌이다. 장명환이 “욕망 같아서는 당신이 뭐기에 나를 욕되게 하려드느가고 소리치고 싶었다”라고 밝힌 대목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심학진은 군 인민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배이데올로기를 체현하는 인물이다. 장명환이 심학진을 향해 설움 가득한 분노를 표출하는 장면은 심학진으로 표상되는 북한 당국, 곧 국가를 향한 개인들의 심리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장명환의 복잡한 심정의 재현은 ‘또 다른 장명환’ 들의 심정을 환기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작품에서는 장명환만이 아니라 심학진의 반성을 함께 형상화함으로써 ‘또다른 장명환’ 들에게 양해를 구하며 동의의 언어를 만들어내고자 한다. 장명환의 반성은 “산림복구 전투가 벌어지는 마당에 벌거숭이산을 그대로 부쳐먹으려 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되어 “산 아닌 산을 너희들에게 넘겨주려고 했다”는, 미래세대에 대한 미안함으로 증폭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하지만 장명환과 심학진의 갈등 해소 과정은 끝까지 순탄하지 않다. 이 과정의 곡절은 고난의 행군으로 빚어진 산림 훼손을 두고 국가와 주민, 세대별 감정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더불어 주민에 초점을 두고 ‘또 다른 장명환’ 들을 독려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듯 “산촌의 메아리”에서는 북한 당국조차 산림훼손을 묵인, 방조했던 고난의 행군 시절을 지나 산림복구라는 당 정책이 수립된 변화된 시대, 국가의 요구를 두고 국가와 주민 간 빚어지는 갈등과 화해의 서사를 읽어낼 수 있다.

17 윤상근, “산촌의 메아리,” 『조선문학』, 2호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16).

3) 북한 문학작품 속 산림복구 서사와 「노동신문」 보도기사 내용 간 교차분석

(1) 「조선문학」 속 산림복구 주요 서사 구절

* 김정은 시대 문학에 나타난 국가적 이상(이선경, 2015)

『돌배향기』¹⁸는 김정은 시대의 산림화가 산림조성과 산림보호의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것이 큰 맥락에서 인공적인 도시화 안으로 수렴된다는 주제를 담고 있다. 작품 속 화자는 20여 년 전 자신의 몸을 다치게 하면서까지 푸른 숲을 가꾸고 지킨, 현재는 그의 장인인 산림감독원 리도영 아버지를 회상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20여 년 전에 산림화는 선견지명을 가진 자에게만 보이는 애국주의의 실천이었다. 미래적인 안목에서 이는 애국주의의 진정한 실천으로 재해석된다. 그리고 이것을 실천하는 자가 의식적으로 그 목표를 분명한 인공적 낙원의 건설로 설정하고 있다는 데에서 소설의 궁극적인 주제는 결국 김정은 시대 인공적 도시화를 형상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산림화의 대표적 형상화 소설 『뿌리깊은 나무』¹⁹ 역시 식수와 그 보호가 주요 인물들에게는 지상 최대의 애국주의의 명령인 것처럼 주어진다. 특히 이 소설이 특이한 것은 김정은 시대가 강조하는 개발 분야 중 하나인 탄광 자원의 발굴과 산림화가 서사 안에서 충돌한다는 것이다. 산림감독원인 여주인공과 혁신갱 소대장인 남주인공의 애정 전선의 대립과 갈등을 만들어내는 요소는 산림보호와 조성에 대한 시각 차이이며, 산림화가 거시적인 시각에서 광업에서까지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해가 애정의 행복한 결말을 만들어낸다. 따라서 서사의 갈등 해결과 남녀의 관계 회복 양자가 임업이 광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데에서, 산업에 있어서 산림화의 우선적인 중요도를 알 수 있다.

(2) 「노동신문」에 기초한 「조선문학」 속 주요 산림복구 서사 구절 고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15년 2월 26일 김정은의 ‘산림복구 전투’ 노작 발표 이후 북한의 산림복구와 관련된 보도는 크게 증가하였다. 당시 북한의 산림, 특히 산림복구와 관련된 보도는 크게 나무모기르기, 나무 심기, 심은 나무 가꾸기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2014년 후반부터 2015년 초기는 나무모기르기 보도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 해당 시기 산림복구와 관련된 노동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살펴보고 당시 북한의 산림복구 방향과 흐름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18 김성희, 『돌배향기』, 《조선문학》 2015년 제1호.

19 리국철, 『뿌리깊은 나무』, 《조선문학》 2015년 제3호.

2014년 11월 11일, 노동신문은 1면과 2면 전체를 할당하여 김정은의 중앙양묘장 현지지도를 게시하였다. 당시 김정은은 최룡해, 최태복, 오수용, 한광상 등과 함께 해당 시설을 방문하였는데, 당시 기사에서 중앙양묘장의 전체적인 시설 개요를 알 수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묘목온실, 묘목포전, 나무모 영양단지와 부직포, 해가림발생산기지들을 돌아보시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²⁰

특히 노동신문은 중앙양묘장이 나무모생산의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한 것에 대해 김정은이 큰 만족을 표했다고 밝히며, 해가림발생산공정을 꾸린 것과 나무모 생산의 고리형순환생산체계 확립에 대해 크게 기뻐했다고 전하고 있다. 또한 나무모 생산에 있어 단지 심는 것뿐 아니라 관상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원문은 다음과 같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중앙양묘장에서 묘목생산기지를 확장하여 더많은 나무모들을 생산하며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는 나무심기 및 관리 방법을 완성할 뿐 아니라 용제립 조성에 필요한 나무모는 물론 관상적 가치가 있는 나무모들을 키워내야한다고 지시하시였다.”²¹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산림복구 전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무모 생산의 과학화를 중점적으로 실행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단순 나무를 심고 키우는 것뿐 아니라 아름답게 가꾸는 것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2015년 1월 19일 노동신문에서는 1면에 관련 사실을 게시하며 본격적인 산림복구 전투의 시작을 알렸다. 특히 국토환경보호성을 비롯한 도, 시, 군국토환경보호부 일군들,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 심지어 학교에 이르기까지 전 인민적인 노력을 들이는 전군중적 운동임을 강조하고 있다.

“오늘의 산림복구 전투의 승패는 전적으로 국토환경보호성을 비롯한 도, 시, 군국토환경보호부 일군들의 책임성과 투신력에 달려있다. 나라의 전반적 산림실태와 자기지방의 구체적 실정에 기초하여

20 본사정치정보도반(2014.11.11.), 『노동신문』, 1~2면

21 본사정치정보도반(2014.11.11.), 『노동신문』, 1~2면

산림조성계획을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조직지휘를 치밀하게 짜고들어야한다.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 학교들에 조림구역과 나무심기 계획을 주고 그것이 정확히 집행되도록 요구성을 높여야 한다. 책상머리에 앉아 계획이나 떨구고 수자나 장악하는 것은 참모일군의 일본새와 인연이 없다. 국토환경보호부문의 일군들은 누구나 산판에 전투좌지를 정하고 현지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 때에 적극적으로, 기동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산림감독기관들과 법기관들에서 감독 통제 사업을 원칙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성, 중앙기관들과 해당 지역의 기관, 기업소들에서는 있는 예비와 가능성을 총동원하여 산림조성과 보호관리에 필요한 물자들을 원만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대용자재, 대용연료를 적극 개발리용하여 나무를 극력 아껴써야 한다. 산림과학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산림조성과 보호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사업을 잘해나가야 한다.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에서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로 발동시키기 위한 사상전, 선전선동전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가야 한다. 각급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은 오늘의 산림복구 전투가 단순한 자연개조가 아니라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이라는 것을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뼈에 새기도록 하여야 한다. 누구나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주의로 심장의 피를 끓이며 전투의 순간순간을 고결한 충정과 위훈으로 빛내어나가도록 적극 고무추동하여야 한다.”²²

이러한 산림복구 전투에 대한 격려 후 3일 후인 1월 22일에는 평안북도와 자강도의 산림복구 전투를 모범 사례로 소개하며 타 지역 단위의 분발을 요구하는 기사가 게시된다.

“평안북도의 산림경영부문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도안의 모든 산들을 푸른 숲이 우거진 황금산으로 전면시키기 위한 전망목표를 세우고 올해 산림복구 전투를 벌려나가기 위한 준비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산림복구 전투지휘부에서는 올해 봄철에 도의 모든 시,군들에서 1만4600여 정보의 면적의 산들에 5200여 만 그루의 여러 가지 나무를 심을 목표를 내세우고 시, 군산림경영소들에서 나무모 보장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도록 하는데 힘을 넣고있다. 이와 함께 지휘부에서는 시, 군의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을 비롯한 모든 단위들에서 양묘장을 꾸려놓고 자체로 수종이 좋은 나무모들을 많이 키워내도록 하는 사업도 적극 내밀고 있다.”²³

22 노동신문(2015.01.19.), 산림복구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숭고한 애국사업이다, 1면

23 송창윤(2015.01.22.), 『노동신문』, 4면

“얼마전 우리가 자강도 산림복구 전투 지휘부를 찾았을 때였다. 당정책대로 나무모생산의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를 보다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생산한 나무모량은 대단하였다. 성과는 그뿐이 아니었다. 도의 산림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애국적 헌신성에 의해 도적인 부식토 생산량은 135%를 넘어섰다는 것이었다.”²⁴

본격적인 산림복구 전투 시작을 알린 후 처음 맞이하는 2015년 3월 3일 식수절에는 전국 각지에서 나무 심기 쟁기대회를 실행했다는 기사가 노동신문에 게시되었으며 평양, 평안도, 황해도, 자강도 등 각 도별로 현재 진행 상황을 뽐내는 기사가 게시되었다.

“전국 각지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사회주의국토건설의 빛나는 전성기를 펼쳐가기 위한 산림복구 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전시에 탄약을 생산보장하는 군수공장이나 같은 중앙과 지방의 양묘장들에서는 잡도리를 단단히 하고 올해 나무심기에 필요한 수억 그루의 나무모를 전량 생산해내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당의 구상을 빛나게 실현하는데 한몫 다 바칠 온 나라 인민의 전투적열의가 천백배로 분출되고 있는 속에 식수절 하루동안에만도 전국적으로 480여 만 그루의 나무와 꽃관목들이 심어졌다.”²⁵

2015년 4월 1일에는 남포시와 동림군의 산림복구 전투 특히 구체적인 나무 심기 성과를 소개하며 각 도단위, 시단위, 군단위에서 성과를 계산하며 지역 간 경쟁에 의해 산림복구 전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포시에서 나무 심기에 력량을 총집중하고 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올해 들어와 시안의 공장, 기업소, 대학을 비롯한 수많은 단위의 당원들과 근로자들, 학생들이 396만5천여 그루의 수종이 좋은 나무모들을 공원과 유원지, 도로와 철길주변, 야산들에 심는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시당위원회에서는 시안의 각급 당조직들에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산림복구 전투에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선전선동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²⁶

24 동세웅(2015.01.22.), 『노동신문』, 4면

25 조선중앙통신(2015.03.03.), 『노동신문』, 3면

26 주창선(2015.04.01.), 『노동신문』, 3면

“전당, 전군, 전민이 산림복구 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동림군에서 산림조성사업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벌려 나가고 있다. 산림경영소에서는 산림복구 전투의 선행공정인 나무모 생산에 힘을 넣고 있다. 그리하여 모체양묘장을 비롯한 군안의 양묘장들에서 올해에만도 182만9000여 그루의 이깔나무, 세잎소나무를 비롯한 수종이 좋은 나무모를 생산하여 근 600정보의 면적에 나무모 심기를 진행할 계획을 세우고 산림복구 전투를 힘있게 다그치고 있다.”²⁷

2015년 6월 1일 기사에서는 지방 행정 단위가 아닌 지역 당원들의 산림복구 전투 성과가 소개되었다. 특히 자강도가 모범 사례로 소개되었는데, 해당 지역의 산림복구 전투 성과가 계속해서 노동신문에 소개되는 것은 자강도 일대의 산림복구 전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성과를 치하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강계시, 희천시, 전천군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나무 심기 성과를 확대해나갔다. 나무를 심는 것은 단순한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당정책옹위전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펼쳐나선 그들은 적지를 바로정하고 창성이깔나무, 잣나무 등을 지대적특성에 맞게 심었다. 초산군, 우시군, 고평군을 비롯한 다른 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도 구렁이파기와 나무모 보장을 앞세우면서 나무 심기를 적지적수의 원칙에서 하였다.”²⁸

이로써 2014년 후반과 2015년 초반 산림복구 전투가 시행되기 시작하던 당시, 주요 산림복구 전투와 관련된 노동신문 기사를 살펴보았다. 노동신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산림복구 전투의 주요 특징은 중앙 및 지방 행정조직과 당원,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전 인민적 운동이며, 지역 간 경쟁을 유도하여 성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모습이다. 또한 나무 심기, 나무모 키우기 등의 과정에 대한 과학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수도와 인근을 중심으로는 묘목의 미적 가치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습을 보인다.

27 송창윤(2015.04.01.), 『노동신문』, 3면

28 김창길(2015.06.10.), 『노동신문』, 1면

3. 결론

연구의 함의 및 후속연구의 관한 시론

본 논문의 머리말에서도 소개한 바와 같이, 기존 연구가 북한 산림 현황 및 정책의 방향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용한 연구 방법론이 지니는 한계를 다른 대안을 통해 극복하려고 하였다. 물론 그러한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검토 문헌 설정부터 이차적 검증의 부재 측면에서 관련 선행연구는 설익은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북한학에 관심 있는 연구자들이 모여, 현존하던 북한학 연구 방법론을 보완하였고, 이렇게 보완된 연구 방법론을 북한 산림정책 파악을 목적으로 새롭게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연구 차별성을 갖는다. 향후 남북 교류 협력이 우선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영역이 산림협력임에 따라, 북한의 산림정책의 현주소 그리고 그에 걸맞은 협력정책을 남한 정부가 제시하는 데 제반 자료가 될 수 있는 연구로서 본 논문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

아쉽게도 본 논문에서는 방법론적 설계와 연구의 범위 등을 구체화하였으나, 자료 열람에서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분석 부분은 보강될 여지가 크다. 특히나 최근 북한자료 열람이 까다로워짐에 따라, 본 연구가 집중하고자 하였던 문학적 세계관이 시사하는 북한의 산림정책을 실증적 보도자료와 교차 비교하는 것은 예시적으로 밖에 실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이는 후속 연구를 통해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실천해 나아갈 예정이다.

참고문헌

- 『노동신문』, 『조선문학』
- 김경민, 김은희, 임중빈, 김명길. (2019). 북한 임농복합경영 추진 현황 및 연구 동향. NIFoS 국제산림정책토포픽, 81.
- 김성일. (2018). 북한 황폐산림 복구를 위한 국제협력과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소견. 수은 북한경제, 58, 38-56.
- 김성일. (2020/02/22). 산림복구사업에서의 실적은 충실성의 높이, 애국의 열도를 보여준다 -산림복구 전투 2단계 과업수행을 위한 지난해의 투쟁과정을 놓고-. 노동신문.
- 명주혁. (2020/02/26). 산림복구 전투는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숭고한 애국사업. 노동신문.
- 명주혁. (2020/08/15). 전국적으로 300여개의 단위가 사회주의애국림칭호를 수여받았다. 노동신문.
- 문예찬, 이현출. (2021). 남북 산림협력의 방향과 과제: 보편성과 특수성의 조화 모색. 분쟁해결연구, 19(1), 34-67.
- 문예찬. (2022). 남북산림협력과 SDGs: 발전방향과 과제. 숲과나무 특정주제연구자 연구보고서.
- 박기형. (2019).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제14차 당사국총회(UNCCD COP14) 논의 동향 및 시사점. NIFoS 국제산림정책토포픽, 92.
- 박경석, 김경민, 송민경, 조민석, 김동엽, 고상현, 김용석, 권진오. (2019). 북한 산림복구를 위한 적정기술 발굴 및 실행모델 구상. 국립산림과학원 연구보고서.
- 북한 김정은 신년사 (2014-2019).
- 송민경. (2017). 북한의 산림부문 기후변화대응 동향 및 시사점. NIFoS 국제산림정책토포픽, 50.
- 송정환, 김선규, 김주현, 문예찬, 황지은. (2021). 한반도 환경협력 연구:산림협력 사례를 중심으로. 풀씨연구회 결과보고서.
- 오삼언, 김은희, 김경민, 박소영. (2019). 남북 산림법 및 정책에 관한 비교 연구. 통일정책연구, 28(1), 159-181.
- 오삼언, 김은희, 김경민. (2018). 김정은 시대 산림정책의 특징. 북한학연구, 14(2), 101-133.
- 윤일선, 이창현, 남다정, 김다휘. (2018). 산림분야 ODA 융합사업 발굴을 위한 유형연구 사업. 산림청 연구용역 보고서.
- 윤철남. (2019/05/22). 국제생물다양성의 날. 노동신문.
- 이성연, 박경선, 박소영, 오정수, 조민성, 조한범. (2010). 북한의 황폐산림 복구 협력방향 및 과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보고, 10-11.
- 이영중. (2019). 2024년까지 모든 산을 황금산으로... 산림복구 전투 나선 북한. 나라경제, 19(4), 67.
- 이종민, 송민경, 박경석. (2017). 김정은 시기(2012-2016) 북한의 산림관련 보도 분석 : 산림복구사업 현황 및 한계. 통일문제연구, 29(2), 49-81.
- 인류의 공동과제-생물다양성의 보호. (2029/05/22). 노동신문.

- 조선말대사전 1권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 최은호, (2018). 제13차 유엔산림포럼(UNFF)의 결과 및 시사점. NIFoS 국제산림정책토크, 68.
- 최현아, 배상원, 이슬기, 켈리거베른하르트, 이우균. (2017). 북한 산림복구 지원을 위한 용도별 조림수종 선정. 통일문제연구, 29(1), 37-56;
- 최현아, 켈리거베른하르트. (2017). 북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 -유럽연합(EU) 지원 사업이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통일연구, 21(1), 47-73.
- 최현아. (2018). 남북한 산림협력 방향과 과제: 국제사회 지원 사업을 바탕으로. 통일정책연구, 27(2), 1-20.
- 최현아, 임철희. (2021). 북한 산림학술지에 나타난 산림연구 특성 분석과 이를 기초한 산림협력 방안. 현대북한연구, 24(1), 88-111.
- 산림청. (2016). 2016년도 산림과 임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대전: 산림청.

